

2025년 정책연구보고서

## 한국의 소득분배와 불평등 지도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와 정책 대안 연구”  
에 관한 용역의 첫 번째 연구주제인 ‘한국의 소득분배와 불  
평등 지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제출일자	2025. 12. 5
제출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5
제2장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 .....	9
제1절 소득분배 측정의 기준과 범위 .....	9
제2절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의 현주소: 국제비교 .....	13
제3절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데이터의 의의 .....	25
제4절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 .....	36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	110
제3장 한국의 사회계층 구조 .....	115
제1절 문제 제기 .....	115
제2절 계층분류의 기준과 방법 .....	129
제3절 통계청 추정 및 사전적 정의에 의한 분석 결과 .....	142
제4절 유럽사회경제 분류(ESeC)를 이용한 한국의 계층 분석 .....	216
제5절 소결 및 함의 .....	242
제4장 결론 .....	247
제1절 한국의 불평등 현단계 .....	247
제2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	249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후속 과제 .....	250
참 고 문 헌 .....	251



## 표 차례

<표 2-1>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 소득/자산 집중도(2023년 기준) .....	19
<표 2-2> 국세청 개인 근로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교 ..	26
<표 2-3> 국세청 개인 근로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교 ..	28
<표 2-4> 국세청 개인 근로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교 ..	29
<표 2-5> 국세청 자료와 가금복 자료의 사업소득 총액 비교 .....	30
<표 2-6>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와 가금복 취업+재산소득 자료의 비교 .....	31
<표 2-7> 국민계정 가계총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비교 .....	32
<표 2-8>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위별 소득과 가계분배계정 분위별 소득 .....	33
<표 2-9>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위별 소득과 가계분배계정 분위별 소득(2022) ..	34
<표 2-10>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	36
<표 2-11>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추이 .....	37
<표 2-12>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	39
<표 2-13> 가구내 지위별 고용률 추이 .....	40
<표 2-14> 개인취업소득 기술통계 .....	41
<표 2-15> 가구 시장소득 기술통계 .....	44
<표 2-16> 개인총소득 기술통계 .....	47
<표 2-17> 가구 경상소득 기술통계 .....	49
<표 2-18> 가구 자산과 부채 기술통계 .....	51
<표 2-19> 순자산 분위별 분포 .....	52
<표 2-20> 자가소유 주택가격 분위별 분포 .....	53
<표 2-21> 균등화시장소득 계층별 점유비중 .....	55
<표 2-22>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소득점유비중 .....	56
<표 2-23> 경상소득(비균등화) 소득점유비중 .....	58
<표 2-24> 시장소득(비균등화) 소득점유비중 .....	59
<표 2-25> 처분가능소득(비균등화) 소득점유비중 .....	60

<표 2-26> 순자산 점유비중 .....	61
<표 2-27> 거주주택 자산 점유비중 .....	62
<표 2-28> 개인 근로소득 점유비중 .....	63
<표 2-29> 개인 취업재산소득 점유비중 .....	64
<표 2-30> 개인 시장소득 점유비중 .....	65
<표 2-31> 개인 총소득 점유비중 .....	66
<표 2-32>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	67
<표 2-33>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행렬 이중차분* ...	68
<표 2-34>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분포 .....	69
<표 2-35>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행렬 이중차분* .....	69
<표 2-36>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	70
<표 2-37>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행렬 이중차분* ...	70
<표 2-38> 개인총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분포 .....	71
<표 2-39>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행렬 이중차분* .....	71
<표 2-40>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	72
<표 2-41>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행렬 차분* .....	72
<표 2-42> 개인총소득 하위40%의 성별 연령별 분포 .....	73
<표 2-43>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성별 연령별 행렬 차분* .....	73
<표 2-44>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소득 구성 .....	74
<표 2-45>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소득 구성비 .....	74
<표 2-46> 개인 총소득 상위5%의 금융자산 및 저축액 .....	75
<표 2-47> 개인 총소득 상위5%의 금융자산 및 저축액 .....	75
<표 2-48>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소득 구성 .....	76
<표 2-49>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소득 구성비 .....	76
<표 2-50>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공적이전소득 구성 .....	77
<표 2-51> 개인 취업재산소득 계층별 특성 분포 .....	78
<표 2-52> 가구 균등화시장소득 5분위 vs. 개인시장소득 5분위 .....	80
<표 2-53> 가구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vs. 개인 총소득 5분위 교차 분포 ..	81



<표 2-54> 가구와 개인의 소득분위 동질성 추이 .....	82
<표 2-55> 가구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vs. 개인 취업소득5분위 교차 분포	84
<표 2-56> 부부간 소득분위 차이 .....	85
<표 2-57> 경상소득 상위10% 가구의 부부간 소득분위 차이 .....	86
<표 2-58> 경상소득 중위51~60% 가구의 부부간 소득분위 차이 .....	86
<표 2-59> 개인 소득유형별 구성 비율 추이 .....	89
<표 2-60> 개인 소득유형별 구성 비율 추이(취업소득 상위5%) .....	90
<표 2-61> 개인 소득유형별 구성 비율 추이(취업소득 하위40%) .....	90
<표 2-62> 상위5%와 하위40% 가구의 기본 특성 .....	92
<표 2-63> 상위5%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	93
<표 2-64> 하위40%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	93
<표 2-65> 상위5%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	96
<표 2-66> 하위40%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	96
<표 2-67> 소득계층별 주요 산업 및 직업군 .....	97
<표 2-68> 소득-자산 결합 25개 계층 분위 .....	99
<표 2-69> 소득-자산 결합 25개 계층분위 연도별 가구수 .....	100
<표 2-70> 소득-자산 25계층 가구의 분포(2023) .....	101
<표 2-71> 소득-자산 결합 25개 계층분위 가구 특성 .....	102
<표 2-72> 소득-자산 25계층 중 최상-최하 계층의 특성 .....	103
<표 2-73>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	104
<표 2-74>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	104
<표 2-75>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	107
<표 2-76>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	107
<표 2-77> 소득계층별 주요 산업 및 직업군 .....	108
<표 3-1> 계층분석 이론의 주요 흐름 .....	118
<표 3-2> 주요 계층분석 모델과 분석 결과 .....	125
<표 3-3> 이론기반 사전적 정의 - 하시모토 겐지의 5계급 분류 기준 .....	131

<표 3-4> 계층분석 방법 장단점 비교 .....	134
<표 3-5> 노동패널 연도별 유효 표본수 .....	143
<표 3-6> 분석대상 표본의 기술통계 .....	144
<표 3-7> 2023년 표본 취업자 분포 .....	146
<표 3-8> 지표 변수의 분포(원변수) .....	147
<표 3-9> 지표 변수의 분포(표준화/결측대체) .....	147
<표 3-10> 지표변수 상관관계 행렬 .....	148
<표 3-11> LCA 분석 적합모델 판단 지표 .....	149
<표 3-12> Model of Fit Statistics of the Latent Class Models .....	149
<표 3-13> 6개 계층의 지표변수 특성(2023) .....	155
<표 3-14> 6개 계층의 주요 특성(2023) .....	156
<표 3-15> 6개 계층의 명칭 부여 .....	156
<표 3-16> 사회계층(Latent Class) 비율 추이 - 취업자 .....	158
<표 3-17> 사회계층(Latent Class) 비율 추이 - 15세이상 전체 인구 .....	158
<표 3-18> 사전 정의에 의한 5계층 분류 결과 - 취업자 .....	162
<표 3-19> 사전 정의에 의한 5계층 분류 결과 - 취업자(60세미만) .....	163
<표 3-20> 5계층 비율 추이 - 취업자 .....	167
<표 3-21> 종사상지위/고용형태 vs. LCA 6계층 비교 - 취업자 .....	170
<표 3-22> 종사상지위/고용형태 vs. 사전정의 5계층 비교 - 취업자 .....	171
<표 3-23> LCA 6계층 vs. 사전정의 5계층 비교 - 취업자 .....	172
<표 3-24> 2018~2023년 자산 증감액 및 주택관련 지표 .....	184
<표 3-25> 연령-성별-사회계층 평균 개인소득 .....	185
<표 3-26> 5계층 결정요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odds ratio) .....	189
<표 3-27> 불안정노동이 될 확률에 대한 3가지 선형회귀 모델 추정 .....	192
<표 3-28> 불안정노동계층이 될 확률의 평균 한계효과(종합) .....	194
<표 3-29> 불안정노동계층의 연평균 이동률 .....	197
<표 3-30> 전기간 전이행렬(1998~2023) .....	198
<표 3-31> 지위유지 .....	198

<표 3-32> 상향이동 .....	198
<표 3-33> 하향이동 .....	198
<표 3-34> 유럽 사회경제계층 분류 .....	219
<표 3-35> KLIPS 필요 변수 및 차수 .....	220
<표 3-36> 개인 ESeC 분포 .....	221
<표 3-37> 가구 ESeC 분포 .....	222
<표 3-38> ESeC 개인 평균 월 취업소득 .....	224
<표 3-39> ESeC 가구 평균 균등화 총소득 .....	225
<표 3-40> ESeC 가구 부동산 자산 .....	226
<표 3-41> ESeC 가구 금융 자산 .....	227
<표 3-42> 개인 KSeC 분포 .....	232
<표 3-43> 가구 KSeC 분포 .....	233
<표 3-44> KSeC 개인 평균 월 취업소득 .....	234
<표 3-45> KSeC 가구 평균 균등화 총소득 .....	237
<표 3-46> KSeC 가구 부동산 자산 .....	238
<표 3-47> KSeC 가구 금융 자산 .....	240

## 그림 차례

<그림 2-1> 가구 소득의 결정 과정 .....	10
<그림 2-2>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12
<그림 2-3> OECD 회원국 지니계수 비교(2022년) .....	13
<그림 2-4> OECD 주요국 시장소득 지니계수 추이 .....	14
<그림 2-5> OECD 주요국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추이 .....	15
<그림 2-6> WID의 지니계수 국제비교 .....	16
<그림 2-7> WID 주요국 세전소득 지니계수 추이 .....	17
<그림 2-8> WID 주요국 세후소득 지니계수 추이 .....	17
<그림 2-9> 1980년 이후 한국 상위계층 소득점유 비중 .....	20
<그림 2-10> 상위10% 소득집중도 국제비교 .....	21
<그림 2-11> 상위1% 소득집중도 국제비교 .....	22
<그림 2-12>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 .....	38
<그림 2-13> 개인취업소득(근로+사업) 분포 변화 .....	42
<그림 2-14> 개인취업소득(근로+사업) 성별 분포(2012 vs. 2023년) .....	43
<그림 2-15> 가구 시장소득 분포 변화 .....	45
<그림 2-16> 개인 취업소득 vs.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 .....	46
<그림 2-17> 개인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지니계수 .....	46
<그림 2-18> 개인총소득 분포 변화 .....	48
<그림 2-19> 개인총소득과 가구 경상소득 지니계수 .....	50
<그림 2-20> 순자산과 주택가격 지니계수 .....	54
<그림 2-21>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점유비중 .....	56
<그림 2-22> 균등화 시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	56
<그림 2-2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계층별 점유비중 .....	57
<그림 2-2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	57
<그림 2-25> 경상소득(비균등화) 계층별 점유비중 .....	58

<그림 2-26> 경상소득(비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	58
<그림 2-27> 시장소득(비균등화) 계층별 점유비중 .....	59
<그림 2-28> 시장소득(비균등화) 상위10% 점유비중 .....	59
<그림 2-29> 처분가능소득(비균등화) 계층별 점유비중 .....	60
<그림 2-30> 처분가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	60
<그림 2-31> 순자산 상위10% 점유비중 .....	61
<그림 2-32> 거주주택 자산 계층별 점유비중 .....	62
<그림 2-33> 거주주택 자산 상위10% 점유비중 .....	62
<그림 2-34> 상위1%와 상위10%의 개인 근로소득 점유비중 변화 .....	63
<그림 2-35> 상위5%와 상위10%의 개인 취업재산소득 점유비중 변화 .....	64
<그림 2-36> 상위1%와 상위10%의 개인 시장소득 점유비중 변화 .....	65
<그림 2-37> 상위5%와 상위10%의 개인 총소득 점유비중 변화 .....	66
<그림 2-38>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교차 분포 .....	79
<그림 2-39>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교차 분포 .....	81
<그림 2-40> 가구-개인의 동조화 경향 .....	83
<그림 2-41> 가구-개인의 탈동조화 경향 .....	83
<그림 2-42> 부부간 소득 동질성 추이 .....	87
<그림 2-43> 혼합형 소득유형 구성비 추이 .....	91
<그림 2-44> 상위5%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	94
<그림 2-45> 하위40%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	94
<그림 2-46> 상위5% 가구의 가구주 직업 분포 .....	95
<그림 2-47> 하위40% 가구의 가구주 직업 분포 .....	95
<그림 2-48> 소득계층별 가구주 산업 분포 .....	98
<그림 2-49> 소득-자산 25계층 가구의 분포(2023) .....	101
<그림 2-50>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	105
<그림 2-51>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	105
<그림 2-52>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가구주 직업 분포 .....	106
<그림 2-53>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가구주 직업 분포 .....	106

<그림 2-54> 소득-자산 최상위 및 최하위 가구의 산업 및 직업 분포 .....	109
<그림 3-1> 자료기반 통계적 추정 - 잠재계층분석(LCA) .....	132
<그림 3-2> 통계적 추정 : 잠재계층분석 단계별 절차 .....	138
<그림 3-3> 사전적 정의 - 계층분류 도식 .....	141
<그림 3-4> 노동패널 취업자의 개인 특성 추이 .....	145
<그림 3-5> 노동패널 취업자의 가구 특성 추이 .....	146
<그림 3-6> 추정모델별 BIC와 Entropy 비교 .....	150
<그림 3-7> 모델별 분포와 6개 계층모델 .....	150
<그림 3-8> 계층별 지표변수 표준화 수치 .....	151
<그림 3-9> 시각화를 통한 지표변수의 계층별 분포 특성 .....	153
<그림 3-10> 기업규모의 분포 .....	154
<그림 3-11> LCA 6계층 주요 지표 비교 .....	155
<그림 3-12> LCA 계층별 추이 .....	157
<그림 3-13> 6개 계층 빈곤율(2023) .....	159
<그림 3-14> 최하위계층 vs. 실업자 빈곤율 추이 .....	160
<그림 3-15> 5계층 주요 지표 비교 .....	162
<그림 3-16> 5계층 및 실업자 상대빈곤율(2023) .....	164
<그림 3-17> 한국과 일본의 5계층 분포 비교 .....	165
<그림 3-18> 사회계층별 비중 추이 .....	168
<그림 3-19> 노동패널 표본별 불안정노동계층 비중 변화 .....	169
<그림 3-20> 불안정노동계층 평균연령과 여성비율 .....	169
<그림 3-21> 계층분류 결과와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 비교 .....	174
<그림 3-22> 사전분류 vs. 통계적추정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 .....	176
<그림 3-23> 5개 계층별 개인소득 격차 .....	177
<그림 3-24> LCA 계층별 개인소득 격차 .....	178
<그림 3-25> 5개 계층별 가구소득 격차 .....	179
<그림 3-26> LCA 계층별 가구소득 격차 .....	179

<그림 3-27> 5개 계층별 총자산 격차 .....	180
<그림 3-28> LCA 계층별 총자산 격차 .....	181
<그림 3-29> 5개 계층별 순자산 격차 .....	182
<그림 3-30> 5개 계층별 주택가격 격차 .....	183
<그림 3-31> LCA 계층별 주택가격 격차 .....	183
<그림 3-32> 계층별 주택보유 비율 변화(2018~2023) .....	184
<그림 3-33> 연령-성별 사회계층 분포(2023) .....	185
<그림 3-34> 5개 계층별 여성비율 .....	186
<그림 3-35> 생애미혼율(45~54세 미혼율) .....	202
<그림 3-36> 불안정노동계층 생애미혼율(45~54세) .....	203
<그림 3-37> 불안정노동계층 유배우 비율 .....	203
<그림 3-38> 주택소유비율과 유배우비율(60세미만 남자) .....	204
<그림 3-39>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 .....	205
<그림 3-40> 신중간계층의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 .....	206
<그림 3-41>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LCA) .....	206
<그림 3-42>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 .....	207
<그림 3-43> 부부간 소득이질성 추이 .....	207
<그림 3-44>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 .....	208
<그림 3-45> 현재 행복도(0~10점) .....	209
<그림 3-46>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2023년) .....	209
<그림 3-47>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 .....	211
<그림 3-48> 노동조합 가입률(5계층) .....	212
<그림 3-49>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여부 .....	214
<그림 3-50> 노동조합에 대한 성-연령별 인식 차이 .....	215
<그림 3-51> ESeC 개인 평균 월 취업소득 .....	224
<그림 3-52> ESeC 가구 균등화 총소득 .....	225
<그림 3-53> ESeC 가구 부동산 자산 .....	226
<그림 3-54> ESeC 가구 금융 자산 .....	227

<그림 3-55> 임금노동자 월취업소득 .....	230
<그림 3-56> 2023년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월 취업소득 분포 .....	231
<그림 3-57> KSeC 개인 월 취업소득 .....	235
<그림 3-58> 2023년 KSeC 개인 월 취업소득 분포 .....	235
<그림 3-59> KSeC 가구 균등화 경상소득 .....	237
<그림 3-60> 2023년 KSeC 가구 계층별 균등화 가구소득 .....	238
<그림 3-61> KSeC 가구 부동산 자산 .....	239
<그림 3-62> 2023년 KSeC 가구 부동산 자산 .....	239
<그림 3-63> KSeC 가구 금융 자산 .....	240
<그림 3-64> 2023년 KSeC 가구 금융자산 .....	241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한국 경제는 최근 수십년 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놀라운 성취를 이룬 나라로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60년여 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교역량, 국부자산은 세계 10위권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1960~70년대 개발독재 시기, 1980~90년대의 개방경제로의 변화시기, 1998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회복과정,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상황을 맞으며 새로운 형태로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왔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 인구 구조와 변화와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과정에서 새로운 불평등 요인들이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출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 개선되고 있던 소득분배지표(2017~2019)가 다시 악화되었다가(2020~2021), 경기둔화와 최상층 소득의 정체에 의해 공식분배지표는 개선되고 있다(2022~2023).

그동안 불평등 문제는 국내외 학계에서 경제학과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과 영역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연구는 국가별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상태와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고(Stiglitz,

#### 4 한국의 소득분배와 불평등 지도

2012; Deaton, 2013; Milanovic, 2016, Piketty, 2014), 국내에서의 연구는 1980~90 년대의 계급론 연구(서관모, 1987; 조돈문, 1994; 신광영, 1994; 신광영, 2004)에 이어 2000년대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이정우·황성현, 1998; 김유선, 2003; 이병훈, 2006).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기업간 소득분배와 노동-자본간 소득분배를 비교하거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가운데 특정 영역을 선택하여 한쪽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낙년·김종일, 2013; 김낙년, 2018; 주상영, 2014; 홍민기, 2015; 전병유, 2016; 정준호·전병유·장지연, 2017; 강신욱·김현경, 2016; 신광영, 2013). 사회계급(social class)과 계층의 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증분석(Wright 2003; 신광영, 2015; 橋本健二, 2018)도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소득불평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김낙년(2016)과 홍세현(2024)의 연구와 분석이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한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두 사람의 연구는 토마 피케티의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에 구축된 58개국 국제비교 데이터에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낙년의 연구는 가구에 대한 소득통계가 고소득층의 소득의 과소추계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과 국민계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상위층의 소득을 보정하여 불평등 실태를 추계했고, 홍세현은 토마 피케티(T. Piketty)와 주크만(G. Zucman) 등이 개발한 분배국민계정(DINA) 방식을 이용하여 가구조사와 국세청 소득자료, 국민계정을 결합하여 소득 상위층과 비과세 소득의 누락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개인과 가구를 연결하여 분석하면서도 소득계층의 분류를 시도하거나 자산까지 포함한 계층 분류를 시도하는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임금 및 소득과 가구단위의 시장소득 형성 및 재분배 처분가능소득의 결정,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양상 변화 등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연구 목적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임금(personal wage)과 가구의 소득(household income)을 구분하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23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개인수준의 임금분포와 가구수준의 소득분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개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문제를 사회계층 이론과 실증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경제활동의 상태와 고용형태, 기업규모, 산업 및 직업에 따른 임금 및 소득의 개인단위 계층분포가 가구단위의 소득과 자산의 계층분포로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계층구조가 형성되어온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 형성과 변화과정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개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연결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한 계층분류 결과와 이론적 모형에 기반한 계층분류 결과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에는 기존의 소득분배에 관한 분석 성과를 활용하면서 사회계층 분류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단계 한국 사회의 소득분배 및 불평등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앞으로 정책적 논의와 사회적 실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개인소득의 계층별분포가 가구소득의 계층별분포로 어떻게 전환되어 귀속되는지를 분석하여 개인소득 분포와 가구소득 분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가구의 노동시장내 지위 및 인적특성과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을 결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계층의 구성과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과제이다.

여기에는 개인과 가구의 시장소득과 조세와 복지에 의한 재분배소득이 모두 분석

## 6 한국의 소득분배와 불평등 지도

대상에 포함되며 객관적 데이터로 측정되는 인적자본과 고용상지위,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하며, 계층귀속 인식과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부가적인 사회문화적 지표들은 부수적인 설명요소로 이론모형 범위 안에서 포함하게 될 것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3)의 가구 및 가구원 데이터이며, 노동패널(1998~2023)은 사회계층(social class)의 분류와 개인과 가구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 제2장

#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

제1절 소득분배 측정의 기준과  
범위

제2절 우리나라 소득분배 현주소:  
OECD 및 WID 통계를  
이용한 국제비교

제3절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데이터의 의의

제4절 RAS 데이터로 본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 제2장 ■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

### 제1절 소득분배 측정의 기준과 범위

#### 1. 소득분배 측정 단위로서의 개인과 가구

일반적으로 불평등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개인 기준인지 가구 기준인지 매우 중요한데도 엄밀하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과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측정 방법과 해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소득분배의 양상과 변화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개인 소득은 개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분포를 기준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며,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가구원들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이 때 가구원들간 소득이 공유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불평등을 측정하며<sup>1)</sup> 가구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조세와 복지에 의한 재분배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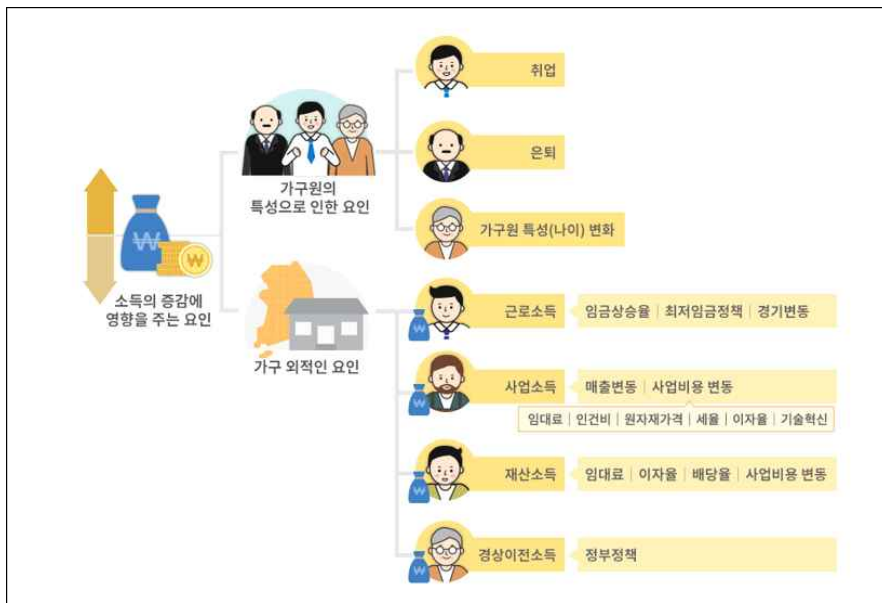
과거에는 개인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고 반대의 경우 다른 가구원들이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구주의 낮은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득이 높은 개인

1) 가구 단위의 소득분배 지표를 작성할 때 가구소득을 1인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가구원 수로 나누어 구한 균등화소득(equivalized income) 개념이 사용된다. OECD에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청도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들끼리 가구를 구성하는 동류혼(同類婚) 비율이 높아지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맞벌이를 지속하면서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개인소득도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반화될 경우 가구 단위 소득불평등이 개인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개인소득은 취업여부와 임금수준,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규모 등 시장의 상황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반면, 가구소득은 조세와 복지급여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소득 불평등보다 가구단위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림 2-1> 가구 소득의 결정 과정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개인소득 중에서 임금은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 임금대장이나 소득신고 자료를 통해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단위의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주된 대상이 된다. 임금불평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노동시장의 수

요공급(고용률, 실업률)과 취업자 개인과 일자리의 특성 등 시장 요인도 있지만, 최저임금 제도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등 제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사업소득은 일정한 계절성을 띠고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며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재료비,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sup>2)</sup> 임금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재산소득도 연간단위로 파악해야 한다.

소득을 측정하는 기간에 따라 소득자의 규모와 분포의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월 단위 고용통계와 임금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취업한 사람에 한해 소득이 파악되지만, 연간 단위의 소득 측정 때는 매우 짧은 기간만 취업소득을 얻은 경우까지 취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집계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자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매우 작은 소득까지 집계된다.

통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의 포괄범위와 정확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소득 중 임금의 경우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를 통해 각각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데, 가구조사는 비공식부문과 비사업체 소속인 경우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소득이 매우 높은 개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구조사를 통한 소득통계 작성에 국세청과 정부 부처의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방법이 병행된다.

하지만 소득분배 혹은 소득불평등을 얘기할 때에는 대체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경제 수준에서 제도부문을 구분할 때도 기업과 가계, 정부를 경제의 3주체로 정의하는데, 개인이 아닌 가계(household)를 하나의 경제단위의 기초로 설정하는 것은 가구원 간에 소득과 지출이 공유되고 취업, 가사, 은퇴 등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가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소득이 가구 소득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소득 그 자체로도 생활의 기초이자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불평등 문제는 기업규모간, 고용형태간 격차 등이 확대될 경우 개인의 취업선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통합에도 위협이 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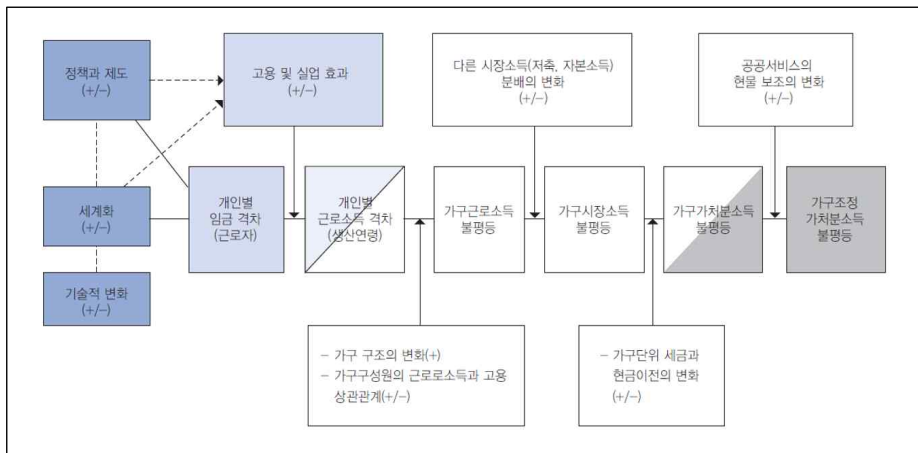
2) 그런 점에서 사업소득은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문에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2. 개인소득 분배지표와 가구소득 분배지표 추이

이에 따라 소득분배의 각 단계별로 개인수준과 가구소득의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임금불평등을 측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해서 가구소득의 결정 과정별로 근로소득과 다른 요소소득들의 분배상태, 가구 구성의 특징과 변화, 조세와 재분배에 의한 정책적 효과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래의 그림은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각 단계별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 현황과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 2-2>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자료 : OECD, Divided We Stand, 2012,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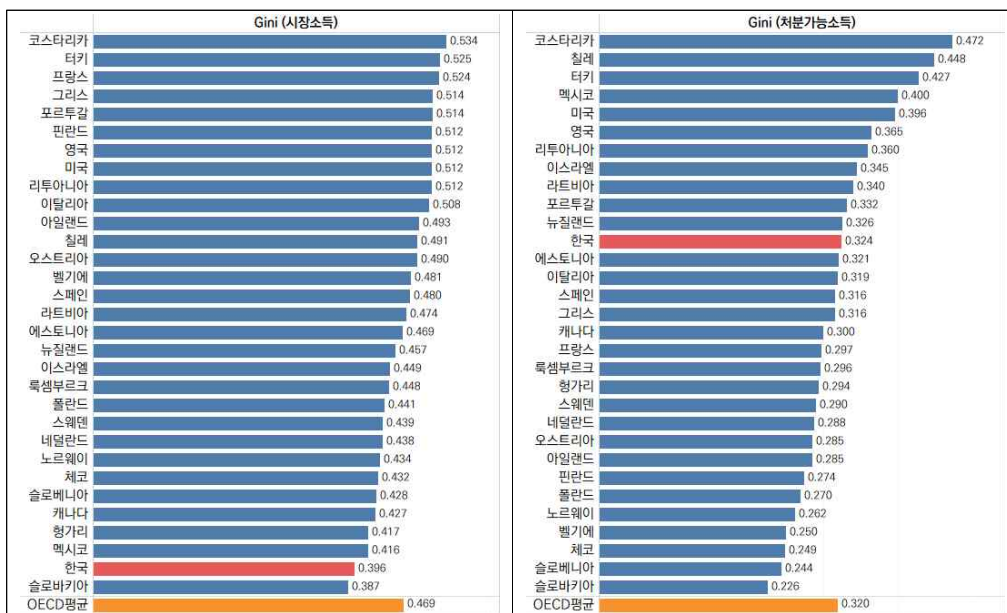
## 제2절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의 현주소: 국제비교

## 1. 한국의 소득불평등 국제비교 : OECD와 WID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상태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전에 장기간에 걸친 소득분배 추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은 OECD와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등 학자들이 운영하는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이하 WID)가 대표적이다.

OECD의 자료는 각국 정부가 보고하는 소득통계를 집계한 것이며, WID는 각국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각국의 가구소득 통계와 소득세, 국민 계정 등 다른 자료들을 재가공해서 국제비교 자료를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lt;그림 2-3&gt; OECD 회원국 지니계수 비교(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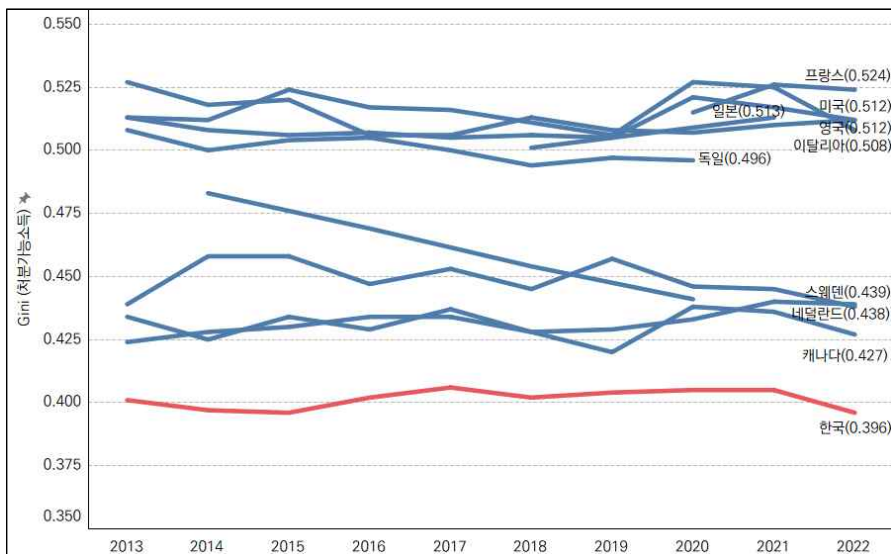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이 글에서는 OECD와 WID 통계에서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기로 하고 이용가능한 OECD 회원국 전체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주요 8개국과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sup>3)</sup>

먼저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31개 회원국 중 30위로 가장 평등한 국가에 속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2위로 불평등한 국가에 속한다. 주요 국가들과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비교하면 한국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는 줄곧 낮은 불평등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가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속했으며 최근 프랑스가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과 함께 시장소득 불평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며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도 매우 평등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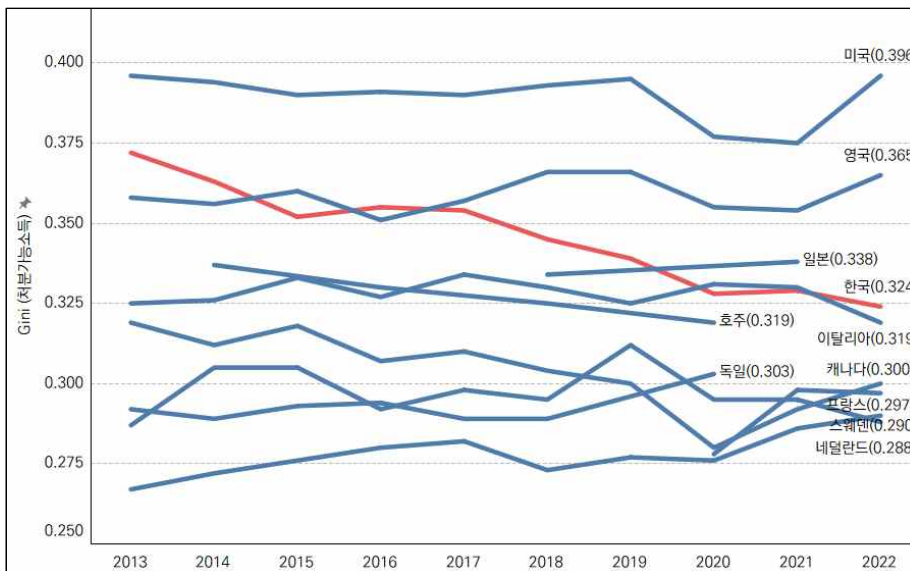
<그림 2-4> OECD 주요국 시장소득 지니계수 추이



3) 가독성을 고려해서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등 8개국으로 하였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을 주요 국가들과 추이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10년 전에는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속했지만, 그동안 빠르게 불평등도가 완화되면서 2022년에는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는 불평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24로 이탈리아(0.319)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스웨덴이 가장 평등한 국가에 속했으나 2022년에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평등한 나라로 기록됐다.

<그림 2-5> OECD 주요국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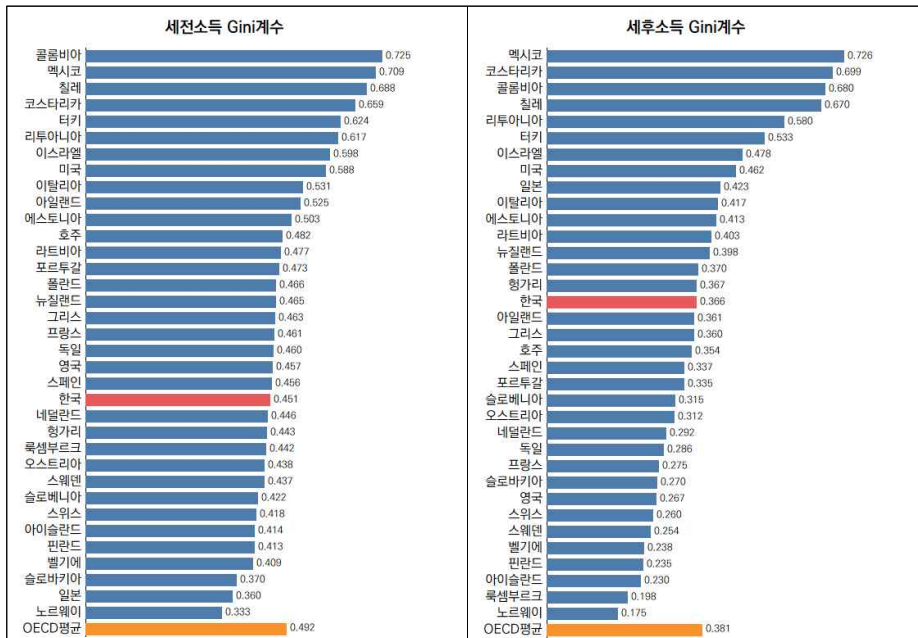
그런데 피케티 등 연구자들이 작성한 WID의 지니계수에서는 2022년 한국의 위치가 세전소득에서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평등한 국가(35개국 중 22위)로 나타나고 세후소득에서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불평등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WID의 지니계수는 OECD의 통계와 작성에 사용된 자료와 작성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sup>4)</sup>, 세전소득 지니계수는 OECD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4) OECD의 소득분배 통계는 한국의 경우 공식분배지표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사용됐으며, WID는 가구

매우 높게 추정됐고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OECD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약간만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혹은 세후소득 지니계수가 국제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과 함께 최근 들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림 2-6> WID의 지니계수 국제비교



자료 : World Inequalit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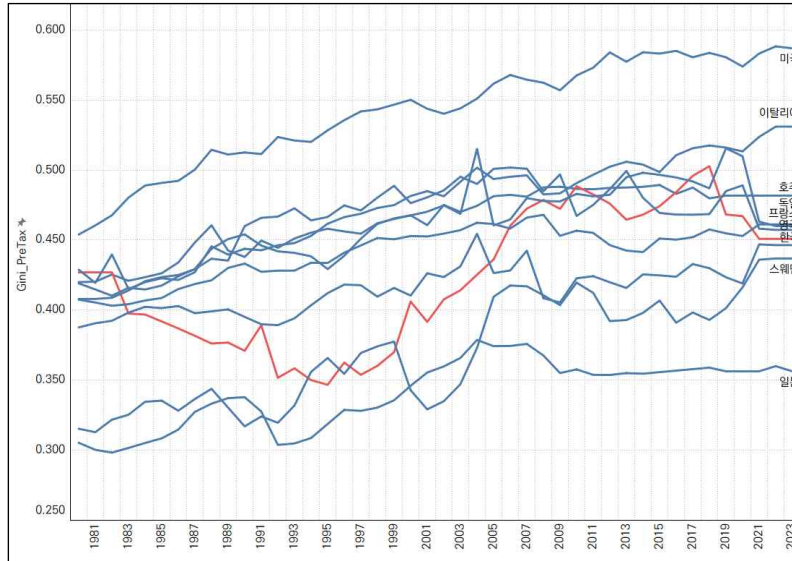
WID 지니계수 통계에서 OECD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이 적어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세전소득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 속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중간 수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WID 통계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낮았던 때는 1995년으로 그 후 2010년까지 한국의 지니계수는 세전과 세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이를 때까지 지니계수 상승이 나타나긴 했지만 한국의 상승폭과

소득 미시자료와 국민계정, 국제통계 등을 활용해서 20세이상 성인의 개인소득으로 변환한 것으로 한국의 가구 소득 자료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것이다. 이 자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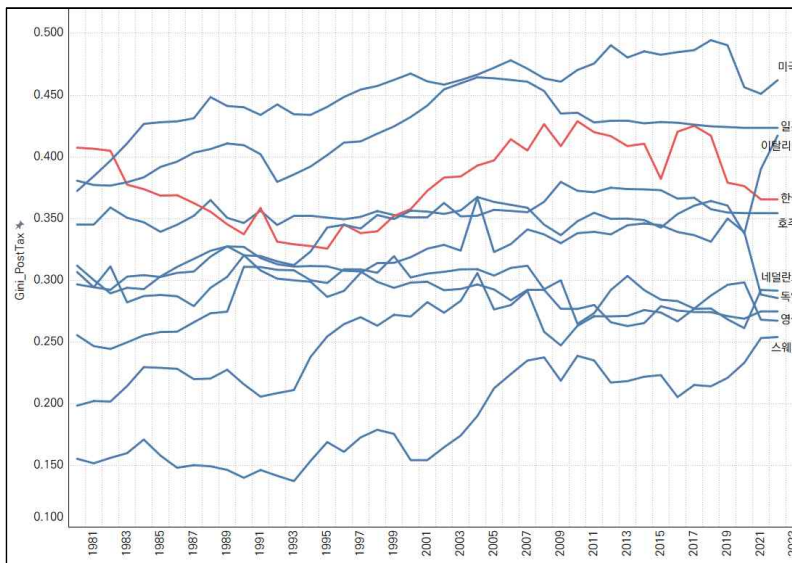


속도가 단연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

<그림 2-7> WID 주요국 세전소득 지니계수 추이



<그림 2-8> WID 주요국 세후소득 지니계수 추이



자료 : World Inequality Database.

## 2.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한국 소득불평등 진단

그런데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한 한국의 소득분배 통계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니계수보다는 최상위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얼마만큼 점유하고 있는지를 소득불평등의 주된 지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자산불평등에 관한 지표들도 불평등의 중요한 척도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데이터를 1980년까지 소급해서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기 때문에 2011년 통계부터 수록하고 있는 OECD에 비해 시계열면에서도 충분히 긴 기간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WID의 한국 소득분배 통계 작성 결과를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후 이 연구에서 다룰 한국의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 추이를 이해하는데 사전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WID의 한국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은 김낙년(2018)에 의해 196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진행된 것이 대표적이며 가장 최근에는 홍세현(2024)에 의해 1933년 이후 2023년까지의 한국 데이터가 정리된 바 있다.<sup>5)</sup> 특히 홍세현·김낙년·Zhexun Mo·Li Yang(2024)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국세청 소득자료, 국민계정을 활용하여 한국의 소득분배를 20세 이상 성인기준으로 개인화하여 소득분배 시리즈를 추계하여 작성했는데, 이른바 분배국민계정(DINA)을 활용한 방법으로 이 방법론에서는 성인의 개인소득 총합이 국민계정의 총소득(GNI, NNI)와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데이터 작성에 활용된 자료는 1963~2022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소득·지출) 원자료(도시-농어가 결합)와 국세청 소득자료, 국민계정(총국민소득과 비과세 소득 추가 보정) 등이 이용되었는데 이들 자료를 결합하여 성인 개인 소득분포를 추정한 것이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10% 소득점유비중은 35.5%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6위로 중간수준이며, 상위 5%의 점유비중은 28.0%로 10위, 상위 1%의 점유비중은 15.1%로 9번째로 최상위 소득계층으로 갈수

5) SEHYUN HONG, NAK NYEON KIM, ZHEXUN MO, & LI YANG. (2024).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1933-2022.

록 소득집중도가 심화되고 불평등 수준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 10%, 상위 5%의 소득집중도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고,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미국보다는 낮지만 독일, 영국, 일본보다 모두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자산불평등의 경우 순자산 상위10%의 점유비중은 59.0%로 중간 수준이지만, 국민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 이른바 피케티비율로 불리는 소득자산 배율은 9.8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국공유 자산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한 자산으로 국한할 경우 민간소득 대비 민간순자산배율은 6.8배인데 이것 역시 7번째로 자산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소득 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집중도가 심화되며, 소득대비 자산가격이 매우 높아 자산불평등이 더 심한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 소득/자산 집중도(2023년 기준)

(단위: %, 배)

순위	국가명	상위10%	순위	국가명	상위5%	순위	국가명	상위1%	순위	국가명	순자산10%	순위	국가명	자산/소득배율	순위	국가명	민간순자산/소득배
1	볼로비아	0.609	1	멕시코	0.461	1	터키	0.244	1	볼로비아	0.790	1	한국	9.810	1	스위스	7.969
2	멕시코	0.596	2	칠레	0.450	2	칠레	0.220	2	멕시코	0.784	2	뉴질랜드	8.904	2	이스라엘	7.946
3	칠레	0.578	3	볼로비아	0.447	3	멕시코	0.216	3	칠레	0.768	3	호주	8.759	3	뉴질랜드	7.724
4	터키	0.567	4	터키	0.444	4	미국	0.207	4	터키	0.756	4	스위스	8.448	4	포르투갈	7.416
5	코스타리카	0.509	5	코스타리카	0.377	5	코스타리카	0.182	5	코스타리카	0.642	5	이스라엘	7.732	5	아이슬란드	7.321
6	이스라엘	0.492	6	미국	0.359	6	볼로비아	0.179	6	이스라엘	0.628	6	노르웨이	7.701	6	호주	7.094
7	미국	0.468	7	이스라엘	0.357	7	이스라엘	0.168	7	미국	0.712	7	아이슬란드	7.585	7	한국	6.802
8	일본	0.435	8	일본	0.332	8	폴란드	0.152	8	일본	0.590	8	포르투갈	7.231	8	터키	6.725
9	폴란드	0.383	9	폴란드	0.286	9	한국	0.151	9	폴란드	0.619	9	터키	7.118	9	벨기에	6.513
10	이탈리아	0.371	10	한국	0.280	10	그리스	0.143	10	이탈리아	0.562	10	독일	6.924	10	이탈리아	6.466
11	독일	0.370	11	아일랜드	0.269	11	아일랜드	0.136	11	독일	0.585	11	일본	6.923	11	독일	6.455
12	아일랜드	0.368	12	독일	0.266	12	룩셈부르크	0.131	12	아일랜드	0.656	12	스페인	6.299	12	스페인	6.241
13	영국	0.362	13	이탈리아	0.263	13	영국	0.131	13	영국	0.572	13	프랑스	6.210	13	일본	6.215
14	룩셈부르크	0.360	14	영국	0.262	14	독일	0.128	14	룩셈부르크	0.591	14	네덜란드	6.186	14	미국	6.089
15	에스토니아	0.358	15	그리스	0.259	15	에스토니아	0.128	15	에스토니아	0.667	15	벨기에	6.163	15	프랑스	5.832
16	한국	0.355	16	룩셈부르크	0.258	16	일본	0.127	16	한국	0.580	16	스웨덴	6.002	16	네덜란드	5.718
17	라트비아	0.353	17	에스토니아	0.256	17	이탈리아	0.123	17	라트비아	0.609	17	미국	5.777	17	오스트리아	5.500
18	오스트리아	0.351	18	오스트리아	0.254	18	스페인	0.121	18	오스트리아	0.620	18	오스트리아	5.704	18	영국	4.753
19	그리스	0.350	19	뉴질랜드	0.254	19	뉴질랜드	0.121	19	그리스	0.608	19	이탈리아	5.698	19	스웨덴	4.596
20	포르투갈	0.350	20	프랑스	0.246	20	프랑스	0.121	20	포르투갈	0.600	20	아일랜드	5.092	20	아일랜드	4.504
21	뉴질랜드	0.350	21	스페인	0.246	21	오스트리아	0.115	21	뉴질랜드	0.572	21	핀란드	4.899	21	그리스	4.473
22	리투아니아	0.349	22	라트비아	0.245	22	핀란드	0.111	22	리투아니아	0.572	22	슬로베니아	4.711	22	칠레	4.314
23	프랑스	0.343	23	핀란드	0.239	23	스웨덴	0.109	23	프랑스	0.597	23	멕시코	4.622	23	슬로베니아	4.214
24	핀란드	0.343	24	포르투갈	0.238	24	라트비아	0.107	24	핀란드	0.559	24	칠레	4.576	24	코스타리카	4.184
25	스페인	0.342	25	리투아니아	0.237	25	호주	0.099	25	스페인	0.572	25	영국	4.410	25	헝가리	3.993
26	호주	0.329	26	헝가리	0.233	26	헝가리	0.098	26	호주	0.572	26	코스타리카	4.300	26	폴란드	3.918
27	헝가리	0.329	27	호주	0.222	27	스위스	0.098	27	헝가리	0.671	27	룩셈부르크	4.233	27	볼로비아	3.502
28	벨기에	0.328	28	벨기에	0.219	28	포르투갈	0.097	28	벨기에	0.523	28	폴란드	4.113	28	노르웨이	3.342
29	스웨덴	0.309	29	스웨덴	0.218	29	리투아니아	0.096	29	스웨덴	0.594	29	헝가리	4.083	29	핀란드	3.319
30	노르웨이	0.306	30	노르웨이	0.211	30	노르웨이	0.093	30	노르웨이	0.576	30	에스토니아	3.977	30	룩셈부르크	3.240
31	스위스	0.301	31	스위스	0.207	31	슬로바키아	0.092	31	스위스	0.628	31	그리스	3.914	31	멕시코	3.212
32	슬로베니아	0.299	32	슬로베니아	0.200	32	벨기에	0.085	32	슬로베니아	0.572	32	라트비아	3.617	32	라트비아	3.184
33	네덜란드	0.290	33	슬로바키아	0.191	33	슬로베니아	0.080	33	네덜란드	0.454	33	볼로비아	3.576	33	에스토니아	3.125
34	슬로바키아	0.280	34	아이슬란드	0.188	34	아이슬란드	0.080	34	슬로바키아	0.495	34	리투아니아	3.453	34	슬로바키아	3.082
35	아이슬란드	0.280	35	네덜란드	0.187	35	네덜란드	0.068	35	아이슬란드	0.567	35	슬로바키아	3.307	35	리투아니아	3.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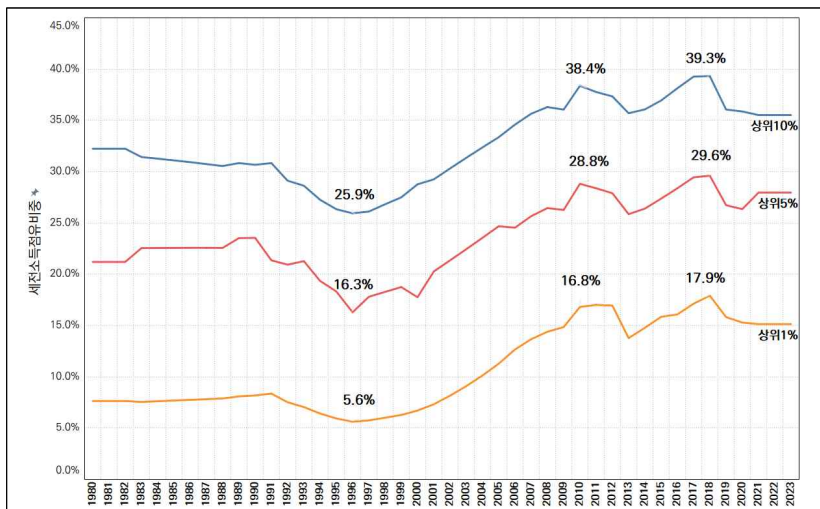
자료: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 <https://wid.world/>

1980년 이후 장기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비과세 자본소득의 최상위층 집중으로 불평등 악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1980년 이후 1990년까지는 상위10%의 소득집중도가 완만하게 낮아지고 상위5%와 상위1%의 소득집중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시기였고,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시기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0년까지 소득분배가 급격하게 악화됐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분배가 다시 개선되는 짧은 기간이 있은 뒤 다시 2016~2017년 기간에 분배 악화가 다시 진행됐다. 그리고 2018~2019년 기간 동안 소득분배가 다시 개선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소득분배 흐름이 정체하고 다시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이후 2023년까지 상위10%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1996년(25.9%)이며,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7년(39.3%)으로 나타난다. 2023년 현재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35.5%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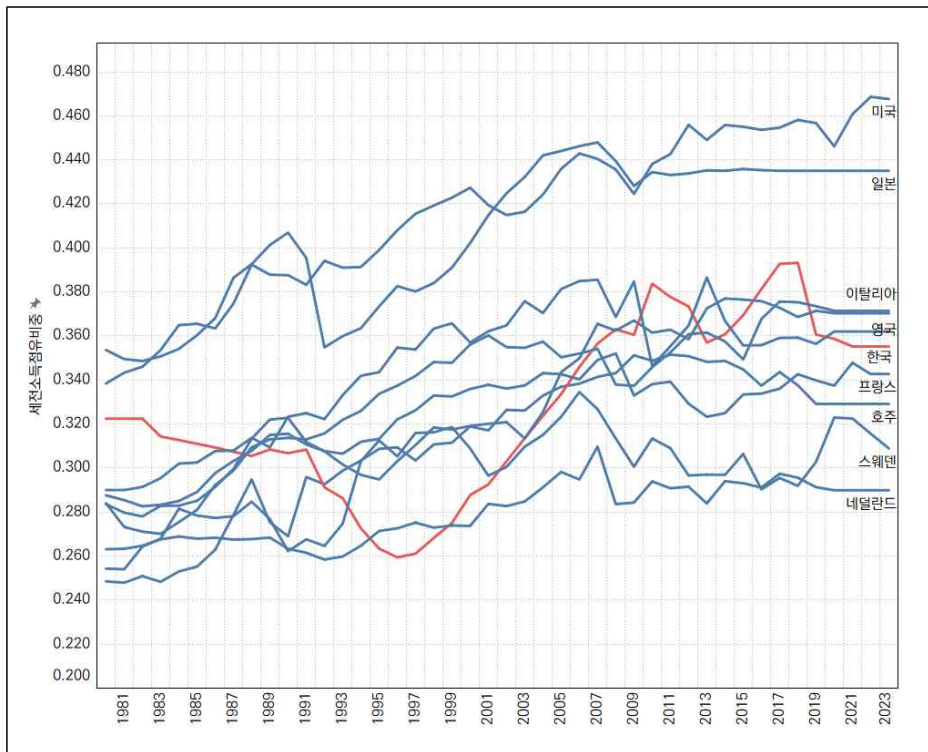
<그림 2-9> 1980년 이후 한국 상위계층 소득점유 비중



자료 : WID, 같은 자료.

WID가 추정한 한국의 상위10% 소득점유비중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1981년에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나 1991년 이후 1995년까지 급격하고 빠른 소득분배 개선이 이루어져 9개국 중 가장 소득집중도가 낮은 국가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까지 다시 어떤 나라보다 급격히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해서 2010년과 2017년에 다시 미국, 일본에 이어 다시 세 번째로 소득집중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2018~2019년 동안 소득집중도가 크게 완화되었지만 2020년 이후 그 폭은 완만해지고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보다 상위10% 소득집중도가 심한 국가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며, 한국보다 소득집중도가 낮은 국가는 프랑스,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가 있다. 상위10% 소득집중도는 9개국 중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0> 상위10% 소득집중도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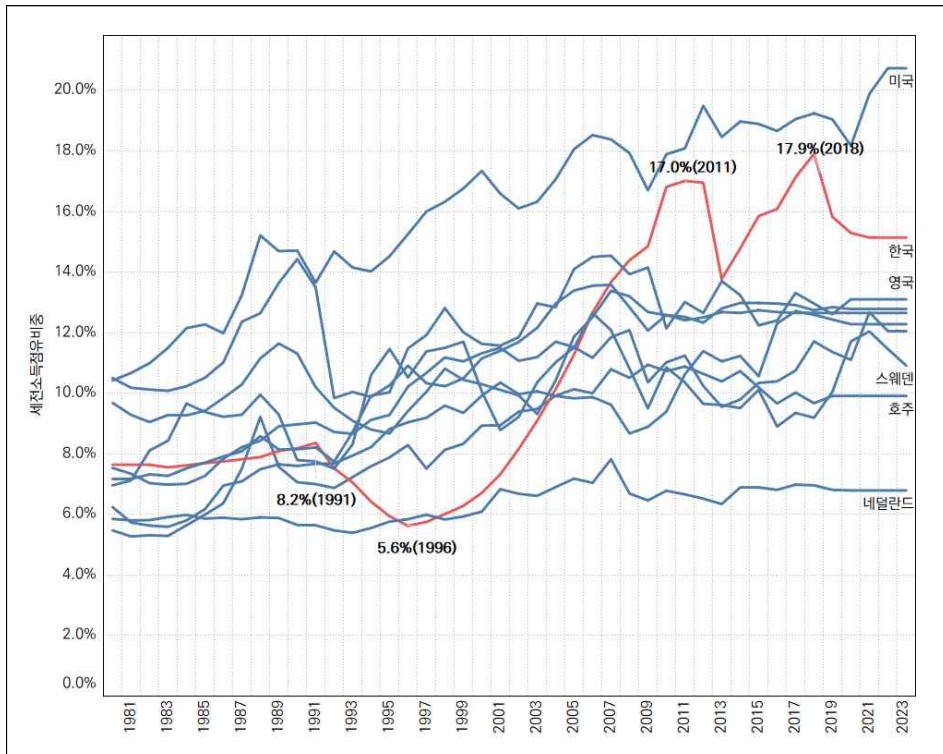


자료 : WID, 같은 자료.



그런데 상위1% 소득집중도를 보면 2018년 이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집중도가 심한 국가의 위치를 보이고 있다. 1996년에 9개국 중 가장 낮은 소득집중도(5.6%)를 보였던 한국이 약 30년만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로 변화된 것이다. 한편 상위5% 소득집중도는 변화 추세는 상위10%나 상위1%와 동일한 방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소득집중도는 28.0%로 미국(35.9%), 일본(33.2%)에 이어 9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1> 상위1% 소득집중도 국제비교



자료 : WID, 같은 자료.

### 3. WID 방법론의 의의와 한계

앞에서 살펴 본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이하 WID)의 한국 데이터는 개인수준의 불평등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원시자료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가계동향조사는 7,200가구 규모의 조사이고, 설문조사(가계부기입) 방식의 조사로 소득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고소득층의 소득 포착률이 매우 낮은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것은 WID의 한국 데이터 작성에 참여해 온 연구자들 스스로 여러 차례 지적해 온 것으로, 그럼에도 이 자료를 사용한 것은 1962년부터 조사가 시작돼 온 점 때문에 장기시계열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반에 공개된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에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를 활용해서 개인단위의 소득정보를 성별, 연령별로 구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가계동향조사는 고소득층의 포착률이 낮기 때문에 최상위층 소득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구간 집계통계와 국민계정상의 재산소득 정보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보정해서 소득분포를 추정하고 있다.<sup>6)</sup>

그렇지만 고소득 가구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면서 가구원의 소득정보로 담고 있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2011년 이후로 국한한다면, 가계동향조사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공공용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에는 가구원 개인의 소득정보가 제공되지 않지만, 통계청이 별도로 승인을 거쳐 제공하는 인가형 서비스(RAS)에서는 가구원의 개인소득과 상세한 소득변수, 그리고 자산과 관련한 정보가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채의 경우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행정자료로 정확한 소득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고, 복지급여도 정부의 행정자료로 지급된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6) 연구자들은 최상위층 소득의 분포가 파레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위소득 계층의 소득점유비율을 추정했다.

따라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우리나라의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포에 관한 단일자료 기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sup>7)</sup>

WID가 정확도가 낮은 가계동향조사를 미시자료로 이용하면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이용해서 이론적 추정과 데이터 보정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와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했던 것은 장기시계열의 자료를 만들면서 가구원의 개인소득 분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이후의 시기로 국한한다면 가구원 개개인의 특성과 소득 정보,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관한 실체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RAS 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통해 그것이 WID가 목표로 했던 개인소득 총합과 국민계정상의 가계소득 총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추가적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상세하고도 통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7) 다만,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은 통계법상 행정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자료만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자산의 경우에도 행정자료는 시장가격과 행정자료상의 공시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제약이 따른다.



### 제3절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데이터의 의의

#### 1.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모집단 대표성

앞서 밝힌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개인과 가구의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소득 자료가 거시자료인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와 총량에서 어느 정도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체계(tax unit)은 부분적으로 세액의 결정단계에서 부양가족 공제 등 가구개념을 적용하긴 하지만 소득세 부과와 기본단위는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개인이 아닌 가구 또는 부부를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WID도 개인 단위 소득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가구원이 아닌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신고 제도와 과세체계를 고려한다면 가금복의 15세이상 가구원 개인소득과 국세청의 개인단위 소득신고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비교 방법이다.

가금복의 가구원 개인 소득 정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자료에는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로 집계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의 총합을 추계할 수가 없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사업소득자(플랫폼, 프리랜서 유형), 연말정산 사업소득 신고자(보험설계사 등)으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 합산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선 가능한 것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합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한계가 아니라 국세청 소득통계의 불충분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 자료는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소득과 일종의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근로소득 신고가 완료되는 일용근로소득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해서 가금복의 가구원 근로소득 총액과 비교하면 된다.

2023년 귀속년도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수는 20,852천명이며 총 급여액은 903.4조원인데, 여기에 일용근로소득 신고자수가 7,088천명 일용근로소득액은 69.5조원 규모임. 이를 합산하면 총 근로소득자 수는 27,940천명이며 근로소득 총액은 973.8조원이 된다(<표 2-2> 참조).

<표 2-2> 국세청 개인 근로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교

(단위: 천명, 조원, 만원, %)

	국세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금복 접근률(%)		
	근로소득연 말정산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합계			가구원 근로소득					
	인원	소득	평균	인원	소득액	평균	인원	소득	평균	인원	소득	평균	인원	금액	평균
2012	15,768	467	2,960	7,879	49	62	23,647	516	2,181	19,189	513	2,676	81.1%	99.5%	122.7%
2013	16,360	498	3,044	7,879	54	69	24,238	552	2,279	19,615	535	2,729	80.9%	96.9%	119.8%
2014	16,687	529	3,168	8,078	59	73	24,765	587	2,371	20,098	570	2,837	81.2%	97.1%	119.6%
2015	17,333	563	3,245	8,262	58	70	25,595	620	2,424	20,165	585	2,903	78.8%	94.4%	119.8%
2016	17,740	596	3,360	8,126	62	76	25,866	658	2,544	24,743	741	2,997	95.7%	112.7%	117.8%
2017	18,006	634	3,519	8,161	65	79	26,166	698	2,669	24,626	678	2,752	94.1%	97.0%	103.1%
2018	18,578	677	3,647	8,172	63	77	26,750	740	2,768	24,942	726	2,911	93.2%	98.1%	105.2%
2019	19,167	718	3,744	7,769	60	77	26,936	777	2,886	25,007	755	3,019	92.8%	97.1%	104.6%
2020	19,495	746	3,828	7,406	58	79	26,902	804	2,990	25,119	773	3,076	93.4%	96.0%	102.9%
2021	19,959	803	4,024	7,018	60	85	26,977	863	3,200	26,371	830	3,148	97.8%	96.2%	98.4%
2022	20,540	865	4,214	6,928	66	96	27,467	932	3,393	27,059	910	3,364	98.5%	97.7%	99.1%
2023	20,852	903	4,332	7,088	69	98	27,940	973	3,482	27,486	971	3,532	98.4%	99.8%	101.4%

자료 : 국세통계연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한편 2023년 귀속년도 가금복의 가구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는 27,486천명이고 금액으로는 971.8조원으로 확인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소득이 포괄률은 인원수로는 98.4%, 금액으로는 99.8%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국세청에 신고되는 근로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추이를 비교해보면 행정자료로 소득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인원수와 소득금액에서 가금복과 국세청 자료의 근접률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이전에 가금복 데이터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

가 국세청의 소득신고 인원의 80% 수준이던 것이 2016년에는 95% 수준으로 높아졌고 2016년 이후에 점점 100% 수준에 근접하게 된 것이다. 가금복의 가구대상 설문조사로 수집하던 소득자료를 국세청 행정자료로 대체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이다.

둘 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과거에는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가금복이 더 높았으나 2016년 이후 평균소득의 차이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통계에서 근로자 평균소득은 4,332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금복의 가구원 근로소득 평균 3,532만원과 비교하면 가금복이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과소추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7,088천명, 69조, 1인당 평균 98만원)과 합산할 경우 1인당 평균소득이 3,482만원이 되며 이는 가금복의 가구원 평균 근로소득의 101.4% 수준으로 근접하게 돼 두 통계의 추정치가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총액과 평균 뿐만 아니라 소득 분포도 가금복이 국세청의 실제 신고 자료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소득구간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세통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의 소득금액규모별 분포(4-2-4)와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현황의 소득금액규모별 분포(4-4-10)을 결합해서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소득구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신고인원에서 1억원 이하의 소득자 비중이 95.01%를 차지하는데 가금복의 1억미만 근로소득자 가구원의 비중은 94.82%로 국세통계보다 1억원 이하 소득자 비중이 낮다. 가금복이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이 높고 10억원이상 초고소득자 비중에서도 국세통계가 0.02%인데 가금복도 0.01%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금복의 고소득층 포착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lt;표 2-3&gt; 국세청 개인 근로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교

(단위: 천명, 조원, 만원, %)

	국세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차이(B-A)
	근로소득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	합계	구성비율A(%)	근로소득 가구원	구성비율B(%)	
1천만 이하	2,869	5,337	8,205	29.40%	5,985	21.77%	-7.63%
2천만 이하	2,564	636	3,200	11.47%	3,787	13.77%	2.31%
3천만 이하	4,019	330	4,350	15.59%	4,693	17.07%	1.48%
4천만 이하	3,246	232	3,478	12.46%	3,687	13.41%	0.95%
5천만 이하	2,157	183	2,340	8.39%	2,544	9.25%	0.87%
6천만 이하	1,524	338	1,862	6.67%	1,843	6.70%	0.03%
8천만 이하	1,943		1,943	6.96%	2,259	8.22%	1.25%
1억 이하	1,136		1,136	4.07%	1,272	4.63%	0.55%
1억 이하 소계	19,459	7,056	26,515	95.01%	26,071	94.82%	-0.19%
2억 이하	1,215		1,215	4.35%	1,277	4.64%	0.29%
3억 이하	113		113	0.40%	96	0.35%	-0.05%
5억이하	45		45	0.16%	41	0.15%	-0.01%
10억 이하	16		16	0.06%	8	0.03%	-0.03%
10억초과	5		5	0.02%	3	0.01%	-0.01%
전체	20,852	7,056	27,908	100.00%	27,496	100.00%	0.0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에서 계산

## 2.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와 비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통해서 상위소득층의 소득점유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치를 가금복 원자료에서 추정한 소득점유 비중과 비중해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23년 국세청 천분위 자료에서 확인된 상위 20%의 소득총액은 438조로 전체 근로소득 총액 903조원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금복 데이터에서 추정한 상위 20%의 소득점유 비중은 49.96%로 전수 자료인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와 거의 동일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 자료에서 상위 10%의 소득점유 비중은 31.59%이고, 상위 5%의 점유비중은 20.4%, 상위 1%의 점유비중은 7.67%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것 역시 가금복에서 상위소득 계층의 점유비중을 추정한 결과 상위 10%가 32.11%, 상위 5%와

상위1%가 각각 20.18%, 6.78%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금복 데이터가 상위소득 점유비중 추정에서도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4> 국세청 개인 근로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 근로소득의 비교

	근로소득총액	상위소득층			
		상위20%	상위10%	상위5%	상위1%
국세청 천분위 자료	903조 (100.0%)	438조 (48.50%)	285조 (31.59%)	184조 (20.40%)	69조 (7.67%)
가계금융복지조사	1,026조 (100.0%)	512조 (49.96%)	329조 (32.11%)	207조 (20.18%)	69조 (6.78%)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천분위' 국회 제출 자료. 가금복 근로소득 총액은 RAS 원자료에서 계산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가금복 자료에서는 총액과 소득분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국세청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과 보험설계사, 음료판매업 등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신고액, 그리고 플랫폼과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각각 별개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인별 합산은 불가능하고 분포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총액 규모만 비교할 수 있다.

이에 총액만 비교하면 2023년 기준 종합소득 신고자의 사업소득은 인원은 12,179천명, 금액으로는 총 154.2조원이었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513천명의 2.5조원, 그리고 원천징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8,620천명 146.1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사업소득액은 302.8조원이 된다. 그런데 가금복에서 확인한 가구원의 사업소득액은 11,968천명, 281조원으로 확인되어 가금복의 사업소득의 포괄률이 92.9% 수준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9, 2020년에는 가금복의 사업소득 포괄률이 99% 수준에 달했으나 2021년 이후에 90% 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근로소득에 비해 포괄률은 다소 낮지만 개인과 가구, 총액의 분포와 불평등 정도를 단일 자료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금복을 분석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t;표 2-5&gt; 국세청 자료와 가금복 자료의 사업소득 총액 비교

(단위: 조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국세청 사업소득액	234.1	236.4	266.0	291.8	302.8
가금복 사업소득액	233.5	232.8	249.4	262.5	281.4
포괄률(%)	99.7%	98.5%	93.8%	90.0%	92.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가금복 사업소득 총액은 RAS 원자료에서 계산

끝으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하는 소득통계 가운데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는 종합소득 신고인원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의 중복을 제거한 것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과 일부 임대소득 중 재산소득까지 포함한 개인소득 집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가금복의 개인취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에 재산소득을 합산하여 비교해보면 확장된 범위에서 가금복 자료의 대표성을 추가로 확인해볼 수 있다.

국세청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재산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금복의 개인취업소득 및 재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계액) 총액이 통합소득보다 규모가 더 큰 반면 1인당 평균액이나 상위소득계층의 경계값은 국세청 자료보다 낮은 특징을 보인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신고한 인원이 모두 26,888천명으로 확인되지만 가금복 자료에서는 아주 작은 은행이자 소득이 있는 가구원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취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총수가 42,359천명에 이른다. 소득총액은 국세청 통합소득이 873조 규모인데 가금복의 취업소득 및 재산소득 총액은 1,087조에 달한다.

반면 평균소득은 국세청 통합소득이 1인당 4,123만원 수준인데 반해 가금복은 3,337만원 수준으로 이보다 낮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상위10%에 포함되려면 통합소득액이 8,402만원이 넘어야 하나 가금복 기준으로는 7,752만원이 경계값이 된다. 상

위5%와 상위1%의 경계값은 국세청 통합소득이 각각 1억 1,211만원과 2억 249만원 인데 반해 가금복 기준에서는 각각 1억 101만원, 1억 7,688만원을 넘어야 한다.

<표 2-6>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와 가금복 취업+재산소득 자료의 비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득자수(천명)	국세청	21,764	22,482	23,247	24,149	24,582	25,359	26,231	26,888
	가금복	39,490	39,700	39,739	39,861	40,026	41,551	41,725	42,359
소득총액(조원)	국세청	563	602	633	678	721	773	824	873
	가금복	765	804	832	857	987	1,036	1,063	1,087
1인당 평균소득(만원)	국세청	3,314	3,438	3,545	3,617	3,697	3,877	4,036	4,123
	가금복	2,498	2,610	2,675	2,727	2,778	2,954	3,146	3,377
상위10% 경계값(만원)	국세청	7,092	7,287	7,434	7,505	7,634	7,954	8,257	8,402
	가금복	6,091	6,409	6,534	6,668	6,763	7,044	7,333	7,752
상위5% 경계값(만원)	국세청	9,237	9,472	9,675	9,754	9,934	10,526	11,043	11,211
	가금복	8,170	8,569	8,708	8,889	8,908	9,437	9,819	10,101
상위1% 경계값(만원)	국세청	15,771	16,462	16,930	17,087	17,636	19,112	19,954	20,249
	가금복	14,020	15,003	14,823	15,001	15,044	16,640	16,524	17,688

자료 : 국세청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주 : 국세청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근로+사업+재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중복인원을 제거한 것임.  
가금복의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인별로 합산한 것임.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국세청 분리과세 소득이 인별로 합산되지 않는데 따른 한계이지 가금복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금복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를 충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 3. 국민계정과 총액 비교: 한국은행 가계분배계정과 비교

WID의 한국 데이터는 20세이상 성인 인구의 소득총액 추정치를 국민계정 통계와 비교하고 있다. 이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얼마나 전체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한국은행의 제도부문별 국민계정과 지난해 처음으로 발표한 시험통계인 <가계분배계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가금복의 경상소득 총액은 1,590조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의 가계

부문 총액 1,478조의 107.5%로 국민계정의 소득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 조사자료 방식의 2012~2015년 기간에는 국민계정 통계에 비해 85.3~88.9% 수준의 포괄률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가계총소득의 95% 수준을 포괄하게 되었고 2021년 이후에는 100% 수준을 넘게 되었다.

<표 2-7> 국민계정 가계총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민계정 (조원)	GNI	1,520	1,581	1,646	1,746	1,839	1,942	2,015	2,057	2,075	2,245	2,352	2,443
	기업	415	430	439	459	496	539	546	530	531	606	632	667
	가계(B)	922	963	1,014	1,081	1,124	1,166	1,223	1,274	1,286	1,350	1,415	1,478
	정부	660	697	738	788	826	865	913	961	965	1,038	1,103	1,148
가계금융 복지조사	경상소득(만원)	4,479	4,658	4,770	4,882	5,478	5,705	5,828	5,924	6,180	6,470	6,762	7,185
	가구수(천)	18,141	18,394	18,643	18,887	19,463	19,694	19,916	20,291	20,517	21,504	21,769	22,127
	총경상소득(A) (조원)	813	857	889	922	1,066	1,124	1,161	1,202	1,268	1,391	1,472	1,590
A/B		88.1%	88.9%	87.7%	85.3%	94.9%	96.3%	94.9%	94.3%	98.6%	103.1%	104.0%	107.5%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한국은행 가계분배계정에는 소득분위별 소득총액도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위별 경상소득 총액과 비교해볼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소득 계층이 4~5분위에 대해서는 가금복이 100%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시자료인 가금복이 거시자료인 한국은행의 가계분배계정에서 집계된 상위소득층의 가구소득을 총량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의 가계분배계정과 비교한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고소득 가구의 소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저소득 분위의 소득을 낮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은의 시험통계인 가계분배계정이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분위간 소득격차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한은의



가계분배계정보다 가금복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계정 통계를 통해 고소득층의 누락 소득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가금복 데이터가 다양한 측면에서 충실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8>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위별 소득과 가계분배계정 분위별 소득

구분		귀속년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전체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경상소득(만원)	2018	1,104	2,725	4,577	6,977	13,754	5,827
		2019	1,155	2,763	4,671	7,126	13,903	5,924
		2020	1,314	3,002	4,915	7,397	14,269	6,180
		2021	1,347	3,133	5,110	7,731	15,026	6,469
		2022	1,405	3,309	5,388	8,111	15,598	6,762
	가구수(천)	2018	3,983	3,982	3,983	3,984	3,983	19,916
		2019	4,058	4,058	4,059	4,058	4,059	20,291
		2020	4,103	4,104	4,103	4,103	4,104	20,517
		2021	4,299	4,302	4,301	4,300	4,302	21,504
		2022	4,353	4,353	4,355	4,355	4,354	21,769
	경상소득총액 (A)(십억원)	2018	43,971	108,519	182,313	277,976	547,877	1,160,506
		2019	46,871	112,110	189,584	289,138	564,303	1,202,026
		2020	53,913	123,194	201,650	303,521	585,601	1,267,934
		2021	57,910	134,777	219,781	332,404	646,400	1,391,063
		2022	61,161	144,035	234,633	353,220	679,134	1,472,052
한국은행 국민계정 (GNI)	가계분배계정 (B)(십억원)	2018	75,302	131,582	199,421	293,245	559,278	1,258,827
		2019	70,049	135,766	208,994	312,461	582,854	1,310,124
		2020	72,854	136,689	204,793	312,165	595,221	1,321,721
		2021	78,196	150,129	215,067	318,923	626,640	1,388,956
		2022	99,008	170,835	233,612	331,930	624,323	1,459,709
미시자료/거시통계 총족률 (A/B)(%)		2018	58.4%	82.5%	91.4%	94.8%	98.0%	92.2%
		2019	66.9%	82.6%	90.7%	92.5%	96.8%	91.7%
		2020	74.0%	90.1%	98.5%	97.2%	98.4%	95.9%
		2021	74.1%	89.8%	102.2%	104.2%	103.2%	100.2%
		2022	61.8%	84.3%	100.4%	106.4%	108.8%	100.8%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분배계정(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한은 가계분배계정 귀속년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종류별로 분위별 소득의 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가금복이 국민경제 수준의 가계의 소득 총량을 대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가금복의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여 소득종류별 합계액을 모두 계산한

것인데, 근로소득은 가금복에서 추정된 총액된 955조원이었는데 한은의 가계분배계정의 피용자보수는 1,102조원으로 추산됐으며, 사업소득은 가금복에서는 262조원, 한은에서는 288조를 가계의 총영업잉여로 추산하고 있다.

분위별로는 근로소득과 피용자보수는 가금복 5분위가 47.9조, 한은의 5분위가 46.3조로 거의 동일했으나 1분위에 대해서는 가금복에서 17조, 한은이 68조원으로 저소득분위의 피용자보수를 상당히 높게 추정하고 있다. 사업소득도 상위분위는 가금복과 한은의 추정치가 유사했으나 저소득분위는 한은의 추정치가 높았다. 반면 재산소득은 가금복이 5분위의 재산소득을 53조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은은 66조로 한은의 거시추정이 좀 더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2-9>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위별 소득과 가계분배계정 분위별 소득(2022)

구분	소득 종류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전체
가계금융 복지조사 (십억원)	경상소득	61,161	144,035	234,633	353,220	679,134	1,472,052
	- 근로소득	17,151	76,392	142,182	240,343	479,591	955,680
	- 사업소득	4,614	24,855	46,770	67,108	119,168	262,540
	- 재산소득	4,266	7,966	12,367	16,331	53,989	94,915
	- 사적이전소득	8,489	6,747	3,484	2,613	1,698	23,076
	- 공적이전소득	26,597	28,076	29,830	26,826	24,644	136,059
	공적이전지출	3,265	11,013	21,382	38,061	111,288	185,041
	사적이전지출	1,828	4,745	6,837	9,581	17,111	40,056
	처분가능소득	53,848	122,794	197,270	291,817	527,703	1,193,403
한국은행 가계분배계정 (십억원)	총본원소득잔액(GNI)	99,008	170,835	233,612	331,930	624,323	1,459,709
	- 피용자보수	68,364	126,799	181,748	263,133	462,720	1,102,765
	- 총영업잉여	33,451	41,182	46,438	57,392	109,690	288,152
	- 재산소득(원천)	8,397	11,440	15,088	22,413	66,450	123,787
	- 순기타경상이전	9	9,845	12,360	14,644	20,685	57,543
	- 공적이전소득	24,811	44,123	51,768	61,216	85,180	267,098
	경상세	4,111	6,212	10,404	23,266	105,501	149,494
	사회부담금	21,670	33,851	46,787	66,473	111,797	280,578
	총처분가능소득	98,037	174,896	228,190	303,407	492,204	1,296,735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분배계정.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원자료에서 계산

이밖에 총액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영역은 경상세와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으로 표현되는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 분야에서 발생했는데 가금복이 가계의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각각 136조와 186조로 추산했지만, 한은은 전체 복지급여 등 재정지출 규모를 267조와 429조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은 가금복이 1,119조 규모로 추정한 반면 한은의 가계분배계정에서는 1.297조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가금복에서 행정자료로 보완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소득종류별로 특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복지지출 총량지표를 활용하는 한은의 가계분배계정이 좀 더 포괄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sup>8)</sup>

### 3. 소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 소득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금복 통계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모집단의 분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소득수준과 소득분포에 대해서도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WID의 연구자들이 한국 자료를 구축하면서 가계동향조사를 미시자료로 이용하고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분포 추정에 근거해 보정해서 사용한 것에 비하면, 가금복의 개인과 가구 소득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더욱 타당한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하의 분석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RAS 데이터에 대한 보다 충실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8)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행정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는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해산급여), 근로장려금, 장애수당, 양육수당, 그리고 실업산재보험 급여 등이다.

## 제4절 개인과 가구의 고용-소득-자산 분배 현황과 추이

## 1. 가구와 가구원 현황 및 최근 변화

이번 절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로 개인과 가구 단위의 소득분배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황과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22,127천 가구이며 1인 가구는 6,632천(30.0%) 가구, 2인가구 6,238천(28.2%), 3인가구 4,592천(20.8%), 4인가구 3,666천(16.6%), 5인이상 가구 1,001천 가구(4.5%)로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9)</sup>

가구원수별 총인구는 52,738천명으로 이 중 1인가구가 6,632천명(12.6%), 2인가구가 12,476천명(23.7%), 3인가구 13,775천명(26.1%), 4인가구 14,664천명(27.8%), 5인이상가구 5,193천명(9.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는 4인 가구의 인구가 가장 많다.

&lt;표 2-10&gt;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이상	전체
가구수	6,632	6,238	4,592	3,666	1,001	22,127
비중(%)	(30.0)	(28.2)	(20.8)	(16.6)	(4.5)	(100.0)
가구원수	6,632	12,476	13,775	14,664	5,193	52,738
비중(%)	(12.6)	(23.7)	(26.1)	(27.8)	(9.8)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직장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가구원도 포함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직장과 학업 등의 사유로 떨어져 사는 가구원도 가구원으로 포함(경제공동체 개념)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1인가구의 일부분이 다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파악되게 되며 그 결과 인구총조사에서 파악하는 가구원수별 가구

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시점은 매년 3월이며 가구원의 종사상지위와 인적특성과 자산 및 부채는 조사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 결과를 반영한다. 따라서 가구 현황과 소득귀속년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기준년도를 소득귀속년도로 통일해서 설명한다.

분포와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22,073천 가구로 1인가구가 7,836천가구로 가금복보다 1,198천가구 더 많으며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2인가구는 6,357천가구(28.8%). 3인가구 4,194천(19.0%). 4인가구 2,936천(13.3%), 5인이상가구 750천(3.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sup>10)</sup>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17.8% 그치고 4인이상 가구 비중이 36.6%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게 되었고 2023년에는 30.0%를 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1인가구의 증가폭이 매우 큰데, 코로나 팬데믹과 주택가격 상승이 겹쳤던 시기에 해당한다.

<표 2-11>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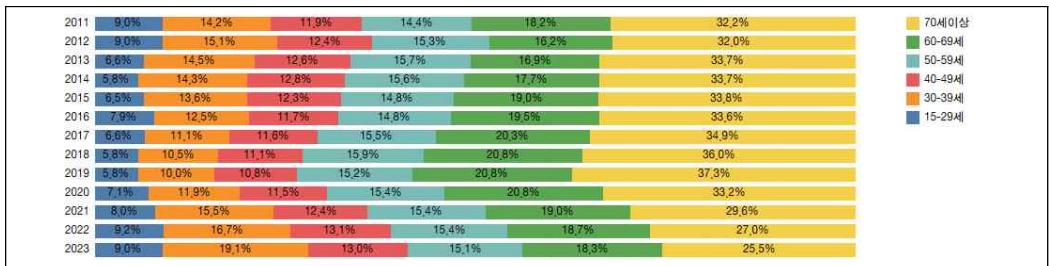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이상	전체
2011	17.8%	25.2%	20.5%	27.5%	9.1%	100.0%
2012	17.3%	23.7%	21.0%	28.5%	9.5%	100.0%
2013	17.1%	23.5%	21.0%	28.6%	9.8%	100.0%
2014	17.3%	23.7%	20.9%	28.6%	9.6%	100.0%
2015	17.9%	24.2%	20.7%	28.0%	9.3%	100.0%
2016	18.8%	25.2%	21.0%	26.3%	8.6%	100.0%
2017	19.3%	26.2%	21.2%	25.4%	7.9%	100.0%
2018	20.6%	27.2%	21.0%	23.9%	7.3%	100.0%
2019	21.9%	28.2%	21.1%	22.3%	6.5%	100.0%
2020	22.8%	28.2%	21.4%	21.4%	6.3%	100.0%
2021	25.3%	28.1%	21.2%	19.7%	5.7%	100.0%
2022	28.0%	28.2%	21.0%	17.8%	5.0%	100.0%
2023	30.0%	28.2%	20.8%	16.6%	4.5%	100.0%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를 보면 2020년 이후 뚜렷한 특징은 과거 1인가구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층이 60대이상 고령자들이었던데 반해 2020년 이후에는 20~30대 청년층이 1인가구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0대의 1인가구는 2011년 14.2%에서 2019년 10.0%로 감소해왔는데,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10) 가계동향조사는 학업 또는 직장으로 인한 비동거 가구원을 별도의 가구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구총조사 기준 가구분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가구원의 동거여부와 학업 또는 직장 관련 비동거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시작해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19.1%로 커지게 되었다. 반면 60대이상 1인가구는 2019년 58.1%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3년이 되면 43.8%로 비중을 줄어들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1인가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최근 들어 더욱 증가폭이 커지게 되었으며, 1인가구의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대가 60대이상 고령층에서 20~30대 청년층으로 변하고 있다.

<그림 2-12>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



한편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838명의 가구내 지위와 경제활동상태 분포를 보면, 가구주는 22,127천명, 배우자가 13,059천명, 자녀 및 자녀배우자가 15,291천명, 그 외 가구원이 2,260천명이며, 가구원들의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지위를 보면 가구주는 취업자가 73.8%, 배우자는 취업자가 58.0%, 자녀의 취업자 비율은 27.1%, 그 외 취업자비율이 27.7%를 각각 차지한다. 15세미만 가구원은 5,897천명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의 종사상지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상용 10,177천명과 임시일용 2,515천명 등 임금근로가 54.6%를 차지하며 고용주가 974천명, 개인자영자 3,422천명 등으로 자영업이 17.6%, 특고기타가 328천명 1.6%를 차지한다. 가구주 중 무직자는 4,707천명으로 26.2%에 이른다.

반면 배우자는 임금근로가 41.8%, 자영업이 14.6%, 특고기타 2.1%를 각각 차지하며 무직자는 42.1%를 차지한다. 자녀와 그 배우자는 임금근로가 24.4%, 자영업이 2.1%, 특고기타 0.6%, 무직 37.6%, 15세미만 35.3%를 차지하고, 그 외 가구원은

임금근로가 21.5%, 자영업이 5.5%, 특고기타 1.4%, 무직 33.2%, 15세미만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단위: 천명, %)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특고	무직	15세미만	합계
	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가구주	10,177	2,515	974	3,422	4	328	4,707		22,127
	41.5%	13.1%	3.5%	14.1%	0.0%	1.6%	26.2%		100.0%
	(19.3%)	(4.8%)	(1.8%)	(6.5%)	0.0%	(0.6%)	(8.9%)		(42.0%)
배우자	4,162	1,562	231	725	904	227	5,248		13,059
	29.5%	12.3%	1.6%	5.4%	7.6%	1.6%	42.1%		100.0%
	(7.9%)	(3.0%)	(0.4%)	(1.4%)	(1.7%)	(0.4%)	(10.0%)		(24.8%)
자녀	2,571	819	47	191	64	81	5,778	5,740	15,291
	18.4%	6.0%	0.3%	1.4%	0.4%	0.6%	37.6%	35.3%	100.0%
	(4.9%)	(1.6%)	(0.1%)	(0.4%)	(0.1%)	(0.2%)	(11.0%)	(10.9%)	(29.0%)
그 외	232	194	13	43	55	17	1,549	157	2,260
	12.0%	9.5%	0.5%	2.2%	2.8%	0.7%	67.9%	4.6%	100.0%
	(0.4%)	(0.4%)	0.0%	(0.1%)	(0.1%)	0.0%	(2.9%)	(0.3%)	(4.3%)
전체	17,142	5,090	1,265	4,381	1,027	654	17,282	5,897	52,738
	33.4%	11.4%	2.4%	9.4%	1.8%	1.4%	33.2%	7.0%	100.0%
	(32.5%)	(9.7%)	(2.4%)	(8.3%)	(1.9%)	(1.2%)	(32.8%)	(11.2%)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 )안의 비율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15세이상 가구원의 취업자비율, 즉 고용률은 63.1%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고용률은 78.7%이며 배우자의 고용률은 59.8%, 자녀 및 자녀배우자의 고용률은 39.5%, 그 외 26.3%이다.

2011년 이후 가구주의 고용률은 고령화로 인해 81.1%에서 78.7%로 -2.8%p 하락한 반면 배우자의 고용률은 47.1%에서 59.8%로 12.8%p 증가했다. 자녀와 자녀배우자의 고용률도 30.9%에서 39.5%로 8.6%p 상승했으며 그 외 가구원의 고용률도 17.9%에서 26.4%로 8.5%p 상승했다. 2011년 전체 가구원의 고용률이 56.1%에서 63.1%로 7.0% 상승한 것은 대부분 가구주 이외 가구원의 취업률이 증가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흐름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lt;표 2-13&gt; 가구내 지위별 고용률 추이

	2011	2014	2017	2020	2023	'11~'23 증감(%p)
가구주	81.5%	81.1%	78.7%	77.3%	78.7%	-2.8%
배우자	47.1%	49.7%	50.2%	53.3%	59.8%	12.8%
자녀	30.9%	34.0%	34.6%	34.3%	39.5%	8.6%
그외	17.9%	18.9%	18.1%	20.1%	26.4%	8.5%
전체	56.1%	56.8%	57.2%	58.6%	63.1%	7.0%

## 2. 개인과 가구의 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2011~2023)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분배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데이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이며, 사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지출 등이 모두 파악된다.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은 각각 세부 항목별로 파악 가능하다.<sup>11)</sup>

개인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개인취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재산소득까지 합산한 것을 ‘개인취업재산소득’으로 정의하며, 가구간 이전까지 고려한 경우 ‘개인시장소득’으로 정의하기로 한다.<sup>12)</sup> 개인총소득은 개인취업소득에 공적이전소득까지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에서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뒤 가구간 이전을 차감한 것을 ‘시장소득’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처분가능소득’으로 정의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경우 ‘경상소득’으로 정의하고,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과 사회보험료)만 차감한 것을

11) 공적이전소득으로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장애수당, 양육수당, 실업산재급여, 코로나재난지원금, 기타정부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적이전지출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등이 파악 가능하다. 가구간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그리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7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12) 개인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로 계산한다.



‘처분가능소득2(소득-비소비지출)’로 별도로 구분한다. 개인소득에서 개인취업소득 또는 취업재산소득과 유사한 것이 가구의 시장소득에 해당하고, 개인총소득은 가구 경상소득과 대응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15세이상 가구원들이 개인취업소득의 기술통계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방법 개편에 따라 2016년 귀속분부터 국세청 소득자료와 정부의 복지급여 행정자료로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2011~2015년 시기와 2016~2023년 시기의 소득통계는 정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취업소득 평균액은 2011년 2,882만원에서 2015년 3,147만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했고 2016년 2,949만원에서 2023년 3,825만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2016년부터 소득자료를 행정자료로 보완하면서 소득자 수는 크게 늘고 평균소득은 낮아지게 되었다.

<표 2-14> 개인취업소득 기술통계

(단위: 천명, 만원, %)

	소득자수	평균소득	중위소득	상위소득 경계값				지니계수
				상위10%	상위5%	상위1%	상위0.1%	
2011	23,454	2,882	2,100	6,000	7,800	13,000	30,000	0.487
2012	25,026	2,908	2,160	6,000	7,900	12,000	30,000	0.475
2013	25,299	3,041	2,400	6,000	8,000	12,500	30,000	0.469
2014	25,889	3,076	2,400	6,000	8,000	12,500	30,000	0.460
2015	25,916	3,147	2,400	6,300	8,000	12,100	30,000	0.455
2016	31,125	2,949	2,000	6,612	8,430	14,000	35,000	0.476
2017	31,097	3,092	2,155	6,971	8,890	15,000	34,322	0.475
2018	31,387	3,146	2,256	7,034	9,000	14,641	35,701	0.469
2019	31,451	3,188	2,306	7,122	9,047	14,788	31,600	0.466
2020	31,797	3,219	2,383	7,076	9,131	14,903	35,000	0.469
2021	33,193	3,424	2,500	7,483	9,727	16,381	34,724	0.461
2022	33,697	3,615	2,723	7,770	10,000	16,388	39,610	0.452
2023	34,171	3,825	3,000	8,003	10,300	17,534	40,000	0.443
'11-'15*	2.5%	2.2%	3.4%	1.2%	0.6%	-1.8%	0.0%	-1.7%
'16-'23*	1.3%	3.8%	6.0%	2.8%	2.9%	3.3%	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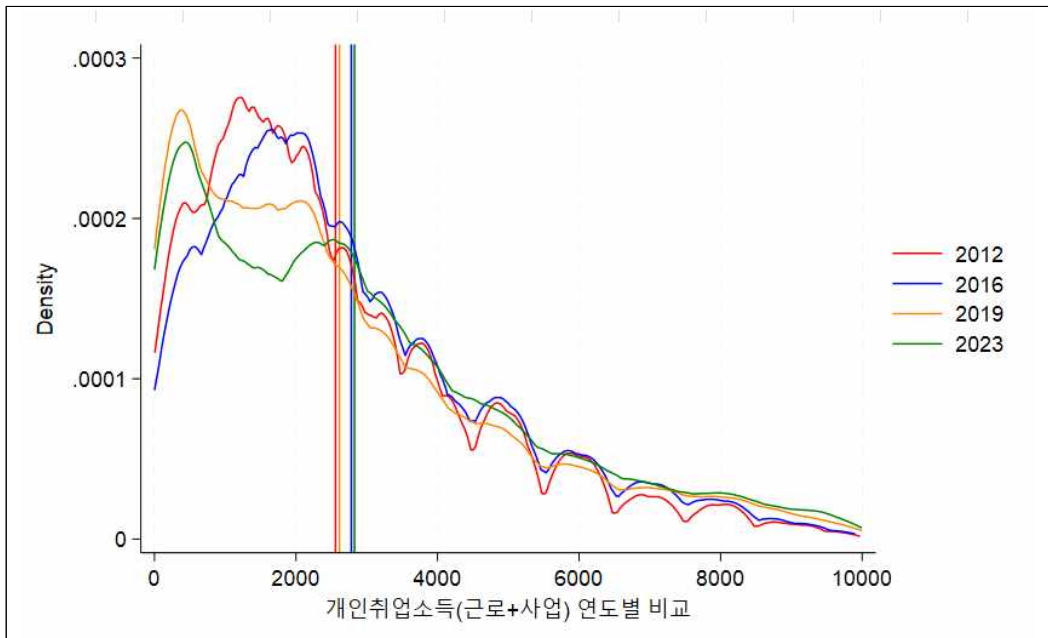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에서 계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은 해당기간 연평균증가율

중위소득은 2011년 2,100만원에서 2015년 2,400만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고

2016~2023년 기간에는 연평균 6.0% 증가했다. 상위소득층의 경계값은 2023년 현재 취업소득 상위10%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8,003만원이 넘어야 하고 상위5%는 1억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상위1% 경계값은 1억 7천534만원이 넘어야 하며 최상위 0.1%에 들어가려면 4억원이 넘어야 한다. 전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증가율보다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높고, 평균이나 중위값의 증가율보다 상위소득계층의 경계값이 낮게 증가한 것은 소득분배가 대체로 개선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취업소득의 지니계수는 2011년 0.487에서 2023년 0.443으로 낮아졌다.

아래 그림은 개인소득 분포를 확률밀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 행정자료로 소득을 보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밀도그래프가 봉우리가 하나인 단봉형에서 봉우리가 2개인 쌍봉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주 낮은 소득을 가진 경우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가진 두 지점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개인취업소득(근로+사업)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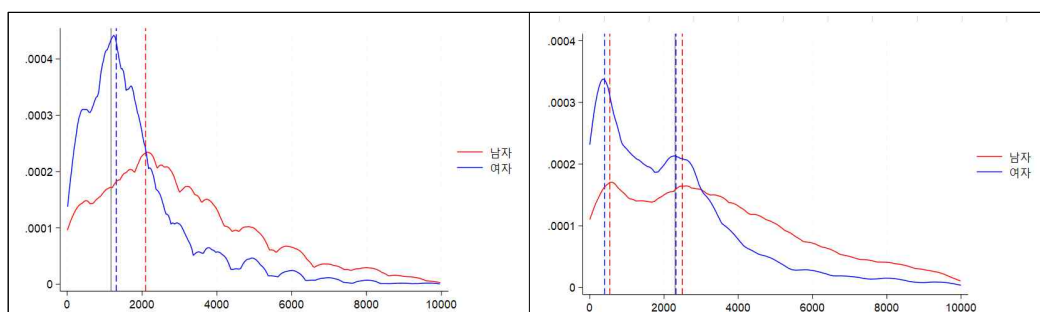


주 : 수직선은 각 년도 중위소득. 그래프 가독성을 위해 X축 소득구간을 1억원 미만으로 제한

아래의 그림은 2012년과 2022년의 남성과 여성의 소득분포 밀도그래프를 표시한 것이다. 세로의 수직선 점선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중위소득이 있는 지점이며 회색의 수직선 실선은 해당연도의 연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이다. 2012년의 경우 남성의 중위소득은 2,097만원, 여성의 중위소득은 1,312만원이었다. 그리고 2012년 최저임금 연액은 1,148만원<sup>13)</sup>이었다. 여성 중위소득이 최저임금 지점에서 형성되고 남성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중위소득이 형성되고 있다. 남성은 2천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여성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여성은 2천만원 이하 저소득 구간에서 남성보다 더 많이 분포한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2개의 최빈값 봉우리를 갖게 되는데 남성은 533만원과 2,928만원이 최빈값이고 여성은 372만원과 2,522만원이 최빈값으로 나온다. 2023년의 최저임금 연액수는 2,413만원으로 여성의 우측 최빈값이 곧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게 된다. 2023년에도 남성은 3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여성보다 많은 수가 분포하고 여성은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구간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소득자 분포를 보인다.

<그림 2-14> 개인취업소득(근로+사업) 성별 분포(2012 vs. 2023년)



주 : 수직선 점선은 각 년도 성별 소득 최빈값, 수직선 회색 실선은 해당년도 최저임금 연액.

13) 2012년 최저임금 시급 44,580×209시간×12개월=1,148만원

다음은 가구소득을 살펴볼 차례이다. 개인취업소득과 유사한 가구소득은 시장소득(비균등화)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가구 시장소득의 주요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가구 시장소득 평균액은 2011년 3,902만원에서 2015년 4,432만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했고 2016년 4,976만원에서 2023년 6,381만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2011년 3,018만원에서 2015년 3,600만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했고 2016~2023년 기간에는 연평균 3.5% 증가했다. 2016~2023년 기간에는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약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저소득 가구의 시장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은 없었고 대신 상위소득층에 대한 소득정보가 개선되면서 경계값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표 2-15> 가구 시장소득 기술통계

(단위: 천명, 만원, %)

	가구수	평균소득	중위소득	상위소득 경계값				지니계수
				상위10%	상위5%	상위1%	상위0.1%	
2011	17,884	3,902	3,018	7,970	10,072	17,450	36,060	0.468
2012	18,141	4,108	3,300	8,260	10,500	17,400	38,695	0.460
2013	18,394	4,271	3,500	8,640	11,000	17,800	40,554	0.457
2014	18,643	4,354	3,560	8,980	11,319	18,000	40,800	0.459
2015	18,887	4,432	3,600	9,090	11,610	18,300	38,720	0.461
2016	19,463	4,976	3,859	10,429	13,217	21,802	57,021	0.479
2017	19,694	5,163	3,960	10,913	13,980	23,405	56,386	0.483
2018	19,916	5,228	4,018	11,197	14,235	23,828	52,626	0.484
2019	20,291	5,265	4,031	11,202	14,467	23,111	51,972	0.489
2020	20,517	5,341	4,060	11,249	14,446	24,404	57,887	0.486
2021	21,504	5,638	4,272	11,991	15,485	26,273	56,852	0.485
2022	21,769	5,954	4,583	12,532	16,078	26,794	58,531	0.478
2023	22,127	6,381	4,903	13,228	17,382	28,643	58,878	0.475
'11-'15*	1.4%	3.2%	4.5%	3.3%	3.6%	1.2%	1.8%	-0.4%
'16-'23*	1.8%	3.6%	3.5%	3.5%	4.0%	4.0%	0.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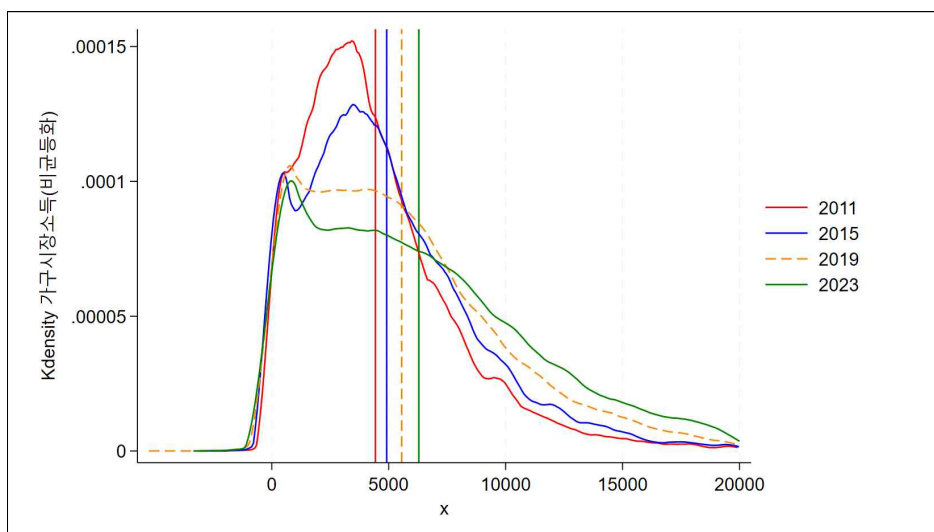
2023년 기준으로 시장소득(비균등화) 상위10%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억 3천 228만원이 넘어야 하고 상위5%는 1억 7천382원이 넘어야 한다. 상위1% 경계값은

2억 8천643만원이 넘어야 하며 최상위 0.1%에 들어가려면 5억 8천878만원이 넘어야 한다.

2011~2015년 기간 동안에는 중위소득 증가율이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높고 상위소득 증가율이 중위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6~2023년 기간은 중위소득 증가율과 평균소득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상위소득 계층의 증가율이 중위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소득분배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시장소득의 소득밀도 그래프는 2016년 이후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평평한 모습으로 분포가 변화되면서 상위소득으로 가구분포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5> 가구 시장소득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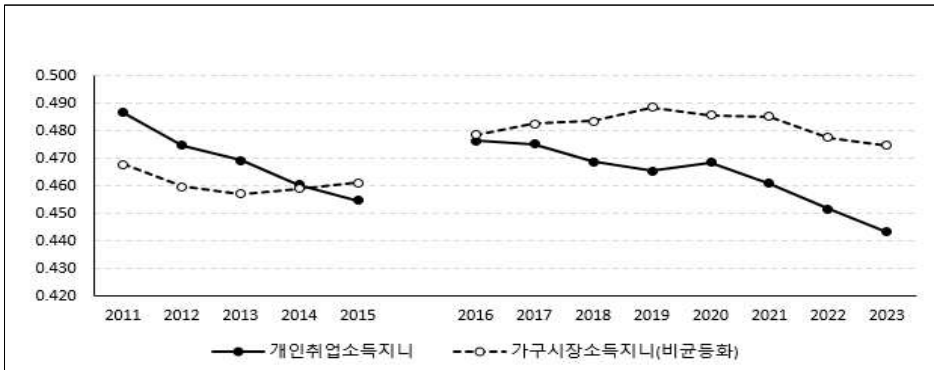
주 : 수직선은 각 년도 평균소득. 그래프 가독성을 위해 X축 소득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제한

가구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2017~2019년 기간 동안 0.483에서 0.48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같은 기간 동안 0.475에서 0.466으로 크게 개선된 것과 대조를 보인다. 2017~2019년 기간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시기로 가구원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자영업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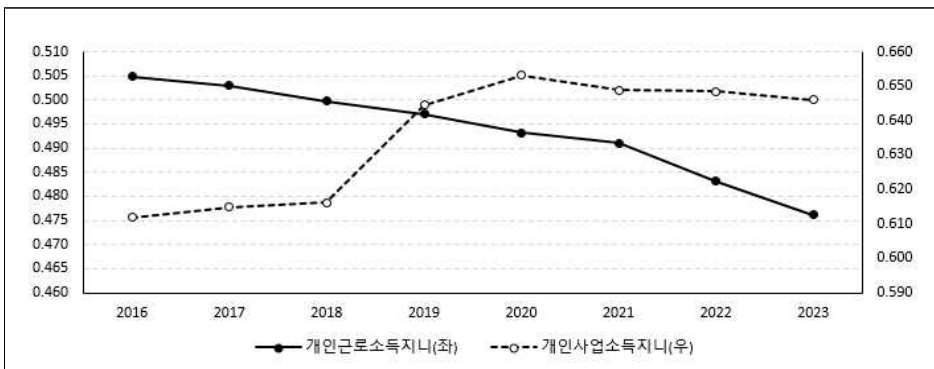
주된 소득인 사업소득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어 취업소득 전체의 소득분포는 불평등 해졌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이후 줄곧 개선되었으나 사업소득 지니계수는 2017~2019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영업자의 양극화(분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의 시장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2011년 이후 개인의 취업소득 지니계수는 개선되었지만 2016~2023년 기간 동안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 개선은 연평균 -0.1% 하락에 그치고 있다.

<그림 2-16> 개인 취업소득 vs. 가구 시장소득 지니계수



<그림 2-17> 개인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지니계수



다음으로 개인의 총소득과 가구의 경상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개인총소득의 평균은 2011년 2,565만원에서 2015년 2,799만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했고 2016년 2,572만원에서 2023년 3,600만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2011년 1,800만원에서 2015년 2,040만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했고 2016~2023년 기간에는 연평균 7.6% 증가했다.

개인총소득은 아주 작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집계되기 때문에 소득자수가 매우 많고 평균액이 낮은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2016~2023년 기간 동안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저소득자들의 소득증가가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말 기준으로 상위계층 소득 경계값을 보면 상위10%, 즉 441만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7,862만원을 넘어야 하고, 상위1% 44만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억 173만원이 넘어야 한다. 최상위0.1%(4.4만명)에 포함되려면 4억 517만원이 넘어야 한다. 개인총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에 증가했고, 2018~2020년 기간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lt;표 2-16&gt; 개인총소득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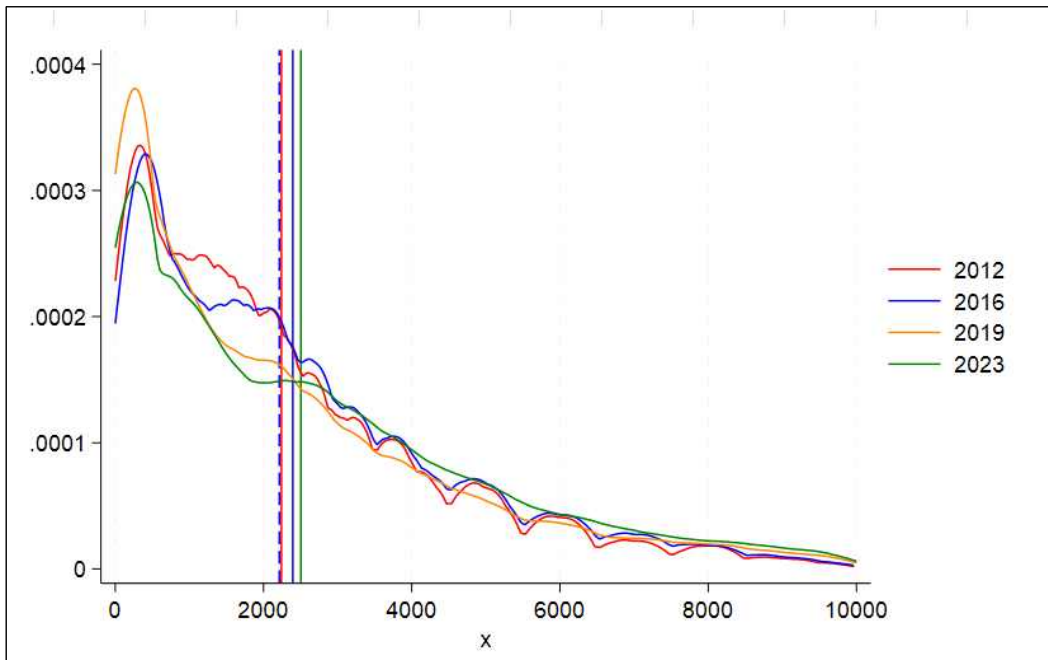
(단위: 천명, 만원, %)

	소득자수	평균소득	중위소득	상위소득 경계값				지니계수
				상위10%	상위5%	상위1%	상위0.1%	
2011	29,511	2,565	1,800	5,500	7,228	12,500	30,000	0.418
2012	31,168	2,605	1,850	5,600	7,400	12,000	32,000	0.411
2013	31,681	2,702	2,000	6,000	7,600	12,480	31,000	0.401
2014	32,581	2,728	2,000	6,000	7,700	12,500	30,050	0.397
2015	32,931	2,799	2,040	6,000	7,970	12,640	30,000	0.396
2016	41,440	2,572	1,616	6,095	8,120	13,847	35,048	0.402
2017	41,548	2,703	1,742	6,408	8,545	14,951	36,006	0.406
2018	41,619	2,788	1,870	6,519	8,663	14,717	36,006	0.402
2019	41,820	2,873	1,940	6,701	8,879	15,002	32,139	0.404
2020	42,045	3,014	2,136	6,905	9,017	15,045	35,130	0.405
2021	45,428	3,060	2,138	7,070	9,342	16,404	33,773	0.405
2022	43,908	3,352	2,443	7,440	9,854	16,481	38,043	0.396
2023	44,139	3,600	2,690	7,862	10,173	17,664	40,517	0.392
'11-~'15*	2.8%	2.2%	3.2%	2.2%	2.5%	0.3%	0.0%	-1.3%
'16-~'23*	0.9%	4.9%	7.6%	3.7%	3.3%	3.5%	2.1%	-0.4%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에서 계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은 해당기간 연평균증가율

개인총소득의 분포를 확률밀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개인총소득은 500만원 미만의 아주 낮은 소득에 최빈값이 분포하고 최저임금 수준과 유사한 구간에 완만한 형태의 밀집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8> 개인총소득 분포 변화



주 : 수직선은 각 년도 평균소득. 그래프 가독성을 위해 X축 소득구간을 1억원 미만으로 제한

개인총소득에 대응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분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 경상소득 평균은 2011년 4,233만원에서 2015년 4,882만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했고 2016년 5,478원에서 2023년 7,185만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2011년 3,360만원에서 2015년 4,000만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했고 2016~2023년 기간에는 4,30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전 기간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약간 높아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lt;표 2-17&gt; 가구 경상소득 기술통계

(단위: 천명, 만원, %)

	가구수	평균소득	중위소득	상위소득 경계값				지니계수
				상위10%	상위5%	상위1%	상위0.1%	
2011	17,884	4,233	3,360	8,400	10,600	18,000	37,000	0.438
2012	18,141	4,479	3,600	8,800	11,028	18,080	43,560	0.429
2013	18,394	4,658	3,800	9,120	11,680	18,500	44,500	0.426
2014	18,643	4,770	3,924	9,500	12,000	18,700	42,200	0.423
2015	18,887	4,882	4,000	9,700	12,088	19,200	39,860	0.421
2016	19,463	5,478	4,300	10,979	13,766	22,762	57,847	0.436
2017	19,694	5,705	4,457	11,535	14,655	24,574	57,754	0.437
2018	19,916	5,828	4,567	11,816	14,925	24,675	53,322	0.434
2019	20,291	5,924	4,652	11,820	15,161	24,551	53,931	0.432
2020	20,517	6,180	4,895	12,138	15,356	25,282	58,247	0.421
2021	21,504	6,470	5,098	12,846	16,320	27,506	56,972	0.423
2022	21,769	6,762	5,362	13,412	16,831	27,726	58,566	0.420
2023	22,127	7,185	5,681	14,113	18,014	29,311	59,468	0.421
'11-'15*	1.4%	3.6%	4.5%	3.7%	3.3%	1.6%	1.9%	-1.0%
'16-'23*	1.8%	4.0%	4.1%	3.7%	3.9%	3.7%	0.4%	-0.5%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에서 계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은 해당기간 연평균증가율

그러나 2016년 이후 상위계층 소득경계값도 연평균 4%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어 경상소득의 분배개선이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말 22,127천 가구 중에서 상위10%에 속하려면 1억 4천113만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상위5%에 들기 위해서는 1억 8천14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 상위1%에는 2억 9천311만원, 최상위0.1%에 포함되려면 5억 9천468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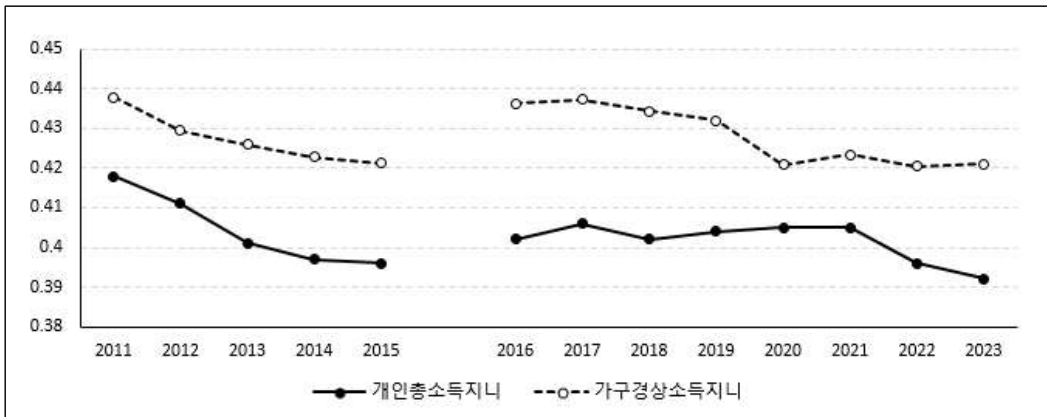
가구 경상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5년 기간에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16~2023년 기간 동안에는 2017년과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약간 증가세를 보인 적이 있었다. 가구 경상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낮았던 해는 2022년(0.420)이었다.

한편 개인총소득 지니계수와 가구 경상소득 지니계수도 2018~2020년 기간 동안은 상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총소득 지니계수는 0.402에서 0.405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구 경상소득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434에서 0.42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 역시 최저임금 인상 기간 동안 개인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복합적

인 영향이 나타나면서 사업소득의 양극화가 개인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소득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경상소득의 분배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19> 개인총소득과 가구 경상소득 지니계수



주 : 수직선은 각 년도 평균소득. 그래프 가독성을 위해 X축 소득구간을 1억원 미만으로 제한

### 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주택자산

이번에는 가구의 자산 분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의 자산항목에는 총자산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주택가격이 있는데, 우선 2012~2023년 기간 동안 각 항목의 평균과 중위값의 추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2024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은 평균 5억 4천22만원이고 부채는 평균 9천128만원이며, 순자산은 평균 4억 4천8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가주택이 있는 가구의 거주주택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평균 3억 8천786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고자산, 고가주택에 의해 평균이 상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위값까지 같이 살펴보면 자산 중위값은 3억 수준이며, 부채는 1,400만원으로 중위값이

매우 적다. 순자산 중위값은 2억 4천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유주택의 중위값은 2억 7천만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산과 부채의 연평균 인상률은 2011~2015년 기간이 더 높았고 거주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2016~2023년 기간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8> 가구 자산과 부채 기술통계

(단위: 천명, 만원, %)

	자산		부채		순자산		거주주택가격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2011	32,324	17,170	5,450	750	26,875	14,091	21,525	15,000
2012	32,688	18,260	5,858	1,000	26,831	14,696	20,905	15,000
2013	33,539	19,506	6,051	1,005	27,488	15,572	21,406	16,000
2014	34,685	20,443	6,256	1,060	28,429	16,484	22,397	17,000
2015	36,637	22,240	6,719	1,120	29,918	17,740	23,888	18,000
2016	38,671	23,780	7,099	1,156	31,572	18,740	25,438	20,000
2017	42,036	25,710	7,668	1,400	34,368	20,045	27,635	20,500
2018	43,191	25,508	7,910	1,350	35,281	20,050	29,318	21,000
2019	44,543	25,795	8,256	1,396	36,287	20,218	31,124	22,000
2020	50,253	28,480	8,801	1,700	41,452	22,600	37,669	25,000
2021	54,772	30,690	9,170	1,800	45,602	24,662	42,933	30,000
2022	52,727	30,231	9,186	1,560	43,540	23,910	38,967	28,000
2023	54,022	30,645	9,128	1,400	44,894	24,000	38,786	27,000
'11-'15*	3.2%	6.7%	5.4%	10.5%	2.7%	5.9%	2.6%	4.7%
'16-'23*	4.9%	3.7%	3.7%	2.8%	5.2%	3.6%	6.2%	4.4%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에서 계산. 거주주택가격은 자기소유만 포함 \*은 해당기간 연평균증가율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일반적으로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순자산과 거주주택 가격을 분위별로 각각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순자산의 분위별 분포를 보면 상위분위로 갈수록 자산액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하위25%의 경계값이 7,650만원인데 비해 상위10%의 경계값은 10억 4천600만원에 이른다.<sup>14)</sup> 순자산 상위1% 경계값은 33억원이며, 최상위0.1%의 경계값은 8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2011~2015년 기간 동안에는 저자산 분위의 자산 증가율이 더 높았으나 2016~2023년 기간에는 고자산 분위일수록 자산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

14)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부자’를 ‘순금융자산 규모 10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타난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전체 가구의 순자산 평균이 연평균 2.7% 상승하고 하위 25% 경계값이 연평균 5.5% 상승하는 동안 상위10% 경계값은 2.1% 상승에 그쳤고 상위5%는 1.0% 상승하는데 그쳤다. 상위1%와 최상위0.1%는 각각 -0.2%, -4.7% 하락해 순자산 불평등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연평균 -1.4%로 자산분배가 개선됐다. 그러나 2016~2023년 기간 동안에는 순자산 평균액이 5.2% 증가할 때 중위값은 3.6% 증가했고 하위25%는 3.1% 증가했다. 반면 상위 10%, 상위5%는 각각 5.7% 증가했고 상위1%와 상위0.1%는 각각 6.8%, 7.0% 상승했다. 자산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된 것이다. 2011~2015년 기간 동안은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화시기였고 2016~2023년 기간은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였다.<sup>15)</sup>

<표 2-19> 순자산 분위별 분포

(단위: 천명, 만원, %)

	p25	중위값	평균	p75	p90	p95	p99	p99.9	지니계수
2011	4,706	14,091	26,875	31,384	61,772	92,783	196,047	625,200	0.625
2012	5,050	14,696	26,831	32,397	60,519	89,660	191,590	565,140	0.613
2013	5,443	15,572	27,488	33,588	61,615	90,535	188,591	520,286	0.599
2014	5,600	16,484	28,429	35,205	63,035	92,570	191,499	492,942	0.595
2015	5,821	17,740	29,918	37,490	67,166	96,540	194,151	514,850	0.592
2016	6,170	18,740	31,572	39,900	70,800	103,023	207,998	536,400	0.589
2017	6,600	20,045	34,368	43,042	78,561	112,772	233,901	555,040	0.593
2018	6,457	20,050	35,281	43,280	81,060	118,530	256,500	631,400	0.602
2019	6,480	20,218	36,287	44,506	83,510	120,300	258,900	726,540	0.609
2020	7,166	22,600	41,452	52,164	96,826	141,388	289,170	688,000	0.608
2021	7,500	24,662	45,602	58,280	108,100	154,490	327,564	707,590	0.610
2022	7,535	23,910	43,540	54,257	101,440	143,884	313,555	743,020	0.609
2023	7,650	24,000	44,894	54,344	104,600	152,030	330,360	861,800	0.616
'11-'15*	5.5%	5.9%	2.7%	4.5%	2.1%	1.0%	-0.2%	-4.7%	-1.4%
'16-'23*	3.1%	3.6%	5.2%	4.5%	5.7%	5.7%	6.8%	7.0%	0.6%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에서 계산. \*은 해당기간 연평균증가율

이러한 자산불평등은 주택가격의 분위별 변화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15) 박근혜 정부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시작됐고, 상승하기 시작한 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 시기 저금리와 확장재정 시기에 계속 자산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은 2.6%로 낮은 편이었고 상위10%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1% 이하의 상승률이거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2023년 기간 동안 주택가격 평균과 중위값 증가율도 각각 6.2%, 4.4%로 높았을 뿐 아니라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증가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졌다. 상위10, 상위5%, 상위1% 증가율은 각각 6.9%, 7.1%, 7.6%로 높아졌고 최상위0.1% 증가율은 9.6%로 가장 높았다.

<표 2-20> 자가소유 주택가격 분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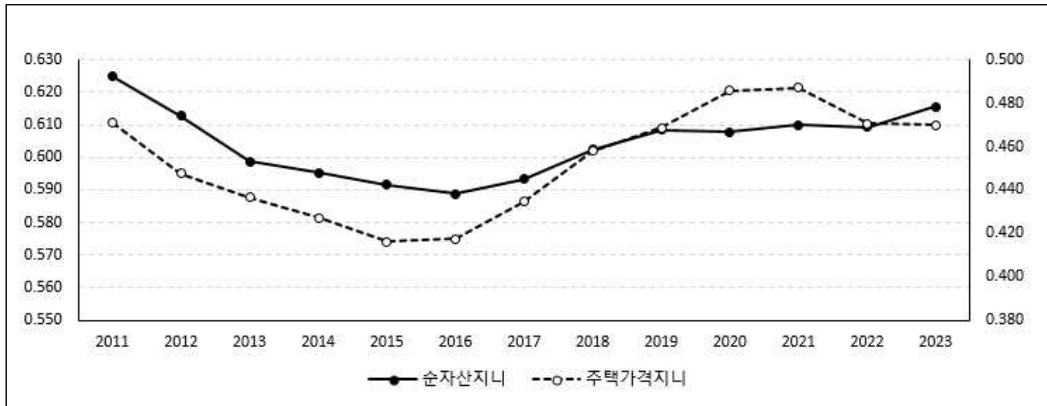
(단위: 천명, 만원, %)

	p25	중위값	평균	p75	p90	p95	p99	p99.9	지니계수
2011	8,000	15,000	21,525	27,000	43,000	60,000	120,000	210,000	0.471
2012	8,500	15,000	20,905	26,000	40,000	55,000	100,000	200,000	0.448
2013	9,000	16,000	21,406	27,000	40,000	55,400	100,000	200,000	0.437
2014	10,000	17,000	22,397	29,000	43,000	57,000	100,000	200,000	0.427
2015	11,000	18,000	23,888	30,000	45,000	60,000	100,000	200,000	0.416
2016	11,000	20,000	25,438	32,000	50,000	62,000	120,000	195,000	0.417
2017	11,800	20,500	27,635	35,000	53,000	70,000	150,000	240,000	0.435
2018	12,000	21,000	29,318	36,000	60,000	80,000	150,000	300,000	0.458
2019	12,000	22,000	31,124	40,000	65,000	85,000	170,000	310,000	0.469
2020	12,000	25,000	37,669	50,000	82,000	107,000	200,000	320,000	0.486
2021	14,000	30,000	42,933	58,000	92,000	120,000	230,000	380,000	0.487
2022	14,000	28,000	38,967	50,000	80,000	104,000	200,000	380,000	0.471
2023	14,000	27,000	38,786	49,000	80,000	100,000	200,000	370,000	0.470
'11-'15*	8.3%	4.7%	2.6%	2.7%	1.1%	0.0%	-4.5%	-1.2%	-3.0%
'16-'23*	3.5%	4.4%	6.2%	6.3%	6.9%	7.1%	7.6%	9.6%	1.7%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원자료에서 계산. 주택자가 소유인 경우만 포함. \*은 해당기간 연평균증가율

이에 따라 자산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과 주택가격 지니계수는 2016년 이후 수직상승하기 시작했고 주택가격 지니계수는 2022년 이후에야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2년 이후에는 순자산 지니계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저자산 계층의 가계부채 악화 등의 상황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lt;그림 2-20&gt; 순자산과 주택가격 지니계수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자산의 일반적 추이를 통해서 2016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자산 통계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취업소득은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 개선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 근로소득 불평등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2017~2019년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양극화되면서 가구의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가 있었다.

둘째, 개인 총소득의 분배는 2018~2020년 시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 경상소득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분배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2016~2023년 기간 동안 자산불평등이 크게 악화되었다. 2011~2015년 주택가격 하향 안정기 시기에 순자산 상위계층의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중위자산 이하의 계층의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산불평등이 완화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위층의 자산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급등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4. 개인과 가구 불평등 추이 : 소득 집중도와 자산 집중도

##### 1) 가구소득의 집중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평등지표인 소득 상위층의 점유비율을 중심으로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균등화 소득으로 추정된 상위10% 소득집중도는 시장소득이 33.2%, 처분가능소득이 24.0% 수준임. 2016년 이후 소득집중도가 가장 낮았던 시점은 2023년 현 시점이며 가장 소득집중도가 높았던 때는 시장소득이 2017년(28.5%), 처분가능소득은 2016년(25.8%)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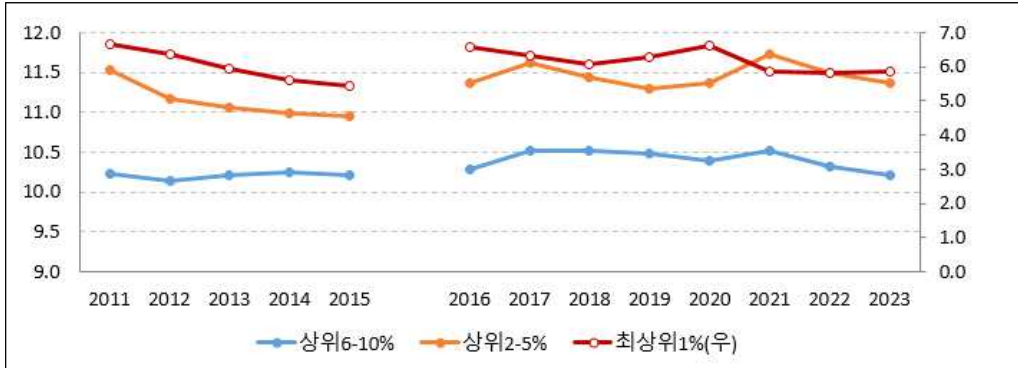
상위1%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7.6%),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6년(5.6%)이었다.

<표 2-21> 균등화시장소득 계층별 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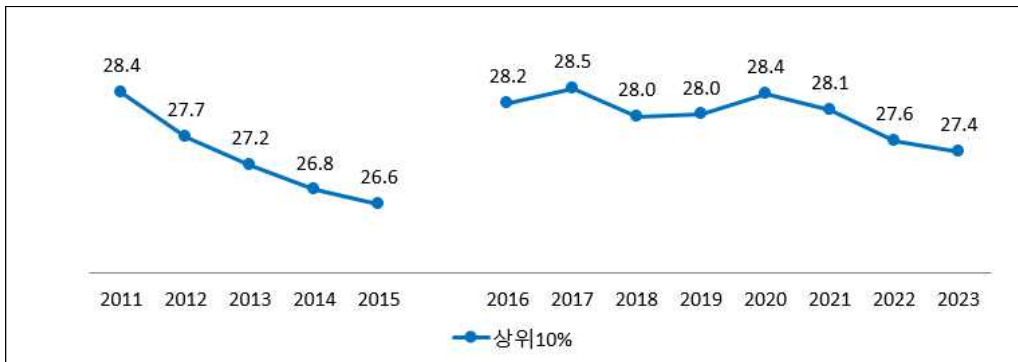
(단위: 천명, 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2.2	13.3	13.9	14.3	14.8	14.6	14.0	13.1	12.5	11.1	10.8	11.8	12.1
중위40%	36.9	37.8	38.1	38.5	38.9	38.9	37.9	36.5	36.2	36.7	37.2	37.4	36.8
상위11-20%	16.8	16.4	16.2	16.3	16.4	16.5	16.2	16.7	17.2	18.3	18.3	17.8	17.9
상위6-10%	11.7	11.3	11.1	10.9	10.9	10.7	11.1	11.5	12.0	12.4	12.2	11.9	11.9
상위2-5%	14.6	13.9	13.6	13.2	12.8	12.9	13.8	14.8	14.5	14.5	14.7	14.1	14.3
상위1%	7.8	7.3	7.1	6.8	6.3	6.3	7.0	7.4	7.6	6.9	6.8	7.0	7.0
상위10% 합계	34.1	32.5	31.8	30.9	29.9	29.9	31.9	33.7	34.1	33.9	33.7	33.0	33.2

&lt;그림 2-21&gt;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점유비중



&lt;그림 2-22&gt; 균등화 시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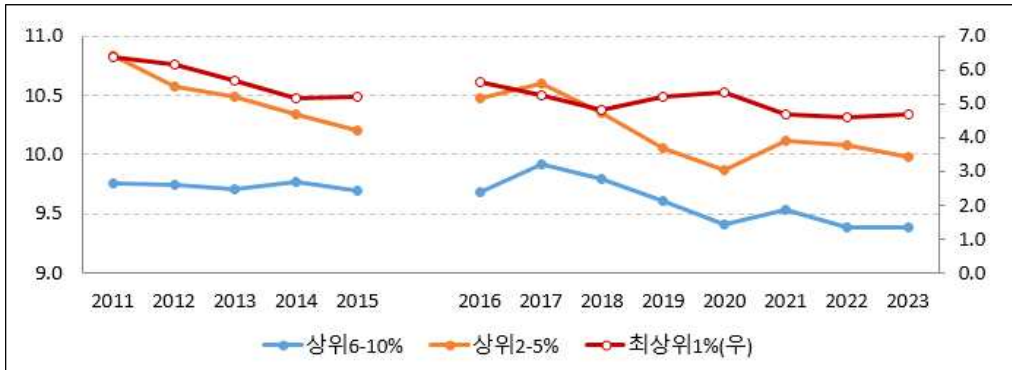
&lt;표 2-22&gt;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소득점유비중

(단위: 천명, 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7.8	17.9	18.2	18.4	18.6	17.8	17.9	18.4	18.8	19.5	19.4	19.6	19.7
중위40%	39.8	40.2	40.4	40.7	40.8	40.7	40.6	40.9	40.8	40.8	40.8	41.1	41.1
상위11-20%	15.5	15.4	15.5	15.7	15.6	15.7	15.7	15.8	15.5	15.2	15.5	15.2	15.2
상위6-10%	9.8	9.7	9.7	9.8	9.7	9.7	9.9	9.8	9.6	9.4	9.5	9.4	9.4
상위2-5%	10.8	10.6	10.5	10.3	10.2	10.5	10.6	10.3	10.1	9.9	10.1	10.1	10.0
상위1%	6.4	6.1	5.7	5.2	5.2	5.6	5.2	4.8	5.2	5.3	4.7	4.6	4.7
상위10% 합계	26.9	26.5	25.9	25.3	25.1	25.8	25.7	25.0	24.9	24.6	24.3	24.1	24.0



&lt;그림 2-23&gt;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계층별 점유비중



&lt;그림 2-24&gt;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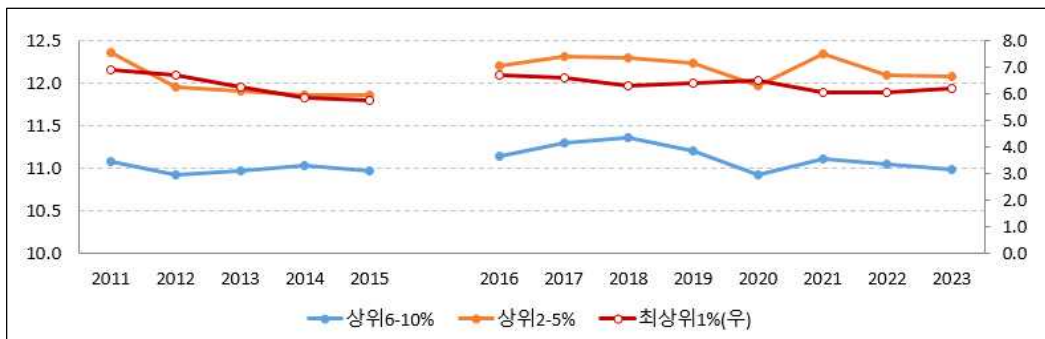
비균등화 소득으로는 경상소득의 경우 상위10% 점유비중이 29.3%. 가장 소득집중도가 높았던 시기는 2017년 30.2%.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22년 29.2%로 확인됐으며, 비균등화 시장소득은 상위10%가 2023년 31.6%를 점유. 2020년 32.0%로 가장 소득집중도가 심했으나 2023년이 가장 낮아진 시점. 비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23년 상위10%가 27.6%를 차지. 2018년이 29.8%로 가장 집중도 높았던 시기로 나타났다.

&lt;표 2-23&gt; 경상소득(비균등화) 소득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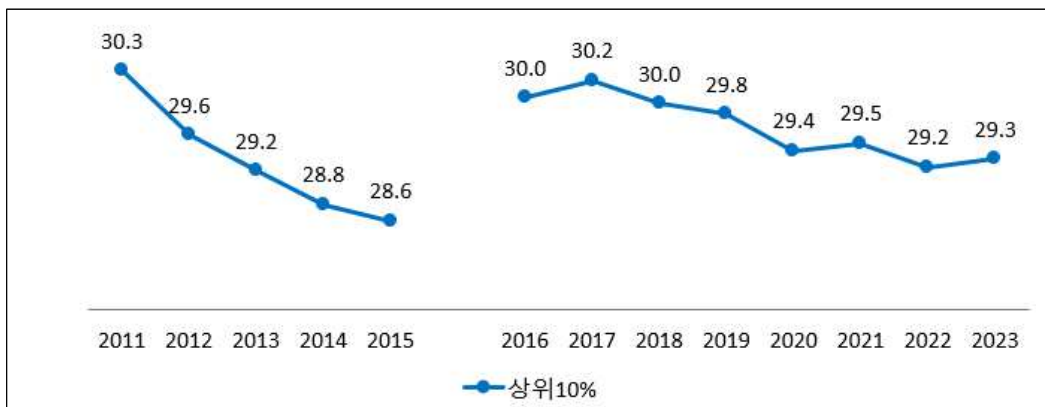
(단위: 천명, 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3.0	13.4	13.4	13.5	13.5	13.0	13.0	13.1	13.2	14.0	13.9	13.9	14.0
중위40%	39.6	40.1	40.5	40.6	40.8	39.8	39.6	39.7	39.8	39.8	39.7	39.9	39.8
상위11-20%	17.0	17.0	16.9	17.1	17.1	17.1	17.2	17.2	17.1	16.8	17.0	16.9	16.9
상위6-10%	11.1	10.9	11.0	11.0	11.0	11.1	11.3	11.4	11.2	10.9	11.1	11.1	11.0
상위2-5%	12.4	12.0	11.9	11.9	11.9	12.2	12.3	12.3	12.2	12.0	12.3	12.1	12.1
상위1%	6.9	6.7	6.3	5.9	5.7	6.7	6.6	6.3	6.4	6.5	6.0	6.1	6.2
상위10% 합계	30.3	29.6	29.2	28.8	28.6	30.0	30.2	30.0	29.8	29.4	29.5	29.2	29.3

&lt;그림 2-25&gt; 경상소득(비균등화) 계층별 점유비중



&lt;그림 2-26&gt; 경상소득(비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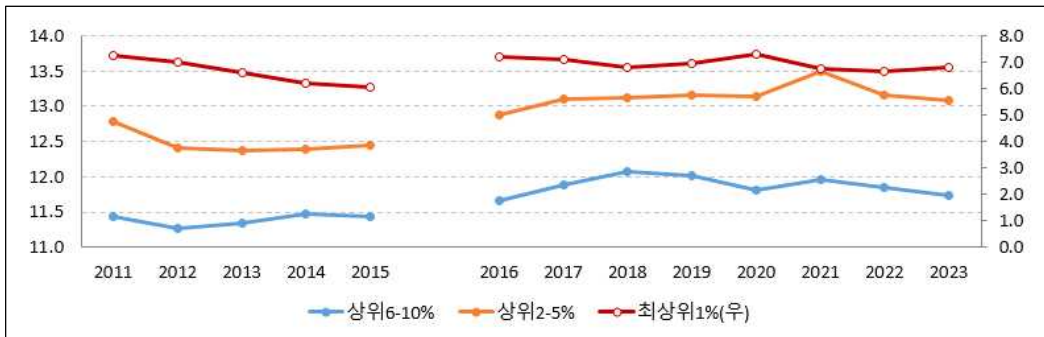


&lt;표 2-24&gt; 시장소득(비균등화) 소득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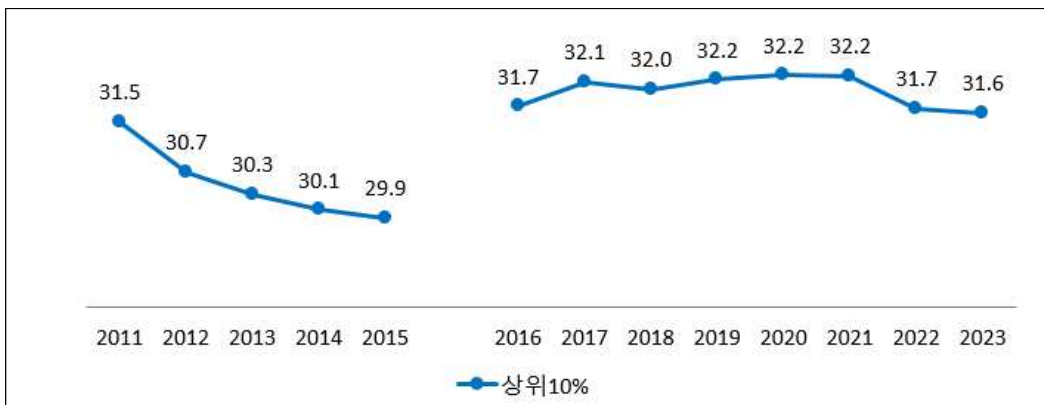
(단위: 천명, 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1.0	11.3	11.3	11.0	10.8	10.2	10.0	9.9	9.5	9.8	9.9	10.3	10.5
중위40%	40.1	40.6	41.0	41.2	41.5	40.3	39.9	40.1	40.2	40.1	39.9	40.2	40.1
상위11-20%	17.5	17.4	17.4	17.7	17.8	17.8	17.9	18.1	18.1	17.9	18.0	17.9	17.8
상위6-10%	11.4	11.3	11.3	11.5	11.4	11.7	11.9	12.1	12.0	11.8	12.0	11.9	11.7
상위2-5%	12.8	12.4	12.4	12.4	12.5	12.9	13.1	13.1	13.2	13.1	13.5	13.2	13.1
상위1%	7.2	7.0	6.6	6.2	6.1	7.2	7.1	6.8	7.0	7.3	6.8	6.7	6.8
상위10% 합계	31.5	30.7	30.3	30.1	29.9	31.7	32.1	32.0	32.2	32.2	32.2	31.7	31.6

&lt;그림 2-27&gt; 시장소득(비균등화) 계층별 점유비중



&lt;그림 2-28&gt; 시장소득(비균등화) 상위10% 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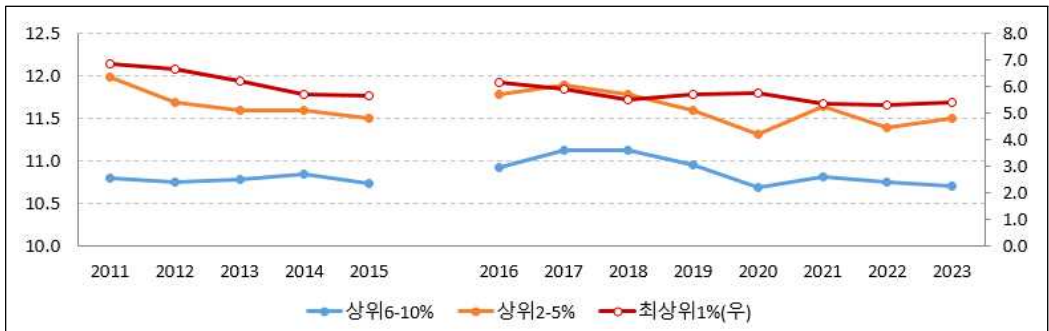


&lt;표 2-25&gt; 처분가능소득(비균등화) 소득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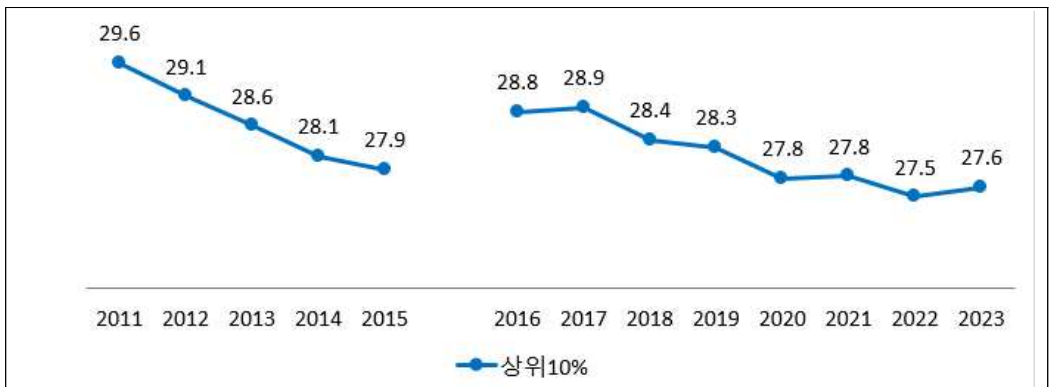
(단위: 천명, 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3.5	13.7	13.9	14.0	14.1	13.3	13.4	13.6	13.8	14.6	14.5	14.6	14.7
중위40%	40.0	40.4	40.8	40.9	41.1	40.7	40.5	40.8	40.9	40.9	40.7	40.9	40.8
상위11-20%	16.9	16.8	16.8	17.0	17.0	17.2	17.2	17.2	17.0	16.8	16.9	17.0	16.9
상위6-10%	10.8	10.7	10.8	10.8	10.7	10.9	11.1	11.1	11.0	10.7	10.8	10.8	10.7
상위2-5%	12.0	11.7	11.6	11.6	11.5	11.8	11.9	11.8	11.6	11.3	11.6	11.4	11.5
상위1%	6.8	6.6	6.2	5.7	5.7	6.1	5.9	5.5	5.7	5.8	5.3	5.3	5.4
상위10% 합계	29.6	29.1	28.6	28.1	27.9	28.8	28.9	28.4	28.3	27.8	27.8	27.5	27.6

&lt;그림 2-29&gt; 처분가능소득(비균등화) 계층별 점유비중



&lt;그림 2-30&gt; 처분가능소득 상위10% 점유비중



순자산 집중도는 2023년 현 시점이 가장 집중도 높은 상황이며, 순자산 상위10%가 전체 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집중도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6년 41.8% 수준이었으며, 상위10% 내에서 상위6-10%, 상위2~5%의 자산집중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이였다. 상위1%의 자산집중도는 10% 수준의 비중을 점유하다가 2023년에 12.2%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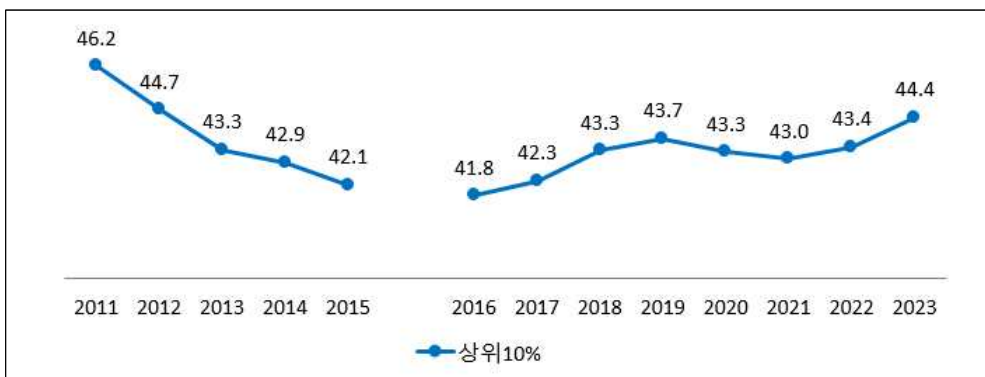
거주주택가격 집중도는 2019~2020년에 정점을 기록했는데, 상위10% 주택가격 점유비중은 2019년 34.1%이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집중도는 주택가격이 정점에 있던 2011~2012년의 자산집중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 2-26> 순자산 점유비중

(단위: 천명, 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5.1	5.4	6.0	6.0	5.9	5.9	5.8	5.6	5.3	5.3	5.0	5.3	5.2
중위40%	31.0	32.1	32.8	33.2	33.9	34.1	33.7	32.9	32.7	32.7	32.9	32.4	31.7
상위11-20%	17.7	17.8	17.9	17.9	18.1	18.2	18.2	18.2	18.3	18.7	19.0	18.8	18.6
상위6-10%	13.9	13.6	13.3	13.3	13.3	13.4	13.5	13.7	13.6	13.9	14.0	13.7	13.9
상위2-5%	19.0	18.4	17.9	17.7	17.4	17.7	18.0	18.2	18.6	18.5	18.4	18.1	18.3
상위1%	13.2	12.7	12.1	11.9	11.5	10.8	10.8	11.4	11.5	10.9	10.6	11.6	12.2
상위10% 합계	46.2	44.7	43.3	42.9	42.1	41.8	42.3	43.3	43.7	43.3	43.0	43.4	44.4

<그림 2-31> 순자산 상위10% 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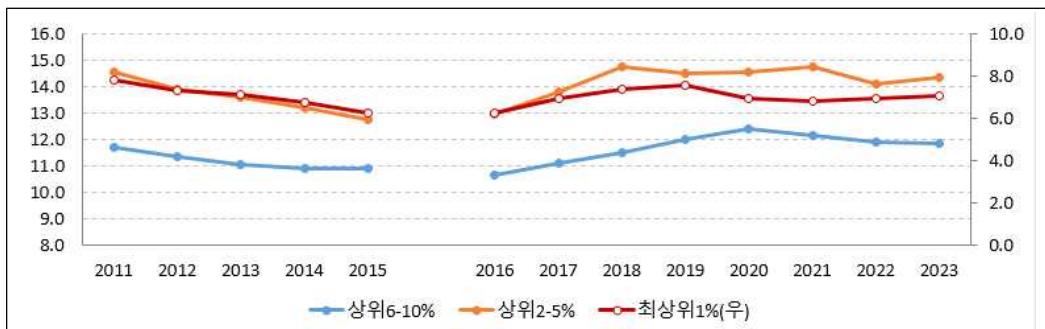


&lt;표 2-27&gt; 거주주택 자산 점유비중

(단위: 천명, 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2.2	13.3	13.9	14.3	14.8	14.6	14.0	13.1	12.5	11.1	10.8	11.8	12.1
중위40%	36.9	37.8	38.1	38.5	38.9	38.9	37.9	36.5	36.2	36.7	37.2	37.4	36.8
상위11-20%	16.8	16.4	16.2	16.3	16.4	16.5	16.2	16.7	17.2	18.3	18.3	17.8	17.9
상위6-10%	11.7	11.3	11.1	10.9	10.9	10.7	11.1	11.5	12.0	12.4	12.2	11.9	11.9
상위2-5%	14.6	13.9	13.6	13.2	12.8	12.9	13.8	14.8	14.5	14.5	14.7	14.1	14.3
상위1%	7.8	7.3	7.1	6.8	6.3	6.3	7.0	7.4	7.6	6.9	6.8	7.0	7.0
상위10% 합계	34.1	32.5	31.8	30.9	29.9	29.9	31.9	33.7	34.1	33.9	33.7	33.0	33.2

&lt;그림 2-32&gt; 거주주택 자산 계층별 점유비중



&lt;그림 2-33&gt; 거주주택 자산 상위10% 점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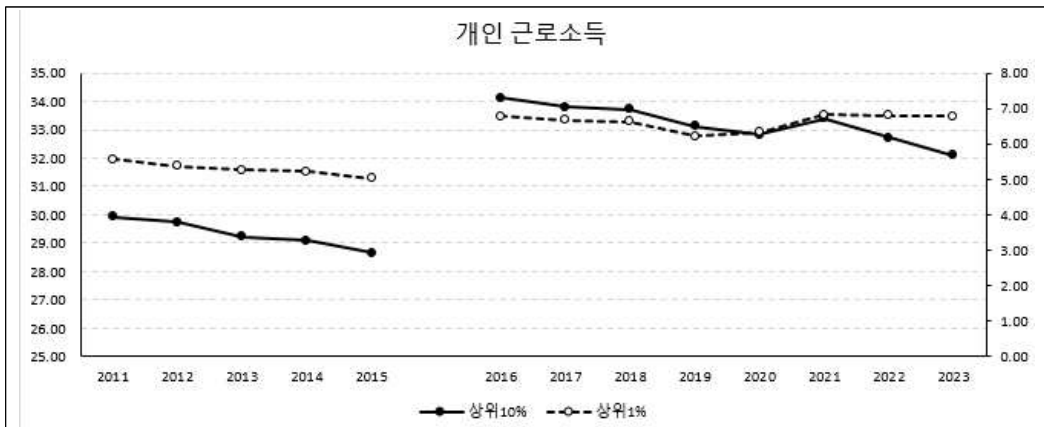
## 2) 개인소득 집중도

개인 근로소득은 상위10%가 전체 소득의 32.1%를 차지한다. 2016년 34.1%가 가장 집중도가 심했던 시기였고 그 후 2020년까지 완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에 상위1%, 상위5%의 집중도가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으며, 최상위 1%의 점유비중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표 2-28> 개인 근로소득 점유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3.2	13.4	13.9	14.0	14.3	9.7	9.7	9.8	9.6	9.7	10.1	10.4	10.6
중위40%	39.2	39.1	39.1	39.3	39.4	37.1	37.4	37.6	38.2	38.6	38.1	38.9	39.4
상위20%	47.6	47.5	46.9	46.7	46.3	53.2	52.9	52.7	52.1	51.7	51.7	50.8	50.0
상위10%	29.9	29.7	29.2	29.1	28.7	34.1	33.8	33.7	33.1	32.8	33.4	32.7	32.1
상위5%	18.2	18.0	17.7	17.5	17.2	21.0	20.7	20.8	20.2	20.1	20.9	20.5	20.2
상위2-5%	12.7	12.7	12.4	12.3	12.2	14.3	14.1	14.1	14.0	13.8	14.1	13.7	13.4
상위1%	5.6	5.4	5.3	5.2	5.0	6.8	6.7	6.6	6.2	6.3	6.8	6.8	6.8

<그림 2-34> 상위1%와 상위10%의 개인 근로소득 점유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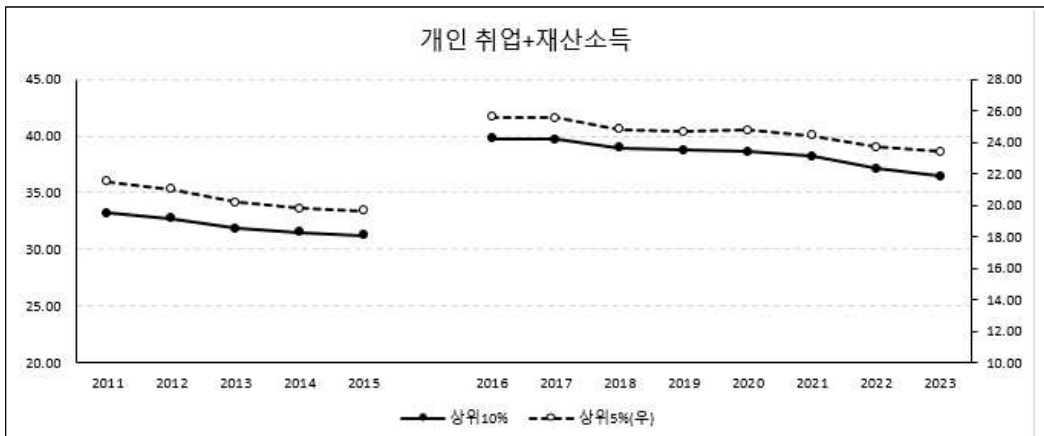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재산소득을 합산한 개인 취업재산소득 점유비중은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36.5%를 차지한다. 2016~17년 39.7%가 가장 집중도가 심했던 시기였고 그 후 점차 완화 추세를 보였음.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에 상위1%, 상위5%의 집중도가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고 상위1%의 점유비중은 2023년에도 다시 증가했다.

<표 2-29> 개인 취업재산소득 점유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11.4	11.8	12.2	12.4	12.5	4.4	4.2	4.4	4.4	4.4	4.7	5.1	5.5
중위40%	37.9	38.0	38.3	38.6	38.7	36.0	36.2	36.8	36.9	37.2	37.6	38.5	39.1
상위20%	50.7	50.2	49.5	49.0	48.7	59.6	59.6	58.7	58.7	58.4	57.6	56.3	55.4
상위10%	33.2	32.7	31.9	31.5	31.3	39.7	39.7	38.9	38.8	38.6	38.2	37.1	36.5
상위5%	21.5	21.0	20.2	19.8	19.6	25.6	25.5	24.8	24.6	24.7	24.5	23.7	23.4
상위2-5%	13.5	13.3	13.0	13.0	12.9	16.2	16.4	16.2	16.0	15.8	16.1	15.5	15.1
상위1%	8.0	7.8	7.2	6.8	6.8	9.4	9.2	8.7	8.7	8.9	8.4	8.2	8.3

<그림 2-35> 상위5%와 상위10%의 개인 취업재산소득 점유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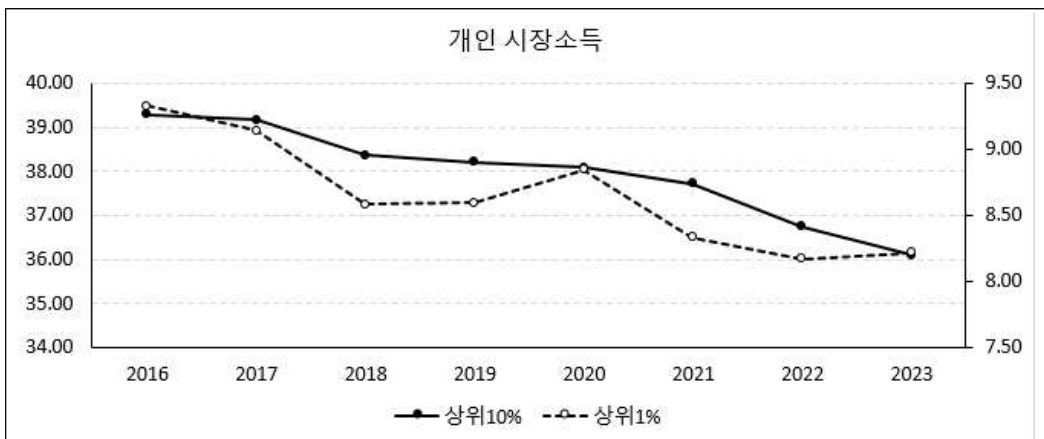


개인 취업재산소득에 가구간 이전소득을 포함한 개인시장소득은 2017년부터 집계 가능하다. 상위10%의 점유비중은 36.1%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6년 39.3%에서 점차 완화되어 오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상위1%의 점유비중이 증가한 시기가 있으며, 상위2~5% 계층의 점유비중도 2021년에 증가한 시기가 있었다.

<표 2-30> 개인 시장소득 점유비중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5.1	5.0	5.3	5.2	5.2	5.5	5.9	6.2
중위40%	36.0	36.2	36.8	36.9	37.2	37.5	38.4	39.0
상위20%	59.0	58.8	57.9	57.9	57.6	57.0	55.8	54.8
상위10%	39.3	39.2	38.4	38.2	38.1	37.7	36.7	36.1
상위5%	25.4	25.2	24.5	24.3	24.4	24.2	23.5	23.2
상위2-5%	16.0	16.1	15.9	15.7	15.6	15.9	15.4	15.0
상위1%	9.3	9.1	8.6	8.6	8.8	8.3	8.2	8.2

<그림 2-36> 상위1%와 상위10%의 개인 시장소득 점유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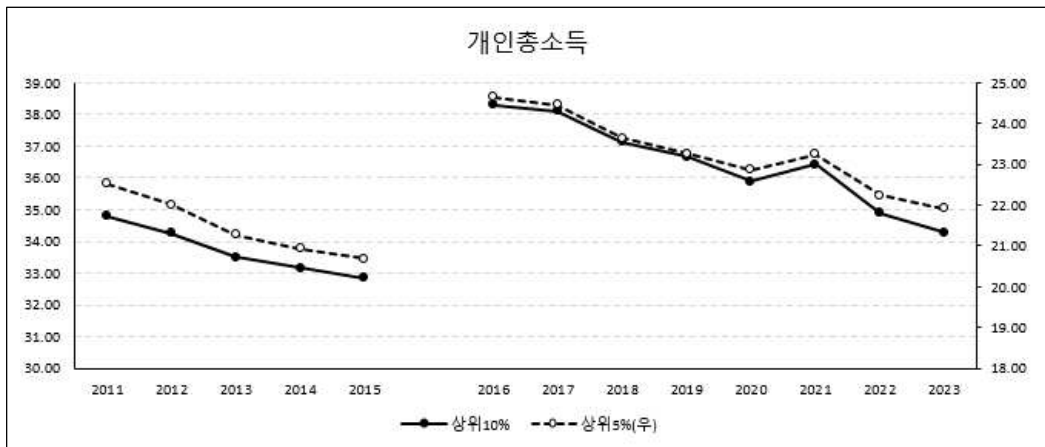


개인 취업재산소득에 공적이전소득까지 합산한 개인 총소득은 상위10%가 34.3%를 점유하고 있다. 2016년에 38.3%로 소득집중도가 가장 심했으며 그 후 빠르게 집중도가 완화되어 왔으나 2021년 상위10%와 상위5%의 소득집중도가 심화되었다가 다시 완화되었다.

<표 2-31> 개인 총소득 점유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40%	9.4	9.6	9.8	9.9	10.1	6.1	6.1	6.6	6.9	7.3	6.6	7.8	8.4
중위40%	37.8	38.2	38.5	38.8	38.8	36.2	36.5	37.1	37.3	38.0	38.0	38.8	39.1
상위20%	52.8	52.2	51.7	51.3	51.0	57.7	57.4	56.3	55.8	54.8	55.3	53.4	52.5
상위10%	34.8	34.2	33.5	33.2	32.8	38.3	38.1	37.1	36.7	35.9	36.4	34.9	34.3
상위5%	22.5	22.0	21.3	20.9	20.7	24.6	24.5	23.6	23.3	22.9	23.3	22.2	21.9
상위2-5%	14.2	14.0	13.7	13.8	13.6	15.7	15.7	15.4	15.1	14.7	15.3	14.6	14.2
상위1%	8.3	8.0	7.5	7.1	7.1	9.0	8.8	8.2	8.1	8.1	7.9	7.6	7.7

<그림 2-37> 상위5%와 상위10%의 개인 총소득 점유비중 변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소득 상위계층 집중도는 소득종류별로 2016년부터 집중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소득은 2020년과 2021년 기간에 상위1%,

또는 상위2~5% 계층의 소득집중도가 심화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개인과 가구의 특성 변화

개인 기준 고소득층과 가구 기준 고소득층의 인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고소득 가구의 가구원 구성 변화를 함께 비교해보기로 한다. 개인소득은 취업소득과 재산소득을 합한 취업재산소득 기준으로 하며, 가구소득은 근로+사업+재산+가구간이전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1) 소득상위층의 특성 변화

취업재산소득 상위5%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경계값이 1억 101만원이상, 평균 소득은 1억 5천793만원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종사상지위 구성 분포는 상용 74.3%, 고용주 12.0%, 자영자 9.2%, 비취업 2.9%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표 2-32>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만원, %)

	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특고	비취업	합계	평균	경계값
2011	66.8	0.5	18.1	12.2	0.0	1.5	1.0	100.0	12,210	7,900
2012	69.9	0.4	17.1	10.2	0.1	1.4	0.9	100.0	12,637	8,000
2013	69.5	0.3	15.7	11.8	0.5	1.2	1.1	100.0	12,422	8,000
2014	71.7	0.2	14.5	11.2	0.1	1.4	1.0	100.0	12,166	8,000
2015	72.3	0.1	13.9	11.1	0.1	1.3	1.3	100.0	10,234	8,040
2016	72.8	0.6	13.4	9.4	0.1	1.5	2.3	100.0	12,791	8,170
2017	73.8	0.7	13.4	8.5	0.3	1.0	2.4	100.0	13,330	8,569
2018	74.9	0.7	12.0	8.2	0.1	1.7	2.5	100.0	13,290	8,708
2019	76.9	0.6	11.1	8.0	0.1	1.3	2.1	100.0	13,445	8,889
2020	77.9	0.5	10.9	7.5		1.3	2.0	100.0	13,755	8,908
2021	78.8	0.5	9.8	7.8	0.0	0.8	2.3	100.0	14,451	9,437
2022	75.8	0.8	10.9	9.0	0.1	0.7	2.7	100.0	14,928	9,819
2023	74.3	0.6	12.0	9.2		1.1	2.9	100.0	15,793	10,101

상위5% 취업재산소득자의 종사상지위 구성비중 변화를 이중차분 행렬<sup>16)</sup>로 계산하면 2021년까지 비중이 감소하던 고용주와 자영자의 비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행렬 이중차분\*

	상용	임시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특고	비취업
2012	1.63	-0.31	-0.94	-1.89	0.42	0.02	1.05
2013	-0.62	-0.03	-1.23	1.71	0.45	-0.19	-0.07
2014	1.66	0.30	-1.30	-0.47	-0.21	0.21	-0.18
2015	0.13	0.60	-0.73	0.14	0.22	-0.03	-0.33
2016	0.04	0.25	-0.46	-1.69	-0.04	0.13	1.75
2017	0.59	0.45	0.07	-1.11	0.21	-0.54	0.32
2018	0.49	-0.28	-1.24	-0.21	-0.23	0.56	0.91
2019	2.64	-0.10	-0.75	-0.22	0.08	-0.49	-1.13
2020	0.09	-0.09	-0.33	-0.89	-0.03	0.07	1.17
2021	-1.06	-0.22	-1.06	0.35	0.19	-0.49	2.31
2022	-4.87	0.14	1.08	1.12	0.32	-0.24	2.45
2023	-2.50	0.03	0.96	0.21	0.05	0.56	0.68

주: \* 행렬차분 = 전년대비 상위5% 구성비율 변화 - 전체 개인 구성비율 차이(행렬 이중차분, Matrix DID)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는 50대 남성이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40대 남성이 31.7%로 그 뒤를 따르며, 60대이상 남성과 3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난다. 구성비율 이중차분 행렬로 보면 60대 남성의 증가와 함께 30~50대 여성의 증가가 눈에 띈다.

16)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계층별 종사자지위 분포의 변화(차분) 행렬을 구한 다음, 전체 가구원의 종사자지위 변화율(차분)을 다시 차감하면, 종사자지위의 전체 분포 변화를 감안한 해당 소득계층 고유의 종사자지위 분포 변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lt;표 2-34&gt;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분포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0.3	0.1	11.6	2.4	44.3	4.4	30.0	1.8	4.4	0.7	100.0
2012	0.2	0.3	13.5	2.0	39.8	4.6	31.1	2.3	5.8	0.6	100.0
2013	0.1	0.4	12.3	1.4	39.0	4.6	33.4	2.0	6.0	0.7	100.0
2014		0.4	10.7	1.3	38.3	3.8	36.2	2.1	6.6	0.6	100.0
2015	0.3	0.4	9.1	1.3	37.2	4.6	36.8	2.7	6.6	0.9	100.0
2016	0.4	0.5	9.5	2.3	36.5	4.9	34.5	3.7	6.5	1.2	100.0
2017	0.5	0.2	9.3	1.9	34.5	5.6	36.1	4.1	7.0	0.9	100.0
2018	0.4	0.3	8.2	1.7	35.0	7.0	35.6	3.9	6.9	1.1	100.0
2019	0.3	0.3	8.8	2.7	33.9	5.4	35.6	3.8	7.9	1.2	100.0
2020	0.4	0.2	9.1	3.2	31.1	6.0	35.5	4.5	8.6	1.3	100.0
2021	0.7	0.1	10.8	4.2	31.3	6.1	31.9	4.1	9.4	1.5	100.0
2022	0.3	0.5	10.6	3.2	30.8	7.0	32.5	4.5	9.5	1.0	100.0
2023	0.5	0.2	8.3	3.4	31.7	6.1	32.3	5.2	10.8	1.5	100.0

&lt;표 2-35&gt;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행렬 이중차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2	-0.30	-0.09	1.53	-0.34	-4.52	0.37	0.83	0.38	1.85	0.31
2013	0.08	0.51	-1.02	-0.59	-0.74	0.17	2.23	-0.47	0.04	-0.20
2014	-0.21	-0.03	-1.10	0.30	-0.49	-0.78	2.76	-0.14	-0.03	-0.27
2015	0.36	0.05	-1.22	0.25	-1.03	0.79	0.57	0.67	-0.41	-0.02
2016	1.23	0.24	0.56	1.33	-0.62	0.26	-2.55	0.87	-0.89	-0.43
2017	0.39	0.15	0.39	0.12	-2.06	0.59	1.52	0.24	-0.36	-0.98
2018	0.68	0.57	-0.79	0.21	0.65	1.73	-0.69	-0.48	-0.95	-0.94
2019	0.31	0.34	1.21	1.34	-1.00	-1.49	0.03	0.06	0.22	-1.02
2020	0.14	0.15	0.16	0.26	-2.72	0.58	-0.14	0.89	0.62	0.07
2021	0.53	-0.07	1.27	0.73	0.33	0.47	-3.57	-0.70	0.61	0.40
2022	-0.03	0.67	-0.62	-0.97	-0.38	1.37	0.71	0.27	-0.21	-0.80
2023	-0.17	-0.03	-2.79	0.40	1.21	-0.60	-0.16	0.87	0.88	0.38

주: \* 행렬차분 = 전년대비 상위5% 구성비율 변화 - 전체 개인 구성비율 차이(행렬 이중차분, Matrix DID)

## 2) 개인총소득 상위5%와 하위40%의 구성 변화

총소득 상위5%에서도 상용직 비중이 계속 늘었으나 2021년 이후 약간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다시 1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비취업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행렬 이중차분으로 확인하면 비취업 증가가 두드러진다. 베이부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

먼저 연금과 재산소득이 있는 비취업 고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다.

<표 2-36>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만원, %)

	상용	임사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특고	비취업	합계	경계값
2011	61.4	0.2	23.1	12.0	0.1	1.2	2.1	100.0	7,228
2012	64.4	0.3	20.1	11.4	0.2	1.6	2.0	100.0	7,400
2013	63.4	0.3	19.5	13.0	0.7	1.3	1.8	100.0	7,600
2014	64.1	0.1	19.7	12.5	0.3	1.3	2.0	100.0	7,700
2015	64.5	0.2	18.4	13.2	0.0	1.4	2.3	100.0	7,970
2016	67.6	0.6	15.7	10.5	0.1	1.6	4.0	100.0	8,120
2017	67.5	0.7	16.2	9.4	0.3	1.0	4.9	100.0	8,545
2018	70.8	0.6	13.3	9.2	0.1	1.3	4.8	100.0	8,663
2019	72.5	0.5	13.2	8.4		1.2	4.2	100.0	8,879
2020	72.4	0.5	13.4	7.6	0.0	1.4	4.7	100.0	9,017
2021	72.9	0.4	11.4	9.7	0.0	0.9	4.7	100.0	9,342
2022	70.6	0.6	12.8	10.2	0.1	0.7	5.0	100.0	9,854
2023	71.6	0.7	11.8	10.0		1.0	5.0	100.0	10,173

<표 2-37> 개인 취업재산소득 상위5%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행렬 이중차분\*

	상용	임사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특고	비취업
2012	1.63	-0.07	-2.90	-0.57	0.43	0.50	0.99
2013	-1.32	0.10	-0.48	1.75	0.59	-0.21	-0.44
2014	0.19	0.17	0.11	-0.41	-0.19	0.01	0.12
2015	-0.10	0.76	-1.34	0.87	-0.05	0.10	-0.22
2016	2.64	0.16	-2.75	-2.65	0.04	0.12	2.42
2017	-0.48	0.39	0.62	-1.27	0.17	-0.55	1.13
2018	2.68	-0.33	-2.74	-0.13	-0.20	0.06	0.64
2019	2.29	-0.07	0.02	-0.82	0.01	-0.14	-1.26
2020	-0.90	0.00	0.01	-1.15	0.05	0.28	1.70
2021	-1.57	-0.32	-1.93	2.14	0.15	-0.54	2.09
2022	-4.06	-0.02	1.39	0.39	0.33	-0.36	2.32
2023	-0.03	0.30	-1.19	-0.14	0.06	0.51	0.48

주: \* 행렬차분 = 전년대비 상위5% 구성비율 변화 - 전체 개인 구성비율 차이(행렬 이중차분, Matrix DID)

&lt;표 2-38&gt; 개인총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분포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0.3	0.1	12.0	2.2	41.4	3.8	30.3	2.1	7.0	1.0	100.0
2012	0.2	0.2	13.3	2.0	37.7	4.3	32.1	2.4	7.0	0.7	100.0
2013	0.4	0.3	12.5	1.5	36.7	4.2	32.4	2.7	8.5	0.8	100.0
2014	0.1	0.3	11.1	1.7	36.0	4.1	35.1	2.8	7.8	1.0	100.0
2015	0.3	0.4	9.2	1.9	35.6	4.6	34.8	3.5	8.5	1.2	100.0
2016	0.4	0.4	9.8	2.2	33.7	4.6	33.2	5.0	9.0	1.7	100.0
2017	0.7	0.3	9.4	2.1	32.2	5.3	33.5	5.3	9.7	1.6	100.0
2018	0.4	0.2	8.1	1.7	31.1	6.5	34.9	5.5	9.9	1.7	100.0
2019	0.5	0.3	8.7	2.9	31.1	5.2	33.0	5.0	11.3	2.0	100.0
2020	0.4	0.2	9.0	3.2	28.7	5.6	32.8	5.1	12.6	2.3	100.0
2021	0.6	0.3	9.9	4.4	28.1	5.6	30.1	5.5	13.1	2.4	100.0
2022	0.3	0.4	10.6	2.9	27.3	6.4	29.9	5.9	13.8	2.4	100.0
2023	0.4	0.2	8.4	3.4	27.8	5.9	29.8	6.2	15.3	2.7	100.0

구성비율 이중차분 행렬로 보면 60대 남성의 증가와 함께 30~50대 여성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

&lt;표 2-39&gt;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성별 연령별 행렬 이중차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2	-0.30	-0.14	1.02	-0.17	-3.65	0.66	1.49	0.17	0.46	0.16
2013	0.29	0.45	-0.67	-0.46	-1.01	0.06	0.25	0.09	1.29	-0.19
2014	-0.36	0.00	-0.88	0.62	-0.49	-0.07	2.62	-0.14	-1.32	0.02
2015	0.26	0.15	-1.53	0.40	-0.34	0.46	-0.30	0.79	0.29	-0.19
2016	1.25	0.13	0.75	0.64	-1.82	-0.08	-1.84	1.39	-0.25	-0.17
2017	0.61	0.35	0.18	0.38	-1.48	0.64	0.26	0.11	-0.16	-0.79
2018	0.43	0.38	-0.93	0.05	-0.94	1.51	1.12	-0.06	-0.65	-1.01
2019	0.56	0.47	1.20	1.50	0.08	-1.21	-1.87	-0.40	0.55	-0.87
2020	-0.04	0.10	0.09	0.09	-2.36	0.40	-0.20	0.29	1.23	0.30
2021	0.35	0.17	0.47	0.99	-0.43	0.44	-2.64	0.07	0.36	0.31
2022	0.10	0.34	0.34	-1.47	-0.74	1.19	-0.13	0.28	0.34	-0.35
2023	-0.21	0.06	-2.74	0.66	0.81	-0.17	-0.04	0.51	1.13	0.18

주: \* 행렬차분 = 전년대비 상위5% 구성비율 변화 - 전체 개인 구성비율 차이(행렬 이중차분, Matrix DID)

개인총소득 하위40%의 구성에서는 비취업자의 증가가 단연 두드러지며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의 하위소득층 편입도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인 비중 변화를 행렬 이

중차분으로 확인하면 비취업 증가가 두드러진다. 하위40%의 가장 큰 비중은 60대 이상, 50대여성, 20대 청년층 순서를 보인다.

<표 2-40>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상용	임사임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특고	비취업	합계
2011	13.8	29.9	0.5	12.2	1.3	1.6	40.8	100.0
2012	15.7	29.0	0.5	11.4	1.7	1.5	40.3	100.0
2013	15.8	29.3	0.7	11.0	1.4	1.7	40.1	100.0
2014	16.3	28.5	0.7	10.1	1.5	1.6	41.3	100.0
2015	15.8	26.5	0.9	10.7	1.4	1.5	43.3	100.0
2016	8.7	13.8	0.2	4.2	4.8	0.7	67.7	100.0
2017	9.1	14.1	0.2	4.2	4.7	0.6	67.1	100.0
2018	8.9	15.1	0.2	4.3	4.9	0.8	65.8	100.0
2019	7.5	14.5	0.3	4.9	4.7	1.0	67.1	100.0
2020	7.6	16.2	0.4	5.2	5.0	1.1	64.5	100.0
2021	6.7	14.4	0.4	4.1	6.1	0.9	67.5	100.0
2022	10.2	17.9	0.4	5.4	4.5	0.9	60.8	100.0
2023	11.4	18.3	0.5	5.7	4.2	0.9	59.0	100.0

<표 2-41>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행렬 차분\*

	상용	임사임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특고	비취업
2012	1.63	-0.07	-2.90	-0.57	0.43	0.50	0.99
2013	-1.32	0.10	-0.48	1.75	0.59	-0.21	-0.44
2014	0.19	0.17	0.11	-0.41	-0.19	0.01	0.12
2015	-0.10	0.76	-1.34	0.87	-0.05	0.10	-0.22
2016	2.64	0.16	-2.75	-2.65	0.04	0.12	2.42
2017	-0.48	0.39	0.62	-1.27	0.17	-0.55	1.13
2018	2.68	-0.33	-2.74	-0.13	-0.20	0.06	0.64
2019	2.29	-0.07	0.02	-0.82	0.01	-0.14	-1.26
2020	-0.90	0.00	0.01	-1.15	0.05	0.28	1.70
2021	-1.57	-0.32	-1.93	2.14	0.15	-0.54	2.09
2022	-4.06	-0.02	1.39	0.39	0.33	-0.36	2.32
2023	-0.03	0.30	-1.19	-0.14	0.06	0.51	0.48

주: \* 행렬차분 = 전년대비 상위5% 구성비율 변화 - 전체 개인 구성비율 차이(행렬 이중차분, Matrix DID)



&lt;표 2-42&gt; 개인총소득 하위40%의 성별 연령별 분포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1	4.9	6.7	3.2	7.2	4.0	11.8	6.0	12.0	19.6	24.6	100.0
2012	5.3	6.8	3.8	7.7	3.8	12.6	6.1	13.1	16.8	23.9	100.0
2013	4.9	6.8	3.6	8.2	4.3	12.8	5.9	13.3	17.1	23.3	100.0
2014	5.5	6.6	2.7	7.7	3.9	12.3	5.9	13.5	18.0	24.0	100.0
2015	5.4	6.4	2.7	7.1	3.5	11.0	5.4	12.9	19.0	26.5	100.0
2016	10.1	10.1	3.0	6.8	2.3	9.2	3.2	10.2	13.4	33.3	100.0
2017	9.4	10.0	2.5	6.6	2.3	8.5	3.4	10.4	13.6	35.3	100.0
2018	8.2	9.6	2.3	6.3	2.3	8.1	3.3	9.8	14.6	37.3	100.0
2019	8.2	9.0	2.1	5.4	2.3	8.1	3.3	9.8	14.3	37.0	100.0
2020	8.2	8.3	2.1	5.9	2.2	9.1	3.4	9.5	14.3	37.0	100.0
2021	9.3	9.9	2.2	6.1	1.9	8.9	2.9	10.0	13.3	35.6	100.0
2022	7.4	8.8	2.3	5.6	2.3	7.2	3.4	9.8	15.8	37.5	100.0
2023	7.2	7.7	2.8	5.5	2.3	6.8	3.4	9.7	17.1	37.5	100.0

&lt;표 2-43&gt;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성별 연령별 행렬 차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2	0.20	-0.14	0.32	0.53	-0.15	0.96	-0.21	0.97	-2.34	-0.24
2013	-0.31	0.35	-0.07	0.54	0.49	0.36	-0.25	-0.01	0.09	-0.89
2014	0.54	-0.20	-0.38	-0.08	-0.19	-0.47	-0.08	-0.04	0.28	0.52
2015	-0.04	-0.15	0.37	-0.40	-0.34	-1.34	-0.50	-0.51	0.59	2.11
2016	5.85	3.83	0.45	0.04	-1.12	-1.88	-2.44	-2.81	-6.35	6.13
2017	-0.39	0.35	0.08	0.28	0.02	-0.76	0.16	0.01	-0.66	1.31
2018	-0.47	0.08	0.17	0.15	0.16	-0.09	-0.38	-0.86	0.15	0.89
2019	0.46	-0.23	0.40	-0.60	0.08	0.09	0.03	0.10	-1.15	-1.47
2020	0.06	-0.50	-0.21	0.29	-0.06	1.00	0.10	-0.11	-0.07	0.00
2021	1.25	1.67	-0.33	-0.01	-0.13	0.24	-0.44	0.17	-1.14	-1.19
2022	-1.50	-0.86	-0.26	-0.47	0.46	-1.31	0.57	-0.32	2.14	1.55
2023	-0.51	-0.84	-0.04	0.06	0.31	-0.07	0.06	0.11	0.93	-0.12

주: \* 행렬차분 = 전년대비 상위5% 구성비율 변화 - 전체 개인 구성비율 차이(행렬 이중차분, Matrix DID)

한편 소득계층별로 소득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인총소득 상위5%의 총소득 구성은 근로소득이 67%를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20%를 차지하는데, 최근 재산소득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lt;표 2-44&gt;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소득 구성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총소득	순자산	순금융자산
2011	5,918	4,742	803	74	24	11,560	93,923	13,203
2012	6,313	4,231	863	66	8	11,482	89,882	14,660
2013	6,337	4,332	719	80	29	11,497	88,128	13,472
2014	6,507	4,053	783	76	14	11,434	89,486	13,698
2015	6,549	3,941	995	93	8	11,586	94,118	12,828
2016	7,686	3,677	1,179	124	17	12,683	91,209	14,555
2017	8,059	3,754	1,272	126	19	13,229	100,508	15,711
2018	8,744	3,059	1,248	119	16	13,186	102,914	16,111
2019	8,686	3,154	1,339	166	26	13,371	107,268	15,858
2020	8,869	3,137	1,456	297	25	13,784	122,900	17,851
2021	9,719	2,873	1,357	263	20	14,232	129,202	15,709
2022	10,081	3,130	1,405	267	22	14,906	129,260	19,938
2023	10,618	3,165	1,698	265	34	15,779	144,635	25,158
'11-'15*	2.6%	-4.5%	5.5%	5.9%	-24.0%	0.1%	0.1%	-0.7%
'16-'23*	4.7%	-2.1%	5.3%	11.5%	10.4%	3.2%	6.8%	8.1%

소득대비 순자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대비 순금융자산 배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총소득 상위5% 개인의 금융자산 중 저축액 구성에서 주식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lt;표 2-45&gt; 개인 총소득 상위5%의 소득 구성비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총소득	순자산	순금융자산
2011	51.2	41.0	6.9	0.6	0.2	100.0	8.1	1.1
2012	55.0	36.8	7.5	0.6	0.1	100.0	7.8	1.3
2013	55.1	37.7	6.3	0.7	0.3	100.0	7.7	1.2
2014	56.9	35.4	6.8	0.7	0.1	100.0	7.8	1.2
2015	56.5	34.0	8.6	0.8	0.1	100.0	8.1	1.1
2016	60.6	29.0	9.3	1.0	0.1	100.0	7.2	1.1
2017	60.9	28.4	9.6	1.0	0.1	100.0	7.6	1.2
2018	66.3	23.2	9.5	0.9	0.1	100.0	7.8	1.2
2019	65.0	23.6	10.0	1.2	0.2	100.0	8.0	1.2
2020	64.3	22.8	10.6	2.2	0.2	100.0	8.9	1.3
2021	68.3	20.2	9.5	1.8	0.1	100.0	9.1	1.1
2022	67.6	21.0	9.4	1.8	0.1	100.0	8.7	1.3
2023	67.3	20.1	10.8	1.7	0.2	100.0	9.2	1.6
'11-'15*	5.3	-7.0	1.6	0.2	-0.1	0.0	0.0	0.0
'16-'23*	6.7	-8.9	1.5	0.7	0.1	0.0	2.0	0.4

&lt;표 2-46&gt; 개인 총소득 상위5%의 금융자산 및 저축액

	저축총액	현금예금	저축	보험	주식채권	펀드
2011	19,766	3,129	8,070	4,743	3,824	
2012	20,966	3,224	6,802	5,625	3,658	1,657
2013	20,002	3,050	6,549	5,988	3,146	1,270
2014	21,182	3,462	6,296	6,336	3,443	1,644
2015	21,602	3,355	6,304	6,890	3,220	1,832
2016	22,020	3,498	6,848	6,559	3,532	1,584
2017	23,622	3,818	7,174	7,139	4,021	1,470
2018	25,278	3,599	8,430	6,762	3,647	2,840
2019	24,927	4,889	8,037	6,472	3,809	1,720
2020	26,842	4,936	7,774	6,554	6,199	1,378
2021	24,972	5,112	6,988	5,204	5,887	1,781
2022	27,621	4,785	8,813	5,481	6,978	1,564
2023	33,485	5,226	10,359	5,840	10,387	1,673
'11-'15*	2.2%	1.8%	-6.0%	9.8%	-4.2%	
'16-'23*	6.2%	5.9%	6.1%	-1.6%	16.7%	0.8%

주식채권 비중이 처음으로 최상위 5% 계층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게 되었다. 보험과 펀드 비중은 줄어든 상태이다.

&lt;표 2-47&gt; 개인 총소득 상위5%의 금융자산 및 저축액

	저축총액	현금예금	저축	보험	주식채권	펀드
2011	100.0	15.8	40.8	24.0	19.3	0.0
2012	100.0	15.4	32.4	26.8	17.4	7.9
2013	100.0	15.2	32.7	29.9	15.7	6.3
2014	100.0	16.3	29.7	29.9	16.3	7.8
2015	100.0	15.5	29.2	31.9	14.9	8.5
2016	100.0	15.9	31.1	29.8	16.0	7.2
2017	100.0	16.2	30.4	30.2	17.0	6.2
2018	100.0	14.2	33.3	26.8	14.4	11.2
2019	100.0	19.6	32.2	26.0	15.3	6.9
2020	100.0	18.4	29.0	24.4	23.1	5.1
2021	100.0	20.5	28.0	20.8	23.6	7.1
2022	100.0	17.3	31.9	19.8	25.3	5.7
2023	100.0	15.6	30.9	17.4	31.0	5.0
'11-'15*		-0.3	-11.6	7.9	-4.4	8.5
'16-'23*		-0.3	-0.2	-12.3	15.0	-2.2

&lt;표 2-48&gt;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소득 구성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총소득	순자산	순금융자산
2011	418	107	44	121	93	783	18,040	2,780
2012	453	105	44	120	82	804	18,445	2,833
2013	490	111	45	131	79	856	19,479	3,142
2014	499	107	41	157	72	876	19,953	2,925
2015	484	115	40	187	72	897	20,635	3,163
2016	223	46	61	143	43	516	28,278	4,389
2017	236	50	62	153	48	549	30,480	4,400
2018	253	56	63	175	58	605	31,119	4,165
2019	249	65	73	208	59	653	32,678	3,830
2020	259	70	74	265	54	722	37,321	4,248
2021	225	60	65	262	53	666	44,733	5,406
2022	325	84	83	304	70	865	40,728	5,393
2023	361	101	122	342	71	997	41,093	5,338
'11-'15*	3.7%	1.8%	-2.4%	11.5%	-6.2%	3.5%	3.4%	3.3%
'16-'23*	7.1%	11.9%	10.4%	13.3%	7.4%	9.9%	5.5%	2.8%

반면 개인총소득 하위40%의 소득구성에서 근로소득 비중은 줄어고 공적이전 소득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이후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된 공적이전소득 중에서 증가폭이 큰 급여 항목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며, 기초생보와 고용산재급여의 증가도 확인된다. 저소득층은 소득대비 순자산 배율이 하락하고 있다.

&lt;표 2-49&gt;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소득 구성비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총소득	순자산	순금융자산
2011	53.4	13.7	5.6	15.5	11.9	100.0	23.0	3.6
2012	56.3	13.1	5.5	14.9	10.2	100.0	22.9	3.5
2013	57.2	13.0	5.3	15.3	9.2	100.0	22.8	3.7
2014	57.0	12.2	4.7	17.9	8.2	100.0	22.8	3.3
2015	54.0	12.8	4.5	20.8	8.0	100.0	23.0	3.5
2016	43.2	8.9	11.8	27.7	8.3	100.0	54.8	8.5
2017	43.0	9.1	11.3	27.9	8.7	100.0	55.5	8.0
2018	41.8	9.3	10.4	28.9	9.6	100.0	51.4	6.9
2019	38.1	10.0	11.2	31.9	9.0	100.0	50.0	5.9
2020	35.9	9.7	10.2	36.7	7.5	100.0	51.7	5.9
2021	33.8	9.0	9.8	39.3	8.0	100.0	67.2	8.1
2022	37.6	9.7	9.6	35.1	8.1	100.0	47.1	6.2
2023	36.2	10.1	12.2	34.3	7.1	100.0	41.2	5.4
'11-'15*	0.6	-0.8	-1.2	5.4	-3.9	0.0	0.0	0.0
'16-'23*	-7.0	1.2	0.4	6.6	-1.2	0.0	-13.6	-3.2

&lt;표 2-50&gt; 개인 총소득 하위40%의 공적이전소득 구성

	합계	연금	기초 연금	장애	기초 생보	양육	근로 장려	고용 산재	농업	코로나	기타
2011	121	41	27	3	28	0	0	4	1	0	18
2012	120	43	26	6	29	0	0	0	0	0	16
2013	131	48	26	6	29	4	0	0	0	0	17
2014	157	56	40	9	29	5	0	0	0	0	19
2015	187	62	62	9	32	4	1	0	0	0	17
2016	143	38	67	6	21	1	3	0	0	0	6
2017	153	44	70	6	23	1	3	0	0	0	6
2018	175	49	80	6	25	1	3	0	0	0	10
2019	208	53	101	7	25	1	10	0	0	0	10
2020	265	61	106	7	26	1	9	17	0	30	7
2021	262	58	101	8	29	1	7	16	0	35	7
2022	304	86	117	8	38	2	10	22	0	11	10
2023	342	99	127	10	50	2	12	31	0	0	11
'11-'15*	66.0	21.0	35.0	6.0	4.0	4.0	1.0	-4.0	-1.0	0.0	-1.0
'16-'23*	199.0	61.0	60.0	4.0	29.0	1.0	9.0	31.0	0.0	0.0	5.0

전체 개인소득 계층의 특성을 요약하면, 최상위1%는 근로자의 고용주, 자영업자가 있어서 근로자비율 낮은 편이지만, 하위40%는 고령자, 여성이 2/3를 차지하며, 고졸이하, 낮은 근로자비율의 특징을 보인다.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여성비율 줄고, 교육년수는 길어지며, 근로자비율이 높아진다.

&lt;표 2-51&gt; 개인 취업재산소득 계층별 특성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하위 40%	연령	48.2	47.4	48.3	48.4	49.1	49.5	50.6	51.7	52.7	52.4	52.4	52.6	52.6
	여성비율	57.8	58.5	58.6	58.4	59.1	68.2	68.8	68.4	67.6	67.1	67.1	66.6	65.5
	교육년수	10.7	11.3	11.3	11.4	11.4	11.0	11.0	10.9	10.9	11.0	11.2	11.3	11.4
	근로자	55.3	57.3	57.0	56.5	55.3	18.1	17.8	18.8	16.8	18.5	20.6	23.3	24.1
중위 40%	연령	42.3	42.4	42.8	43.2	43.5	46.1	47.0	47.6	48.1	48.3	47.6	47.5	47.6
	여성비율	33.8	31.5	31.6	33.9	33.9	47.2	47.9	47.7	49.2	48.7	48.3	48.5	47.9
	교육년수	13.0	13.3	13.4	13.4	13.5	12.8	12.8	12.9	12.9	13.0	13.1	13.2	13.3
	근로자	70.9	70.1	72.8	72.1	72.1	67.2	66.1	66.3	65.8	65.6	68.3	68.8	69.2
상위 11-20%	연령	44.4	44.2	44.5	44.7	44.7	44.3	45.1	45.6	46.1	46.2	46.4	46.2	46.0
	여성비율	18.1	18.1	18.6	19.5	20.5	22.0	24.9	23.8	23.8	24.2	25.9	26.6	27.0
	교육년수	14.2	14.4	14.3	14.4	14.6	14.0	14.0	14.1	14.1	14.1	14.3	14.4	14.5
	근로자	69.0	71.6	67.4	69.7	71.9	69.3	70.1	69.9	71.0	72.1	71.4	73.8	75.4
상위 5-10%	연령	46.4	46.6	47.0	47.4	47.0	46.4	47.2	47.4	47.9	47.6	47.4	47.8	47.7
	여성비율	11.9	13.6	14.7	13.7	14.7	19.8	20.2	22.8	24.0	22.5	23.7	23.9	24.9
	교육년수	14.8	14.9	14.8	14.8	14.9	14.7	14.8	14.9	15.0	14.9	15.0	15.1	15.0
	근로자	73.7	74.8	73.0	76.0	75.5	76.5	77.6	77.9	76.0	78.1	79.4	79.6	75.7
상위 2-5%	연령	47.6	47.8	48.3	48.4	48.9	48.8	49.0	49.5	49.5	49.9	49.4	49.4	49.7
	여성비율	9.5	9.6	9.6	9.3	10.8	13.4	14.2	15.2	15.2	17.3	18.2	20.2	20.3
	교육년수	14.8	15.0	14.9	14.8	15.0	14.9	15.0	15.2	15.4	15.4	15.4	15.3	15.2
	근로자	65.7	68.2	69.5	68.6	69.6	71.6	72.8	75.1	76.4	76.8	75.8	73.1	75.6
상위 1%	연령	48.9	49.8	49.8	50.7	51.1	50.7	50.9	51.1	51.1	50.7	50.6	51.0	51.7
	여성비율	9.0	7.5	8.1	9.3	11.7	16.0	16.6	17.6	16.7	17.6	16.5	11.8	14.8
	교육년수	14.9	15.0	15.1	15.1	15.0	15.2	15.3	15.7	15.8	15.8	16.1	15.9	15.9
	근로자	38.5	44.8	42.5	45.6	46.1	56.3	54.5	57.6	62.7	63.5	68.9	70.3	67.8
전체	연령	45.4	45.3	45.8	46.0	46.3	47.4	48.3	49.1	49.9	49.8	49.5	49.5	49.6
	여성비율	39.3	40.3	40.2	40.5	40.7	50.1	50.6	50.8	51.1	50.8	50.8	50.8	50.1
	교육년수	12.3	12.7	12.8	12.8	12.9	12.4	12.4	12.4	12.4	12.5	12.7	12.8	12.9
	근로자	64.1	64.4	65.3	65.3	65.2	48.3	47.9	48.5	47.6	48.4	50.4	51.8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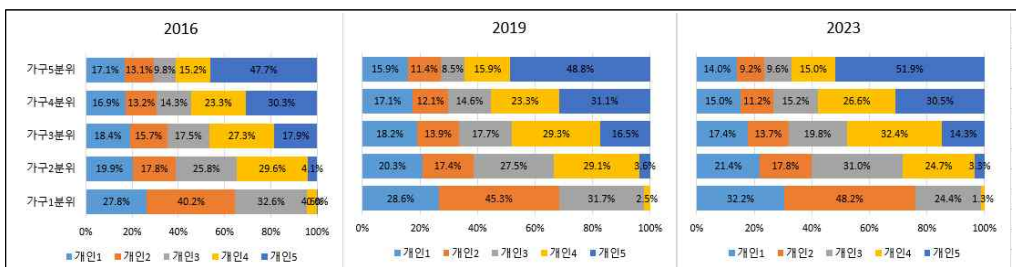
## 4) 가구의 특성 변화 : 개인과 가구 동질화

2011년 이후 개인과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분배상황의 변화 양상과 함께 개인과 가구의 소득 형성과 관련한 인적 특성의 변화 가운데 유의미한 현상들을 통계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구소득 분위별로 가구원의 개인소득 분위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소득 가구에 고소득 가구원이 속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저소득 개인이 속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원래 일반적인 경향으로 존재하지만, 그 정도가 유의할 정도로 높아지만 소득불평등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6년에는 가구 시장소득 5분위(상위20%)에 개인 취업소득 하위20%에 속하는 가구원이 17.1% 존재했으나,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5.1%로 줄어들고 2023년에는 14.0%로 더 줄어들었다. 가구소득 5분위에 속하는 개인소득 2분위 가구원의 비율도 2016년 13.1%에서 2019년 11.4%, 2023년 9.2%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가구소득 상위20%에 속하는 개인소득 상위20%의 가구원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19년 48.8%로 늘었고, 2023년에는 51.9%로 절반을 넘게 되었다. 가구의 소득분위와 가구원의 개인소득분위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lt;그림 2-38&gt;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교차 분포



&lt;표 2-52&gt; 가구 균등화시장소득 5분위 vs. 개인시장소득 5분위

		2016	2019	2023
가구1분위	개인1분위	27.8%	28.6%	32.2%
	개인2분위	40.2%	45.3%	48.2%
	개인3분위	32.6%	31.7%	24.4%
	개인4분위	4.6%	2.5%	1.3%
	개인5분위	0.0%		
가구2분위	개인1분위	19.9%	20.3%	21.4%
	개인2분위	17.8%	17.4%	17.8%
	개인3분위	25.8%	27.5%	31.0%
	개인4분위	29.6%	29.1%	24.7%
	개인5분위	4.1%	3.6%	3.3%
가구3분위	개인1분위	18.4%	18.2%	17.4%
	개인2분위	15.7%	13.9%	13.7%
	개인3분위	17.5%	17.7%	19.8%
	개인4분위	27.3%	29.3%	32.4%
	개인5분위	17.9%	16.5%	14.3%
가구4분위	개인1분위	16.9%	17.1%	15.0%
	개인2분위	13.2%	12.1%	11.2%
	개인3분위	14.3%	14.6%	15.2%
	개인4분위	23.3%	23.3%	26.6%
	개인5분위	30.3%	31.1%	30.5%
가구5분위	개인1분위	17.1%	15.9%	14.0%
	개인2분위	13.1%	11.4%	9.2%
	개인3분위	9.8%	8.5%	9.6%
	개인4분위	15.2%	15.9%	15.0%
	개인5분위	47.7%	48.8%	51.9%

마찬가지로 저소득 분위에 속하는 가구에 개인소득이 낮은 가구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에 가구소득 하위20%에 개인소득 하위20%에 속하는 가구원의 비율은 27.8%였는데, 2019년 이 비율은 28.6%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32.2%로 증가했다. 개인소득이 낮은 가구원들끼리 저소득 가구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구-개인 소득분위 동질화 현상은 가구 내에서 가구원들간의 소득이나 지출을 공유함으로써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선택 폭을 높이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 저소득 가구가 가구원의 소득능력을 바탕으로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에 가구소득 1분위에 개인소득 4분위 가구원이 4.6%에서 1.3%로 줄었고 개인소득 3분위 비율도 32.6%에서 24.4%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구1분위가 다른 분위로 상승 이동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가구와 개인총소득 5분위 가구원의 교차표에서도 2012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에는 가구소득과 개인소득간 동질성이 완화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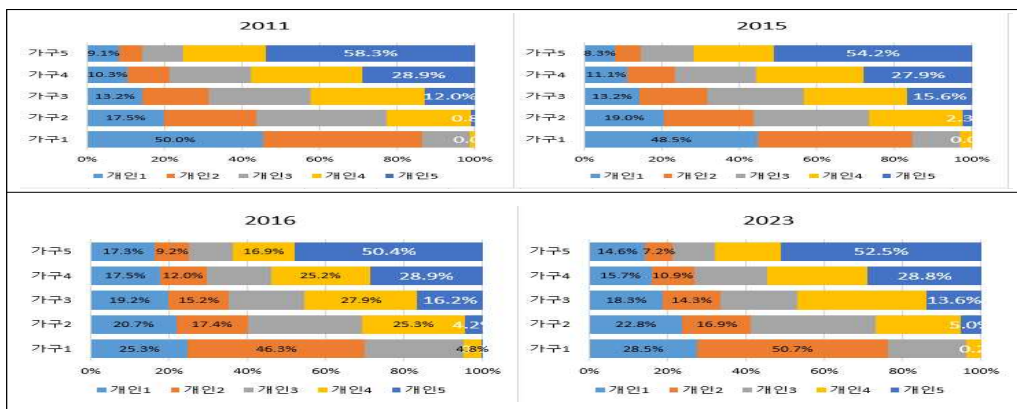


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1분위에 개인4분위 비율이 늘어나고 가구5분위에 속한 개인1~2분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2019년에서 2023년 기간에는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가구1분위에 속한 개인4~5분위 비율이 감소하고 가구5분위에 속한 개인1~2분위 비중이 일제히 감소하고 있다.

<표 2-53> 가구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vs. 개인 총소득 5분위 교차 분포

		2012	2015	2019	2023
가구1분위	개인1분위	50.0%	48.5%	25.3%	28.5%
	개인2분위	45.4%	43.0%	46.3%	50.7%
	개인3분위	13.7%	13.6%	25.6%	20.9%
	개인4분위	1.4%	3.3%	4.8%	3.7%
	개인5분위	0.0%	0.0%	0.3%	0.2%
가구2분위	개인1분위	17.5%	19.0%	20.7%	22.8%
	개인2분위	21.3%	21.6%	17.4%	16.9%
	개인3분위	29.8%	27.7%	27.6%	30.6%
	개인4분위	19.5%	22.3%	25.3%	20.9%
	개인5분위	0.8%	2.3%	4.2%	5.0%
가구3분위	개인1분위	13.2%	13.2%	19.2%	18.3%
	개인2분위	16.1%	16.1%	15.2%	14.3%
	개인3분위	24.4%	23.4%	18.8%	19.2%
	개인4분위	27.4%	24.8%	27.9%	32.3%
	개인5분위	12.0%	15.6%	16.2%	13.6%
가구4분위	개인1분위	10.3%	11.1%	17.5%	15.7%
	개인2분위	10.9%	12.1%	12.0%	10.9%
	개인3분위	20.8%	21.0%	16.5%	18.4%
	개인4분위	28.6%	27.9%	25.2%	25.7%
	개인5분위	28.9%	27.9%	28.9%	28.8%
가구5분위	개인1분위	9.1%	8.3%	17.3%	14.6%
	개인2분위	6.3%	7.2%	9.2%	7.2%
	개인3분위	11.5%	14.4%	11.5%	11.0%
	개인4분위	23.1%	21.8%	16.9%	17.5%
	개인5분위	58.3%	54.2%	50.4%	52.5%

<그림 2-39>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교차 분포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고소득 가구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 가구에 저소득 가구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가구-개인 동조’ 현상으로 유형화하고, 반대로 고소득 가구에 저소득 가구원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저소득 가구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가구-개인 탈동조’ 현상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구소득 4-5분위에 속하는 개인소득 4-5분위의 비율(고소득 가구-개인 동조), 가구소득 1-2분위에 속하는 개인소득 1-2분위의 비율(저소득 가구-개인 동조)을 구하고, 반대로 가구소득 4-5분위에 속하는 개인소득 1-2분위의 비율(고소득 가구-개인 탈동조), 가구소득 1-2분위에 속하는 개인소득 4-5분위 비율(저소득 가구-개인 탈동조)으로 4개 그룹으로 유형화해서 추이를 살펴본다.

다음의 표를 보면 2016년 이후 특히 2020~2021년 이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양측에서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고 탈동조화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고소득 비율이 2020년 70.6%에서 2023년 76.3%로 높아졌고 저소득-저소득 비율도 65.1%에서 68.1%로 높아졌다.

<표 2-54> 가구와 개인의 소득분위 동질성 추이

	가구-개인 동조		가구-개인 탈동조	
	고소득가구-고소득개인	저소득가구-저소득개인	고소득가구-저소득개인	저소득가구-고소득개인
2011	85.1%	72.4%	1.2%	15.0%
2012	84.0%	72.5%	2.2%	15.3%
2013	84.9%	72.4%	2.6%	15.7%
2014	85.1%	70.2%	2.4%	15.7%
2015	84.6%	71.8%	3.1%	14.7%
2016	70.0%	63.9%	5.0%	25.2%
2017	71.5%	64.8%	5.1%	24.8%
2018	71.4%	65.5%	4.8%	23.9%
2019	70.9%	67.0%	4.8%	23.1%
2020	70.6%	65.1%	5.2%	24.3%
2021	69.1%	65.7%	5.6%	24.2%
2022	74.9%	66.9%	4.8%	22.5%
2023	76.3%	68.1%	3.7%	21.3%
'11-'15*	-0.6%	-0.6%	1.9%	-0.3%
'16-'23*	6.3%	4.2%	-1.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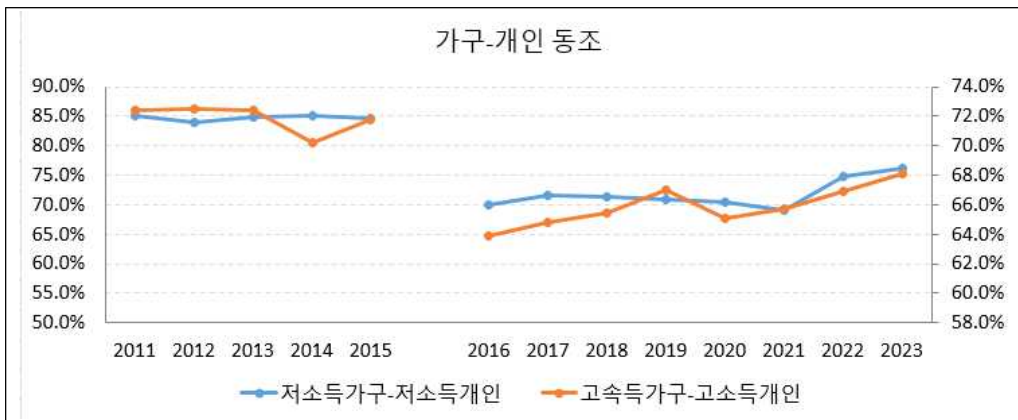
주 :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5분위 기준으로 고소득은 4-5분위, 저소득은 1-2분위로 정의

\* 해당기간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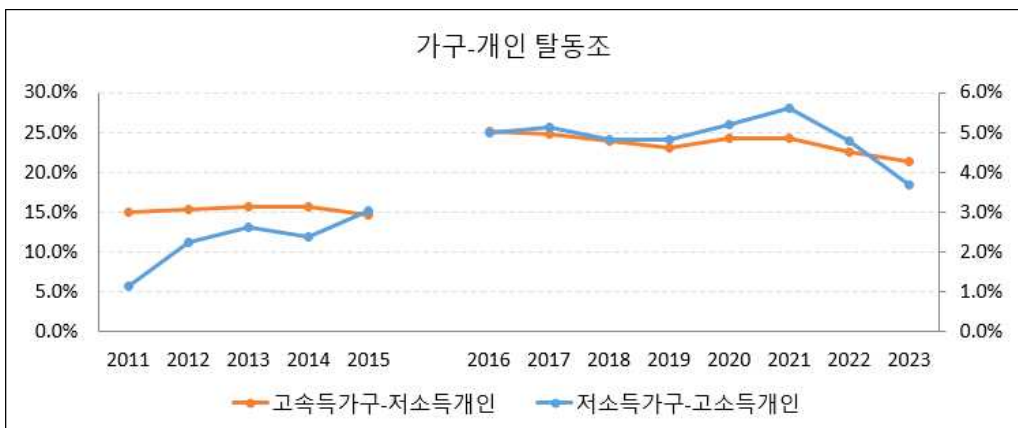
반면 탈동조로 유형화한 고소득가구-저소득개인 비율은 5.6%에서 3.7%로 낮아졌고 저소득가구-고소득개인 비율은 24.3%에서 21.3%로 더욱 크게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가구소득과 가구원의 소득계층의 유사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생애주기 특성에 의해 젊은 가구원이나 고령자 가구원의 소득분위는 가구소득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으며,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고소득 가구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0> 가구-개인의 동조화 경향



<그림 2-41> 가구-개인의 탈동조화 경향



&lt;표 2-55&gt; 가구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vs. 개인 취업소득5분위 교차 분포

		2012	2015	2019	2023
가구1분위	개인1분위	41.0%	38.3%	36.8%	39.0%
	개인2분위	22.7%	24.0%	20.8%	20.8%
	개인3분위	16.4%	17.0%	16.5%	16.1%
	개인4분위	11.9%	12.4%	14.5%	13.5%
	개인5분위	7.9%	8.4%	11.5%	10.6%
가구2분위	개인1분위	18.8%	15.6%	25.6%	26.6%
	개인2분위	29.0%	27.9%	26.6%	25.0%
	개인3분위	23.8%	22.9%	20.2%	20.3%
	개인4분위	19.0%	21.5%	16.4%	16.6%
	개인5분위	9.5%	12.1%	11.2%	11.5%
가구3분위	개인1분위	7.4%	7.5%	8.7%	7.5%
	개인2분위	26.2%	22.2%	27.0%	29.3%
	개인3분위	26.6%	25.3%	24.9%	24.8%
	개인4분위	24.4%	24.4%	23.8%	23.4%
	개인5분위	15.5%	20.5%	15.6%	15.0%
가구4분위	개인1분위	0.7%	0.7%	2.8%	2.6%
	개인2분위	17.3%	17.8%	19.6%	16.3%
	개인3분위	26.7%	24.9%	28.4%	30.4%
	개인4분위	28.8%	30.2%	28.7%	30.6%
	개인5분위	26.6%	26.5%	20.5%	20.2%
가구5분위	개인1분위	0.0%	0.0%	0.2%	0.1%
	개인2분위	0.5%	0.9%	2.1%	3.5%
	개인3분위	10.4%	12.9%	13.1%	12.7%
	개인4분위	28.5%	26.7%	28.1%	26.6%
	개인5분위	60.6%	59.5%	56.5%	57.2%

## 5) 부부간 소득분위의 동질화 : 동류혼 비율의 증가

이와 함께 가구의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부간 소득분위가 동일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동류혼(同類婚)으로 불리는 현상으로 경제력이 유사한 개인들이 결혼하고 맞벌이 가구를 유지하면서 가구소득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해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과 함께 진행되면서 개인간 소득격차가 가구단위에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개인소득을 5분위로 구분한 다음 부부간의 소득분위 차가 0일 경우를 ‘동일분위’, 가구주의 소득분위에서 배우자의 소득분위를 뺀 값이 2이하일 때 ‘가구주 약우위’, 3이상일 때 ‘가구주 강우위’, -2이상일 때 ‘가구주 약열위’, -3이하일 때 ‘가구주 강열위’로 구분하여 부부가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가구의 소득분위별로 분포를 확인하였다.

전체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간 소득분위 차이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구주 약우위’로 39.1%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유형은 ‘가구주 강우위’로 26.9%를 차지했다. ‘부부동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19.7%로 세 번째로 많은 가구유형에 속했다. 그밖에 ‘가구주 약열위’는 8.7%, ‘맞벌이가 아님(부부 한쪽의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가 4.5%에 속했다.

&lt;표 2-56&gt; 부부간 소득분위 차이

	가구주 강우위	가구주 약우위	부부동일	가구주 약열위	가구주 강열위	맞벌이가 아님	전체
2011	9.1	25.3	12.8	4.0	0.3	48.5	100.0
2012	10.8	28.2	13.4	4.2	0.3	43.2	100.0
2013	12.3	26.4	13.0	4.1	0.4	43.7	100.0
2014	12.3	27.6	13.4	4.8	0.3	41.7	100.0
2015	12.0	27.7	14.0	4.7	0.3	41.2	100.0
2016	30.6	36.8	16.2	6.7	0.5	9.2	100.0
2017	29.8	37.6	16.5	6.9	0.6	8.6	100.0
2018	29.5	37.9	16.7	7.4	0.7	7.7	100.0
2019	29.2	37.8	17.8	7.3	0.7	7.2	100.0
2020	29.6	38.4	17.2	7.4	0.6	6.8	100.0
2021	30.9	39.6	19.2	8.0	0.8	1.5	100.0
2022	28.8	38.4	18.7	9.1	0.8	4.2	100.0
2023	26.9	39.1	19.7	8.7	1.0	4.5	100.0
’11-’15*	2.9	2.4	1.2	0.8	0.0	-7.3	
’16-’23*	-3.7	2.4	3.5	2.0	0.5	-4.7	

그런데 소득분위를 구분해서 비교하면 고소득 분위일수록 부부의 소득분위가 동일한 비율이 높고 증가 추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소득 상위10%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동일’ 가구 비중이 39.9%로 가장 높았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 가구의 경우 2011년에는 ‘가구주 약우위’가 2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부동일’이 20.9%를 차지했으나 2012년부터 부부동일 가구가 1위의 위치를 차지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차이를 벌려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는 ‘부부동일’ 가구가 ‘가구주 약우위’에 비해 10%p 이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t;표 2-57&gt; 경상소득 상위10% 가구의 부부간 소득분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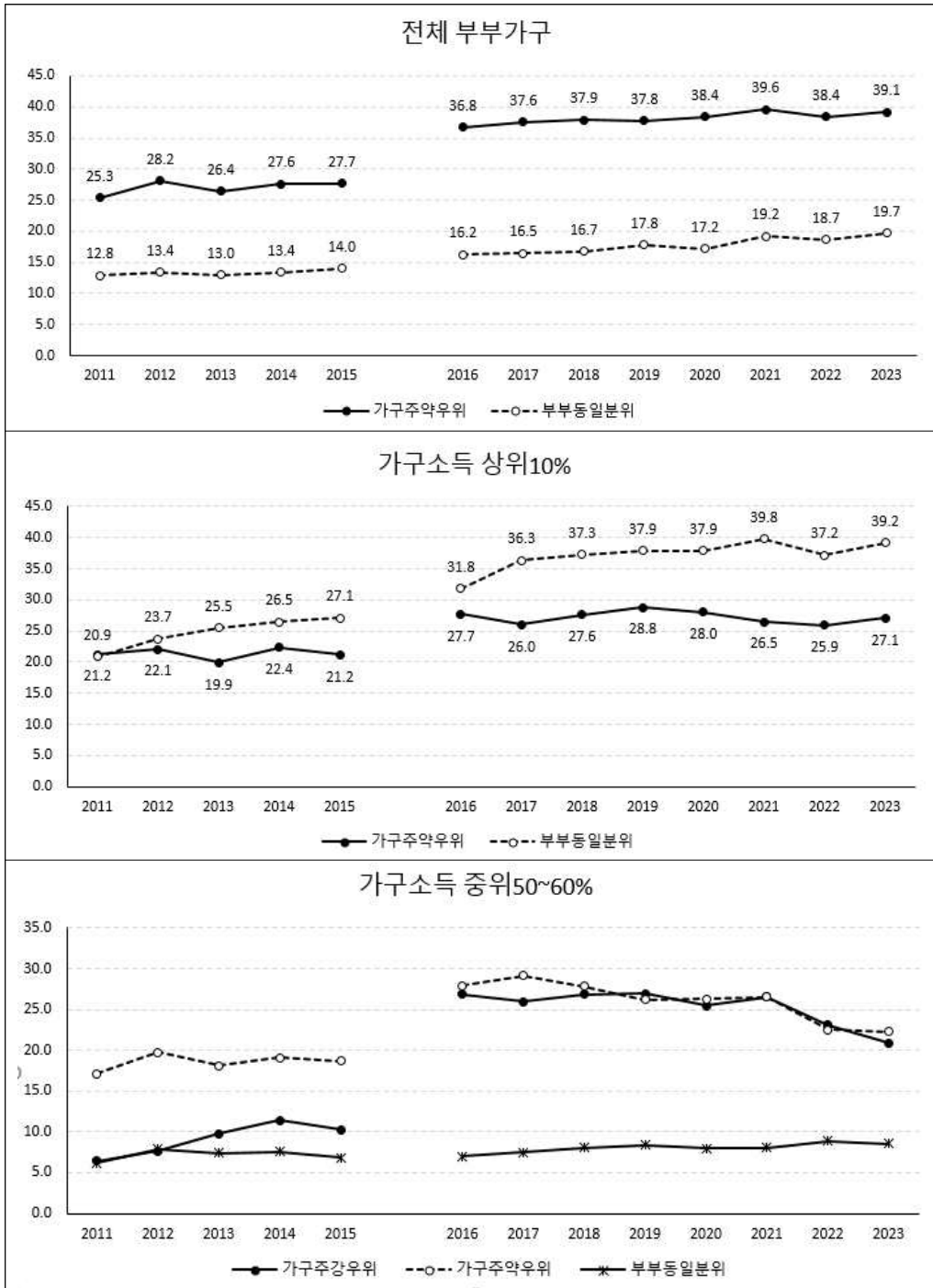
	가구주 강우위	가구주 약우위	부부동일	가구주 약열위	가구주 강열위	맞벌이 아님	전체
2011	12.0	21.2	20.9	3.8	0.4	41.6	100.0
2012	13.3	22.1	23.7	3.6	0.5	36.8	100.0
2013	13.8	19.9	25.5	2.6	0.5	37.6	100.0
2014	14.3	22.4	26.5	2.8	0.1	34.0	100.0
2015	13.0	21.2	27.1	3.5	0.1	35.3	100.0
2016	28.4	27.7	31.8	3.8	0.4	8.0	100.0
2017	26.9	26.0	36.3	3.8	0.4	6.6	100.0
2018	25.1	27.6	37.3	4.1	0.5	5.6	100.0
2019	24.4	28.8	37.9	3.7	0.6	4.6	100.0
2020	24.6	28.0	37.9	4.0	0.4	5.0	100.0
2021	23.4	26.5	39.8	4.4	0.2	5.8	100.0
2022	25.8	25.9	37.2	4.4	0.3	6.5	100.0
2023	22.1	27.1	39.2	4.6	0.5	6.5	100.0
'11-'15*	0.9	0.0	6.2	-0.4	-0.4	-6.3	
'16-'23*	-6.3	-0.6	7.4	0.9	0.2	-1.5	

반면 중위소득 가구(가구소득 10분위 중 5분위)의 경우 부부가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는 8.5%에 그쳤고 ‘부부동일’ 비중의 증가폭도 미미했다.

&lt;표 2-58&gt; 경상소득 중위51~60% 가구의 부부간 소득분위 차이

	가구주 강우위	가구주 약우위	부부동일	가구주 약열위	가구주 강열위	맞벌이 아님	전체
2011	6.4	17.1	6.2	2.8	0.1	67.4	100.0
2012	7.6	19.8	7.9	2.5	0.2	62.0	100.0
2013	9.8	18.1	7.4	2.9	0.4	61.4	100.0
2014	11.4	19.1	7.6	3.2	0.2	58.6	100.0
2015	10.3	18.7	6.9	3.8	0.3	60.1	100.0
2016	26.9	27.9	7.0	6.2	0.3	31.7	100.0
2017	26.0	29.1	7.5	6.4	0.6	30.4	100.0
2018	26.9	27.9	8.1	6.1	0.7	30.4	100.0
2019	26.9	26.2	8.4	7.0	0.5	31.0	100.0
2020	25.5	26.3	8.0	6.1	0.5	33.7	100.0
2021	26.6	26.6	8.1	6.8	0.4	31.6	100.0
2022	23.1	22.5	8.9	6.6	0.8	38.1	100.0
2023	20.9	22.3	8.5	6.0	0.7	41.6	100.0
'11-'15*	3.9	1.5	0.7	1.0	0.2	-7.3	
'16-'23*	-6.0	-5.6	1.5	-0.2	0.4	9.9	

&lt;그림 2-42&gt; 부부간 소득 동질성 추이



## 6) 가구원 소득원천의 다양화

최근 10년간 가구원의 개인소득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취업경로의 확산으로 인해 N잡러 형태의 다중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취업경로와 소득원천의 확대는 저소득 일 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변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고소득 가구의 추가적인 소득원천으로서 기능함으로써 향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원 개인의 소득을 인별로 합산하면 하나의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종류별로 각 개인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소득유형’을 구분하였다.

우선 근로소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근로소득 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소득이 90%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중심형’으로 구분했다. 고령자 증가와 재산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재산소득이 총소득의 50%이상인 경우 ‘재산소득형’으로 구분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총소득의 50%이상인 경우 ‘공적이전소득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나 간헐적 취업과 같은 소액의 소득을 갖는 경우도 가금복에서는 모두 포착되는 이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위소득의 25%미만의 소득을 얻을 경우(2023년 기준 645만원미만) ‘중위25%미만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근로소득 비중이 90% 미만이고 사업소득 비중도 90% 미만이며, 비취업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를 ‘혼합소득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6가지 소득유형은 각각 적극적 취업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산이나 복지급여나 소규모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로 경제활동 상태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총소득에 대한 각 소득의 비율을 먼저 계산한 뒤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23년말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형’으로 45.6%의 가구원



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혼합소득형’으로 19.2%를 차지했는데 이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양쪽에서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네 번째로 많은 유형은 ‘공적이전소득형’으로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이 개인소득의 50%를 넘는 가구원의 비중이 17.6%에 달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사업소득형으로 8.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위25%’ 이하 유형도 8.4%로 사업소득형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부는 사업소득형이 아니라 ‘중위25%이하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재산소득형은 0.7%로 아직 비중이 크지 않았다.

2012년 이후 각 유형의 비중 변화를 보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혼합형’과 ‘중위25%이하’ 유형이며 근로소득이 90% 이상인 유형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위25%이하’ 유형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가구원 개인의 소득원천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9> 개인 소득유형별 구성 비율 추이

	근로소득형	사업소득형	혼합형	공적이전형	재산소득형	중위25%이하	전체
2011	45.8	12.0	4.7	32.7	0.2	4.6	100.0
2012	47.2	11.7	5.0	31.5	0.3	4.5	100.0
2013	47.1	11.0	4.8	32.7	0.3	4.2	100.0
2014	47.3	10.8	4.5	33.1	0.3	4.0	100.0
2015	47.2	10.4	4.5	33.9	0.3	3.6	100.0
2016	48.1	8.9	16.7	18.0	0.5	7.8	100.0
2017	47.7	8.9	17.0	17.7	0.6	8.2	100.0
2018	47.8	8.9	16.9	17.7	0.5	8.2	100.0
2019	47.2	8.5	17.2	18.2	0.6	8.3	100.0
2020	46.2	8.3	16.9	19.9	0.6	8.1	100.0
2021	47.2	8.6	14.2	22.2	0.6	7.2	100.0
2022	47.9	8.6	16.6	18.4	0.6	7.8	100.0
2023	45.6	8.5	19.2	17.6	0.7	8.4	100.0
'11-'15*	1.4	-1.6	-0.2	1.2	0.1	-1.0	
'16-'23*	-2.5	-0.4	2.5	-0.4	0.2	0.6	

주: 근로소득형(근로소득90%이상), 사업소득형(사업소득90%이상), 공적이전-재산소득형(해당소득50%이상)

그런데 소득계층을 구분해서 ‘취업소득 상위5%’인 고소득 개인과 ‘취업소득 하

위40%’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따로 분석해보면 이들에게서 ‘혼합형’ 소득유형이 전체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0> 개인 소득유형별 구성 비율 추이(취업소득 상위5%)

	근로소득형	사업소득형	혼합형	공적이전형	재산소득형	중위25%이하	전체
2011	55.9	35.3	8.4		0.4		100.0
2012	60.1	31.0	8.4		0.5		100.0
2013	59.6	31.9	7.9		0.6		100.0
2014	59.0	31.1	9.3		0.6		100.0
2015	61.6	29.6	8.1		0.7		100.0
2016	62.5	21.7	15.0		0.8		100.0
2017	59.9	23.2	16.3		0.6		100.0
2018	68.5	17.4	13.4		0.7		100.0
2019	70.0	14.9	14.5		0.7		100.0
2020	69.2	16.3	13.8		0.7		100.0
2021	66.7	17.6	15.0		0.7		100.0
2022	71.5	12.7	15.5		0.3		100.0
2023	66.4	14.4	18.7		0.6		100.0
’11-’15*	5.7	-5.7	-0.3		0.3		
’16-’23*	3.9	-7.3	3.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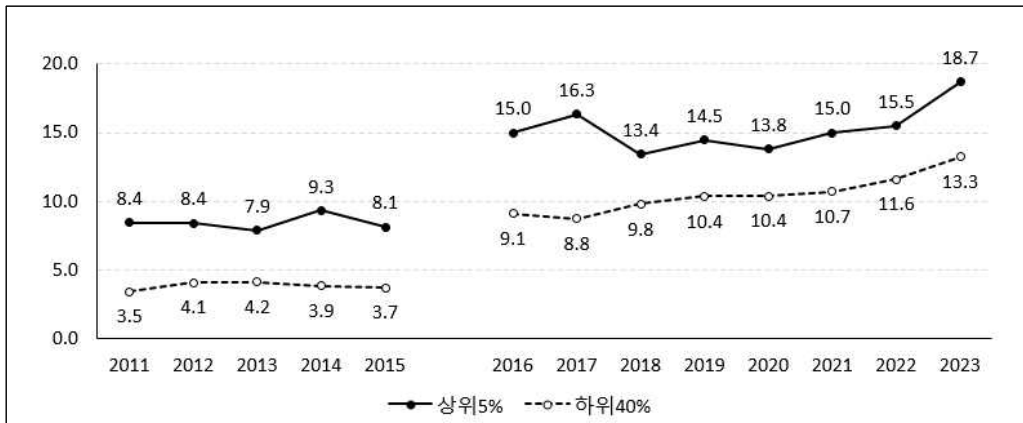
주: 근로소득형(근로소득90%이상), 사업소득형(사업소득90%이상), 공적이전-재산소득형(해당소득50%이상)

<표 2-61> 개인 소득유형별 구성 비율 추이(취업소득 하위40%)

	근로소득형	사업소득형	혼합형	공적이전형	재산소득형	중위25%이하	전체
2011	56.4	13.7	3.5	2.8	0.7	22.9	100.0
2012	57.3	12.9	4.1	2.8	0.9	22.0	100.0
2013	57.9	12.2	4.2	2.9	0.8	22.0	100.0
2014	58.8	12.5	3.9	3.2	0.9	20.9	100.0
2015	59.0	14.4	3.7	4.0	0.9	17.9	100.0
2016	41.3	7.9	9.1	5.9	1.5	34.3	100.0
2017	40.0	7.4	8.8	6.5	1.5	35.9	100.0
2018	38.7	8.3	9.8	7.5	1.3	34.4	100.0
2019	35.4	8.7	10.4	9.3	1.4	34.8	100.0
2020	30.5	8.6	10.4	15.4	1.2	33.9	100.0
2021	33.3	9.1	10.7	16.4	1.5	29.1	100.0
2022	33.3	8.6	11.6	13.9	1.6	31.0	100.0
2023	31.1	8.5	13.3	13.3	1.8	32.0	100.0
’11-’15*	2.6	0.7	0.3	1.2	0.2	-5.0	
’16-’23*	-10.2	0.6	4.2	7.5	0.3	-2.4	

2020년 이후 이러한 혼합소득 유형이 고소득층과 하위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하고 중위소득 25% 이하 소액 소득자도 증가하는 현상은 소득원천의 다양화가 소득분배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2-43> 혼합형 소득유형 구성비 추이



주: 혼합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총소득의 90% 미만인 반면 중위소득 25% 이상인 경우

## 6. 소득-자산 결합 분석 결과 : 고소득-고자산, 저소득-저자산 계층의 특징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소득과 자산의 계층별로 가구와 가구원의 구성 특성을 확인하고,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결합하여 소득과 자산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에 있는 가구의 특성을 확인해보고 최근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추가적인 불평등 분석과 한국 사회의 계층 분류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 1) 균등화시장소득 상위5%와 하위40%

공적이전소득을 지급받기 이전의 균등화시장소득 기준으로 상위5% 고소득가구와 하위40% 저소득 가구의 특성을 확인하고 비교할 것이다.

상위5% 가구는 2023년말 현재 가구주 평균연령이 53.9세이고 여성가구주 비율은 11.0%이며 경상소득은 2억 7천90만원이며 순자산은 18.5억, 순금융자산은 3.6억원, 거주주택가격은 6.6억으로 추정된다.

<표 2-62> 상위5%와 하위40% 가구의 기본 특성

		2011	2015	2019	2023
상위5%	연령	49.2	51.1	52.7	53.9
	가구원수	3.23	3.20	3.16	2.95
	여성비율(%)	7.6%	7.9%	6.7%	11.0%
	교육년수	12.7	13.2	13.3	13.6
	경상소득	16,424	16,965	22,454	27,090
	순자산	113,404	111,563	138,150	184,669
	순금융자산	16,925	14,205	21,808	36,283
	거주주택가격	33,150	33,935	52,497	66,254
하위40%	연령	53.8	56.8	60.0	62.1
	가구원수	2.44	2.46	2.17	1.99
	여성비율(%)	36.6%	35.2%	35.3%	35.9%
	교육년수	8.7	9.4	9.6	10.3
	경상소득	1,730	2,078	2,532	3,228
	순자산	13,933	16,799	20,999	25,210
	순금융자산	1,943	2,437	2,637	3,402
	거주주택가격	7,567	9,499	11,899	14,717

이에 비해 하위40% 가구는 평균연령이 62.1세이며 여성가구주 비율이 35.9%이며 경상소득은 3,228만원, 순자산은 2억 5천210만원, 순금융자산은 0.3억, 거주주택 가격은 1.3억 수준에 그친다.

상위5% 가구주는 연령별 성별 분포에서 50대와 40대 남성의 비중이 가장 크데 이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60대 남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30대 남성과 여성, 50대 여성 가구주가 상위5%에 진입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하위40%는 60대 남성과 여성 등 고령자 가구 비중이 가장 많은데 지금도 이 비중이 증가하면서 최근 20~30대 청년들이 하위가구로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표 2-63> 상위5%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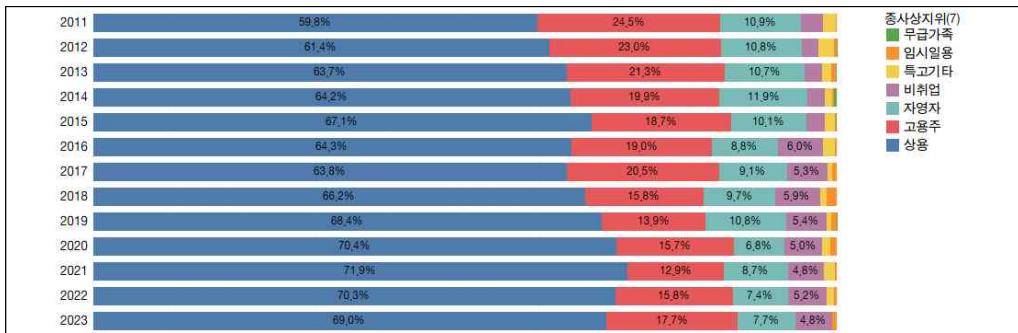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대이하	남성	0.5	0.4	0.4	0.3	0.3	0.3	0.2	0.1	0.2	0.4	0.5	0.7	0.2
	여성	0.0	0.0	0.1	0.2	0.1	0.1	0.2	0.1	0.1	0.1	0.2	0.1	0.1
30대	남성	13.7	13.4	13.9	11.4	9.6	7.9	7.0	6.8	10.0	11.8	12.2	10.8	9.1
	여성	1.2	0.9	0.9	0.6	0.6	1.0	1.2	0.9	0.5	0.7	1.3	1.3	1.1
40대	남성	36.2	30.5	28.4	27.6	28.5	28.2	29.6	32.1	27.0	24.3	23.7	27.4	24.6
	여성	2.4	1.5	1.2	1.7	2.1	1.1	1.9	1.5	0.6	1.1	1.4	1.6	3.4
50대	남성	35.7	42.4	42.9	44.6	43.9	45.4	44.0	40.2	42.6	42.9	39.5	37.0	35.6
	여성	1.3	1.5	1.9	1.3	2.0	3.0	2.1	1.7	1.9	2.3	2.1	2.2	3.1
60대이상	남성	8.5	8.9	9.7	11.6	11.8	11.2	13.0	15.5	16.3	15.6	18.2	18.4	21.9
	여성	0.5	0.4	0.7	0.5	1.1	1.7	0.8	1.1	0.7	0.9	0.9	0.5	1.0

<표 2-64> 하위40%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대이하	남성	1.9	1.8	1.1	1.3	1.0	1.3	1.1	1.1	1.0	1.1	1.2	1.6	1.6
	여성	1.0	0.9	0.6	0.4	0.6	0.6	0.6	0.6	0.7	0.7	1.0	1.1	1.2
30대	남성	13.4	13.4	13.4	12.1	11.7	12.1	11.1	10.4	9.0	9.1	8.4	9.0	9.1
	여성	2.8	2.3	2.1	2.2	2.1	2.2	1.7	1.6	1.6	1.7	2.3	1.8	2.3
40대	남성	18.9	21.3	20.5	19.7	18.4	19.9	19.0	17.6	16.6	16.3	16.1	14.8	13.8
	여성	6.6	6.1	6.5	6.5	6.1	4.9	4.4	4.5	4.2	4.3	4.1	4.5	3.7
50대	남성	14.9	15.6	15.6	15.0	15.4	14.8	14.3	14.4	13.7	14.2	13.4	12.6	13.2
	여성	5.0	5.1	5.7	6.4	6.4	5.5	5.4	5.2	4.9	5.1	5.2	5.2	5.1
60대이상	남성	25.7	24.2	24.8	26.6	27.8	28.0	31.1	32.8	34.9	34.6	35.0	35.7	36.1
	여성	9.8	9.4	9.7	9.8	10.5	10.6	11.2	12.0	13.4	13.0	13.2	13.8	13.9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에서는 상용직 비중이 69.0%로 가장 높는데 최근 이 비율이 다소 줄어들면서 과거 비중이 하락해왔던 고용주 가구의 비중이 2019년 13.9%에서 2023년 17.7%로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하위40% 가구에서는 비취업 무직 가구주 비중이 37.4%로 가장 높은 편이지만 2020년 이후 무직 가구주의 비중이 다소 줄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44> 상위5%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그림 2-45> 하위40%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상위5%의 가구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이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소매업과,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업 등이 뒤를 잇는다. 하위40% 가구주의 종사산업은 비취업이 3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제조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이 뒤를 잇는다. 다만, 이러한 산업분포는 산업별 종사자의 규모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산업 종사자 비중을 차분하여 각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는 산업을 확인해볼 수 있다.

&lt;표 2-65&gt; 상위5%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조업	22.8%	22.2%	23.0%	23.8%	20.2%	20.1%	18.4%	23.2%	23.0%	21.7%	23.4%	28.3%	26.8%
도소매업	11.4%	9.2%	10.5%	11.4%	11.3%	12.3%	11.4%	9.8%	11.2%	11.8%	11.1%	11.0%	13.1%
금융보험	9.5%	9.6%	8.4%	9.0%	11.5%	9.8%	9.2%	8.5%	10.4%	10.5%	9.3%	8.1%	8.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7%	7.1%	6.2%	7.1%	8.2%	7.6%	5.8%	8.2%	8.2%	9.3%	13.5%	10.1%	7.8%
건설업	5.9%	6.5%	6.1%	5.1%	5.7%	5.9%	7.0%	5.2%	5.2%	6.0%	6.3%	5.8%	5.8%
보건사회복지업	5.3%	5.7%	4.9%	4.4%	4.6%	6.0%	7.5%	6.9%	6.0%	6.8%	5.1%	5.9%	5.2%
출판영상정보통신업	5.1%	4.2%	4.3%	5.0%	4.0%	4.6%	5.5%	5.5%	5.4%	4.8%	3.9%	4.3%	5.1%
교육서비스업	7.8%	9.4%	9.2%	8.3%	7.7%	6.6%	6.2%	6.7%	6.5%	7.6%	6.2%	4.2%	4.9%
비취업	3.0%	2.2%	2.4%	2.5%	2.5%	6.0%	5.3%	5.9%	5.4%	5.0%	4.8%	5.2%	4.8%
농림어업	3.4%	4.7%	4.5%	5.1%	4.8%	3.6%	3.2%	2.5%	2.3%	2.2%	2.4%	2.3%	3.4%
운수업	2.1%	3.0%	2.8%	3.2%	3.6%	2.4%	4.5%	3.8%	2.8%	2.0%	2.5%	3.4%	3.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4.3%	4.7%	5.0%	4.7%	5.8%	3.9%	4.5%	3.5%	3.8%	4.2%	2.7%	3.3%	2.9%
숙박음식업	4.9%	3.9%	4.6%	3.4%	2.7%	3.3%	3.3%	2.3%	1.8%	1.5%	1.4%	2.3%	2.8%
부동산임대업	2.8%	2.3%	3.3%	2.4%	3.1%	2.9%	3.2%	2.9%	2.7%	2.8%	2.9%	1.4%	2.1%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0.9%	0.8%	0.6%	0.8%	1.7%	1.5%	1.9%	1.8%	1.1%	0.9%	1.4%	1.8%	1.1%
예술스포츠여가업	0.8%	0.6%	0.6%	1.1%	0.5%	0.4%	0.6%	0.6%	0.4%	0.4%	1.1%	1.0%	0.7%
하수물폐기처리업	0.2%	0.3%	0.5%	0.2%	0.2%	0.1%	0.1%	0.2%	0.6%	0.3%	0.3%	0.4%	0.6%
전기가스수도업	1.1%	1.2%	1.0%	1.0%	0.7%	1.0%	1.0%	1.2%	2.0%	1.3%	0.8%	0.5%	0.6%
협회단체수리서비스업	1.7%	2.0%	2.1%	1.6%	1.0%	1.6%	1.2%	1.1%	1.2%	1.3%	0.8%	0.6%	0.5%
외국국제기관	0.2%	0.2%	0.2%	0.2%	0.2%	0.2%	0.2%					0.0%	0.1%
광업	0.2%					0.0%	0.1%						

&lt;표 2-66&gt; 하위40%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취업	34.0%	33.8%	34.2%	35.7%	38.2%	37.2%	37.3%	38.5%	41.6%	39.5%	38.0%	37.3%	37.4%
제조업	9.2%	8.9%	8.9%	8.8%	8.7%	9.4%	9.2%	8.3%	7.6%	7.2%	8.3%	8.3%	8.2%
농림어업	10.0%	8.9%	8.7%	8.5%	7.9%	7.6%	8.2%	8.2%	8.1%	8.1%	7.6%	7.4%	7.2%
도소매업	8.2%	8.7%	7.9%	7.7%	7.4%	7.5%	7.4%	7.1%	6.6%	6.7%	6.8%	7.1%	6.7%
건설업	7.1%	7.6%	7.5%	6.9%	5.8%	5.7%	6.3%	6.7%	5.8%	5.7%	5.9%	5.8%	5.4%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4.7%	4.5%	4.8%	4.6%	4.9%	5.3%	5.4%	5.2%	4.7%	4.7%	4.3%	3.9%	3.7%
운수업	4.2%	4.7%	4.7%	4.7%	4.5%	4.8%	4.3%	4.4%	4.3%	4.6%	4.5%	4.4%	4.6%
숙박음식업	4.8%	4.7%	4.5%	4.7%	4.6%	4.9%	4.8%	4.0%	4.1%	4.7%	4.4%	4.4%	4.5%
협회단체수리서비스업	4.3%	4.2%	4.4%	4.6%	4.5%	4.4%	3.8%	4.0%	3.6%	3.7%	3.8%	3.9%	3.8%
보건사회복지업	2.5%	2.3%	2.3%	2.4%	2.9%	3.0%	3.2%	3.9%	4.1%	4.8%	5.6%	6.0%	6.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2.1%	2.3%	2.4%	2.2%	2.0%	1.8%	2.0%	2.1%	2.0%	2.5%	2.8%	2.8%	2.8%
교육서비스업	2.5%	2.3%	2.6%	2.5%	2.4%	2.2%	2.2%	2.2%	2.2%	2.2%	2.2%	2.1%	2.0%
부동산임대업	1.9%	2.1%	2.3%	2.0%	1.6%	1.6%	1.4%	1.1%	1.2%	1.2%	1.2%	1.5%	1.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0%	1.1%	1.1%	1.3%	1.0%	1.2%	1.1%	1.0%	1.1%	1.1%	1.3%	1.3%	1.8%
출판영상정보통신업	0.9%	1.1%	0.9%	1.0%	1.0%	1.3%	0.9%	0.9%	0.8%	0.9%	1.0%	1.1%	1.0%
예술스포츠여가업	0.8%	0.7%	0.8%	0.9%	0.9%	0.9%	0.9%	0.7%	0.8%	1.0%	1.1%	1.3%	1.2%
금융보험	0.9%	1.0%	0.9%	0.6%	0.7%	0.6%	0.7%	0.6%	0.7%	0.6%	0.6%	0.8%	0.7%
가사서비스업	0.6%	0.6%	0.6%	0.5%	0.6%	0.3%	0.4%	0.4%	0.3%	0.3%	0.2%	0.3%	0.2%
하수물폐기처리업	0.3%	0.3%	0.4%	0.4%	0.3%	0.4%	0.4%	0.3%	0.4%	0.3%	0.3%	0.4%	0.3%
전기가스수도업	0.1%	0.1%	0.2%	0.2%	0.1%	0.1%	0.2%	0.2%	0.1%	0.1%	0.0%	0.1%	0.1%
광업	0.0%	0.1%	0.0%	0.0%	0.0%	0.0%	0.1%	0.1%	0.1%	0.0%	0.0%	0.0%	0.0%
외국국제기관					0.0%					0.0%		0.0%	0.0%



전체 산업분포를 차분한 결과 상위5%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제조업(+9.9%p), 금융보험(+6.0%p),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1%p), 도소매업(+2.6%p), 출판영상정보통신업(+1.9p), 교육서비스업(+1.4%p) 등이었다.

이에 반해 하위40% 가구가 더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비취업자가 전체 가구보다 14.7%p 더 많았고, 농림어업(+2.7), 협회단체수리서비스업(+1.2), 숙박음식업(+0.9), 보건사회복지업(+0.8),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0.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산업과 직업을 교차하여 상위5% 및 하위40% 가구의 산업별 직업군을 가장 많은 순서대로 각각 10개 집단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직업군이 우리나라 가구의 시장소득의 상위층과 하위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7> 소득계층별 주요 산업 및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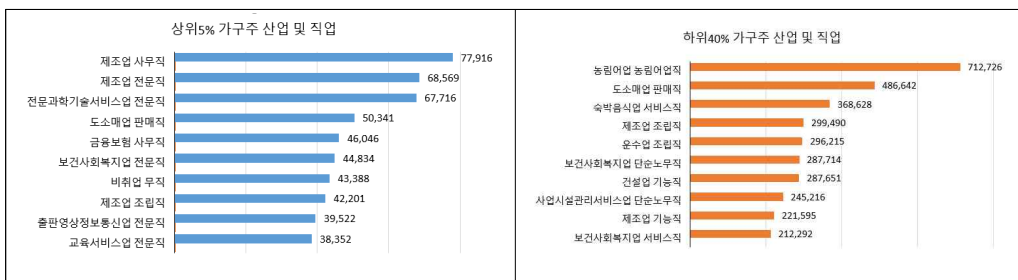
균등화시장소득 상위 5%					
순위	산업	직업	가구수	비중*	누적비율
1	제조업	사무직	77,916	8.7%	8.7%
2	제조업	전문직	68,569	7.7%	16.4%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직	67,716	7.6%	23.9%
4	도소매업	판매직(고용주포함)	50,341	5.6%	29.5%
5	금융보험	사무직	46,046	5.1%	34.7%
6	보건사회복지업	전문직(의사등)	44,834	5.0%	39.7%
7	비취업	무직	43,388	4.8%	44.5%
8	제조업	조립직	42,201	4.7%	49.2%
9	출판영상정보통신업	전문직	39,522	4.4%	53.6%
10	교육서비스업	전문직	38,352	4.3%	57.9%
균등화시장소득 하위40%					
순위	산업	직업	가구수	비중*	누적비율
1	비취업	무직	3,958,006	37.4%	37.4%
2	농림어업	농림어업직	712,726	6.7%	44.1%
3	도소매업	판매직	486,642	4.6%	48.7%
4	숙박음식업	서비스직	368,628	3.5%	52.2%
5	제조업	조립직	299,490	2.8%	55.0%
6	운수업	조립직	296,215	2.8%	57.8%
7	보건사회복지업	단순노무직	287,714	2.7%	60.5%
8	건설업	기능직	287,651	2.7%	63.2%
9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단순노무직	245,216	2.3%	65.6%
10	제조업	기능직	221,595	2.1%	67.6%

주 : \* 비중은 상위5%, 하위40% 가구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 상위5%에 포함되는 가구에서 가구주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산업의 직업은 제조업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8만 가구로 상위5% 가구의 8.7%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많은 직업은 제조업 전문직으로 6.9만 가구로 7.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전문직이 6.8만 가구(7.6%), 도소매업의 고용주를 포함한 판매직이 5.0만(5.6%), 금융보험 사무직이 4.6만(5.0), 의사를 포함한 보건복지업의 전문직이 4.4만(4.8%) 가구를 차지했고,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도 시장소득 상위5%에 포함되는 가구가 3.9만(4.8%)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조립직 노동자도 상위5% 속한 경우가 4.2만 가구로 4.7%를 차지했다. 상위5% 가구의 10개 산업 및 직업이 전체 상위5% 가구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위4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무직가구가 395만 가구로 전체 하위40% 가구의 3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71.2만 가구로 6.7%를 차지했고 도소매업 판매직(48.7만, 4.6%), 숙박음식업 서비스직(36.9만, 3.5%), 그리고 제조업 조립직(29.9만, 2.8%)이 그 뒤를 이었다. 운수업 조립직과 보건사회복지업의 단순노무직, 건설업 기능직 등도 주요한 직종으로 포함됐다. 하위40% 가구의 주요 직업 10개도 전체 하위40% 가구의 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8> 소득계층별 가구주 산업 분포



## 2) 소득-자산 결합 25개 계층 분석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도 가구의 공식분배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균등화소득 이외에 경상소득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분위에 관한 모집단 추정결과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득 분위와 자산 분위기를 결합하게 되면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소득×자산분위에 관한 계층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고소득이면서 고자산인 가구와 저소득이면서 저자산인 가구, 그리고 중간 수준의 소득과 중간 정도의 순자산을 가진 가구 등이 구분될 수 있다.

이에 통계청의 경상소득 5분위와 순자산 5분위를 교차하여 25개의 소득자산 결합 분위기를 구분하고 이 계층분위로 우리나라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소득과 자산 분위기를 단순 교차할 경우 해당 분위의 가구 수는 동일한 가구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소득-고자산인 가구와 저소득-저자산인 가구는 일정한 규모로 항상 존재하지만 고소득이면서 저자산인 가구와 저소득이면서 고자산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하지만 매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계층이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25개 계층분위를 구분해서 가구의 특성이 어떠한지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lt;표 2-68&gt; 소득-자산 결합 25개 계층 분위

순위	산업	순위	산업	순위	산업
1	저소득-저자산	11	중소득-저자산	21	고소득-저자산
2	저소득-중하자산	12	중소득-중하자산	22	고소득-중하자산
3	저소득-중자산	13	중소득-중자산	23	고소득-중자산
4	저소득-중상자산	14	중소득-중상자산	24	고소득-중상자산
5	저소득-고자산	15	중소득-고자산	55	고소득-고자산
6	중하소득-저자산	16	중상소득-저자산	X	
7	중하소득-중하자산	17	중상소득-중하자산		
8	중하소득-중자산	18	중상소득-중자산		
9	중하소득-중상자산	19	중상소득-중상자산		
10	중하소득-고자산	20	중상소득-고자산		

&lt;표 2-69&gt; 소득-자산 결합 25개 계층분위 연도별 가구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LW-LC	1,688	1,746	1,773	1,773	1,801	1,878	1,886	1,935	1,920	1,943	2,098	2,095	2,104
2-LW-MLC	897	917	924	926	971	1,008	1,012	1,032	1,057	1,047	1,101	1,038	1,106
3-LW-MC	538	520	526	540	527	562	590	550	600	582	564	656	633
4-LW-MHC	298	292	277	294	314	290	289	310	321	347	358	369	398
5-LW-HC	156	153	179	195	164	155	161	156	160	185	178	196	184
6-MLW-LC	1,076	1,056	1,068	1,092	1,133	1,096	1,130	1,123	1,144	1,180	1,158	1,242	1,282
7-MLW-MLC	964	1,021	1,019	1,028	1,033	1,085	1,058	1,075	1,081	1,078	1,172	1,230	1,275
8-MLW-MC	701	723	743	765	769	808	821	853	812	853	966	887	890
9-MLW-MHC	539	501	499	513	510	577	573	569	628	610	647	623	643
10-MLW-HC	297	325	349	331	332	326	357	363	393	383	360	372	334
11-MW-LC	549	550	553	591	561	579	562	594	629	648	672	643	659
12-MW-MLC	960	946	1,008	946	994	958	1,012	983	1,006	1,051	1,056	1,100	1,086
13-MW-MC	953	1,011	971	957	996	1,004	984	1,000	1,029	973	1,121	1,105	1,193
14-MW-MHC	654	693	701	739	753	830	810	844	830	882	855	885	913
15-MW-HC	462	431	447	497	473	521	571	563	564	549	597	621	575
16-MHW-LC	210	226	236	206	233	260	282	255	270	247	278	304	323
17-MHW-MLC	584	564	558	625	583	643	650	691	679	673	750	754	771
18-MHW-MC	943	944	985	996	1,020	999	1,056	1,057	1,059	1,110	1,040	1,090	1,084
19-MHW-MHC	1,072	1,126	1,133	1,137	1,089	1,099	1,129	1,122	1,171	1,165	1,279	1,250	1,259
20-MHW-HC	768	767	765	764	852	892	821	860	879	908	952	957	988
21-HW-LC	53	49	49	67	50	79	78	76	95	84	93	69	58
22-HW-MLC	173	182	169	204	195	199	207	203	235	255	222	232	186
23-HW-MC	441	431	454	472	465	519	489	524	559	586	609	617	627
24-HW-MHC	1,015	1,016	1,068	1,045	1,113	1,096	1,138	1,139	1,108	1,100	1,163	1,227	1,211
25-HW-HC	1,895	1,952	1,940	1,942	1,956	2,000	2,029	2,041	2,062	2,079	2,215	2,208	2,345
전체	17,884	18,141	18,394	18,643	18,887	19,463	19,694	19,916	20,291	20,517	21,504	21,769	22,127

주 : W-소득, C-자산, L-낮음, H-높음, M-중간. LW-LC=저소득-저자산

이렇게 소득과 자산을 결합하여 계층을 분류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는 순자산 보유액도 낮고 소득이 높은 가구는 순자산 보유액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1분위 하위계층의 72%가 순자산 1,2분위에 속하게 되며, 소득과 자산 모두 최하위에 속하는 계층(전체의 9.6%)과 소득과 자산모두 최상위에 속하는 계층(전체의 10.1%)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2023년 기준 25개 계층 분위의 가구 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lt;표 2-70&gt; 소득-자산 25계층 가구의 분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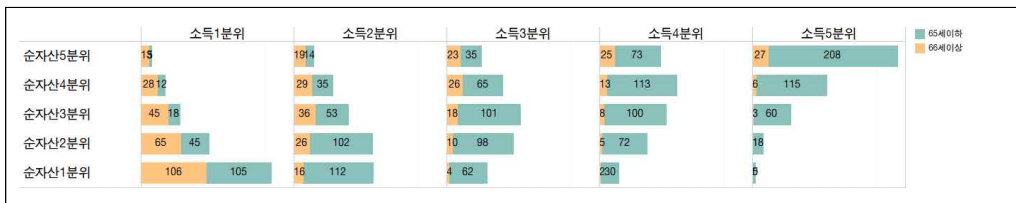
(단위: 만 가구, %)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합계
순자산 5분위	184 (0.8)	334 (1.5)	575 (2.6)	988 (4.5)	2,345 (10.6)	4,426 (20.0)
순자산 4분위	398 (1.8)	643 (2.9)	913 (4.1)	1,259 (5.7)	1,211 (5.5)	4,424 (20.0)
순자산 3분위	633 (2.9)	890 (4.0)	1,193 (5.4)	1,084 (4.9)	627 (2.8)	4,427 (20.0)
순자산 2분위	1,106 (5.0)	1,275 (5.8)	1,086 (4.9)	771 (3.5)	186 (0.8)	4,424 (20.0)
순자산 1분위	2,104 (9.5)	1,282 (5.8)	659 (3.0)	323 (1.5)	58 (0.3)	4,426 (20.1)
소계	4,425 (20.0)	4,424 (20.0)	4,426 (20.0)	4,425 (20.1)	4,427 (20.0)	22,127 (100.1)

25개 계층을 65세이상 노인가구와 65세미만 가구로 구분하면 노인가구는 대부분 저소득 가구이면서 순자산 보유액도 낮은 편이다. 순자산 보유액이 많으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가구는 106만 가구에 불과하다.

&lt;그림 2-49&gt; 소득-자산 25계층 가구의 분포(2023)

(단위: 만가구)



&lt;표 2-71&gt; 소득-자산 결합 25개 계층분위 가구 특성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전체
순자산 5분위	평균연령	72.9	67.9	61.8	58	54.4	57.4
	여성비율	43.8%	30.7%	17.1%	11.4%	7.6%	12.9%
	가구원수	1.54	1.96	2.46	2.9	3.39	2.45
	시장소득	989	2,577	4,435	7,484	17,859	6,669
	경상소득	1,691	3,585	5,788	8,814	19,040	13,146
	순자산	107,955	119,082	114,443	123,031	161,876	125,277
	주택가격	69,468	61,046	56,968	57,089	67,576	63,441
순자산 4분위	평균연령	72.1	64.8	58.2	51.8	51	56
	여성비율	43.1%	26.2%	18.0%	10.7%	10.5%	17.3%
	가구원수	1.57	2.05	2.54	3.06	3.48	2.54
	시장소득	903	2,645	4,799	7,852	13,617	5,963
	경상소득	1,644	3,580	5,844	8,666	14,373	8,275
	순자산	46,124	46,274	45,685	46,454	48,936	46,695
	주택가격	31,460	26,558	26,825	29,472	28,137	28,315
순자산 3분위	평균연령	72	63	54.1	50.6	50.5	56.4
	여성비율	51.0%	30.0%	18.4%	13.8%	9.2%	23.0%
	가구원수	1.51	1.93	2.51	3	3.29	2.45
	시장소득	906	2,716	4,883	7,825	12,459	5,758
	경상소득	1,618	3,556	5,681	8,505	13,166	6,424
	순자산	23,512	23,512	24,226	24,548	25,453	24,250
	주택가격	15,358	14,144	13,988	16,640	16,917	15,279
순자산 2분위	평균연령	70.4	56.8	50.3	49.5	51.2	56.6
	여성비율	54.5%	37.8%	23.0%	14.6%	16.4%	33.4%
	가구원수	1.38	1.72	2.31	2.82	3.3	2.31
	시장소득	904	2,975	5,129	7,804	12,537	5,870
	경상소득	1,562	3,519	5,664	8,410	13,214	4,817
	순자산	10,009	10,082	10,769	11,299	12,024	10,837
	주택가격	5,447	4,471	5,939	7,144	10,078	5,777
순자산 1분위	평균연령	67.1	51.2	49.6	49.9	52.2	57.9
	여성비율	52.9%	38.9%	25.5%	23.3%	8.5%	42.0%
	가구원수	1.2	1.68	2.15	2.91	3.85	2.36
	시장소득	711	2,873	5,015	8,016	11,824	5,688
	경상소득	1,399	3,420	5,517	8,524	12,562	3,263
	순자산	991	1,340	1,658	1,201	403	1,119
	주택가격	345	382	845	2,979	1,237	634
전체	평균연령	69.6	59.3	54.7	52.4	52.8	56.8
	여성비율	51.8%	34.3%	20.4%	13.2%	9.0%	25.7%
	가구원수	1.44	1.87	2.39	2.94	3.46	2.42
	시장소득	883	2,757	4,852	7,796	13,659	5,989
	경상소득	1,505	3,512	5,700	8,605	16,602	7,185
	순자산	37,718	40,058	39,356	41,307	49,739	41,636
	주택가격	9,441	12,715	18,294	26,674	46,329	22,692

25개 계층 가운데 고소득-고자산 계층과 저소득-저자산 계층을 비교하면 고소득-고자산 계층은 균등화시장소득 상위5% 가구와 특성이 비슷하고 저소득-저자산 계층은 소득 하위40% 계층보다 훨씬 소득이 낮고 순자산도 적다.

<표 2-72> 소득-자산 25계층 중 최상-최하 계층의 특성

		2011	2015	2019	2023
고소득 고자산 (25)	연령	49.9	52.0	52.8	54.4
	가구원수	3.75	3.73	3.54	3.39
	여성비율(%)	4.9%	5.8%	5.4%	7.6%
	교육년수	12.1	12.6	12.7	13.1
	경상소득	11,503	12,517	15,767	19,040
	순자산	99,368	103,357	127,823	161,876
	순금융자산	15,367	16,603	18,425	28,230
	거주주택가격	34,437	35,843	54,662	67,576
저소득 저자산 (1)	연령	60.8	63.5	66.2	67.1
	가구원수	1.52	1.52	1.30	1.20
	여성비율(%)	60%	60%	59%	53%
	교육년수	6.4	7.7	7.7	8.9
	경상소득	704	847	1,075	1,399
	순자산	714	947	822	991
	순금융자산	276	479	329	411
	거주주택가격	342	331	329	345

두 계층의 가구주의 연령별 성별 특성과 종사상지위,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득-고자산 계층의 가구주는 50대 남성이 32.5%로 가장 많고 40대 남성이 25.3% 그 다음으로 많은데 최근 60대이상 남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40~50대 여성도 일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소득-저자산 계층의 가구는 60대이상의 남성과 여성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청년층 가구가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t;표 2-73&gt;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대이하	남성	0.2	0.2	0.1		0.0	0.0	0.2	0.1	0.1	0.0	0.0	0.2	0.2
	여성				0.1	0.0	0.1	0.0		0.0			0.1	0.1
30대	남성	10.9	10.0	9.3	8.1	7.4	6.0	6.0	5.8	7.2	7.8	8.4	7.0	6.0
	여성	1.1	0.8	0.4	0.6	0.7	0.8	1.0	1.0	0.5	0.4	1.3	0.8	0.8
40대	남성	35.3	32.8	32.4	29.1	28.4	29.5	29.6	30.7	31.0	28.8	26.8	26.4	25.3
	여성	1.1	0.9	0.7	1.5	1.6	1.4	1.9	1.5	1.1	1.1	1.2	1.5	2.1
50대	남성	35.8	39.2	40.3	41.0	40.9	40.5	39.8	38.4	35.2	35.9	35.0	34.0	32.5
	여성	1.9	1.7	1.7	2.2	2.2	2.1	1.5	1.5	2.0	2.4	2.5	3.0	2.7
60대이상	남성	12.9	13.7	14.2	16.6	17.6	18.1	18.7	19.7	21.1	22.3	23.8	25.7	28.4
	여성	0.8	0.7	0.8	0.8	1.2	1.5	1.4	1.4	1.7	1.2	1.0	1.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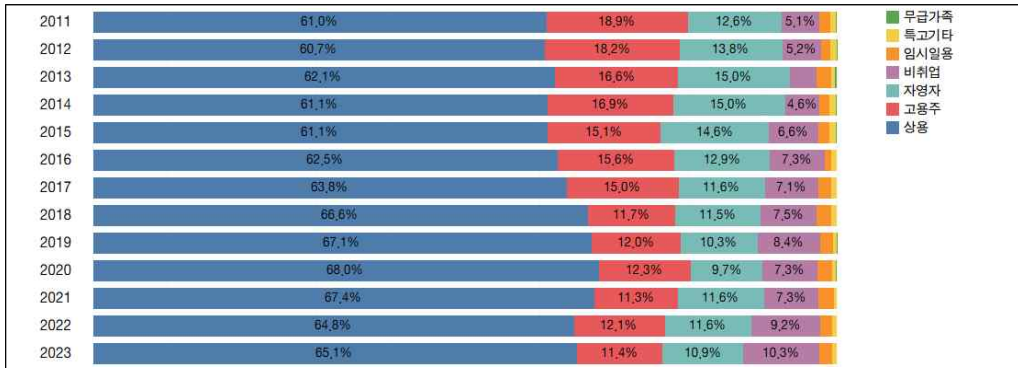
&lt;표 2-74&gt;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연령별\*성별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대이하	남성	1.9	1.8	1.1	1.3	1.0	1.3	1.1	1.1	1.0	1.1	1.2	1.6	1.6
	여성	1.0	0.9	0.6	0.4	0.6	0.6	0.6	0.6	0.7	0.7	1.0	1.1	1.2
30대	남성	13.4	13.4	13.4	12.1	11.7	12.1	11.1	10.4	9.0	9.1	8.4	9.0	9.1
	여성	2.8	2.3	2.1	2.2	2.1	2.2	1.7	1.6	1.6	1.7	2.3	1.8	2.3
40대	남성	18.9	21.3	20.5	19.7	18.4	19.9	19.0	17.6	16.6	16.3	16.1	14.8	13.8
	여성	6.6	6.1	6.5	6.5	6.1	4.9	4.4	4.5	4.2	4.3	4.1	4.5	3.7
50대	남성	14.9	15.6	15.6	15.0	15.4	14.8	14.3	14.4	13.7	14.2	13.4	12.6	13.2
	여성	5.0	5.1	5.7	6.4	6.4	5.5	5.4	5.2	4.9	5.1	5.2	5.2	5.1
60대이상	남성	25.7	24.2	24.8	26.6	27.8	28.0	31.1	32.8	34.9	34.6	35.0	35.7	36.1
	여성	9.8	9.4	9.7	9.8	10.5	10.6	11.2	12.0	13.4	13.0	13.2	13.8	13.9

두 계층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를 비교하면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65.1%로 가장 높으며, 최근 와서 비취업 가구주 비중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경우 비취업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59.6% 수준으로 감소하고 상용직 가구가 일부 이 계층에 포함되고 있다.



&lt;그림 2-50&gt;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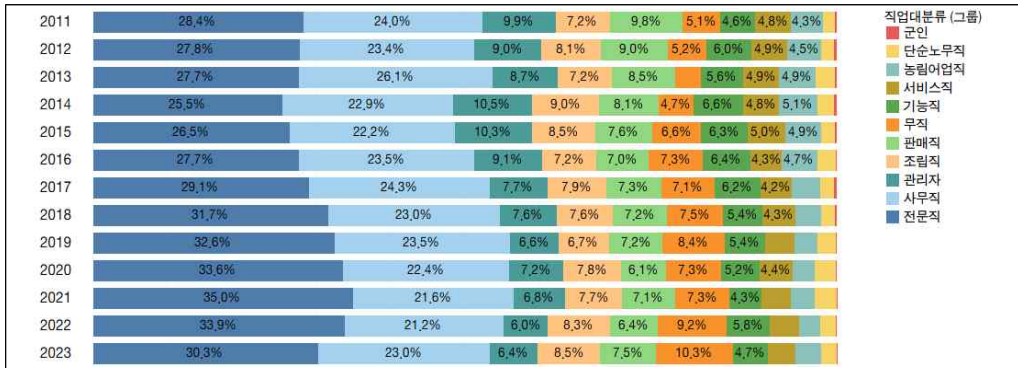
&lt;그림 2-51&gt;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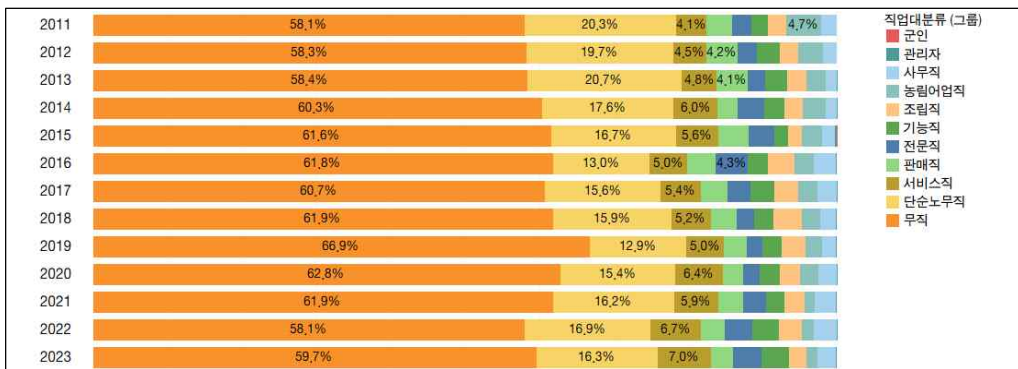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직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6년 이후 전문직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년 이후 사무직과 조립직의 비중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으며, 비취업 가구주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하위40%의 직업별 비중은 무직이 59.7%로 가장 많고 단순노무직(16.3%)과 서비스직(7.0%) 등이 뒤를 잇는다.

<그림 2-52>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가구주 직업 분포



<그림 2-53>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가구주 직업 분포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이 2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소매업과, 전문과학기술업, 금융보험 등이 뒤를 잇는다.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종사산업은 비취업이 59.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이 뒤를 잇는다.

&lt;표 2-75&gt;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조업	21.2%	21.0%	20.8%	20.3%	21.1%	19.4%	19.9%	21.9%	20.7%	21.2%	21.1%	23.1%	21.2%
도소매업	12.2%	11.7%	11.6%	10.9%	10.6%	9.7%	9.8%	9.3%	10.6%	10.5%	9.8%	9.6%	10.7%
비취업	5.1%	5.2%	3.5%	4.7%	6.6%	7.3%	7.1%	7.5%	8.4%	7.3%	7.3%	9.2%	1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3%	5.2%	5.7%	5.7%	6.1%	6.9%	7.0%	6.5%	6.9%	7.2%	8.6%	7.5%	7.9%
건설업	6.4%	7.3%	6.7%	6.8%	7.1%	6.6%	6.6%	6.1%	6.3%	7.6%	6.9%	6.6%	7.1%
금융보험	6.6%	6.7%	6.3%	6.7%	6.9%	7.3%	6.8%	7.5%	7.2%	5.6%	6.2%	6.7%	6.3%
교육서비스업	8.2%	8.2%	8.3%	6.8%	6.2%	6.7%	6.5%	7.1%	7.7%	6.7%	7.4%	6.3%	6.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6.3%	6.7%	7.5%	8.0%	7.2%	5.6%	6.4%	5.9%	6.7%	6.4%	6.1%	5.3%	5.3%
출판영상정보통신업	4.2%	4.1%	4.1%	4.2%	4.0%	4.5%	5.2%	4.8%	5.1%	5.5%	4.6%	4.6%	4.8%
운수업	3.7%	4.5%	3.9%	5.1%	3.9%	4.2%	4.5%	3.8%	3.5%	4.5%	4.6%	4.9%	4.4%
보건사회복지업	3.2%	2.7%	3.2%	2.8%	2.9%	3.6%	4.0%	4.0%	3.1%	4.1%	3.8%	4.1%	3.8%
농림어업	4.2%	4.6%	4.9%	5.2%	4.8%	4.8%	4.0%	3.8%	3.2%	3.2%	3.2%	2.9%	3.5%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1.2%	1.2%	1.6%	1.3%	1.8%	3.2%	3.1%	2.6%	2.0%	1.7%	2.3%	2.3%	2.3%
숙박음식업	3.8%	3.6%	3.5%	3.8%	3.3%	3.2%	2.3%	2.2%	1.6%	2.2%	1.8%	1.7%	1.7%
부동산임대업	3.3%	2.6%	3.5%	3.0%	3.3%	2.7%	2.5%	2.6%	2.8%	2.2%	2.4%	1.6%	1.4%
협회단체수리서비스업	2.3%	2.0%	2.0%	1.9%	1.8%	2.0%	2.3%	2.0%	1.9%	1.5%	1.7%	1.4%	1.1%
전기가스수도업	1.5%	1.5%	1.6%	1.5%	1.2%	0.9%	1.1%	1.5%	1.4%	1.5%	0.8%	1.1%	0.8%
예술스포츠여가업	0.9%	0.8%	0.7%	0.9%	0.8%	0.9%	0.6%	0.5%	0.4%	0.4%	0.7%	0.5%	0.7%
하수물폐기처리업	0.2%	0.2%	0.5%	0.4%	0.4%	0.5%	0.3%	0.4%	0.6%	0.7%	0.8%	0.6%	0.7%
가사서비스업												0.0%	0.1%
외국국제기관	0.1%	0.2%		0.2%		0.0%	0.0%					0.1%	0.1%
광업	0.0%				0.0%	0.1%			0.0%			0.0%	0.0%

&lt;표 2-76&gt;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가구주 산업 분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취업	58.1%	58.3%	58.4%	60.3%	61.6%	61.8%	60.7%	61.9%	66.9%	62.8%	61.9%	58.1%	59.7%
보건사회복지업	2.2%	2.4%	2.2%	3.4%	3.2%	3.4%	2.9%	3.6%	3.2%	5.5%	5.4%	5.8%	6.0%
도소매업	5.4%	6.3%	5.5%	4.6%	5.0%	5.0%	4.8%	4.9%	3.3%	3.2%	4.2%	4.4%	4.6%
건설업	4.3%	4.4%	4.6%	4.0%	2.8%	3.7%	3.8%	3.9%	4.0%	3.8%	3.4%	4.3%	4.1%
숙박음식업	4.5%	4.0%	4.7%	5.2%	4.4%	4.3%	5.0%	4.3%	4.2%	4.3%	3.6%	4.1%	4.0%
제조업	3.7%	3.2%	2.9%	2.9%	2.2%	3.8%	3.6%	2.4%	2.9%	2.2%	3.0%	4.1%	3.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3.0%	3.2%	3.2%	2.3%	3.3%	1.8%	2.8%	2.7%	2.5%	3.3%	3.2%	3.4%	3.2%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2.8%	3.5%	4.3%	3.2%	3.6%	3.2%	3.0%	3.4%	1.9%	2.4%	3.0%	3.3%	2.9%
협회단체수리서비스업	2.7%	2.3%	2.6%	3.1%	2.9%	2.5%	2.7%	2.7%	2.8%	3.4%	2.7%	2.5%	2.8%
운수업	1.4%	1.9%	1.8%	1.8%	1.7%	2.0%	2.1%	2.7%	2.1%	2.3%	2.6%	2.2%	2.3%
농림어업	6.7%	5.0%	4.3%	4.2%	4.0%	3.7%	3.9%	3.4%	2.9%	3.0%	1.8%	2.4%	2.1%
예술스포츠여가업	0.5%	0.9%	1.1%	1.1%	0.8%	0.7%	0.7%	0.5%	0.2%	0.6%	1.3%	1.3%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3%	0.3%	0.5%	0.3%	0.2%	0.6%	0.3%	0.6%	0.3%	0.4%	0.6%	0.8%	1.0%
교육서비스업	1.7%	1.4%	1.3%	1.7%	1.8%	1.4%	1.5%	1.0%	1.4%	1.2%	0.8%	1.2%	0.8%
부동산임대업	0.6%	0.9%	0.5%	0.9%	0.7%	0.5%	0.4%	0.4%	0.4%	0.6%	0.5%	0.5%	0.5%
출판영상정보통신업	0.2%	0.4%	0.6%	0.2%	0.2%	1.0%	0.4%	0.3%	0.3%	0.4%	0.6%	0.5%	0.4%
금융보험	0.6%	0.5%	0.3%	0.2%	0.6%	0.3%	0.5%	0.3%	0.3%	0.5%	0.5%	0.4%	0.4%
가사서비스업	0.9%	0.9%	1.0%	0.5%	0.8%	0.2%	0.5%	0.4%	0.4%	0.3%	0.3%	0.4%	0.3%
하수물폐기처리업	0.1%	0.1%	0.1%	0.3%	0.2%	0.2%	0.3%	0.3%	0.2%	0.1%	0.5%	0.3%	0.3%
전기가스수도업	0.1%	0.1%			0.1%		0.1%	0.2%				0.2%	
광업							0.1%	0.1%					

산업과 직업을 교차하여 고소득-고자산 가구와 저소득-저자산의 산업별 직업군을 가장 많은 순서대로 각각 15개 집단을 추정한 결과 아래의 직업군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자산 계층의 양극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77&gt; 소득계층별 주요 산업 및 직업군

고소득-고자산 가구(25계층 최상위 25)					
순위	산업	직업	가구수	비중*	누적비율
1	비취업	무직	240,786	11.4%	10.3%
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직	149,980	7.1%	16.7%
3	제조업	사무직	147,039	7.0%	22.9%
4	제조업	전문직	144,101	6.8%	29.1%
5	교육서비스업	전문직	112,577	5.4%	33.9%
6	제조업	조립직	110,806	5.3%	38.6%
7	도소매업	판매직(고용주포함)	109,788	5.2%	43.3%
8	출판영상정보통신업	전문직	85,433	4.1%	46.9%
9	금융보험	사무직	83,171	4.0%	50.5%
10	농림어업	농림어업직	80,492	3.8%	53.9%
11	도소매업	사무직	70,832	3.4%	56.9%
12	보건사회복지업	전문직	68,499	3.3%	59.9%
1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사무직	54,722	2.6%	62.2%
14	운수업	조립직	51,397	2.4%	64.4%
15	건설업	기능직	42,679	2.0%	66.2%
저소득-저자산 가구(25계층 최하위 1)					
순위	산업	직업	가구수	비중*	누적비율
1	비취업	무직	1,255,281	59.7%	59.7%
2	보건사회복지업	단순노무직	73,599	3.5%	63.2%
3	숙박음식업	서비스직	69,568	3.3%	66.5%
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단순노무직	61,259	2.9%	69.4%
5	도소매업	판매직	51,069	2.4%	71.8%
6	건설업	단순노무직	46,733	2.2%	74.0%
7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단순노무직	41,371	2.0%	76.0%
8	건설업	기능직	37,338	1.8%	77.8%
9	보건사회복지업	서비스직	37,251	1.8%	79.5%
10	농림어업	농림어업직	30,814	1.5%	81.0%
11	도소매업	단순노무직	27,420	1.3%	82.3%
12	운수업	조립직	24,997	1.2%	83.5%
13	제조업	기능직	23,249	1.1%	84.6%
14	협회단체수리서비스업	서비스직	22,630	1.1%	85.7%
15	운수업	단순노무직	20,840	1.0%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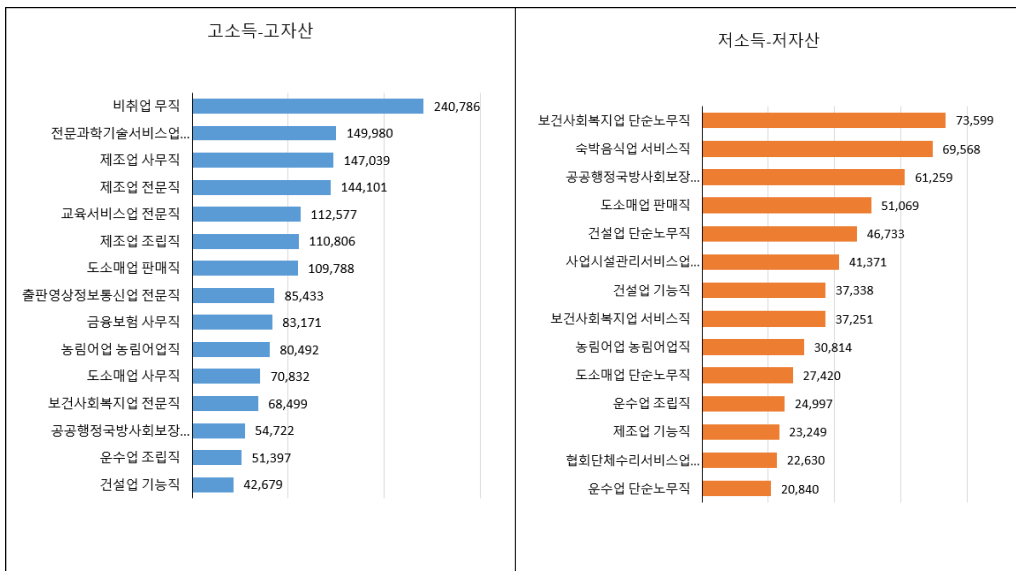
주 : \* 비중은 상위5%, 하위40% 가구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소득-고자산 가구와 저소득-저자산 가구에 모두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가구는 비취업 무직 가구였다. 이들은 고소득-고자산 가구 중에서는 24.1만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11.4%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구는 전문과학기술업의 전문직으로 15만 가구로 7.1%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의 사무

직과 전문직이 각각 14.7만 가구(7.0%), 14.4만 가구(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의 전문직이 11.2만, 제조업 조립직 11.1만, 도소매업의 고용주를 포함한 판매직이 5.0만(5.6%) 등이 상위 직업을 차지했다. 상위15위의 산업 및 직업이 전체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6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하위4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무직가구가 125만 가구로 전체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59.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건사회복지업 단순노무직이 7.3만 가구로 3.5%를 차지했고 숙박음식업의 서비스직(6.9만, 3.3%), 공공행정의 단순노무직(6.1만, 2.9%), 그리고 도소매업의 판매직(5.1만, 2.4%)이 그 뒤를 이었다.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주요 직업 15개가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그림 2-54> 소득-자산 최상위 및 최하위 가구의 산업 및 직업 분포



##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금복 자료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모집단의 분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소득수준과 소득분포에 대해서도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의 연구자들이 한국 자료를 구축하면서 가계동향 조사를 미시자료로 이용하고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분포 추정에 근거해 보정해서 사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의 소득분배와 자산불평등, 개인과 가구의 분배 상황을 파악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충분히 유용한 자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금복의 개인과 가구 소득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하고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취업소득과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

둘째, 2016~2023년 기간 동안 한국의 자산불평등이 크게 악화되었다. 2011~2015년 주택가격 하향 안정기 시기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위층의 자산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급등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셋째,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 현황과 변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구조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발견되었다.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위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부부를 비롯한 가구원간의 소득분위 동질성도 강화되고 있다.

넷째, 최근 10년간 가구원의 개인소득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취업경로의 확산으로 인해 N잡러 형태의 다중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양한 취업경로와 소득원천의 확대는 저소득 일

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변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고소득 가구의 추가적인 소득원천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시장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소득상위층의 소득집중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결합한 분석을 통해 최상위 소득과 자산 계층 및 최하위 계층의 특징과 분포,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불평등이 어떤 구조와 환경에 놓여 있는지 진단하고 계층분류를 통한 불평등 지도를 완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장

# 한국의 사회계층 구조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사회계층 분류의  
기준과 방법

제3절 통계적 추정 및 사전적  
정의에 의한 분석 결과

제4절 유럽사회경제 분류(ESeC)를  
이용한 한국의 계층 분석

제5절 소결



## 제3장 ■ 한국의 사회계층 구조

### 제1절 문제 제기

이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계층을 이론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각 계층의 분포와 계층간 불평등의 상태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불평등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계급’ 또는 ‘계층’의 용어와 함께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이론적 관점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는 점이다.

영미권에서는 ‘class’, ‘social class’, ‘class analysis’라는 용어가 한 사회의 개인들을 위계적인 집단으로 서열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social stratification’과 함께 마르크스주의나, 베버주의, 부르디외 이론은 물론 불평등을 사회적 효율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기능주의 계층이론 계열에서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두루 사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계급(階級)’과 ‘계층(階層)’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론적 관점과 이념적 입장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분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계급이나 계급분석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에 따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계층이나 계층분석은 베버주의를 비롯한 비(非)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sup>17)</sup>

17)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는 ‘class’에 대해 “(사회) 계층, (사회적) 계급 (제도)”로 병렬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영사전에서도 ‘계급’과 ‘계층’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로 “class”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급’은 “일정한 사회에서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들로 형성되는 집단. 또는 그렇게 나뉜 사회적 지위”로, ‘계층’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구별되는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론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활용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에만 계급 개념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용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로 계층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급이라는 용어를 적극 사용할 경우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미리 전제한다는 오해를 낳게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그러한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을 회피한 때에는 정당한 개념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러한 번역·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실증분석의 의미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거나, 계층구조의 구조적 속성을 간과하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하의 연구와 분석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확인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차원에서, ‘계급’이라는 용어 대신 ‘계층’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기본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계급’ 또는 ‘social class’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엄밀한 관점과 해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1. 사회계층과 계층분석 : 이론과 실증분석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계층(social class)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사회집단을 의미하고, 계층화(stratification)는 이러한 집단들이 일정한 위계(hierarchy)를 형성하면서 자원과 권력, 기회 등의 접근과 분배에 있어서 체계적인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Crompton, 2015).

그러므로 사회계층 분석(social stratification analysis)은 특정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와 구조화된 위계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분석틀이 된다(Waitkus et al., 2025, p.127).

고전적 계급이론을 정식화한 마르크스(K. Marx)는 계급을 생산수단 소유관계에 따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도 경

제적 계급에 의해 규정되는 단일한 차원의 구조로 파악했다. 이에 비해 베버(M. Weber)는 사회계층이 경제적 계급(economic class) 외에도 사회적 지위(status)와 정치적 권력(power)이라는 추가적인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3요소 계층화 이론(three-component theory of stratification)’을 제시했다. 베버는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외에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이 사회적 계급을 함께 구성한다고 보았다.

흔히 국내의 교과서 등에서는 전자를 계급이론으로 정의하고 계급간 경계가 명확하고 단절적이라고 규정하며, 후자를 계층이론으로 정의하면서 계층간의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관계가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등에서 언급하는 ‘순수’ 계층론의 입장은, 개인들이 특정 계층에 속하는 것을 연속형 요인 변수들의 ‘정도의 차이’에 의한 우연적 결과로 설정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러한 입장은 생산관계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조건으로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에 의해 합법칙적으로 결정되는 계층구조를 설정하는 베버의 관점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현대 사회학의 계층분석 연구는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 이론의 절충과 융합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Goldthorpe et al., 1987; Wright, 1980). 대표적인 흐름으로서 존 골드소프(John H. Goldthorpe)가 발전시킨 ‘EGP 11 계층체계’와 에릭 올린 라이트(E. O. Wright)의 ‘12개 계급체계’가 계층분석 논의를 주도했다(Waitkus et al., 2025).

이와 관련해서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주의가 계층이론에서 갖는 관계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베버주의적 계층이론은 개선된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간주해도 좋고, 실제로 골드소프의 이론은 비마르크스주의적인 전제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논의를 적용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신행철, 1997, pp.337~338).

골드소프는 신베버주의 계층이론에 입각해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고용상황에 따른 시장지위와 통제권, 자율권의 정도에 따른 작업지위를 고려한 11개 계층의 ‘Erikson-Goldthorpe-Portocarero(EGP) schema’를 창안했다<sup>18)</sup>. 이 계층분류 도식은

18) 존 골드소프(John H. Goldthorpe)를 중심으로 로버트 에릭슨(Robert Erikson), 루치안 포르토카레로(Lucienne Portocarero) 등 옥스퍼드 뢰펠드칼리지의 계층분류 도식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연구인 CASMIN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으며, 영국 통계청의 직업지위분류(NS-SEC) 구축의 근간이 되고 이후 유럽의 사회경제지위 분류(ESeC) 등으로 발전했다.

반면 라이트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analytical Marxism)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응하는 자본재(capital asset) 뿐만 아니라 기술재(skill asset)와 조직재(organization asset)의 소유와 행사까지 계급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포함하는 다차원의 ‘12개 계급’ 모델을 제안했다(Wright, 1985)<sup>19)</sup>.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하면서도 노동자 안에서 기술적 숙련수준(전문직, 준전문직, 단순직)과 통제권(관리직, 감독직, 기술직)을 등급화하여 이를 교차하여 세분화시킨 혼합형 계급구조를 제시했다.

<표 3-1> 계층분석 이론의 주요 흐름

	마르크스주의	베버주의	부르디외
현대이론 실증분석	E. Wright 12개 계층체계 자본재(소유), 기술재(통제), 조직재(권위)	J. Goldthorpe EGP 11개 계층체계 시장위치(임금, 고용), 작업위치(통제, 권력, 권위)	P. Bourdieu 특정 개수 없음 아비투스과 장(사회공간) 생산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자본가, 소고용주, 소부르주아 전문관리직, 전문감독직, 전문기술직 준전문관리직, 준전문감독직, 준전문기술직 단순관리직, 단순감독직 노동계급	고위관리전문직, 하위관리전문직 일반사무직, 일반서비스판매직 고용주, 자영업자 육체노동 감독직, 숙련 육체노동자, 반숙련-미숙련 육체노동자 농업노동자, 자영농민	상류층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 3가지의 자본 총량과 비중에 따라 분포
고전이론	K. Marx 생산수단 소유 여부(1요소)	M. Weber 자본-지위-권력(3요소)	K. Marx와 M. Weber 계급, 지위
	자본가계급 노동자계급	자산계급, 소부르주아, 화이트칼라, 노동계급	

19) 라이트의 12개 계급모델은 ‘착취계급 모델(exploitation model)’로 불리는데 이는 자본재와 기술재, 조직재의 소유 여부에 따른 착취관계가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보다 앞서 라이트가 제시한 또다른 계급모델로서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contradictory class model)’이 있는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소규모 자영업자(구중간 계급)와 자율성이 높은 노동계급(신중간계급)을 설정하여 4가지 계급으로 제시한 바 있다. 착취모델이 모두 소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반해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은 자산의 소유관계가 누락된 경우들이 있다.

앞의 두 가지 흐름 외에 계급이론 영역에서 중요한 시도로 추가할 것이 있다면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eu)의 이론을 들 수 있다. 부르디외는 경제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추가하여 3가지 자본의 총량과 구성이 사회적 위치, 즉 계급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부르디외의 이론은 마르크스의 계급(class) 개념과 베버의 지위(status)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문화와 소비행태 등이 ‘구별짓기’를 통해 계급관계의 정당화와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 복합적인 불평등 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다.<sup>20)</sup>

전체적으로는 평가한다면 사회계층 분석 영역에서 라이트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흐름과 골드소프의 신베버주의 계보가 주축을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실증연구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고용상태와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계층을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사회계층을 고용상의 지위와 직업을 함께 하는 집단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집계(employment aggregate)’ 접근법으로 불려지고 있다. 사회이동성을 비롯한 계층분석의 실제 적용에서는 골드소프의 EGP 방식이 통계모형화(log-linear modeling)를 진전시키면서 보다 폭넓게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르디외의 이론은 자본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문화와 소비 영역,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계급관계 재생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 2. 계층분석 이론과 방법론의 유효성

이러한 계층분석 이론과 방법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불평등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것은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다른 방법론들에 비춰 갖는 장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사회의 소득이나 불평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지니계수나 분위간 소득배율

20) 이밖에 신제도주의 그룹에 속하는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은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의한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계층구조의 유동성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크롬튼(Crompton)과 위머(Wimmer)는 각각 젠더와 인종이 계층구조의 교차축으로 기능한다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데이비스와 무어의 기능주의 계층이론은 사회의 계층구조가 유기체에 있어서 필요에 의한 기능하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p90/p10)이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최근에 와서는 최상위1%의 소득 및 자산 점유비중 등의 지표가 흔히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들은 불평등의 평면적인 결과만 보여줄 뿐 불평등이 생산관계와 사회집단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여줄 수 없다. 상위층 몇 %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나머지 하위계층의 이질성도 간과된다.

이에 반해 골드소프나 라이트의 계층분석 모델은 사회의 위계적 계층이 분포하는 구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집단의 체계적인 특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어떤 계층이 불평등 심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빈곤이 심화 또는 완화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범위를 좁혀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시계열을 연장하거나 패널자료에 적용할 경우 계층간 불평등의 추이와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며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에 대한 인과적 추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층분석 방법은 가장 큰 장점은 - 계층분류에서 중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 사회의 자원이 구성원들에게 계층별로 분배되는 전체적인 모습, 요컨대 라이트가 말한 ‘계층지도(class map)’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용주나 자영업자들이 대거 누락된 채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 분석이나, 성별이나 학력, 고용형태의 구분을 중심으로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논하는 방식의 접근법이 갖는 제약을 확실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계층을 구분한 다음에 불평등의 상태와 변화를 분석하게 되면, ‘어떤 계층의 어떤 집단’이 분배구조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있는지와 함께 그러한 구조가 어느 정도 폐쇄적이고 고정적인지 여부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회계층 분석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고용과 직업 변수가 계층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선진국들이 전후 장기호황 시기를 지나면서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서비스산업의 성장, 탈숙련화 등 변화가 발생하면서 과거의 고용지위와 계층귀속을 연결하던 젠더, 교육, 숙련, 통제 등의 요소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금융업, IT산업에서 각 직업이 담당하던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도 고용기반 계층분석



방법론의 유효성이 약화된 논거로 제시된다.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이들이 서비스업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 프롤레타리아의 서비스화와 여성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 골드소프의 EGP 분류체계에서 많은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서 이러한 젠더적 동학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Waitkus, 2025).

한편 또다른 관점에서 계층이론이 일국적 틀 내에서 고용과 직업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이나 불평등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불평등의 주요 변수가 되고 가구의 구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세와 복지제도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문제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신광영, 2013). 그리고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인구 중심의 계층분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슈퍼리치들의 부의 독점과 각국 내에서 자산 불평등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분석에서 취업자 중심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중심에 두어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Waitkus, 2025).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비판과 한계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층분석 방법의 필요성과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는 계층이론의 보완을 통해서 개선할 문제이며 전혀 다른 대안적 해결책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계층분석의 현재적 의의와 보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불평등이나 최상위층의 소득점유 비중을 추정 비교하는 방법의 한계나 제약이 훨씬 더 분명하며, 사회전체의 계층구조를 전제로 한 계층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가질 수 있다. 계층분석과 다른 불평등 분석은 대부분 병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체적인 분석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계층분석이 제외될 때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이 오히려 분명해진다. 비경활동인구가 제외되는 문제는 해당 그룹을 또다른 특성에 따라 별도의 계층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sup>21)</sup>.

둘째, 계층분석이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어서 가구 구성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나, 가구를 기본단위로 계층분류를 하고 있어 개인과 젠더의 동학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서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자 각각의 방법론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분류의 기준을 개인으로 할 것인가 가구로 할 것인가의 이슈는 계층분석 방법론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본래부터 내재된 중요한 문제였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와 가부장제 모델(single-bread-earner)의 해체가 동시 진행되는 상황, 소득 상위층의 동류혼 경향과 저소득·미혼 가구의 증가, 가구 단위 부(wealth)의 불평등 심화와 자산의 개인화 경향(금융자산 시장)의 동시 진행 등을 고려할 때 개인단위 계층분류 기준을 적용하되 가구의 구성과 특성, 자산 불평등에 대한 추가적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은 계층분석 방법론의 개선과 확장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셋째,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비임금고용(non-employment-contract)의 증가, 교육의 질적 변화를 동반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이질성 증가를 포함한 직업의 다양화와 숙련 및 지위의 변화, 보상 수단과 소득유형의 다양화 등 계층분류 기준이 되는 주요 변수와 임계치(threshold)의 변경 필요성 등도 모두 계층분석 방법론의 개선과 기능향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온 플랫폼노동 종사자나 새로운 유형의 프리랜서 직업군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도입한 새로운 분류기준(ICSE-18)을 계층분석 영역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미 2000년대 초반 계층분석 연구에서 시도해 온 미시적 직업기준 조정(Grusky & Weeden, 2001 ; Weeden & Grusky, 2005 ; Oesch, 2006 ; Ganzboom, 2008)<sup>22)</sup> 등의 방법론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의 타당성이 확보될수록 보편적 기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21) 예를 들어 비경제활동인구를 재학생과 전업가사, 65세미만 비경제활동인구와 65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그룹화하는 방법이 있다.

22) Oesch(2006)는 탈산업화·서비스화에 따른 직무·기술·상호작용을 반영한 ‘메조’급 분류기준을 새로 제시했고, Ganzboom(2008)은 2002~2007년의 ISSP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제직업지위(ISEI-88)을 시대변화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연구를 진행해 PISA, PIAAC 등에 적용하도록 했다. Grusky(2005)는 계층분류를 세분화된 직업분류로 대체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넷째, 시장 외부에서 외생적으로 일어나는 기술변화와 일국적 수준을 넘어서는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양상의 변화, 시장분배 이후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재분배와 복지제도의 영향 등은 계층분석을 포함한 사회학과 경제학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과학 전반의 도전 과제일뿐 계층분석에 내재된 고유한 한계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역과 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과 산업의 영향을 고려하는 불평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면서 계층분석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기존에 시도되어 온 계층별 거주지 선택과 분리에 관한 연구와 유사점도 있다.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비롯한 제도에 의한 계층구조의 영향 문제 역시 계층분석의 추가적인 분석 주제임을 재확인시켜준다.

### 3. 국내에서의 계층분석 연구와 시도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불평등을 진단하기 위한 이론과 분석방법으로서 계층이론과 계층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며, 개선과 확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겠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계층분석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몇 차례 중요한 이론모델 구성과 실증분석 시도가 있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 10년 동안에는 뚜렷한 실증분석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계급과 계층에 관한 초기 이론 연구가 시작되고 계층론의 입장에서 실증연구들도 시작되었으며(김채운, 1964 ; 김채운, 1984), 1970년대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고용과 직업에 기초한 계층분류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했다(김영모, 1979). 그리고 이른바 계급이론의 맥락에 입각한 이론과 실증연구들은 198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 사회운동, 학술운동의 전개와 함께 본격화된다.<sup>23)</sup>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실증연구로는 홍두승(1983)과 서관모(1985)의 연구가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에는 신철행의 (1991)과 조돈문(1994)이 계급이론과 실증분석을 진행했고, 신광영(2009), 장귀연

23)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로 Koo(1980, 1982), Hong(1980), 홍두승(1983), 김진균(1984), 김형기(1985), 서관모(1987) 등이 있다.

(2013)도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동안 진행된 계층분석 실증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실증연구로 볼 수 있는 홍두승(1983)이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서 고용관계와 직업분류(3자리 소분류)를 교차해서 계층을 8개(상류계급, 중상계급, 신중간계급, 구중간계급, 근로계급, 도시하류계급, 독립자영업, 농촌하류계급)로 구분하였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상류계급을 제외한 7개 계급이 분류되었다.<sup>24)</sup> 분석 결과는 1980년의 중상계급은 1.8%, 근로계급은 22.6% 비중을 차지했다. 이 때 신중간계급에 관리직과 전문직, 기술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판매직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계급이 과소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관모(1987)은 자본가, 임금중간층/인텔리, 자영업자층, 노동계급의 4계급 모델을 제시하고 인구센서스와 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1963~1983년 기간 동안의 계급구성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서관모는 5인이상 사업체의 고용주를 자본가로 정의하여 자본가와 노동계급의 비중을 1980년 기준 각각 1.0%와 44.7%로 제시했다. 서관모는 신중간계급/인텔리의 폭을 좁게 설정하고 도시하류계급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 노동계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신행철외(1991)은 라이트의 모델을 적용하여 6개 계급(부르주아, 소규모고용인<sup>25)</sup>, 뽀띠부르주아, 관리감독직, 반자율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을 구분했으며 부르주아의 비중이 0.6%, 프롤레타리아가 26.8%를 차지했다. 이 연구에서는 17개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제연구의 일환으로 가장 폭넓은 분류와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라이트의 착취모델 계급분류와 골드소프의 7개 모델, 그리고 연속적 계층분류 등 모든 계층분류 모델에 대한 분석이

조돈문(1994)는 1960년 이후 10년 단위의 인구센서스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라이트의 모델에 적용한 계층분류를 시도했는데,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비율이 1980년 각각 6.2%, 22.5%, 1990년 각각 6.2%, 27.5%를 차지했다. 1960년 이후 구중간계급이 크게 줄어들고 노동계급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비소유계급 중

24) 상류계급은 대기업주, 자본가, 정부최고위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모델을 설정하였으나, 인구센서스의 직업분류표상 해당 직업을 식별할 수 없어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5) 소규모고용인은 직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의 정의했으며, 1인 자영업자는 뽀띠부르주아로 분류했다.

에서는 신중관계층의 비중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돈문은 당시 종사상지위의 고용주는 모두 자본가계급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10인 이상을 부르주아로 정의했던 신행철과 5인이상으로 정의했던 서관모에 비해 자본가계급의 비중을 과대 추정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2> 주요 계층분석 모델과 분석 결과

	모델과 분류기준	분석결과		자료/기간/비고
홍두승 (1983)	골드소프 + 라이트 종사상지위-직업(소분류) 8계층	상류계급 (누락) 중상계급 1.8% 신중관계급 17.7% 구중관계급 20.8% 근로계급 22.6% 도시하류계급 5.9% 독립자영농 23.2% 농촌하류계급 8.1%	1980	인구센서스 1960~1980
서관모 (1987)	라이트 + 골드소프 종사상지위-직업 4계급	자본가계급 1.0% 임금중간층/인테리 5.8% 자영업자층 48.5% 노동자계급 44.7%	1980	인구센서스+사업체조사 1963~1983 자본가는 5인이상 고용주
신행철외 (1991)	라이트 + 골드소프 소유 + 기술 + 권위 서열계층(cluster analysis) 추가	부르주아 0.6% 소규모고용인 7.9% 쁘티부르주아 33.8% 관리감독직 15.7% 반자율노동자 15.2% 프롤레타리아트 26.8%	1990	17개국 설문조사 1991년 부르주아=직원 10명이상
조돈문 (1994)	라이트 모순적 위치모델 + 착취모델	자본가계급 6.2% 쁘티부르주아 34.3% 경영인 2.7% 감독인 7.6% 전문가 21.7% 프로레타리아 27.5%	1990	인구센서스+경제활동인구조사 1960~1990 자본가=1인이상 고용주
신광영 (2009)	라이트 4계급 모델 + 정규/비정규	자본가 1.2% 프티부르주아 25.0% 중관계급정규직 18.8% 노동계급정규직 35.6% 중관계급비정규직 1.3% 노동계급비정규직 13.9% 실업자 4.2%	2007	한국노동패널(1998, 2007) 자본가=5인이상 고용주
장귀연 (2013)	라이트 모순적 위치모델 4계급	부르주아계급 5.7% 구중관계급 22.0% 신중관계급 16.1% 노동계급 56.1%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가계동향 1995~2010 자본가=1인이상 고용주

이어서 신광영(2009)은 한국노동패널 자료(1998, 2007)를 이용해서 계층구분을 자본가, 프티부르주아지, 중간계급, 노동계급으로 하되, 노동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다시 구분하여 세대와 계급의 분포를 교차분석하였다. 이때 자본가는 5인 이상 고용주로 정의하였는데, 자본가와 노동계급의 비중은 2007년 기준 각각 1.2%와 49.5%로 나타났는데 노동계급 가운데 정규직은 35.6%, 비정규직은 13.9%를 각각 차지했다.<sup>26)</sup>

가장 최근의 계층분석은 장귀연(2013)에 의해 시도되었다. 조돈문의 분석작업을 이어 1995~2010년 기간 동안의 계층분포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뒤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가구소득을 추정했다. 계층분류는 자본가계급과 구중간계급, 신중간계급, 노동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모두 자본가로 분류하고 노동계급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무직도 모두 노동계급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2010년 자본가계급은 5.7%로 노동계급은 56.1%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구중간계급의 비중은 -7.1%p 줄어들고, 노동계급과 신중간계급은 각각 +5.0%p, +3.7%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주요 계층분석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규모 추정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는 라이트의 모순적 위치 기반 계층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일부 골드소프의 직업지위 구분을 사용하였으며, 자본가의 분류에 있어 피용자 규모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급은 사무직과 판매직을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추가로 구분하는지 여부에도 차이가 있었다. 분석대상 자료는 인구센서스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패널 등 다양한 자료들이 사용되었는데, 별도의 국제공동조사 조사가 사용되기도 했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계층분류 모델에서 설정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계층분류가 이뤄졌음에도 유사한 분류기준을 적용한 조돈문(1994)과 장귀연(2013)의 분석결과들을 연결하면 구중간계급의 축소와 신중간계

26) 신광영은 상용직일 경우 정규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

급의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구소득에서는 노동계급 내부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27)</sup>

#### 4. 평가와 과제

이상과 같은 분석시도와 결과를 고려할 때 2010년 이후 시기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간에 걸친 기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층분석 모델의 개선과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계층분류 기준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지지되어온 라이트의 계층모델을 중심으로 골드소프의 고용직업 지위 분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분류방법과 분석주제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대상 자료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총인구조사의 모집단분포와의 일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의 분류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주와 함께 홍두승(1983) 모델에 포함되었던 최고위임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과 신중간계급의 분류에 있어서 직업지위가 보다 엄밀하고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무직 가운데 전문기술직과 유사한 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신중간계급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할 사항으로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와 관련하여 비정규직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일반적인 전통노동계급 지위와 달리 별도의 계급으로 주변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 노동계층이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소득, 가구형성의 어려움, 계급적 재생산의 문제 등에 모두 직면함으로써 새로운 하층계급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7) “노동자계급 중에서는 사무직의 상승이 눈에 띈다. 한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비율이 오르고 있다. 1994년에 사무직의 전체 가구소득 대비 평균 가구소득 비율은 다른 노동자계급 분파들 즉 기능생산직,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비해 각각 12.1%, 15.5%, 17.0%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을 보면 사무직과 다른 노동자계급 분파들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하급사무직에 해당하는 이 노동자층은 소득 수준에서나 노동과정에서 신중간계급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다른 노동자계급 분파들과의 격차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장귀연, 2013)”

(이승윤, 2024). 이른바 영국과 일본 등에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또는 언더클래스(underclass) 등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하층계급의 존재와 확산 문제가 현단계 계층분석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계층분류의 기준과 방법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객관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불평등과 격차에 관한 많은 담론과 실증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관한 많은 분석들은 주로 임금노동자에 국한되었고 고용주와 자영자의 상황을 함께 보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개인 임금만 알 수 있을 뿐 그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구원들의 개별 소득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과 자산 분위에 따른 격차를 보여주고 지니계수나 상대빈곤률 등의 지표를 통해 불평등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소득분위나 자산분위, 빈곤층의 개념은 모두 사후적 결과치에 따른 구분일 뿐이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상태와 개인소득, 가구소득과 자산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층을 분류하고, 그러한 계층구분 하에서 각 집단의 고용상황과 소득과 자산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계층분류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전체 취업자의 소득 및 자산과 관련한 계층분포를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체 사회의 분배구조를 맵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국내외에서 시도되었던 계층분석 모델과 방법론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과 불평등 현상에 부합하도록 조정, 개선하여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급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분류하기 위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존의 계층분석 이론과 실증분석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전에 논리적으로 정의된 도식(圖式, schema)’에 따라 계층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계층을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잠재적인(latent) 변수로 가정하고 다차원적인 측정 지표(indicators)들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층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전자를 ‘이론기반(theory-driven)’ 분류 방식이

라고 한다면 후자는 ‘자료기반(data-driven)’ 분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정의에 의한 이론기반 방식의 대표적인 예들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자본 소유와 숙련 수준, 통제 권한을 함께 고려하는 라이트의 ‘모순적 위치 계급모델’과 골드소프의 ‘EGP 모형’이 있으며 국내외에서 이미 두 가지 모델을 조정-통합하여 실제로 분석에 사용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도 이미 축적되어 있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서관모(1987)와 조돈문(1994), 신광영(2009), 장귀연(2013)이 자본 소유 여부와 고용상의 지위에 따라 자본가 또는 고용주와 임금노동자를 구분하면서도, 직업분류코드와 고용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자본가와 자영업자, 관리직과 전문직, 노동계급 등으로 다양한 계층적 지위를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영국 통계청이 사용하는 NS-SEC 분류체계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ESeC 분류체계도 고용상 지위와 직업코드(ISCO)를 조합해서 표준적인 공식 계층분류 체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마르크스주의적 자본소유 기준과 베버주의적 직업 기준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주목할만한 해외 연구로는 일본 와세다대의 하시모토 겐지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일본의 전체 취업자를 고용상 지위와 직업, 고용형태 등을 기준으로 5계급으로 구분하면서, ‘언더클래스’라는 새로운 하위계급의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해 보였다(橋本健二, 2018 ; 橋本健二, 2025).

하시모토는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을 기존의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구중단계급과 신중단계급과 구분되는 제5의 계급인 ‘언더클래스(アンダクラス, underclass)’를 추가했다. 하시모토의 계급분석에서 5개의 계급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체계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의되었다. 자본가계급은 5인이상 기업의 고용주와 고위임원으로 구성되며, 구중단계급은 5인미만 고용주와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로 정의된다. 신중단계급은 임금노동자 가운데 관리직과 기술전문직, 그리고 정규직(남성) 사무직으로 구성된다. 제조·건설·판매·서비스직 정규직과 사무직 여성 및 비정규직은 일반 노동계급으로,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더클래스로 분류한다. 다만, 모든 비정규직이 언더클래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부파트’로 별

도로 구분하면서 분석대상의 언더클래스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이것은 라이트(Wright)가 제시한 자본재와 조직재, 기술재 모델에서 일본의 상황을 반영해서 일부를 수정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4>는 이러한 논리에 의한 사전정의 방식의 계층분류가 적용되는 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표 3-3> 이론기반 사전적 정의 - 하시모토 겐지의 5계급 분류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자/고위임원
관리직	신중간계급		5인이상 고용주 고위임원은 자본가계급  5인미만 자영자 1인자영업자는 구중간계급
전문직			
사무직	남성: 신중간계급	노동계급	
	여성: 노동계급		
생산/판매/서비스 단순노무직	노동계급	언더클래스	

자료 : 橋本健二. (2025). 『新しい階級社会 最新データが明かす〈格差拡大の果て〉』. 講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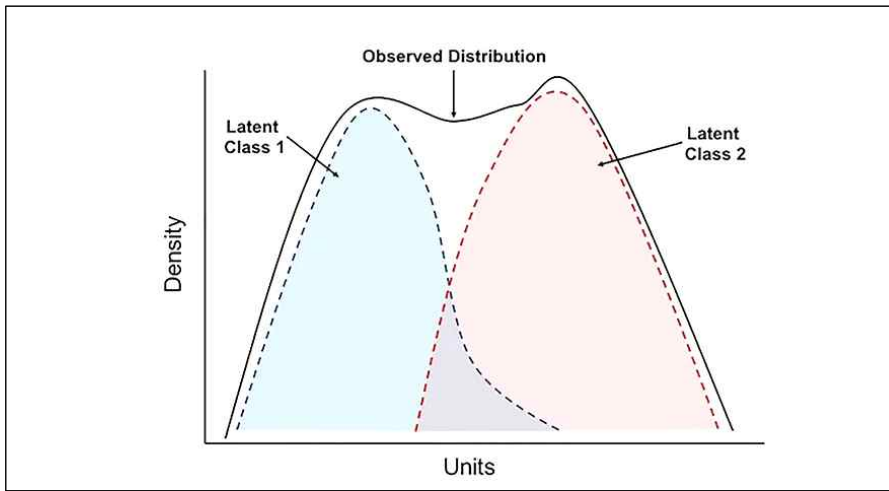
다른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접근법은 측정되지 않는(unobserved) 계층의 존재를 측정가능한(observed) 지표 변수들을 이용하여 역추정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특성이 유사한 응답을 보인 것은 그들이 동일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체계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다시 말해, 관측된 다차원 변수들이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고, 집단 간에는 이질적인 특성 분포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집단을 복수의 잠재적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군집분석, 요인분석, 잠재계층분석(LCA/LPA) 등이 활용되어 왔다.<sup>28)</sup>

잠재계층분석은 임금이나 소득과 같은 관측된 지표 변수의 분포가 잠재계층(latent classes) 이라고 불리는 이질적인 기저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

28) 과거에는 지표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 LPA(잠재프로파일분석)를 적용하고 지표변수가 이항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LCA(잠재계층분석)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MLE, EM 알고리즘을 이용한 계산능력이 발전하고 다양한 분포가정을 통합하는 일반화된 모형이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졌다(Stata18의 gsem, Mplus 등에서 혼합모형(FMM)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CA 분석이 지표변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Sinha et al., 2021)).

과라는 가정에 기반한다(그림 3-1). 이때 각 계층은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라는 측면에서 한 개체는 한 계층에만 속할 수 있으며, 포괄적(exhaustive)이라는 측면에서 모집단의 모든 개체가 자신의 계층을 갖게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모델링된다.

<그림 3-1> 자료기반 통계적 추정 - 잠재계층분석(LCA)



자료 : Sinha et al. (2021). Practitioner's Guide to Latent Class Analysis.

특히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은 K-mean 등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장 근거리 위치를 집단으로 묶는 기존의 군집분석 방식과 달리 확률분포 가정에 의해서 가설 검정과 모델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등을 자유롭게 포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심리학과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최근 들어 다차원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사회경제적인 계층분석에도 강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잠재계층분석(LCA) 방법론을 사회계층 분석에 적용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Savage(2013)가 있다. 영국 런던경제대학(LSE)의 마이크 새비지(Mike Savage) 교수 연구팀은 2011년 BBC와 함께 16만명의 이상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사회계층조사(GBSC)’를 실시한 뒤, 영국 사회를 7개 계층

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sup>29)</sup> 이들은 소득과 자산, 직업<sup>30)</sup>과 같은 기존의 계층분류 기준 외에 부르디외가 강조했던 문화적 취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지표 변수에 포함시켰는데, 연구팀은 결론에서 전통적 노동계급이나 중산층 외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에 참여하는 ‘신흥문화중산층(emergent cultural middle class)’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함께 소득과 자산,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등 모든 영역에서 노동계급과 동일한 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최하위의 계층으로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e)’라는 새로운 계층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레카리아트의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론에 기반한 사전적 정의에 의한 계층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계층분석 방법론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연구자의 해석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계층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계층분류 기준을 반복 가능한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도와 자료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분류 기준의 임의성과 경계설정의 자의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통계적 잠재계층 분석(LCA)은 데이터에 내재된 규칙성과 이질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도출된 집단의 성격을 이론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지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점과 표본의 크기에 따라 계층분류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재현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9) Savage, M., Devine, F., Cunningham, N., Taylor, M., Li, Y., Hjellbrekke, J., Le Roux, B., Friedman, S., & Miles, A. (2013). A New Model of Social Class? Findings from the BBC's Great British Class Survey Experiment. *Sociology*, 47(2), 219~250. <https://doi.org/10.1177/0038038513481128>

30) Savage의 연구에서 직업변수는 Wright나 Goldthorpe 모델에서처럼 범주형 변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국제직업지위지수(ISEI)를 사용하여 연속형 변수값을 부여함으로써 통계적 모델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LCA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직업분류코드(3자리)를 국제표준코드(ISCO)로 변환한 뒤 ISEI 지수값으로 재변환하여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lt;표 3-4&gt; 계층분석 방법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사전적 정의 방법	해석 용이, 정책 연계 반복 적용, 다양한 자료 사용 가능	기준의 자의성 문제, 경계의 임계치 설정
통계적 추정 방법	임의성 배제, 독립적 객관성 유연성, 새로운 발견 가능성	이론적 의미, 해석상 어려움, 반복재현의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방법을 보완적(complementary) 방식으로 병행 적용하고, 이후 분석 결과에서 양 접근 방식이 제시하는 계층 구조의 차이와 공통점, 해석상의 함의를 비교·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동시 적용은 계층분석에 있어 이론적 쟁점에 따르는 경직성을 피하고, 사회현실에 대한 해석의 유연성과 실증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도출된 계층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불평등 상황에 관한 분석 결과를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데이터와 분석방법

이하에서 통계청 확률적 방법에 의한 계층분석 방법과 사전적 정의 방식에 대한 계층분류 분석을 각각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통계청의 한국노동패널(1998~2023) 자료를 이용하게 되며, 통계적 계층분류 방법으로는 Savage(2013)에서 사용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법을 적용하며 분석하게 되며, 사전정의 방식에 의한 계층분류 방법으로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와 하시모토(2018, 2025)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차(1998년)부터 제26차(202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동패널 자료는 표본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응답률 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과 2018년에 각각 신규 표본을 추가한 바 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친 계층분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최대한 확장하기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되, 계층분류의 취업자에 대해 수행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 2) 분석단위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앞에서 밝힌대로 임금노동자와 비임금취업자를 포함해서 15세이상 모든 개인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하였다. 전통적인 사회계층 분석에서는 개인(individual)의 직업, 교육, 소득 등을 중심으로 계층을 사회적 지위를 규정해왔으며, 골드소프의 EGP 계층모형이나 영국의 NS-SEC 모형도 이 같은 계층분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토마 피케티의 WID도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 가구소득을 균등분배하여 소득집중도 지표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계층은 단지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적 위치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분배, 주거환경, 소비·문화 실천 등의 가구(household) 수준 자원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Savage et al., 2013; Atkinson, 2015). 이에 따라 최근의 계층분석은 개인과 가구 간 이중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가구기반 자본 측정과 개인기반 계층 귀속을 결합하는 절충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을 반영하여, 이하 분석에서 계층의 귀속은 개인 단위로 수행하되, 가구 기준의 소득, 자산도 지표들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Savage et al. (2013)의 접근을 따른 것으로, 개인이 속한 가구의 자원 상태와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가 결합하여 계층적 위치를 형성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 3) 분석방법

### (1) 통계적 추정 기반 분류 : 잠재계층분석(LCA)

사회경제적 계층을 결정하는 지표변수로 본인의 교육년수, 직업지위(ISEI), 기업 규모,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총자산 등 총 6가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교육년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과정을 졸업했을 경우 각각 6, 9, 12, 14, 16, 18, 20년의 점수를 부여하고 졸업하지 못한 상태이면 절반의 점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직업지위는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홍두승(1983) 외에는 직업대분류 변수만 사용했으나, 노동패널 자료가 3자리 소분류 정보까지 제공하고 점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국제직업지위지수(ISEI)<sup>31)</sup>는 ILO에서 공식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사회경제지위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로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준으로 직업별로 부여된 점수(0~100)가 있는데, 노동패널에 기입된 직업소분류(KSCO)를 ISCO-08로 변환<sup>32)</sup>한 뒤, 이에 대응하는 ISCO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셋째, 기업규모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가 일하는 직장의 종업원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1~6까지의 서열형 변수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sup>33)</sup> 기업규모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고용주의 지위(자본가, 소고용주 구분 등)를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의 지위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들 역시 기업규모 변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서 포함시켰다. 넷째, 개인소득은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며, 다섯째 가구총소득은 가구의 개인소득과 정부의 공적이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끝으로 총자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모든 자산(부동산, 금융, 자동차, 기타)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분석에 사용할 지표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 원변수들은 표시 단위가

31) ISEI는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이 참여한 2002~2007년 기간 동안의 국제사회조사(ISSP) 자료에 기반해 구축된 것으로 최저 10점(주방보조원)에서 89점(의사)까지 연속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Ganzboom, 2009).

32)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간의 매칭 대응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에서 이를 활용해서 변환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와의 연계표는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 다운로드.

33) 노동패널 변수에는 종업원수가 10명미만이면 1, 10명~29명이면 2, 30명~99명 3, 100명~299명 4, 300명~499명 5, 500명이상 6이 각각 부여되어 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LCA에 분석에 투입할 변수로는 불안정성이 매우 커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다수의 결측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투입을 위해서는 결측값을 평균값 또는 0으로 대체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변수 자체가 아니라 z-score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으며, 결과치를 비교할 때에는 원래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 교육년수(p\_educ\_year) : 최종학교 이수여부 결합 계산. 중퇴·수료시 1/2 부여<sup>34)</sup>
- 직업지위지수(p\_isei\_score) : 직업소분류 코드를 ISEI지수(10~89)로 변환
- 기업규모(p\_firm\_size) : 1~6 정수 변수값을 연속형 변수처럼 표준화하여 사용<sup>35)</sup>
- 개인소득(p\_wage) : 임금노동자의 임금, 비임금취업자의 소득
- 가구총소득(h\_inc) : 모든 가구의 총소득. 자료추출시스템 자동 생성 변수
- 가구총자산(wealth) : 부동산+금융+기타 자산 총합계. 자료추출시스템 생성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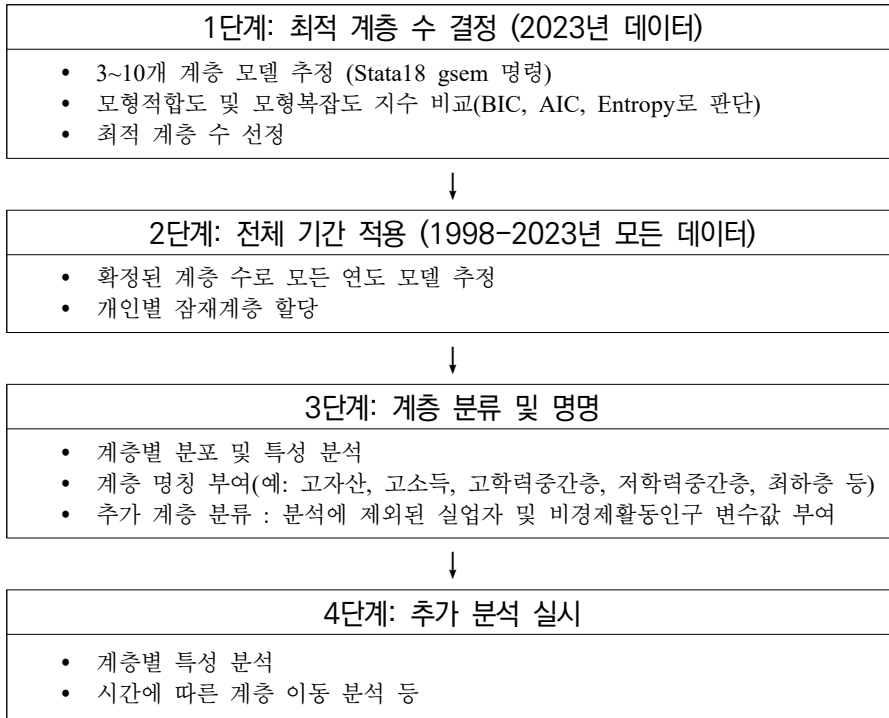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며, 계층분류와 확정된 이후에는 각 계층별 특성과 계층별 불평등 실태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한다.

가장 최근 년도(2023년)에 대해 모델별(3~10개 계층)로 LCA 분석 실시(Stata에서는 gsem 명령어 사용) 후, 모형적합도(goodness-of-fit)와 복잡도(complexity)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층의 수를 결정(BIC, AIC, Entropy로 판단) → 결정된 계층의 수를 확정하여 모든 년도(1998~2023)의 개인에 대해 잠재계층 할당 → 계층의 분포와 특성을 확인하여 계층분류 명칭(고자산, 고소득, 고학력중간층, 저학력중간층, 최하층 등) 부여 → 계층분류에서 제외되었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별도 변수값 부여 → 분류가 완료된 계층에 대한 추가 분석 실시

34) 무학(0), 초등(6), 중학(3), 고교(3), 전문대(2), 대학(4), 대학원(2), 박사(2) 등을 기준으로 졸업한 경우는 누적합계. 중퇴시 해당 기간 1/2 만큼 부여. 예를 들어 고교 중퇴시  $6+3+(3 \times 1/2)=10.5$ 년

35) 기업규모 변수값. 1=10명미만, 2=10명~29명, 3=30명~99명, 4=100명~299명, 5=300명~499명, 6=500명이상

<그림 3-2> 통계적 추정 : 잠재계층분석 단계별 절차



## (2) 사전적 정의 기반 분류 : 소유관계 및 고용·직업상 지위 기준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소유관계와 고용·직업상 지위를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하는 방식은 대체로 4개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자본가·고용주와 노동계급의 2개 계층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들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계급으로서 과거로부터 존재해 온 자영업자와 함께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스스로 통제권을 갖고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새로운 중간계급이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중간계급 중에서 전자를 구(舊)중간계급이라고 하고 후자를 신(新)중간계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Savage(2013)와 하시모토(2025)에서 프레카리아트 또는 언더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층으로 분류된 집단의 존재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 새비지는 “소득은 가장 낮고 저축은 가장 적으며, 사회적 관계의 폭과 문화자본도 가장 적은 계층”으로서 “파악된 모든 계층 중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임이 분명하다”며 Standing(2011)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명명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가이 스탠딩은 해당 저작에서 프레카리아트가 비록 고정된 계층이 아니라 형성과정에 있는 중이긴 하지만<sup>36)</sup>, 적어도 기존의 노동계급과 동일한 계층에 속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It is being in a status that offers no sense of career, no sense of secure occupational identity and few, if any, entitlements to the state and enterprise benefits that several generations of those who saw themselves as belonging to the industrial proletariat or the salariat had come to expect as their due.”*(Standing, 2011, p.41)

하시모토(2018)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적어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노동이 가능한 상태이고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길러 계급을 재생산할 수는 있어

36) “Although the precariat is not yet a class-for-itself, it is a class-in-the-making, increasingly able to identify what it wishes to combat and what it wants to construct.”(Standing, 2011, p.268)

야 하는데, “생계를 유지하고 차세대 노동자 계급을 재생산할 만큼의 임금도 얻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 계급이 노동력의 가치와 동등한 임금을 받는 정규 노동자 계급과 그렇지 못한 언더클래스라는 두 개 계층으로 위계가 이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하시모토 겐지, 2022, pp.169~170.).

이에 따라 사전정의 방식의 계층분류에서는 일반적 전통노동계층 외에 최하위 취업자층을 추가하고 해당 계층을 포함해서 5개의 계층을 다음과 같이 도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우선 종사상 지위가 고용주이면서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경우와 임금노동자 중에서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본가·고용주계층’으로 구분하였고, 5인 미만 직원을 둔 고용주와 1인 자영업자를 ‘구중간계층’으로 정의했다.

‘신중간계층’은 임금노동자 가운데 직업분류상 관리직이나 전문직, 기술직인 경우로 정의하되, 사무직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정규직은 신중간계층으로 포함시켰다.<sup>37)</sup> 반면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대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는 일반 노동계층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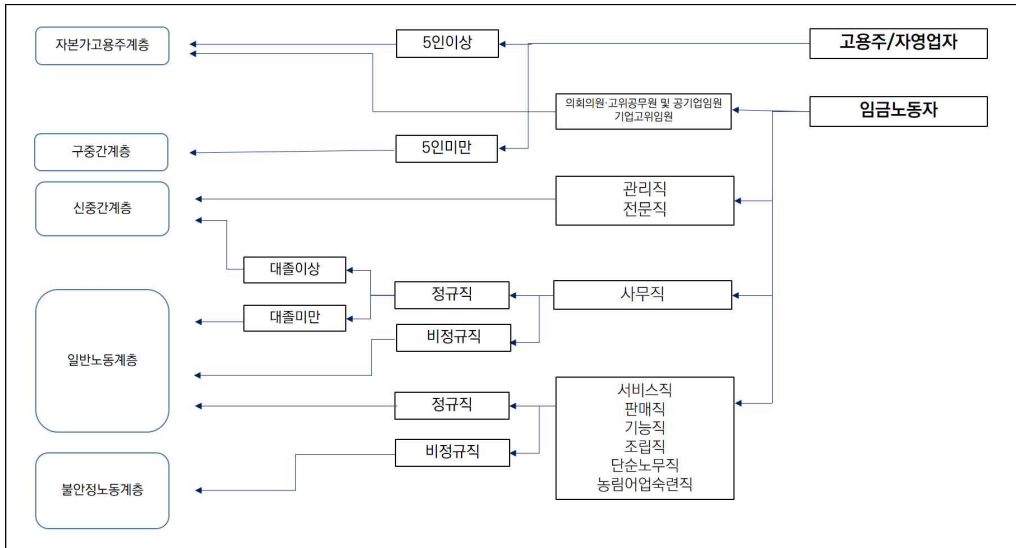
다음으로 직업분류상 관리직과 전문직, 사무직이 아닌 임금노동자가 되는데, 이들 중에서 정규직은 전통노동계층으로 비정규직인 경우는 언더클래스로 따로 구분하였다. 이 때 비정규직을 판별하는 기준은 정부의 통계청 기준이 아니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노동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상과 같은 계층 분류 도식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3-3>과 같다.

- 자본가·고용주계층 : 5인 이상 고용주와 민간 및 공기업의 고위임원
- 구중간계층 : 5인 미만 고용주와 1인 자영업자
- 신중간계층 : 임금노동자이지만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 + 대졸 이상 정규직 사무직

37) 이것은 국내 연구 중 홍두승(1983)은 사무직 전체를 신중간계층으로 분류하고 조돈문(1994)과 장귀연(2013)은 모두 노동계급으로 분류한 것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이라면 관리직으로의 승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이거나 대졸 이하인 경우 관리직 승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의 하시모토(2025)에서 정규직 사무직에 대해 남성은 신중간계급으로 여성은 노동계급으로 무조건 구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과 승진 등의 차별이 모두 심한 나라이지만, 동일한 조건의 남성과 여성을 성별 차이만을 이유로 다른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 전통노동계층 : 대출 미만 또는 비정규적인 사무직, 서비스/판매/제조/단순노무 직업의 정규직
- 불안정노동계층 : 관리직/전문직/사무직이 아닌 서비스/판매/제조/단순노무적인 비정규직

&lt;그림 3-3&gt; 사전적 정의 - 계층분류 도식



## 제3절 통계청 추정 및 사전적 정의에 의한 분석 결과

## 1. 통계적 추정에 의한 잠재계층(LCA) 분석 및 결과

## 1) 노동패널 데이터 확인

노동패널은 1998년 5,000가구의 13,319명의 가구원의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23년 기준 조사(2024년 실시)에는 11,401가구의 23,364명의 가구원이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패널조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대표 패널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조사가 계속되면서 조사가구의 이탈 등으로 인한 표본의 마모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2009년과 2018년에 각각 신규 표본을 대거 추가하여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1998년 이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8년통합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98통합표본은 15세이상 가구원 기준으로 1998년 13,319명에서 2023년에는 11,987명으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sup>38)</sup>

잠재계층 분석을 위해서는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모델에 투입되는 관측된 변수인 지표변수(Indicator Variables)가 유효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소득과 교육년수, 직업지위지수(ISEI), 기업규모, 가구소득과 가구총자산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비취업자가 있을 경우 분석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취업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한 결과 98년통합표본 중에서 취업자인 가구원 응답자는 1998년 6,427명에서 2023년 6,966명이며 이들이 분석대상(총 167,483명)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대로 각 지표변수들은 단위 크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z-score로 표준화하여 사용한다고 했는데<sup>39)</sup>, 표준화 이후 결측치에 대해서는 평균

38) 한국노동패널의 98년통합표본의 표본가구는 1998년 1차 조사에서 5,000가구로 출발해서 2023년 26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원표본 3,028가구와 분가 가구 2,847가구를 포함해서 5,875가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표본유지율은 60.7%이고 가구원 사망 등으로 소멸한 가구를 포함한 유효표본 유지율은 67.8%에 이르고 있다.

39) 측정값에서 평균을 뺀 뒤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말한다. 표준화한 지표변수들의 평균값은 0이 된다.

에 해당하는 0으로 대체하여 분석에 사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노동패널의 전체 표본 가운데 통합표본의 유형과 취업자 여부, 그리고 지표변수의 결측치가 평균값으로 대체된 분석자료의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표 3-5>과 같다. 그리고 분석 대상이 되는 98년통합표본의 주요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와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3-6>이다.

&lt;표 3-5&gt; 노동패널 연도별 유효 표본수

연도	전체표본	98년통합	취업자	지표변수 유효표본						분석대상
				개인소득	교육년수	직업지위	기업규모	가구소득	총자산	
1998	13,319	13,319	6,427	5,410	6,427	6,395	3,610	6,198	5,832	6,427
1999	12,034	12,034	6,272	5,364	6,272	6,006	3,691	6,125	6,131	6,272
2000	11,204	11,204	5,813	5,079	5,813	5,638	3,548	5,727	5,650	5,813
2001	11,046	11,046	5,827	5,117	5,827	5,633	3,802	5,693	5,662	5,827
2002	10,961	10,961	5,955	5,278	5,954	5,832	3,823	5,900	5,842	5,955
2003	11,535	11,535	6,211	5,559	6,210	6,116	3,966	6,136	6,115	6,211
2004	11,656	11,656	6,284	5,644	6,284	6,219	4,166	6,203	6,228	6,284
2005	11,579	11,579	6,210	5,686	6,210	6,163	3,991	6,147	6,124	6,210
2006	11,752	11,752	6,349	5,856	6,348	6,320	4,230	6,284	6,305	6,349
2007	11,851	11,851	6,391	5,931	6,390	6,369	4,358	6,330	6,378	6,391
2008	11,732	11,732	6,374	5,884	6,373	6,360	4,340	6,352	6,367	6,374
2009	14,489	11,739	7,787	5,898	6,361	6,341	4,287	6,286	6,355	6,362
2010	14,116	11,582	7,838	5,998	6,442	6,418	4,420	6,387	6,440	6,442
2011	13,899	11,376	7,811	5,997	6,417	6,391	4,477	6,325	6,415	6,417
2012	13,996	11,442	7,947	6,115	6,527	6,501	4,462	6,455	6,524	6,528
2013	13,885	11,329	7,908	6,098	6,495	6,468	4,422	6,421	6,490	6,496
2014	13,168	10,752	7,679	5,899	6,287	6,263	4,299	6,246	6,285	6,287
2015	14,010	11,434	7,970	6,171	6,528	6,498	4,525	6,457	6,528	6,528
2016	14,202	11,618	8,148	6,344	6,699	6,669	4,667	6,640	6,697	6,699
2017	14,475	11,839	8,329	6,475	6,822	6,796	4,773	6,781	6,821	6,822
2018	23,971	11,835	13,273	6,484	6,850	6,822	4,766	6,795	6,847	6,850
2019	23,223	11,818	12,810	6,449	6,781	6,751	4,756	6,713	6,780	6,781
2020	22,962	11,738	12,441	6,364	6,647	6,617	4,556	6,597	6,647	6,647
2021	22,957	11,726	12,611	6,382	6,703	6,672	4,516	6,684	6,703	6,703
2022	23,274	11,882	12,954	6,536	6,842	6,813	4,486	6,836	6,842	6,842
2023	23,364	11,976	13,080	6,667	6,966	6,934	4,565	6,961	6,966	6,966
합계	394,660	302,755	216,699	154,685	167,475	166,005	111,502	165,679	165,974	167,483

자료 : 한국노동패널 각년도 자료에서 계산

&lt;표 3-6&gt; 분석대상 표본의 기술통계

(단위: %, 세, 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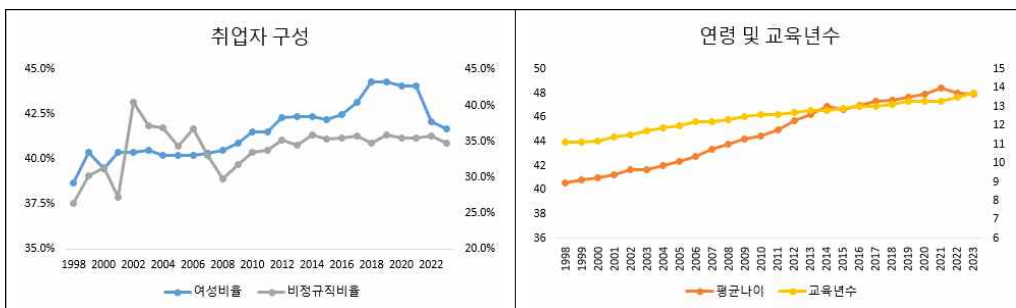
연도	여성비율	평균나이	비정규비율	교육년수	개인소득	가구소득		총자산	
						단순평균	가중치조정*	단순평균	가중치조정*
1998	38.7%	40.6	26.3%	11.1	117	2,067	1,940	6,336	6,031
1999	40.4%	40.8	30.2%	11.1	110	2,182	2,058	8,547	8,239
2000	39.5%	41.0	31.3%	11.2	118	2,339	2,207	8,731	8,523
2001	40.4%	41.3	27.2%	11.4	136	2,530	2,391	10,163	9,796
2002	40.4%	41.7	40.4%	11.5	151	3,073	2,872	10,546	10,141
2003	40.5%	41.7	37.2%	11.7	163	3,322	3,101	13,160	12,691
2004	40.2%	42.0	36.9%	11.9	180	3,550	3,296	15,786	14,699
2005	40.2%	42.4	34.3%	12.0	180	3,694	3,431	17,089	16,405
2006	40.2%	42.8	36.7%	12.2	197	4,119	3,807	19,406	18,518
2007	40.3%	43.4	33.1%	12.2	205	4,333	3,993	22,382	21,385
2008	40.5%	43.8	29.8%	12.3	211	4,607	4,232	24,020	23,038
2009	40.9%	44.2	31.8%	12.5	212	4,496	4,113	24,255	22,870
2010	41.5%	44.5	33.5%	12.6	221	4,690	4,375	24,210	22,891
2011	41.5%	45.0	33.8%	12.6	231	4,898	4,525	24,123	23,227
2012	42.3%	45.7	35.1%	12.7	238	5,089	4,714	25,365	24,119
2013	42.4%	46.2	34.4%	12.8	246	5,352	4,901	25,774	24,393
2014	42.4%	46.9	35.9%	12.8	253	5,590	5,115	26,267	24,565
2015	42.2%	46.7	35.3%	12.9	255	5,629	5,156	28,423	26,472
2016	42.5%	47.0	35.5%	13.0	262	5,856	5,319	30,258	27,410
2017	43.2%	47.3	35.7%	13.0	266	6,220	5,621	32,330	29,351
2018	44.3%	47.4	34.8%	13.1	276	6,476	5,819	36,036	33,216
2019	44.3%	47.7	35.9%	13.3	282	6,661	5,961	35,220	32,838
2020	44.1%	47.9	35.5%	13.3	280	7,279	6,922	38,503	37,107
2021	44.1%	48.4	35.5%	13.3	285	8,027	7,637	45,420	42,518
2022	42.1%	48.0	35.7%	13.5	299	7,342	6,511	47,873	44,908
2023	41.7%	47.9	34.8%	13.7	305	7,864	6,783	47,597	42,423

주 : 기존의 개인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취업자 표본에서 가구소득 및 자산이 취업자 수만큼 반복 계산되어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다인 가구로 평균이 상향편의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중치를 취업자수로 나누어 가중치를 조정하여 계산한 것임. 다만, 기존 가중치를 사용한 관찰 표본의 평균값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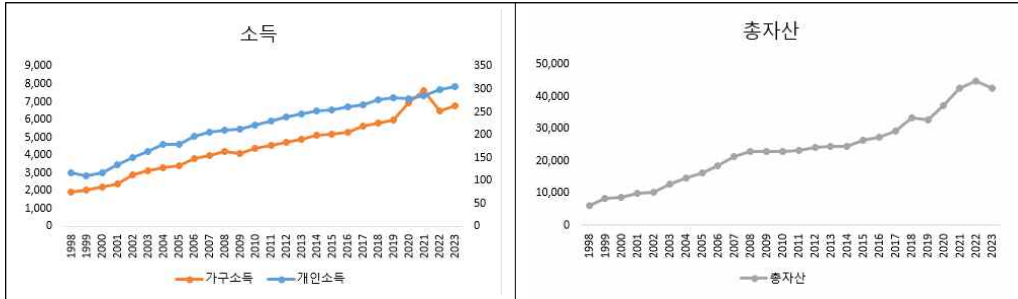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의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비율은 1998년 38.7%에서 2019년 44.3%까지 약 5.6%p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 이 비율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평균연령은 고령화와 청년진입 인구의 감소에 따라 1998년 40.6세이던 것이 2023년에는 47.9세로 약 7세 이상 늘어났다. 비정규직 비율(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준)은 98년 16.4%에서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27%로 급증한 뒤 2008년까지 20.5%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 27% 수준으로 다시 비율이 늘어났다. 교육년수는 대학진학률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 평균 교육년수가 13.7년에 이르고 있어 전문대 재학 이상의 평균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4> 노동패널 취업자의 개인 특성 추이



소득과 자산의 경우 경제위기 시작에 감소나 정체를 겪으면서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의 평균 개인소득은 98년 117만원에서 2023년에는 305만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가구소득은 연간소득 기준으로 1998년 1,940만원에서 2023년 6,783만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총자산은 1998년 가구당 6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2023년 4억 2천만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해 개인소득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자산우위 증가세를 보였다.

&lt;그림 3-5&gt; 노동패널 취업자의 가구 특성 추이



## 2) 2023년 지표 변수(indicator variables)의 분포

다음으로 모든 표본에 대해 사회계층 할당을 하기 전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표본에 대해 모형 적합도와 복잡도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계층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3년 취업자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고 LCA 분석에 투입될 지표(indicator) 변수들의 요약통계를 확인하였다. 직업대분류 기준으로는 관리직(1.4%), 전문가(23.3%), 사무직(17.9%), 서비스직(12.0%), 기능직·조립직(20.7%), 단순노무직(11.1%) 순으로, 상위 3개 직업군이 전체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단계 한국의 취업자 구조가 화이트칼라 전문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숙련 노동과 중간 범주의 직무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lt;표 3-7&gt; 2023년 표본 취업자 분포

직업대분류	표본수	비중(%)
관리직	95	1.4
전문가	1,606	23.3
사무직	1,235	17.9
서비스직	831	12.0
판매직	668	9.7
농림어업숙련직	276	4.0
기능직	686	9.9
기계조작조립직	744	10.8
단순노무직	765	11.1
합계	6,906	100.0

다음으로 지표변수인 개인소득과 교육년수와 ISEI 직업지수, 가구총소득, 총자산, 사업체규모를 확인할 차례이다.

원자료 기준에서 개인소득의 중앙값은 월 290만 원, 가구총소득은 약 5,460만 원, 총자산은 약 2.76억 원 수준이며, 평균 교육년수는 13.3년, 평균 ISEI 직업지수는 39.6, 평균 종업원규모는 약 2.6으로 약 50~100명 규모 구간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소득과 자산 지표는 상위 분위로 갈수록 격차가 매우 커지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분리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8> 지표 변수의 분포(원변수)

	Mean	SD	Min	P25	P50	P75	Max	N
개인소득	325	228	0	200	290	400	3,900	6,667
가구총소득	6,848	5,422	50	3,200	5,460	9,102	109,620	6,961
총자산	41,362	50,106	0	10,000	27,620	55,500	1,000,000	6,966
교육년수	13.3	3.0	0.0	12.0	14.0	16.0	20.0	6,966
ISEI 직업지수	39.6	15.0	10.0	28.0	36.0	46.0	89.0	6,934
총자산	191	1,254	1	3	6	20	20,000	2,110
종업원규모	2.64	1.77	1	1	2	4	6	4,565

<표 3-9> 지표 변수의 분포(표준화/결측대체)

	Mean	SD	Min	P25	P50	P75	Max	N
개인소득STD	0.685	1.056	0.740	0.127	0.492	1.085	17.059	6,966
가구총소득STD	0.295	1.075	1.229	0.383	0.102	0.699	20.546	6,966
교육년수STD	0.082	1.039	0.866	0.541	0.195	0.355	20.412	6,966
ISEI직업지수STD	0.352	0.775	3.061	0.009	0.521	1.033	2.056	6,966
총자산STD	0.821	0.677	0.514	0.300	0.662	1.114	3.059	6,966
종업원규모STD	0.527	1.197	0.563	0.563	0.066	1.324	3.210	6,966

한편 지표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크게 높지 않아 상호독립성 가정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교육, 직업지위, 소득, 자산, 고용규모 등 각 지표변수가 상관계수는 0.09~0.53 수준 간의 상관이 대체로 중위 정도의 상관을 보이면서, 다중공선성 우려 없이 계층분류에 투입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동일한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득이나 자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적자본, 직업지위, 경제적자원 등 다차원적 요소가 사회계층의 결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LCA 분석이 유효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lt;표 3-10&gt; 지표변수 상관관계 행렬

	개인소득STD	총소득STD	총자산STD	교육년수STD	ISEI STD	규모STD
개인소득STD	1					
가구총소득STD	0.4482	1				
총자산STD	0.2768	0.4575	1			
교육년수STD	0.3380	0.2784	0.2196	1		
ISEI직업지수STD	0.3355	0.2397	0.1778	0.5345	1	
종업원규모STD	0.2694	0.1392	0.0932	0.2441	0.1923	1

### 3) 분석 결과

#### (1) 사회계층 수 - 취업자 6개 계층 + 실업자 + 비경활 = 8개 계층

잠재계층분석(LCA)에서 계층을 몇 개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추정량을 가지고 모델별로 모형적합도(goodness-of-fit)와 복잡도(complexity)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계층의 수를 3개에서 10개까지 순차적으로 실행한 결과가 아래 <표 3-13>에 나타나 있다. 이 때 AIC, BIC, 엔트로피(Entropy)가 주요 판단지표가 되는데, AIC와 BIC는 계층분류의 수치가 낮을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는 BIC가 더 중요하다. 엔트로피는 어떤 개인이 어떤 계층에 속할 확률이 보다 분명하게 나뉘어질수록 1에 가까운 수치를 갖는데 계층분류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lt;표 3-11&gt; LCA 분석 적합모델 판단 지표

판단지표	의 미	해석 기준
AIC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 자유도 패널티	작을수록 좋은 모델
BIC	AIC와 유사하지만, 큰 표본일수록 복잡한 모델에 더 큰 패널티를 부여	작을수록 좋은 모델 (AIC보다 더 보수적)
Entropy	잠재계층 분류의 명확성 측정	1에 가까울수록 좋은모델 (0.8 이상)

모델별 실행결과 BIC는 계층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Entropy는 계층수가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6 계층에서 7계층으로 넘어갈 때 BIC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2.64E+08 \rightarrow 2.65E+08$ ), 역시 같은 구간에서 Entropy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0.996 \rightarrow 0.992$ ).

&lt;표 3-12&gt; Model of Fit Statistics of the Latent Class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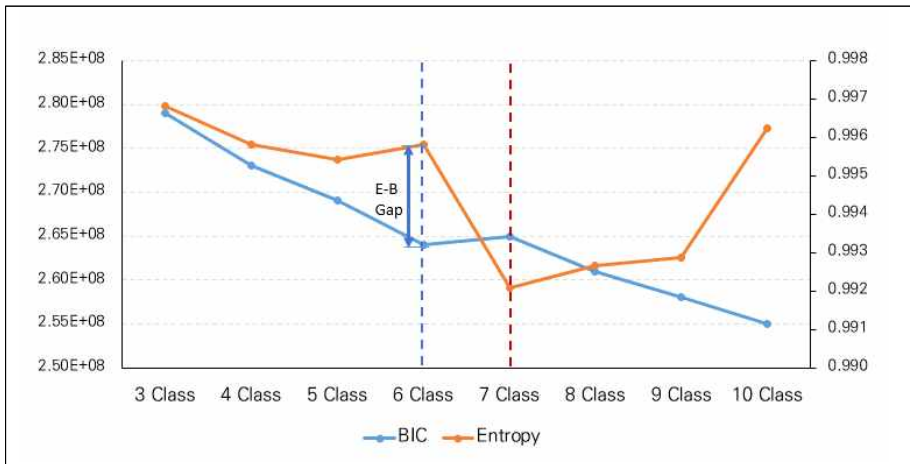
Model	N	ll(model)	df	AIC	BIC	Entropy
3 Class	6,933	-1.39E+08	26	2.79E+08	2.79E+08	0.997
4 Class	6,933	-1.37E+08	33	2.73E+08	2.73E+08	0.996
5 Class	6,933	-1.34E+08	40	2.69E+08	2.69E+08	0.995
6 Class	6,933	-1.32E+08	47	2.64E+08	2.64E+08	0.996
7 Class	6,933	-1.33E+08	54	2.65E+08	2.65E+08	0.992
8 Class	6,933	-1.30E+08	61	2.61E+08	2.61E+08	0.993
9 Class	6,933	-1.29E+08	68	2.58E+08	2.58E+08	0.993
10 Class	6,933	-1.27E+08	75	2.55E+08	2.55E+08	0.996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23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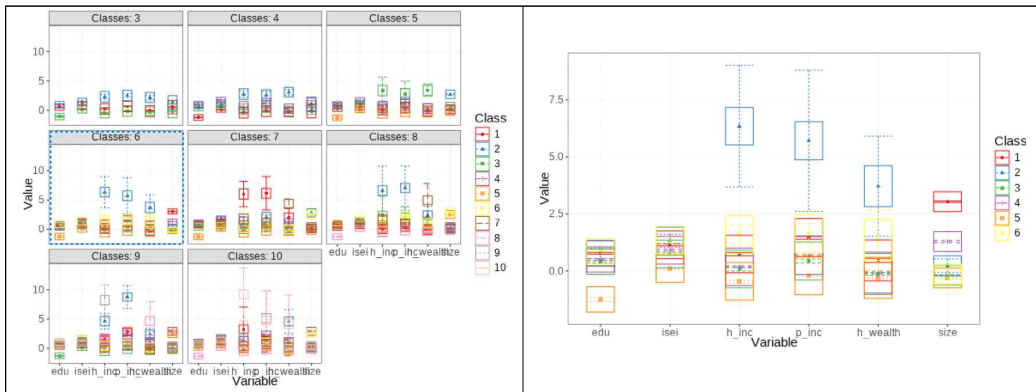
<그림 3-6>을 보면 이러한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6개의 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BIC는 낮아지고 Entropy는 증가하는 흐름의 정점을 보이지만, 7개 계층에서 BIC가 증가하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모형 적합도가 무조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6개 계층을 넘게 되

면 분류의 질이 오히려 나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BIC와 엔트로피 모두에서 6계층 모형이 7계층 모형보다 우수한 값을 보이며, 이는 모형 복잡성 증가 대비 설명력 향상이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수치로만 보면 10계층 모델이 가장 BIC 값이 낮지만 최적모델은 6계층 모형( $BIC = 2.64E+08$ )이 된다.<sup>40)</sup>

<그림 3-6> 추정모델별 BIC와 Entropy 비교



<그림 3-7> 모델별 분포와 6개 계층모델



40) 앞서도 검토했듯이 잠재계층분석은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정답’을 제공한다기보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과 실증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McCutcheon, 1987; Nylund et a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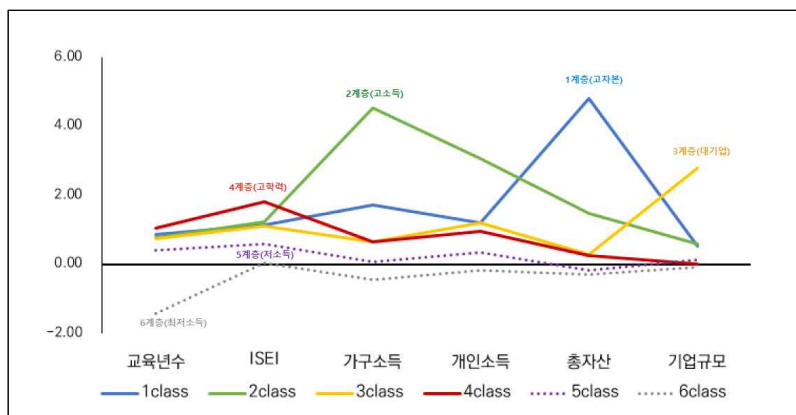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3-7>는 추정 모델별로 관측변수에 대한 계층별 분포의 특성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6개 계층 모델이 계층간의 중첩 정도가 가장 낮으면서 변수와 계층간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명확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감안할 때도 6개 계층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계층의 개수를 확정하고 6 계층 모델로 1998~2023년 전체 기간에 대해 연도별로 표준화한 지표변수를 다시 LCA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년도의 데이터에 대해 계층을 할당하였다.

## (2) 6개 사회계층의 주요 특성

LCA 분석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교육, 직업, 개인소득, 가구소득, 총자산, 사업체 규모 등의 지표를 통해, 집단 내부적으로 동질적이고 집단간에는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6개의 사회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3-8>은 표준화한 지표변수의 분포 특성을 보여준다.

‘1class’는 총자산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2class’는 가구소득이 가장 높다. ‘3class’는 기업규모가 큰 것이 두드러지며 ‘4class’는 교육년수와 직업지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5class는 모든 지표에서 평균(0)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며 6class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8> 계층별 지표변수 표준화 수치



### (3) 시각화를 통한 계층 특성 확인

다음으로 지표변수들이 잠재계층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커널 밀도곡선과 바이올린 플롯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각 계층의 분포특성과 계층간 서열을 확인할 수 있으며, 4분위 지점의 분산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구총자산의 분포를 보면 1계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산의 분포를 보이고 2계층>3계층 순으로 자산 순위를 보인 뒤 다른 계층들은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계층은 자산중심 계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은 두 번째 2계층이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고 1계층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3계층, 4계층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5계층이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6계층은 낮은 소득의 하위분위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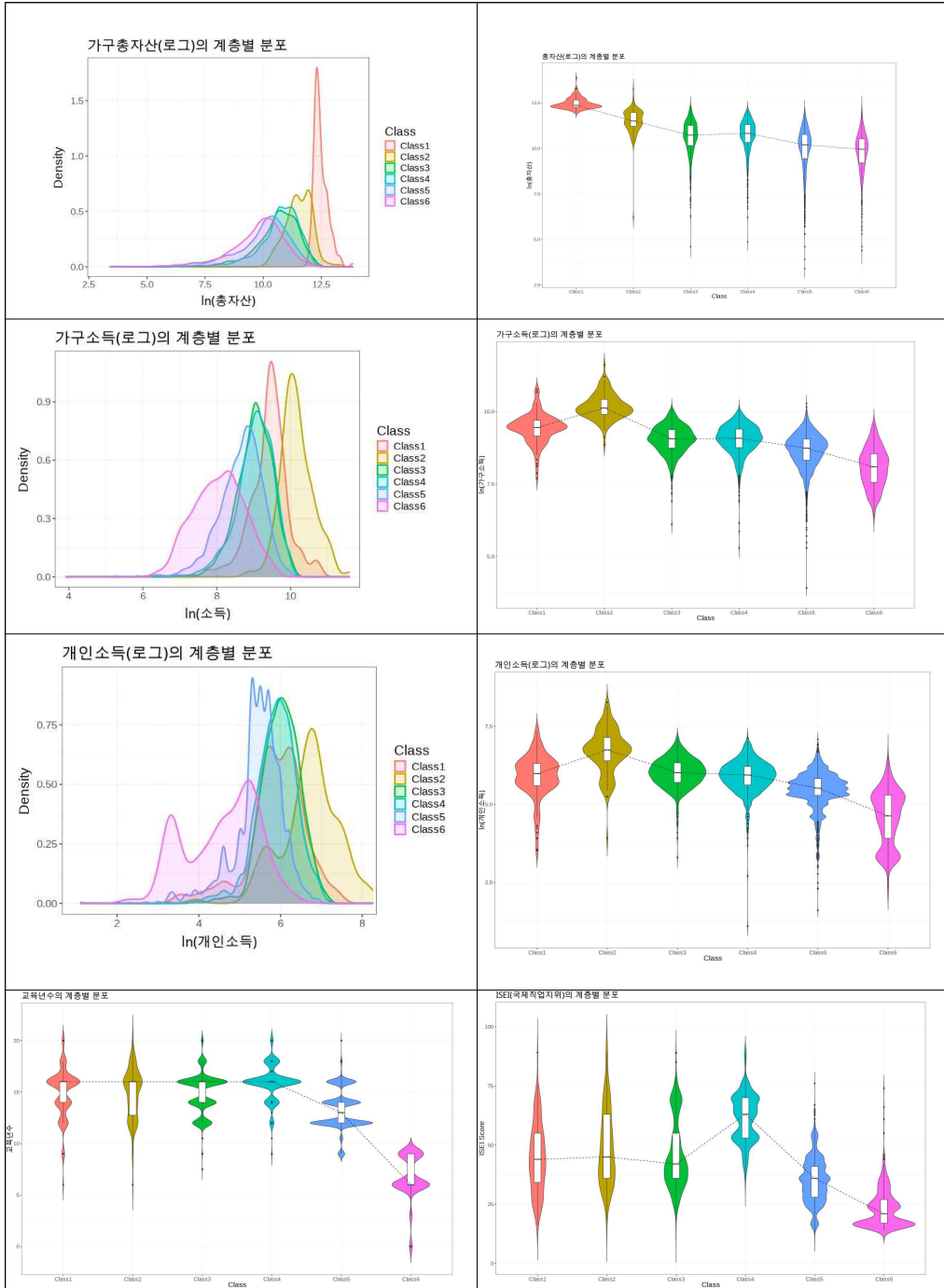
개인소득은 2계층이 최상위를 확실히 차지하고 다른 계층들은 평균의 분포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1계층의 저소득 부분 꼬리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5계층과 6계층은 저소득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6계층의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개인소득이 있는 그룹이 별도로 분포하고 있다.

이어 교육년수와 직업지위 지수의 분포를 보면 4계층이 교육년수와 특히 국제직업지위(ISEI) 점수에 있어서 뚜렷하게 높고 상위에 분포하는 집단의 비중도 크다. 4계층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취업자가 다수인 계층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반면 6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학력과 직업지위가 크게 낮은 집단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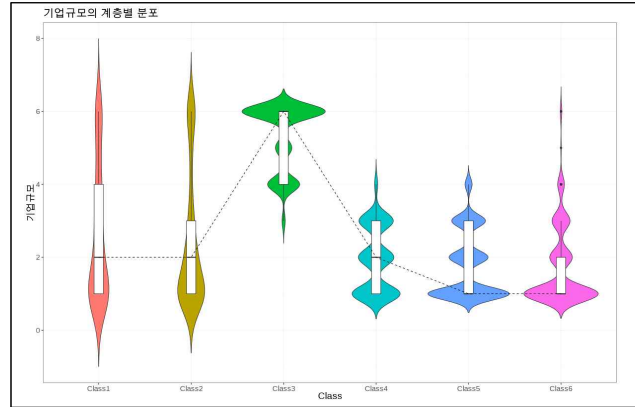
끝으로 기업규모는 3계층이 단연 압도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평균 사업체 규모도 상위에 있는 편이지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5계층과 6계층은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큰 편이며, 6계층은 매우 넓은 범위의 분포를 보여준다. 한편 1계층과 2계층은 규모가 큰 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양극단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사업체와 고용주와 대기업의 임원이나 관리직 취업자가 포함돼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lt;그림 3-9&gt; 시각화를 통한 지표변수의 계층별 분포 특성



&lt;그림 3-10&gt; 기업규모의 분포



#### (4) 6개 계층의 명칭 부여

우선 ‘1class’는 개인소득(464만원)과 가구소득(1.5억원)도 두 번째로 높지만 총자산이 앞도적으로 많은(평균 27.9억원) ‘고자산-고소득’ 유형의 그룹의 특징을 보인다. 교육년수도 가장 길고 직업지위도 평균 이상으로 높다. 다만, 기업규모는 적은 편이다. 두 번째 ‘2class’는 개인소득(844만원)과 가구소득(2.9억원)이 각각 평균의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자산(11.5억원)은 두 번째로 많은 ‘고소득-고자산’ 그룹에 해당한다. 교육년수도 길고 직업지위도 두 번째로 높은 그룹이다. 1class와 2class는 각각 취업자의 2.3%, 2.0%에 불과해서 우리 사회의 최상위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그룹 ‘3class’과 ‘4class’는 가구소득과 총자산이 각각 1억원과 5.5억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면서 3class가 개인소득이 훨씬 더 높고 기업규모도 훨씬 더 큰 특징을 보인다. 이에 반해 4class는 교육년수(16.1년)가 가장 길고 직업지위지수가 61.8로 압도적으로 높다.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특성이 3class에서 나타나고 4class는 고학력 전문직 특성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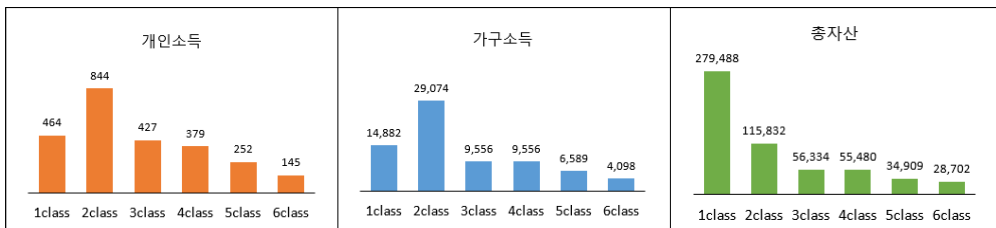
이에 비해 5class는 개인소득(252만원), 가구소득(6,500만원), 총자산(3.5억원) 등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장 큰 비중(60.2%)을 차지한다. 교육년수(13.6년)와

직업지위(61.8점)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노동계층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6class는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소득 평균이 150만원 수준이며, 가구소득과 총자산은 각각 4천만원, 2.9억원 수준이다. 교육년수는 중졸 이하 수준을 보이며 직업지위도 가장 낮다.

<표 3-13> 6개 계층의 지표변수 특성(2023)

	교육년수	ISEI	개인소득	가구소득	총자산	기업규모	빈도	구성비(%)
1class	15.4	47.3	464	14,882	279,488	43	135	2.3
2class	15.0	48.9	844	29,074	115,832	271	121	2.0
3class	15.0	45.9	427	9,556	56,334	1,712	1,037	12.9
4class	16.1	61.8	379	9,556	55,480	14	955	15.1
5class	13.6	34.8	252	6,589	34,909	12	4,025	60.2
6class	6.5	22.7	145	4,098	28,702	9	660	7.6
전체	13.7	40.0	305	7,864	47,597	157	6,933	100.0

<그림 3-11> LCA 6계층 주요 지표 비교



이와 함께 <표 3-14>에는 6개 계층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취업조건과 관련한 상태의 평균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산과 가구소득이 가장 높았던 1class와 2class에는 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낮다. 고용주나 자영업 취업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3class는 절대적인 비중이 임금노동자이며 평균연령이 가장 낮으며 청년비율도 높은 편이다. 4class는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높고 결혼비율이 가장 낮다. 6class는 청년들이 거의 없고 평균연령이 68세가 넘고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임금노동자 비중도 낮은 편이다.

끝으로 5class는 연령과 여성비율은 평균에 가깝지만 근속년수(8.2년)가 가장 짧고 비정규직 비율(41.7%)은 가장 높으면서 주택소유자 비율(59.1%)이 가장 낮은 그룹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표 3-14> 6개 계층의 주요 특성(2023)

	평균연령	여성비율	결혼비율	유배우	임금노동	비정규직	주택소유	청년비율	근속년수
1class	51.3	38.6	74.4	65.6	58.3	20.1	97.4	23.8	11.2
2class	52.0	35.8	89.3	82.1	57.2	17.2	86.4	14.2	17.5
3class	41.9	37.0	64.1	60.8	99.6	11.2	64.6	34.6	10.6
4class	43.6	41.9	60.5	57.5	84.6	21.5	65.7	29.0	9.6
5class	47.4	40.7	63.7	54.8	71.9	41.7	59.1	25.0	8.2
6class	68.5	59.3	98.5	69.6	63.5	79.2	76.7	0.2	13.0
전체	47.9	41.7	66.7	57.9	76.1	34.8	63.6	24.7	9.3

이에 각 계층의 명칭을 1계층은 자산이 많은 ‘고자산층’, 2계층은 ‘고소득층’으로, 3계층과 4계층은 중상위계층으로서 3계층은 대기업이라는 특징이 분명하고 4계층이 고학력 전문직 특성이 뚜렷함에 따라 각각 ‘대기업중상층’과 ‘고학력중상층’으로 명명했다. 5계층은 중간수준의 개인소득 분포를 보이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노동계층’으로 정의했다.

끝으로 제6계층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자산 뿐만 아니라 학력수준과 직업지위 지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5계층과의 질적인 차이도 분명하다. 이들을 5계층과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 부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6계층을 프레카리트(precariat) 또는 언더클래스(underclass)와 유사한 ‘최하위계층’으로 정의하였다.

<표 3-15> 6개 계층의 명칭 부여

• 계층1 → 고자산층 : 취업자의 2.3%. 자산 28억원, 소득은 두 번째. 낮은 고용주 다수 분포
• 계층2 → 고소득층 : 취업자의 2.0%. 가구소득 2.9억, 개인소득 1억원. 임금노동 낮은 비중
• 계층3 → 대기업중상층 : 취업자의 12.9%, 개인소득 5천만원, 가구소득 1억원. 대다수 임금노동자
• 계층4 → 고학력중상층 : 취업자의 15.1%. 고학력-전문직, 여성 청년 비중 높으나 낮은 결혼비율
• 계층5 → 일반노동계층 : 취업자 60%, 저소득-저자산, 비정규직 비율 높고 자가주택 비율 낮음
• 계층6 → 최하위층 : 취업자 8%. 저학력/비숙련/고령자/여성, 대부분 비정규직, 빈곤 위험

## (5) 6계층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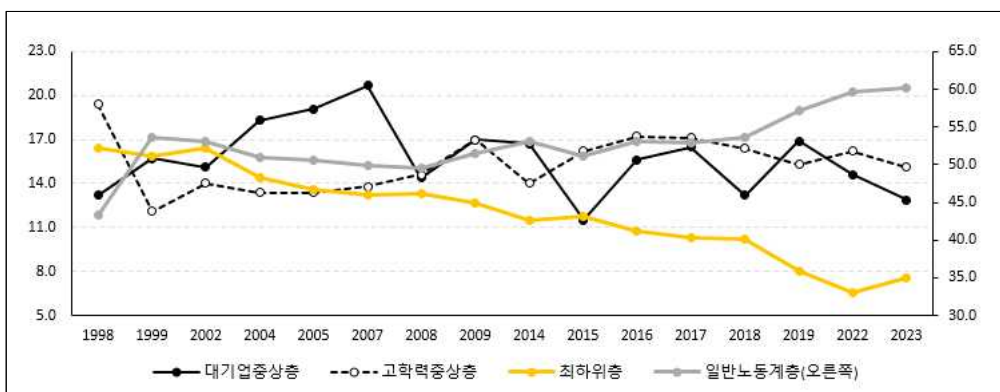
1998~2023년 전 기간에 대한 LCA 분석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계층분류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표 3-16>과 <표 3-17>에 나와 있다. 취업자 중에서의 비중과 15세이상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을 표시했다.

잠재계층 분석에 의한 6계층 모델의 연도별 비중은 최상위 고자산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은 각각 1%와 2~3% 수준으로 변화가 없으나 최하위층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일반노동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중상층은 2007년에 20% 정도까지 차지했으나 2008년 이후 비중이 12%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고학력중상층은 1998년의 수치를 예외로 한다면 추세적으로는 12% 수준에서 16~17% 수준으로 비중이 늘어난 상태이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노동계층이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고학력중상층(15.1%), 이어 대기업중상층(12.9%)이 많은 수를 차지하며, 최하위층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2> LCA 계층별 추이



&lt;표 3-16&gt; 사회계층(Latent Class) 비율 추이 - 취업자

	고자산층	고소득층	대기업중상층	고학력중상층	일반노동계층	최하위층	전체
1998	1.1	6.6	13.2	19.4	43.3	16.4	100.0
1999	0.3	2.5	15.7	12.1	53.6	15.9	100.0
2002	0.7	0.9	15.1	14.0	53.0	16.4	100.0
2004	0.5	2.6	18.3	13.4	50.9	14.4	100.0
2005	0.6	2.7	19.1	13.4	50.6	13.6	100.0
2007	0.9	1.5	20.7	13.8	49.9	13.2	100.0
2008	2.1	6.1	14.4	14.6	49.6	13.3	100.0
2009	0.2	1.8	17.0	17.0	51.4	12.7	100.0
2014	0.1	4.6	16.7	14.0	53.1	11.5	100.0
2015	2.3	7.1	11.5	16.2	51.1	11.8	100.0
2016	0.3	3.1	15.6	17.2	53.0	10.8	100.0
2017	1.2	2.1	16.5	17.1	52.9	10.3	100.0
2018	1.0	5.6	13.2	16.4	53.7	10.2	100.0
2019	1.9	0.9	16.9	15.3	57.1	8.0	100.0
2022	1.1	1.8	14.6	16.2	59.7	6.6	100.0
2023	2.3	2.0	12.9	15.1	60.2	7.6	100.0

&lt;표 3-17&gt; 사회계층(Latent Class) 비율 추이 - 15세이상 전체 인구

	고자산층	고소득층	대기업중상층	고학력중상층	일반노동계층	최하위층	실업자	비경활	전체
1998	0.5	3.2	6.4	9.3	20.9	7.9	7.6	44.1	100.0
1999	0.2	1.3	8.2	6.3	28.0	8.3	3.7	44.1	100.0
2002	0.4	0.5	8.1	7.5	28.6	8.8	1.8	44.2	100.0
2004	0.3	1.4	9.7	7.1	27.2	7.7	2.4	44.2	100.0
2005	0.3	1.4	10.1	7.1	26.7	7.2	2.6	44.8	100.0
2007	0.5	0.8	10.9	7.3	26.3	7.0	2.0	45.2	100.0
2008	1.1	3.2	7.6	7.8	26.3	7.1	1.5	45.4	100.0
2009	0.1	1.0	9.0	9.0	27.3	6.8	2.1	44.8	100.0
2014	0.1	2.6	9.4	7.8	29.8	6.5	1.4	42.6	100.0
2015	1.2	3.9	6.3	8.8	27.8	6.4	1.1	44.4	100.0
2016	0.2	1.7	8.6	9.6	29.4	6.0	1.1	43.4	100.0
2017	0.6	1.2	9.2	9.5	29.5	5.8	1.4	42.8	100.0
2018	0.6	3.2	7.5	9.2	30.4	5.7	1.3	42.2	100.0
2019	1.1	0.5	9.3	8.4	31.5	4.4	2.0	42.8	100.0
2022	0.6	1.0	8.1	8.9	32.9	3.6	0.9	44.0	100.0
2023	1.3	1.1	7.1	8.3	32.9	4.2	1.0	4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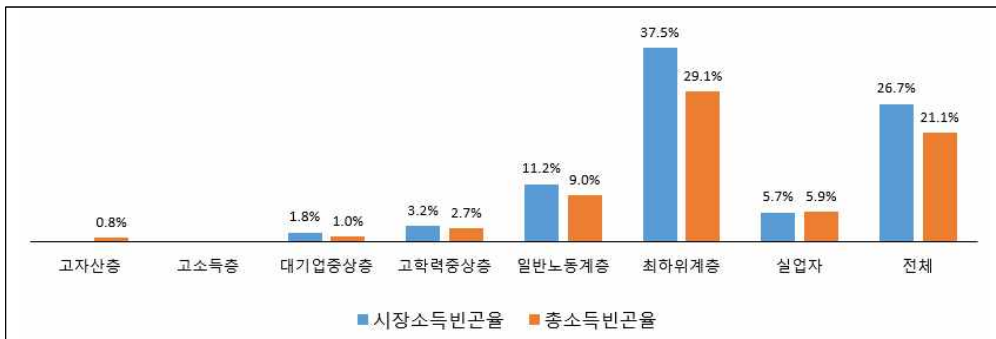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계층분류는 각각의 집단이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기 때

문에 임계값에 따른 경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며 해당 영역을 포함해서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는 확률값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취업자의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최하위층 비중이 줄고 불평등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LCA 분석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된 최하위층은 고령자이면서 낮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자산도 매우 낮은 가난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취업자 가운데 가장 빈곤위험에 몰려 있는 집단에 해당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빈곤가구에 속한 인구 비율<sup>41)</sup>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8%이고 총소득 기준으로는 8.2%인데, 최하위계층의 빈곤율은 각각 37.5%, 29.1%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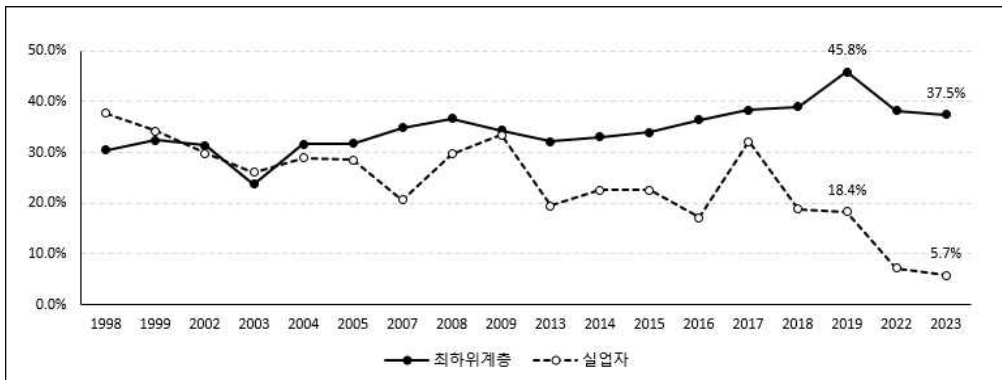
<그림 3-13> 6개 계층 빈곤율(2023)



특히 과거에는 최하위계층의 빈곤율이 실업자의 빈곤율보다 낮았으나 지금은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의 인상 등으로 실업자의 빈곤율은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지만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 계층의 빈곤율이 실업자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고 더 심화되는 상태에 있다.

41) 상대빈곤율로 정의되며,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빈곤가구에 해당한다.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이 상대빈곤율이 된다.

<그림 3-14> 최하위계층 vs. 실업자 빈곤율 추이



이하에서의 LCA 계층분류에 의한 사회계층별 특성과 계층간 격차 등의 비교분석은 사전적 정의에 의한 두 번째 계층분류까지 완료한 이후 함께 비교분석할 것이다.



## 2. 사전적 정의에 의한 계층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앞 장에서 설명한대로 사전에 정의된 분류 기준에 따라 취업자를 다섯 개의 계층(자본가·고용주, 구중간계층, 신중간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으로 구분하는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분류기준을 다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가·고용주계층 : 5인 이상 고용주와 민간 및 공기업의 고위임원
- 구중간계층 : 5인 미만 고용주와 1인 자영업자
- 신중간계층 : 임금노동자이지만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 + 대졸 이상 정규직 사무직
- 전통노동계층 : 대졸 미만 또는 비정규직인 사무직, 서비스/판매/제조/단순노무 직업의 정규직
- 불안정노동계층 : 관리직/전문직/사무직이 아닌 서비스/판매/제조/단순노무직인 비정규직

이 방식은 고용상 지위와 직업,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 내 권력과 지위, 그리고 경제적 특성에 기반하여 계층을 구분하는 실증전략에 따른 것으로, 고정된 이론적 계급 모형을 전제하거나 특정의 이념적 분석틀을 따르기보다는, 한국 노동시장 현실에 맞춰 조정된 분류 체계에 가깝다. 이와 함께 복잡한 통계적 모델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연도와 자료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한국노동패널(1998~2023)의 모든 취업자 표본에 대해 계층을 할당한 다음, 가장 최근에 추가된 신규표본까지 포함하는 ‘18통합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시한 ‘2023년 기준 5계층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취업자 5계층 분류 결과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고용주와 고위임원으로 정의된 ‘자본가·고용주’ 계층은 27만 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714만 3천명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와 1인 자영업자로 구성되는 ‘구중간계층’은 603만 3천명으로 22.2%를 차지했다. 이어 관리직과 전문직, 그리고 대졸 이상 정규직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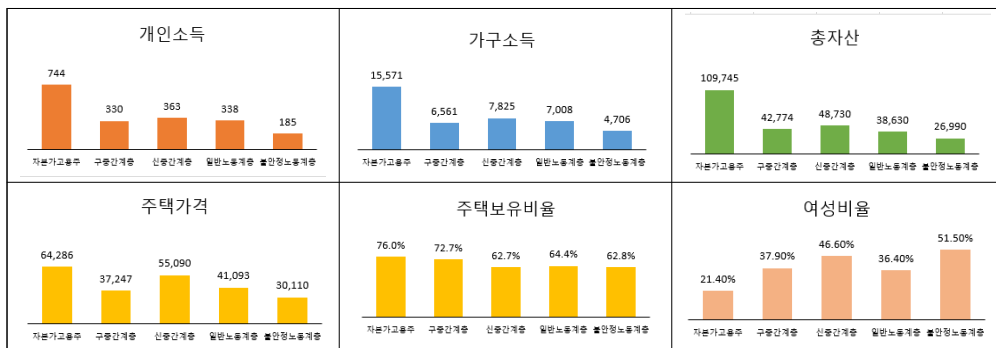
직이 포함되는 ‘신중단계층’은 597만 6천명으로 22.0%를 차지해 구중단계층과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다음으로 블루칼라 정규직 노동자와 사무직 가운데 고졸이하 또는 비정규직이 포함되는 가장 규모가 큰 일반노동계층은 982만 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6.2%를 차지했다. 끝으로 블루칼라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는 ‘불안정노동계층’은 503만 8천명의 전체 취업자의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2)</sup>

<표 3-18> 사전 정의에 의한 5계층 분류 결과 - 취업자

	자본가고용주	구중단계층	신중단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전체
인원수	272	6,033	5,976	9,824	5,038	27,143
구성비(%)	1.0%	22.2%	22.0%	36.2%	18.6%	100.0%
개인소득(월)	744	330	363	338	185	317
가구소득(년)	15,571	6,561	7,825	7,008	4,706	6,734
총자산	109,745	42,774	48,730	38,630	26,990	40,219
주택가격	64,286	37,247	55,090	41,093	30,110	41,245
직업지위지수	44.3	34.6	58.4	38.0	28.7	40.1
종업원수	11.3	2.0	151.3	402.9	25.2	195.0
평균연령	53.6	55.4	41.2	43.7	54.2	47.8
여성비율	21.4%	37.9%	46.6%	36.4%	51.5%	41.6%
주택소유비율	76.0%	72.7%	62.7%	64.4%	62.8%	65.7%

자본가·고용주계층은 개인소득(월 744만원)과 가구소득(연간 1억 5,571만원), 총자산(10억 9,475만원)에서 모두 다른 계층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그림 3-15> 5계층 주요 지표 비교



42) 취업자 외에는 실업자가 48만 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838만 1천명으로 15세이상 전체 인구는 4,600만 7천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들의 뒤를 이은 것은 신중관계층으로 개인소득은 363만원, 가구소득은 7,825만원, 총자산은 4억 8,730만원의 수준을 나타냈다. 구중관계층은 사업체가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총자산에서는 4.3억원으로 일반노동계층을 앞섰으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서는 노동계층보다 낮은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일반노동계층은 개인소득은 338만원, 가구소득은 7,008만원, 총자산은 3.9억원의 평균분포를 보였다.

끝으로 불안정노동계층은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를 나타냈다. 개인소득은 185만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월액 201만원(시간당 9,620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구소득과 총자산 역시 4,706만원과 2.7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노동계층에 비해 불안정노동계층의 개인소득은 55%, 가구소득은 67%, 총자산은 70% 수준에 그쳤다.

불안정노동계층의 평균연령이 54.2세로 자본가·고용주(53.6세), 구중관계층(55.4세)과 함께 고령자들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0세 미만 취업자로 제한할 경우 불안정노동계층의 열악한 지위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60세미만의 5계층 분포를 보면 불안정노동계층은 개인소득이 212만원으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가구소득은 5,482만원으로 증가하지만 다른 계층들도 그 이상 소득이 증가한다. 총자산은 오히려 2.7억에서 2.5억으로 감소하고 주택소유비율은 62.8%에서 54.2%로 최하위가 된다. 한편 6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자영업자인 구중관계층이 일반노동계층보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더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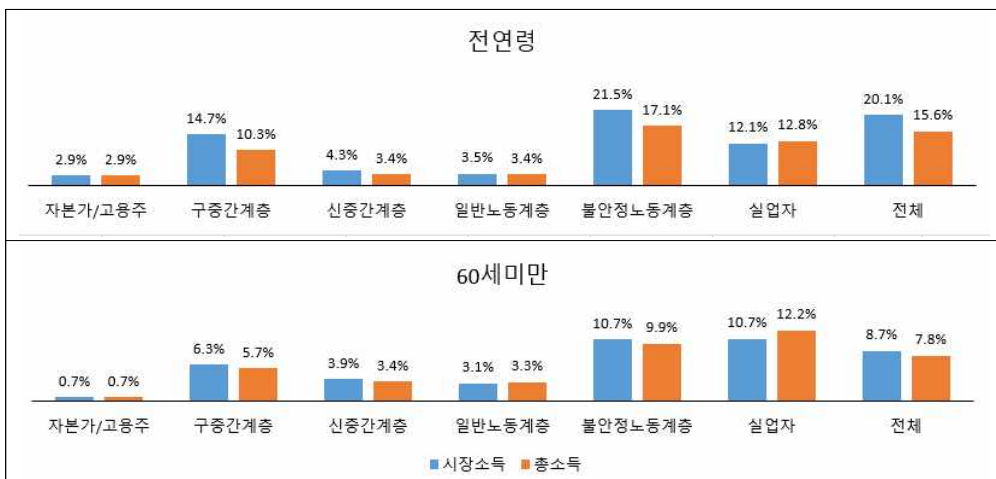
<표 3-19> 사전 정의에 의한 5계층 분류 결과 - 취업자(60세미만)

	자본가·고용주	구중관계층	신중관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전체
인원수(천명)	191	3,638	5,535	8,906	2,802	21,072
구성비(%)	0.9%	17.3%	26.3%	42.3%	13.3%	100.0%
개인소득(월)	758	386	363	344	212	341
가구소득(년)	16,630	7,255	7,751	7,065	5,482	7,157
총자산	111,437	42,605	46,756	38,628	25,071	40,333
주택가격	64,728	42,529	54,183	41,856	32,674	44,398
직업지위지수	43.3	38.4	58.1	38.5	30.9	42.7
종업원수	10.9	2.0	160.3	414.3	28.8	219.0
평균연령	48.9	47.4	39.4	41.6	43.5	42.7
여성비율	24.3%	38.5%	48.7%	36.1%	49.2%	41.5%
주택소유비율	71.5%	63.9%	61.2%	62.9%	54.2%	61.6%

이렇게 볼 때 불안정노동계층은 계층분류 전단계에서 일반노동계층과 동일한 계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지위지수가 고령자를 포함했을 때는 일반노동계층에 비해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고령자를 제외해도 8점 가까이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별도의 계층으로 봐야할 필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빈곤율을 확인해보면 2023년 모든 연령대의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 총소득 기준으로는 15.6%에 이르는데, 불안정노동계층의 빈곤율은 각각 21.5%, 17.1%에 이른다. 취업인구의 실업자의 빈곤율 12%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있고 정부가 지급하는 재분배소득을 포함하더라도 매우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빈곤위험이 매우 높은 고령자를 제외하더라도 불안정노동계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시장소득 기준 10.7%, 총소득 기준 9.9%로 실업자(10.7%, 12.2%)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것은 불안정노동계층이 취업자인 것만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으로 이들을 일반적인 노동계층의 범주로 보기보다는 별도의 최하위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림 3-16> 5계층 및 실업자 상대빈곤율(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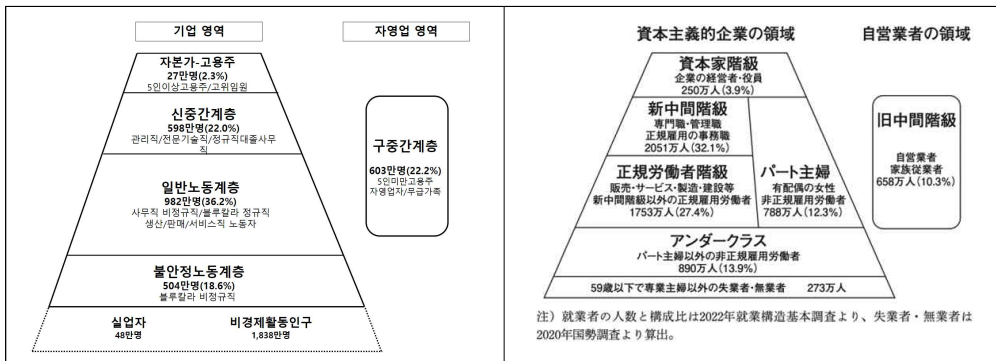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계층분류 결과를 일본의 하시모토(2025)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과 비교하면 Savage(2013)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노동계급 외에 하위의 계층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sup>43)</sup>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이번 5계층 분류 결과와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자본가계급이 3.9%로 약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한국에서는 2.3%로 그보다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중간계층의 경우 일본에서는 과거 수십년 동안 많이 축소되어온 과정을 거쳐 2022년 현재 10.3% 수준이지만 한국은 과거 30% 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현재 22.2%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도 구중간계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계층인 점은 동일하다. 한국은 일반노동계층이 36.2%로 일본(27.4%)보다 더 많고 불안정노동계층은 18.6%로 일본의 언더클래스(13.9%)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17> 한국과 일본의 5계층 분포 비교



- 43) 하지만 하시모토의 경우 ‘파트주부’라는 별도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독자계급이 계층으로 분류하지 않고 가구주의 계층 귀속을 따른다고 보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젠더차별이 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동일한 조건에 있는 취업자를 독자적인 계층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103만엔의 벽’이라고 해서 연간 103만엔을 넘지 않을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가구의 보조소득원으로서 주부들의 경제활동이 단시간·단기 취업의 형태를 띠는 매우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은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성 비정규직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이와 함께 하시모토는 사무직의 경우 - 대졸이 아닌 경우에도 - 남자이고 정규직이면 모두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하고 여성은 모두 일반노동계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졸 정규직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하고, 고졸인 경우에는 일반 노동계층으로 분류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일본에서 12.3%를 차지하는 ‘주부파트’가 한국에서는 상당수 불안정노동계층으로 포함되고 일부는 일반노동계층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시모토의 분류에서 고졸 사무직 모두가 신중간계층으로 분류되어 일본은 신중간계층이 32.1%에 이르지만 한국은 일반노동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2.0% 수준으로 일본보다 낮다.

## (2) 5계층 비중 추이

사전적 정의 방식에서는 통계적 모델에 의한 분류와 달리 노동패널의 모든 표본에 대해 계층할당이 가능하다. 다만, 표본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해서 분석해야 한다. 우선 가장 긴 시계열의 ‘98년통합표본’의 5계층 비중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3-30>이다. 이 때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서 가장 최근 2023년 기준 각 계층별 비중과 수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998년 이후 2023년까지 25년 동안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구중간계층의 지속적이고 빠른 감소 추세와 더불어 신중간계층의 급격한 증가 추세이다. 특히 두 계층간의 비중은 2022년 시점부터 역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1998년 전체 취업자의 35.6%를 차지하던 구중간계층은 2023년에 22.7%로 -12.9%p 감소했고, 대신 14.8%를 차지하던 신중간계층은 22.8%로 8.0%p가 늘었다. 이와 함께 25년 전 12.9%를 차지하던 불안정노동계층의 비중도 2023년 19.0%로 6.1%p나 증가했다. 일반노동계층의 비중이 과거에도 34.9%, 현재도 34.4%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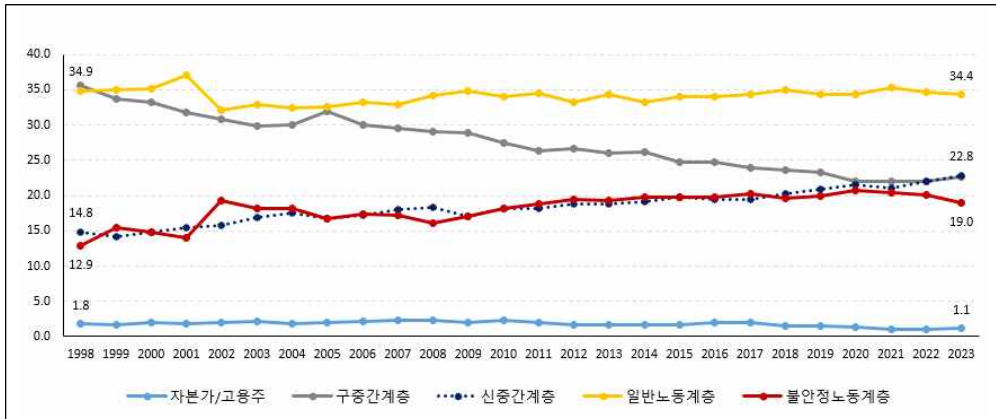
4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1998년 당시 15세이상 인구는 3,535만명이었고 고용률은 56.4% 수준이었으며, 2023년 현재 인구는 4,541만명 고용률은 62.6%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994만명에서 2,842만명으로 848만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취업자 수 848만명에는 인구 증가와 고용률 증가의 효과 두 가지가 모두 반영된 것인데, 인구증가에 의한 효과는 630만명(현재 취업자수 - (과거 인구 × 현재 고용률)), 고용률 증가에 의한 효과는 280만명(현재 취업자수 - (현재 인구 × 과거 고용률)) 규모로 각각 추산된다. 같은 방법으로 신중간계층과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하는 취업자 비중이 예전 비율을 유지했을 경우 예상되는 인원대비 초과로 더 증가한 취업자는 신중간계층이 +227만명, 불안정노동계층이 +173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lt;표 3-20&gt; 5계층 비율 추이 - 취업자

	자본가·고용주	구중간계층	신중간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취업자전체
1998	1.8	35.6	14.8	34.9	12.9	100.0
1999	1.7	33.8	14.2	35.0	15.4	100.0
2000	2.1	33.2	14.8	35.2	14.8	100.0
2001	1.9	31.7	15.4	37.0	14.0	100.0
2002	1.9	30.9	15.8	32.1	19.3	100.0
2003	2.1	29.8	16.9	32.9	18.2	100.0
2004	1.9	30.1	17.5	32.4	18.1	100.0
2005	2.0	31.9	16.7	32.7	16.8	100.0
2006	2.2	30.0	17.3	33.2	17.3	100.0
2007	2.3	29.6	18.0	32.9	17.3	100.0
2008	2.4	29.0	18.4	34.2	16.1	100.0
2009	2.1	28.9	17.1	34.8	17.1	100.0
2010	2.3	27.4	18.2	34.1	18.1	100.0
2011	2.1	26.4	18.2	34.5	18.9	100.0
2012	1.7	26.7	18.8	33.2	19.5	100.0
2013	1.6	26.0	18.8	34.3	19.3	100.0
2014	1.7	26.1	19.1	33.2	19.8	100.0
2015	1.6	24.8	19.8	34.1	19.7	100.0
2016	2.0	24.7	19.4	34.1	19.7	100.0
2017	2.0	24.0	19.4	34.4	20.2	100.0
2018	1.6	23.6	20.2	35.0	19.6	100.0
2019	1.4	23.4	20.9	34.4	19.9	100.0
2020	1.3	22.1	21.5	34.4	20.8	100.0
2021	1.1	22.1	21.1	35.3	20.5	100.0
2022	1.1	22.0	22.1	34.6	20.2	100.0
2023	1.1	22.7	22.8	34.4	19.0	100.0

지난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도화에 따라 반자율적인 화이트칼라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저숙련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숙련화와 탈숙련화가 양방향으로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lt;그림 3-18&gt; 사회계층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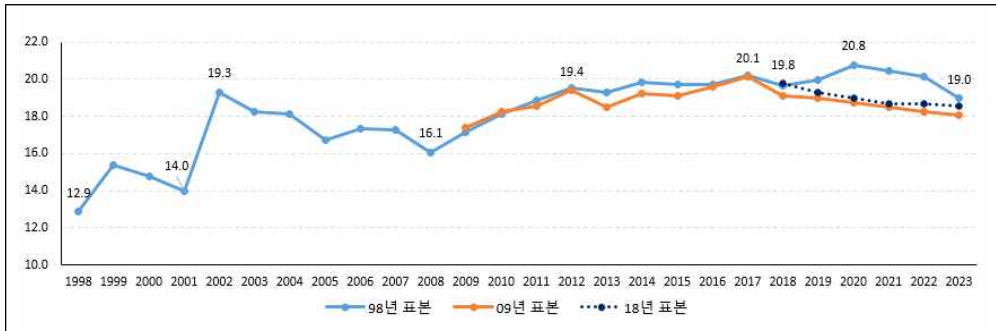


불안정노동계층의 비중은 분류도식의 정의상 블루칼라 비정규직의 증가 또는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고려해서 이 계층의 비중 변화를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감원과 이후 비정규직의 대체 고용이 확대되면서 2002년까지 불안정노동계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후 2008년까지는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비정규직 입법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축소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권교체 등의 상황에서 다시 불안정노동계층은 다시 증가했고 이후 2017년 20.2%로 최고 정점을 기록하게 된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불안정노동계층의 비중 변화는 노동패널의 표본에 따라 약간 상이한 추이를 보이기도 한다. 98년통합표본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시 늘어난 뒤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09년통합표본과 18년통합표본에서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규표본의 정확도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8년 이후 불안정노동계층의 확대는 주춤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상 역시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둔화에 따른 블루칼라 비정규직의 고용 축소에 따른 비중 감소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만은 어려운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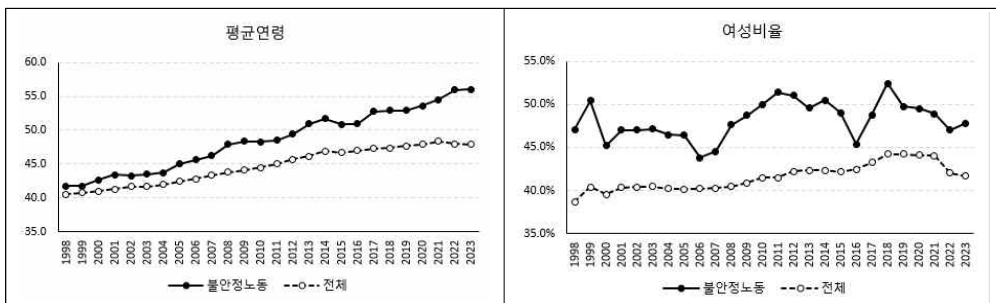


&lt;그림 3-19&gt; 노동패널 표본별 불안정노동계층 비중 변화



고령자의 취업이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불안정노동계층의 평균연령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에서의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불안정노동계층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은 그동안 증가와 감소의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2018년 52%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lt;그림 3-20&gt; 불안정노동계층 평균연령과 여성비율



### 3. 사회계층 분류 결과 평가

#### 1) 분류 체계간 일치도 및 타당도 검증

두 가지 방식에 의한 사회계층 분류 결과는 기존의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취업자 분류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아래의 <표 3-21>, <표 3-22>, <표 3-23>은 기존의 분류법과 새로운 사회계층 분류 결과를 각각 교차표로 비교하고, 카이제곱 검정과 Cramer's V를 산출한 결과이다. 카이제곱 통계량은 두 변수의 분포가 서로 독립적인지 여부를 검정하는 지표로서 p값이 0.001보다 작을 경우 두 분류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Cramer's V는 0~1 범위의 값으로 변수간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표 3-21>을 보면 LCA 분석에 따른 6계층 분류에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는 일반노동계층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속하게 되지만 26%는 대기업중상층으로 구분되고 고학력중상층에도 18%가 포함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규직 중에서 최하위계층으로는 분류된 비율은 2% 이하에 그쳤다. 비정규직은 일반노동계층에 66%가 속했지만 최하위계층으로도 19%가 분류되었고, 고학력중상층과 대기업중상층에도 6~7%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고용형태만으로 비정규직을 구분할 경우 내부의 상당한 이질성이 간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카이제곱 통계량(1,688.48,  $p < 0.001$ )과 크래머V 수치(0.2842)는 두 분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만 관계의 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21> 종사상지위/고용형태 vs. LCA 6계층 비교 - 취업자

	고자산층	고소득층	대기업중상층	고학력중상층	일반노동계층	최하위계층	합계
정규직	1.9	1.5	26.3	17.7	51.1	1.6 (8.3)	100.0
비정규직	0.9	0.6	6.7	7.6	65.8	18.5 (49.0)	100.0
고용주	6.6	11.5	0.5	20.5	56.7	4.2 (2.7)	100.0
자영업자	1.9	1.0	0.0	9.3	66.9	21.0 (40.0)	100.0
합계	1.9	1.8	15.0	13.8	58.0	9.5 (100.0)	100.0

$\chi^2(df = 15) = 1,688.48$  ( $p < 0.001$ ) Cramér's V = 0.2842. \*( )는 최하위계층 내에서의 비율

기존 분류를 사전정의에 따른 5계층 분류와 비교해보면 좀 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새로운 계층분류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는 68%가 일반노동계층에 속했지만 신중간계층으로도 32%가 분류되었으며, 비정규직은 불안정노동계층에 78%가 속하면서 신중간계층으로 15%가 분류되고 7.3%만 일반노동계층에 포함되는 결과를 보였다. 5계층 분류 방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부의 이질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분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5계층 분류 결과는 카이제곱 검정과 크레만V 값에서 이전 종사상지위 분류와 상관관계(0.7884)가 매우 높으면서도 체계적인 관련성( $p < 0.001$ )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표 3-22> 종사상지위/고용형태 vs. 사전정의 5계층 비교 - 취업자

	자본가/고용주	구중간계층	신중간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합계
정규직			32.0	68.0		100.0
비정규직			14.6	7.3	78.1 (100.0)	100.0
고용주	18.7	81.3				100.0
자영업자		100.0				100.0

$\chi^2(df = 12) = 24392.36$  ( $p < 0.001$ ) Cramer's  $V = 0.7884$  \* ( )는 불안노동계층 내에서의 비율

끝으로 새로운 계층분류 방식으로 생성된 두 가지 변수끼리 비교한 <표-3-23>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사전정의 방식의 5계층 분류 기준에서 불안정노동계층으로 분류된 계층은 LCA 계층분류에서 일반노동계층에 70%가 속했지만 최하위계층에도 25%가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가운데 대기업중상층(5%)이나 고자산층(0.7%), 고소득층(0.2%), 고학력중상층(0.4%)의 비율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LCA 계층분류의 최하위계층이 매우 협소하게 분류된 계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신중간계층의 경우에는 고학력중상층에 39%가 분포하고 대기업중상층에도 26%가 분류돼 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중심의 화이트칼라 계층으로서의 특성이 잘 포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전정의 방식의 5계층 분류에서 일반노동계층(정규직 중심)은 LCA 방식 계층분류에서 일반노동계층에 63%가 속하면서도 대기업중상층

24%, 고학력중상층 8%로 다양한 특성이 내재돼 있음을 드러냈다. 일반노동계층이 갖는 포괄성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구중간계층은 일반노동계층에 66%가 속하면서도 최하위계층에 18%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자산층과 고소득층 내부의 구성 비율에서도 각각 30%와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분산을 가지면서도 고자산, 고소득층이 여전히 상당히 포함된 계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가고용주계층도 LCA 분류에서는 일반노동계층(33%)에도 속하고 고소득층(31%)과 고자산층(14%)으로도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지위에서 1인이상 고용주인 집단보다 상위계층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냈다.

LCA 6계층이 사전정의 방식 5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면 사전정의 방식 계층분류의 장점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서는 구중간계층이 가장 많고(27%), 고학력중상층에는 신중간계층이 가장 많으며(58%), 최하위계층에서는 불안정노동계층(4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전정의 방식에 의한 5계층 분류 결과가 각 계층의 특성과 핵심을 상대적으로 더 잘 드러내는 분류 결과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표 3-23> LCA 6계층 vs. 사전정의 5계층 비교 - 취업자

	고자산층	고소득층	대기업 중상층	고학력 중상층	일반 노동계층	최하위 계층	합계
자본가/고용주	13.8 (8.9)	31.0 (21.8)	2.3 (0.2)	19.5 (1.8)	33.3 (0.7)	- -	100.0 (1.2)
구중간계층	2.5 (29.6)	2.1 (27.4)	0.0 0.0	11.7 (19.5)	66.0 (26.1)	17.7 (42.7)	100.0 (23.0)
신중간계층	2.3 (24.4)	2.3 (25.8)	25.9 (35.3)	38.7 (57.5)	30.5 (10.7)	0.2 (0.5)	100.0 (20.4)
일반노동계층	1.6 (30.4)	1.1 (22.6)	24.1 (58.6)	7.8 (20.8)	63.2 (39.7)	2.1 (8.0)	100.0 (36.4)
불안정노동계층	0.7 (6.7)	0.2 (2.4)	4.6 (5.8)	0.4 (0.5)	69.6 (22.7)	24.5 (48.9)	100.0 (19.0)
합계	1.9 (100.0)	1.8 (100.0)	15.0 (100.0)	13.8 (100.0)	58.0 (100.0)	9.5 (100.0)	100.0 (100.0)

$\chi^2(df = 20) = 2975.95$  ( $p < 0.001$ ) Cramér's  $V = 0.3268$ . \*( )는 LCA 계층 내에서의 비율

결론적으로 사전정의에 의한 5계층 분류 결과는,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보다 집단간 이질성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며, LCA 계층 분류가 안고 있는 불안정성(연도별 차이)과 불명확성(일반노동계층 비율 58%)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분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LCA 계층분류 방법은, 다년도의 패널자료에 적용할 경우 독립불안정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회계층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사전정의 방식으로 분류한 계층 내부의 이질적인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때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언더클래스(underclass)의 복지수급 유형화를 시도한 Cumberworth(2017)의 연구에서 언더클래스 계층의 정의와 분류는 고용상 지위와 빈곤 여부를 사용하면서도 언더클래스의 하위 유형을 나눌 때 잠재계층분석(LCA)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한 예가 있다.<sup>45)</sup>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방식의 혼합적인 사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계층분류 결과와 주관적 계층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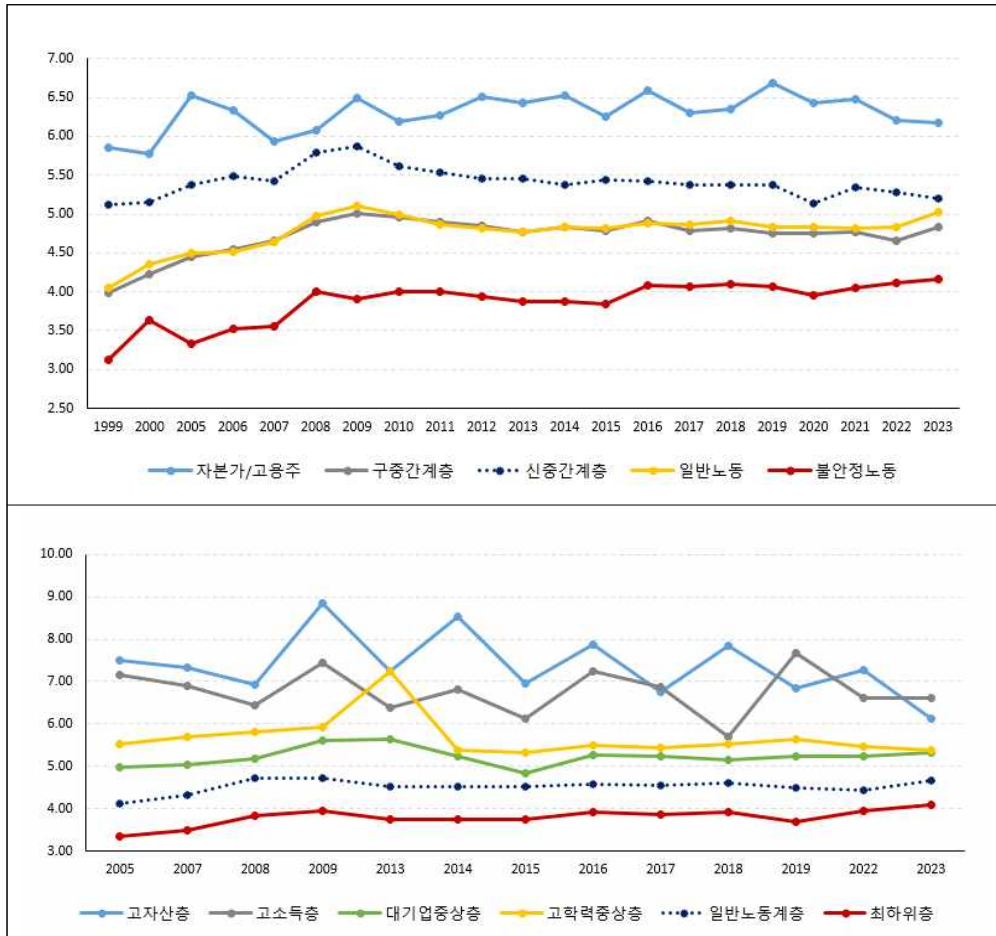
사전정의 방식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한 사회계층 분류결과를 노동패널의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와 비교해보면 이번 연구에서의 계층분류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모든 가구원에 대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간을 나눠 ‘상상’에서부터 ‘하하’까지 6가지 단계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연속형 점수로 계산하여 사회계층과 비교한 결과가 <그림 3-21>에 나타나 있다.<sup>46)</sup> 결과를 보면 사전정의 방식에 의한 5계층 분류결과는 본인들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과 거의 비례적으로 조응하고 있다.

45) Cumberworth, E. (2017). The underclass and the American class structure [STANFORD UNIVERSITY].

46) 1부터 11까지 2점 구간으로 할당하면 6개의 선택지와 균등할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t;그림 3-21&gt; 계층분류 결과와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 비교



사람들이 응답한 결과는 대체로 하향선택을 하고 있는데 고용주계층은 평균 6점대 수준으로 ‘중상’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신중간계층은 ‘중상’에 가까운 ‘중하’의 선택비율이 높으며, 구중간계급과 일반노동계층은 중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노동계층은 ‘하상’에 가까운 ‘중하’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분류한 사회계층은 주관적 계층인식에 서열과 의미상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통계적 추정에 의한 LCA 계층분류 결과도 주관적 계층인식 수준과 동일한 서열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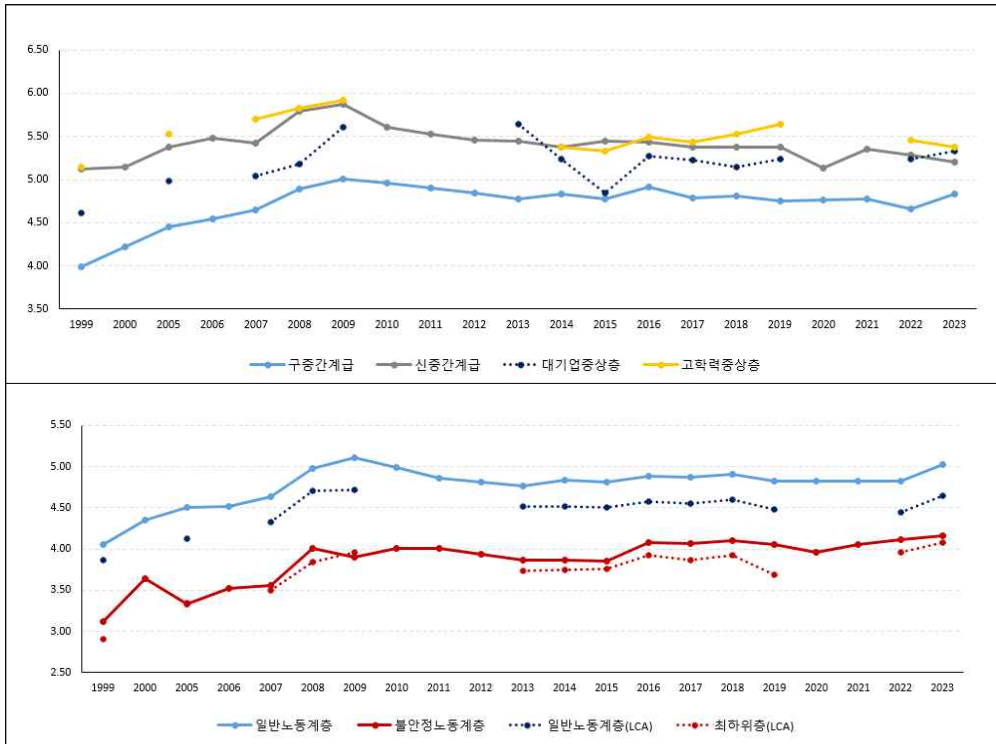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구중간계급과 일반노동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2016년 이후 일반노동계층의 주관적 인식보다 구중간계급의 인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구중간계급의 소득과 자산 등 객관적 상황이 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에 비해 열위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상 지위와 직업, 고용형태로 구분한 사회계층과 통계적으로 추정된 LCA 계층간의 서열과 인식도 거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는 두 계층분류 기준에서 유사한 중상 정도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 대기업중상층과 고학력중상층의 주관적 지위 인식을 비교해보면 사전분류 방식의 신중간계급과 통계적으로 분류한 고학력중상층이 거의 같은 수준의 주관적 인식을 보여주며, 대기업중상층은 그보다 약간 아래의 지위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상당히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중간계급은 이들에 비해 뚜렷하게 하위의 지위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간의 상대적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계층으로 들어가보면, 블루칼라 정규직을 주축으로 하는 ‘사전분류’ 일반노동계층이 대기업중상층과 구분된 LCA의 일반노동계층보다 약간 더 높은 지위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편 가장 열위에 있는 불안정노동계층은 화이트칼라와 정규직 중심의 일반노동계층에 비해 ‘1점 이상’의 지위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두 계층의 지위인식 변화 방향도 일치하며, 이러한 방향은 LCA 계층분류상의 일반노동계층과 최하위층의 인식변화 방향과도 동일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블루칼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분류된 불안정노동계층이 저소득-저자산 취업자를 중심으로 분류된 최하위층에 비해서는 약간 사회경제적 지위인식이 좀 더 상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2> 사전분류 vs. 통계적추정 주관적 계층인식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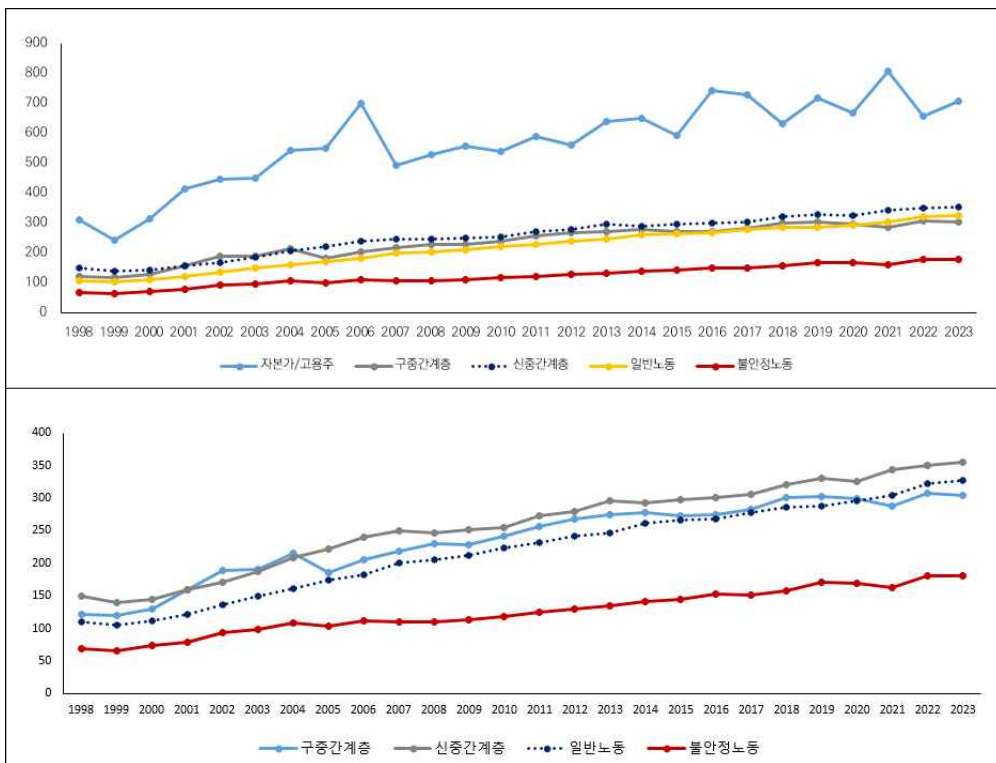


## 3) 계층간 소득과 자산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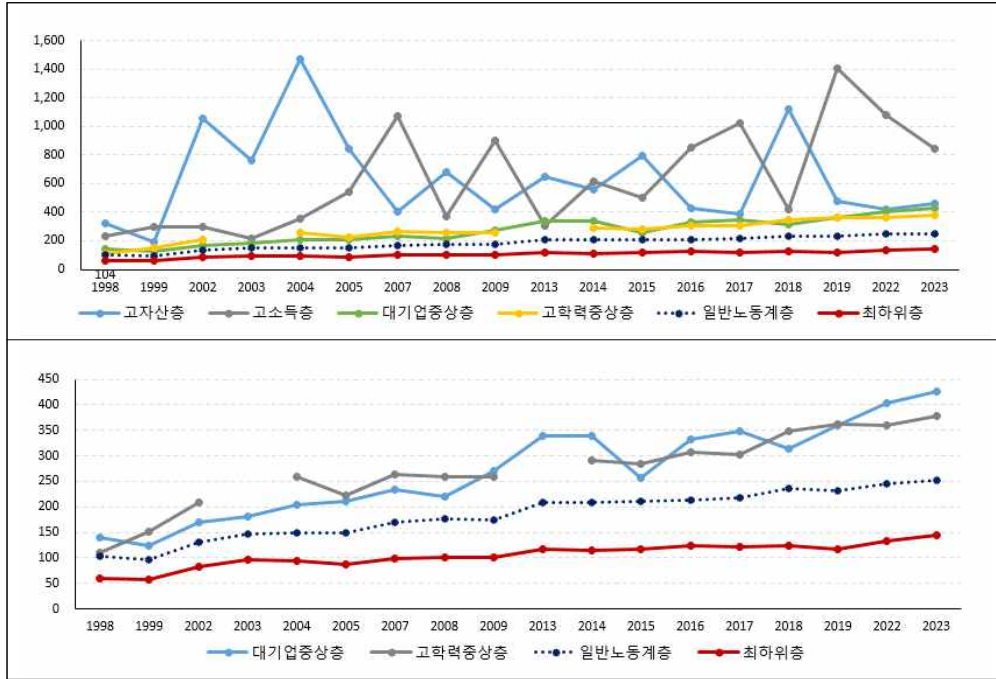
사회계층으로 분류한 집단간의 실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총자산의 분포와 함께 계층간의 격차의 수준과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밝힌대로 1998년 이후 25년간의 장기시계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98년통합표본’을 사용하였다.

먼저 개인소득을 보면 2023년 현재 평균소득은 305만원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고용주계층은 709만원, 신중간계층은 355만원, 일반노동계층은 327만원, 구중간계층은 304만원의 평균분포를 보인다. 불안정노동계층은 181만원으로 일반노동자계층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1998년 일반노동계층의 약 63% 수준이던 불안정노동계층의 상대수준으로 2007년 이후 50%대로 떨어졌고 그 후로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lt;그림 3-23&gt; 5개 계층별 개인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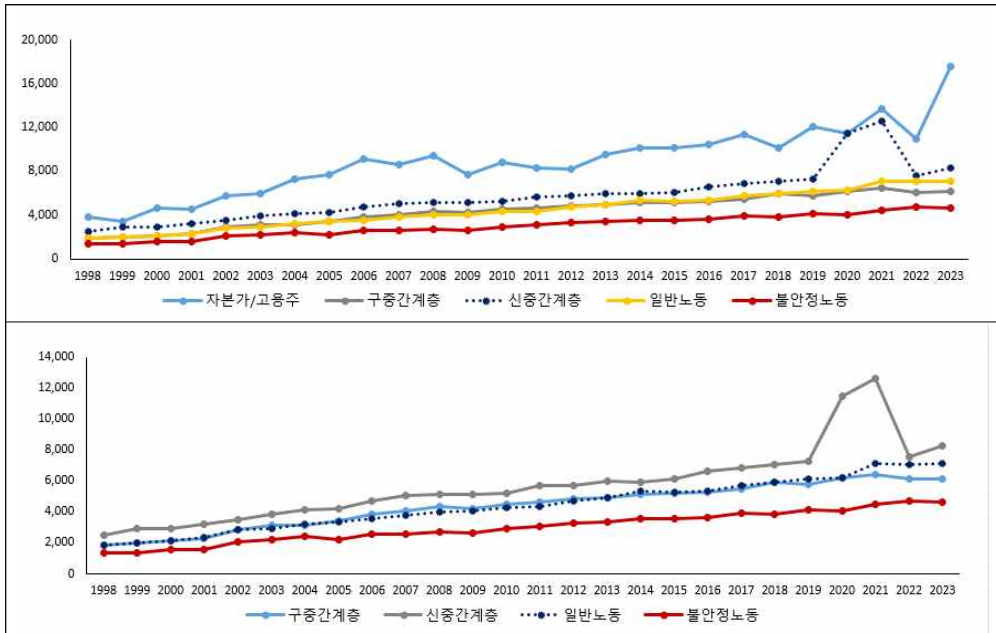
&lt;그림 3-24&gt; LCA 계층별 개인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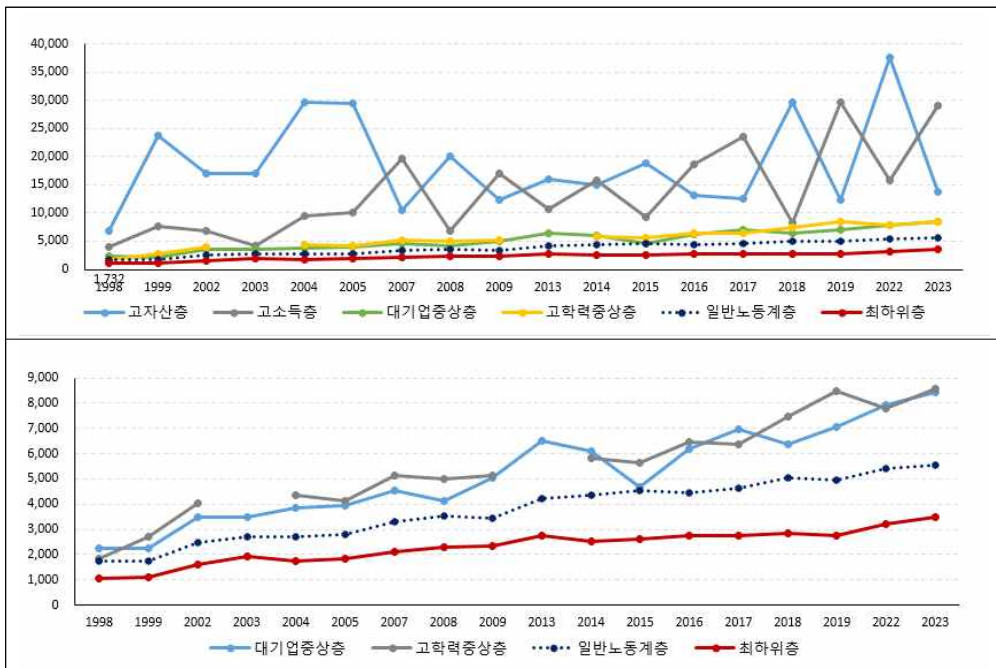
가구소득에서도 고용주계층이 1억 7천만원 이상인데 비해 신중간계층은 8천만원 대, 일반노동계층은 7천만원, 구중간계층은 6천만원 수준의 순차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비해 불안정노동계층은 4,643만원으로 일반노동계층에 비해 2,500만원 가까이 낮은 수준에 있다. 불안정노동계층의 상대소득은 25년 전 70% 수준에서 현재는 6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 이후로 고용주와 신중간계층의 소득은 큰 변동을 보이면서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일반노동계층의 가구소득이 팬데믹 시점 이후 뚜렷하게 자영업 구중간계층의 가구소득을 추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구중간계층의 가구소득은 2020년 6,400만원 수준에서 2023년 6,100만원으로 하락했는데, 일반노동자 가계도 평균소득이 감소 내지 정체(7,90만원 → 7,050만원)했으나 구중간층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최근 시점에 와서 정규직노동자 가구가 자영업가구를 소득면에서 추월했다고 할 수 있다.

&lt;그림 3-25&gt; 5개 계층별 가구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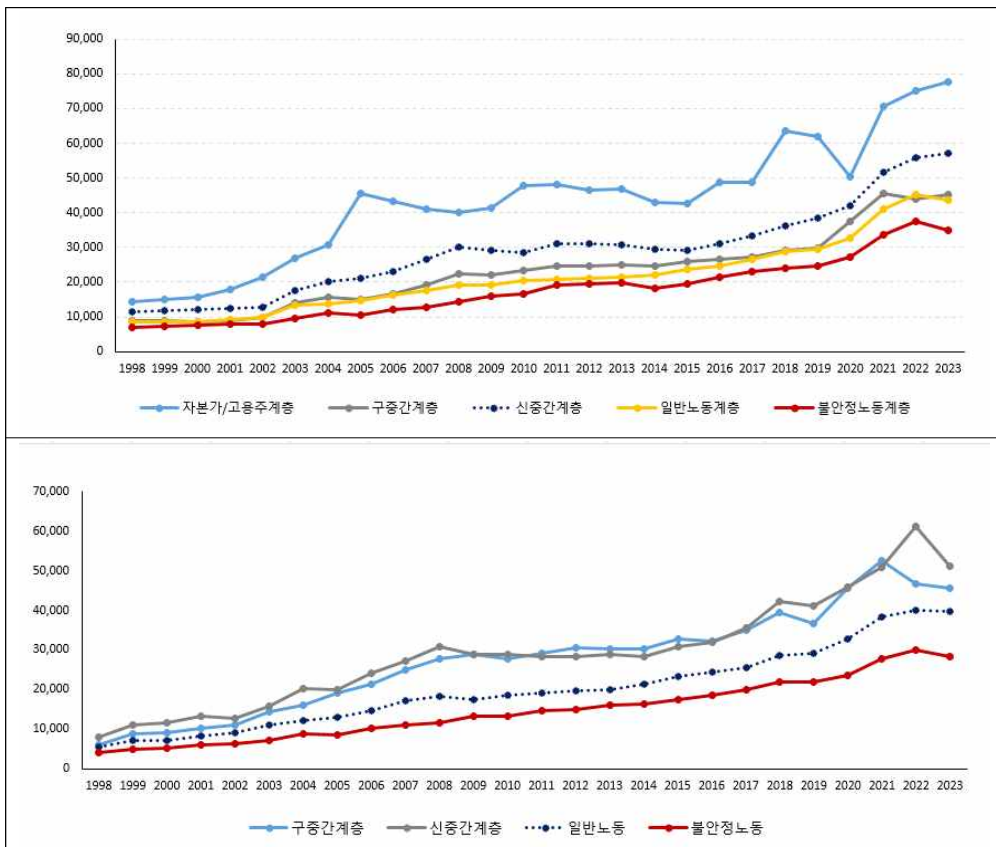
&lt;그림 3-26&gt; LCA 계층별 가구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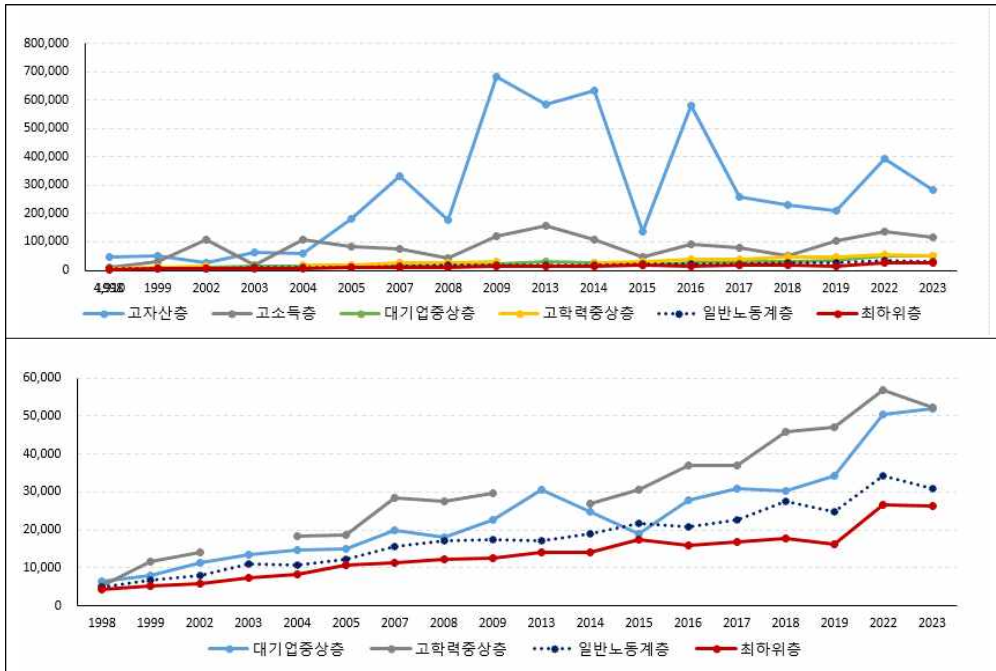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산불평등에 대해 평균 분포로 확인할 차례이다. 최근 가계자산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2018년 이후 총자산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이 3억원에서 4억원 초반으로 약 40% 이상 증가했는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금액 증가폭도 크고 상승률도 높다.

고용주계층은 평균 7억원에서 14억원으로 7억원이상 2배 이상 늘었고, 신중간계층은 3.5억원 증가, 노동계층은 2.5억원 증가했는데, 하층인 불안정노동층은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후반대로 1억원 가량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자산격차는 더욱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총자산액을 의미하는 자산소득·배율은 1998년 3.1배 수준에서 2022년 6.9배로 훨씬 배율 격차가 커지고 말았다. 취업소득의 상대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림 3-27> 5개 계층별 총자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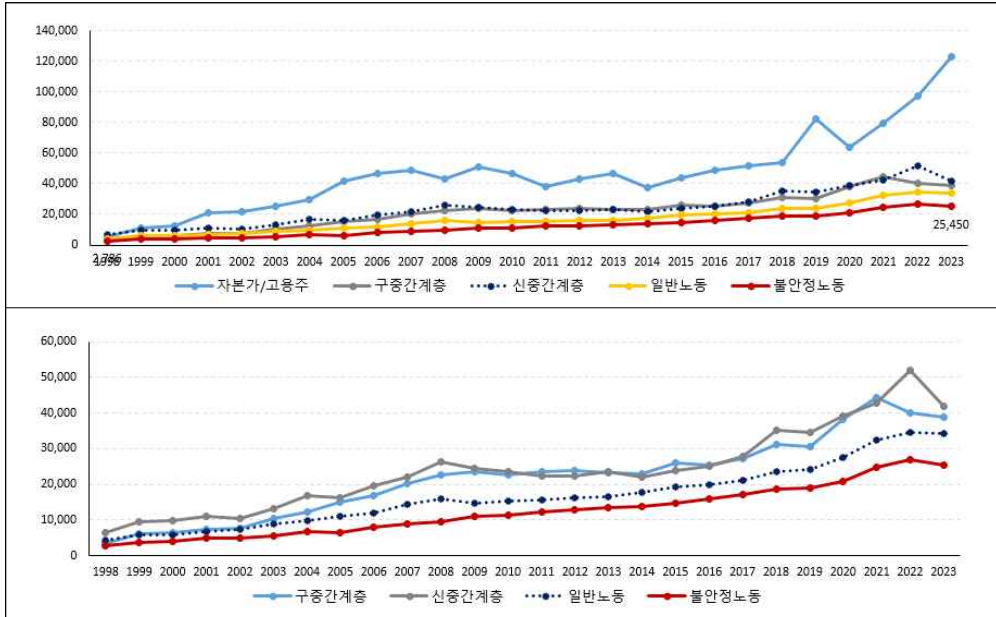
&lt;그림 3-28&gt; LCA 계층별 총자산 격차



그런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보면 총자산 증가액보다 순자산 증가액이 적고 증가율도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부채의 증가, 즉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증가를 실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이 많은 계층일수록 순자산과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계층간 순자산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자산이 많은 계층이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개인들은 2021~22년 자산 폭등기를 지나서 약간 후퇴하는 수축기를 겪었지만 가장 자산이 많은 고용주자본가계층은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자산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격차와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주계층을 제외하면 신중간층이 가장 큰 자산증가를 실현했는데 2008년 이전까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층이 신중간층보다 자산측면에서는 우위에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는 두 계층의 평균자산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변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신중간계층의 자산액이 확실히 구중간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lt;그림 3-29&gt; 5개 계층별 순자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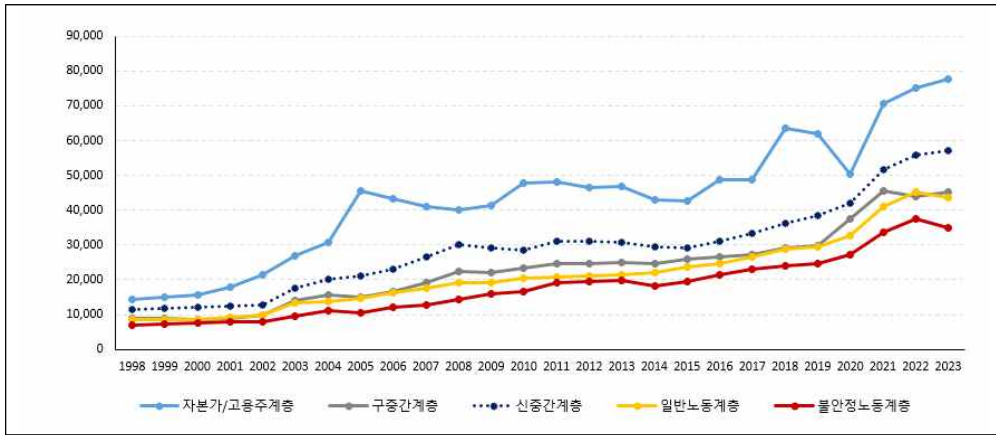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산의 증가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가격, 즉 집값 상승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총자산 증가액이나 증가율보다 주택시세 증가액과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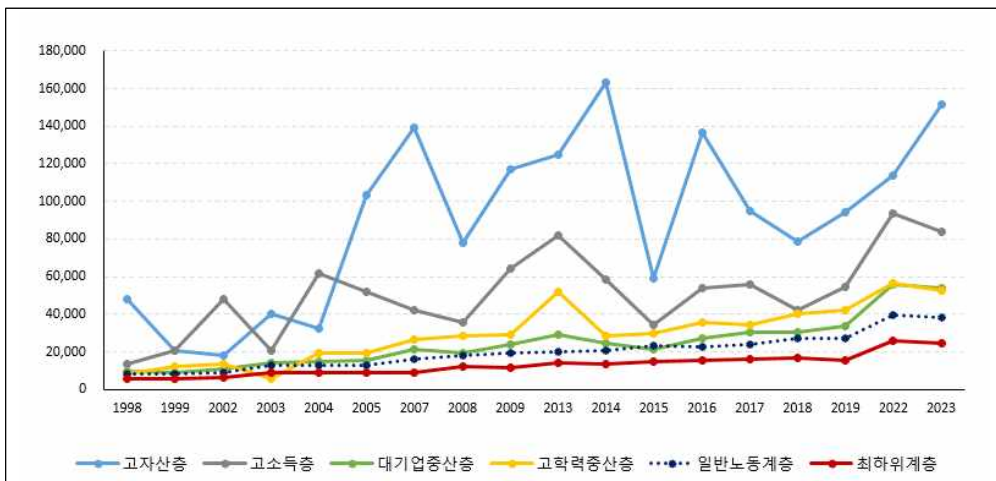
2018년 자가주택의 평균시세는 3억 183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억 6,083만원으로 1억 8천만원(64%) 이상 올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자산이 많은 고용주계층의 소유주택 시세는 6억원에서 8억 3천만원으로 증가했고, 불안정노동계층은 2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의 평균 증가액이 9,207만원이었고 순자산 증가액은 8,926만원이었는데 2배에 가까운 집값 상승이 있었던 것이다. 총자산액에 이미 소유주택 가격이 포함된 것이므로 총자산, 순자액을 훨씬 초과하는 집값은 결국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lt;그림 3-30&gt; 5개 계층별 주택가격 격차



&lt;그림 3-31&gt; LCA 계층별 주택가격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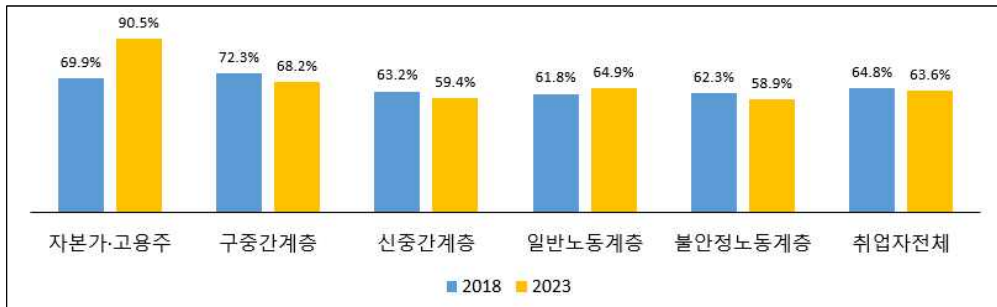


2023년 현재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가소유 비율은 63% 수준이다. 2018년 64%에서 자가보유 비율은 오히려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주자본가계층만 자가보유 비율이 상승했고 일반노동계층에서 3%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그 비율이 하락했다. 불안정노동계층의 자가보유 비율은 -3% 하락해서 59%로 떨어진 상태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명목상 자산액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소수 계층에 그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더 잃게 된 것이다.

&lt;표 3-24&gt; 2018~2023년 자산 증감액 및 주택관련 지표

		자본가·고용주	구중간계층	신중간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취업자전체
증감액 (만원)	총자산	71,988	6,048	8,954	11,085	6,458	9,207
	순자산	69,134	7,688	6,672	10,439	6,796	8,926
	주택가격	23,470	15,984	18,668	16,511	9,845	15,915
	금융자산	8,387	1,925	2,462	1,968	80	1,742
집값상승/순자산증가		68.0%	116.0%	129.4%	134.4%	137.9%	127.7%
자가비율(2018)		69.9%	72.3%	63.2%	61.8%	62.3%	64.8%
자가비율(2023)		90.5%	68.2%	59.4%	64.9%	58.9%	63.6%
자가비율 증감(%p)		20.6%	-4.1%	-3.8%	3.0%	-3.3%	-1.2%

&lt;그림 3-32&gt; 계층별 주택보유 비율 변화(201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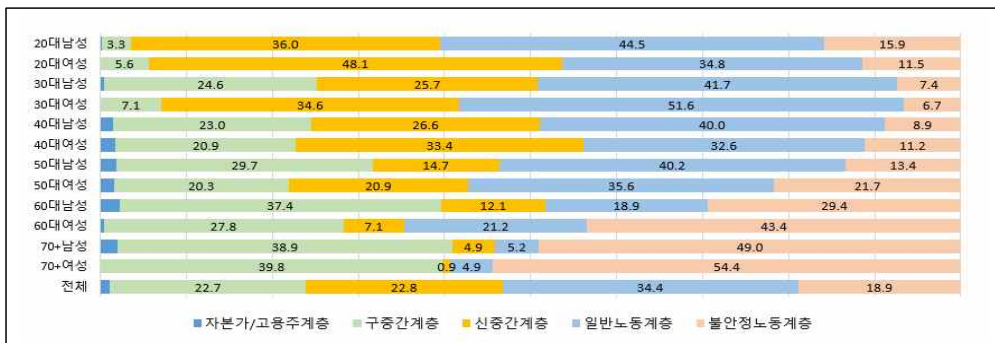


## 4) 연령과 세대, 성별 분포

불안정노동계층은 청년의 일부와 고령자에 주로 분포한다. 젠더를 구분할 경우 청년들은 20대에 남성들의 불안정노동계층 비중이 높고 40대 이상으로는 여성의 불안정노동계층 비중이 더 높다.

젊은층에서 신중간층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신중간층과 일반노동계층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20대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신중간층 비중(48.1%)를 보이고 있다.

&lt;그림 3-33&gt; 연령-성별 사회계층 분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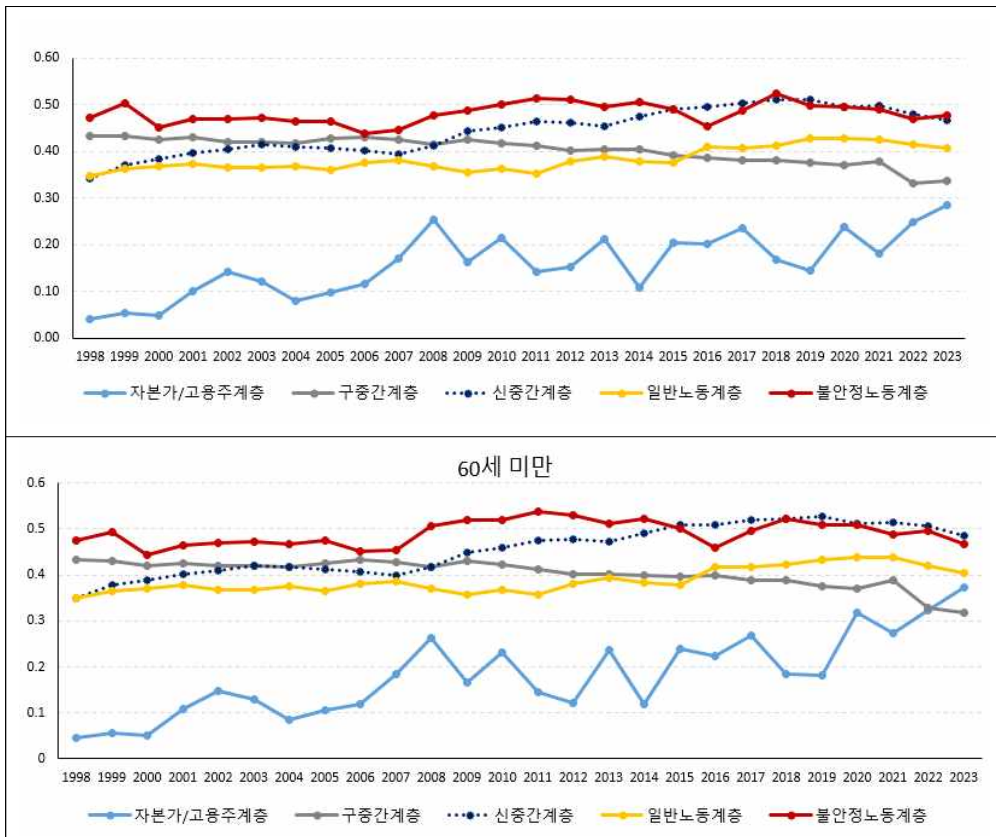
&lt;표 3-25&gt; 연령-성별-사회계층 평균 개인소득

	자본가·고용주	구중간계층	신중간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취업자전체
20대남성		371	247	284	225	270
20대여성		152	249	244	232	241
30대남성	827	238	411	329	249	327
30대여성	316	298	291	279	176	280
40대남성	639	334	595	413	289	438
40대여성	625	361	348	309	202	330
50대남성	833	395	562	443	310	439
50대여성	319	327	326	282	221	292
60대남성	931	301	413	348	237	324
60대여성	603	287	365	220	202	245

성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장기에 걸쳐서 확인하면, 구중간층의 여성비율이 크게 감소(45% → 30%)하면서 신중간층에 속하는 여성비율(30% → 50%)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의 경우 과거에는 거의 여성이 없었으나 이제는 30% 수준에까지 비중이 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자영업 부문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했던 것이 이제는 대졸 정규직 화이트칼라와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앞으로의 또다른 사회 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 3-34> 5개 계층별 여성비율



#### 4.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요인들

사회계층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을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다섯 개 사회계층에 대한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5범주 사회계층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반 다항로지스틱(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추정하였다.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는 ‘일반노동계층(4)’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에 초점을 맞춰 5계층 변수에서 불안정계층(5계층)에 해당하면 1, 그 외 계층이면 0을 부여하는 이항변수(unstable)를 생성한 뒤, 이를 종속변수로 두고, 선형확률모형(LPM)에 해당하는 OLS 모형, 고정효과 모형(FE), 임의효과 모형(RE)을 각각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고 평균 한계효과(AME)를 정리하였다.

3가지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요인에는 교육년수(p\_educ\_year)와 직업지위(p\_isei\_score)를 사용하였으며, 가족적 요인에는 연간 가구소득(h\_inc\_new)과 총자산(h\_wealth), 그리고 청소년기(14세) 부모의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변수(h\_parent\_job)를 사용하였다. 이때 가구소득은 개인적 요소를 제외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소득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소득과 자산은 분석단계에서 로그(log)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p\_sex)과 연령구간(p\_ageg), 그리고 시기(period) 변수를 사용하였다.

##### 1) 일반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먼저 첫단계로 5개의 사회계층 가운데 어떤 계층에 속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일반 다항로지

스틱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서는 동일한 개인이 여러 시점에 걸쳐 포함된 패널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개인 단위로 군집화된 강건표준오차(vce)를 적용하였다.<sup>47)</sup> 분석 결과의 계수(coefficient)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승산비(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표 3-26>를 보면,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일반노동계층보다는 신중간계층(OR=2.09,  $p<0.001$ )이나 불안정노동계층(OR=1.23,  $p<0.001$ )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고용주계층이 될 가능성은 일반노동계층에 비해 60%p가 낮았다. 연령집단별로는 20대 이하 연령층은 신중간계층(OR=1.40)이나 불안정노동계층(OR=1.20)이 될 확률이 더 높았고 구중간계층이나 고용주계층이 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할 때 구중간계층과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상대확률을 감소시키는 반면(OR=0.90), 신중간계층(OR=1.18)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ISEI 직업지수가 높을수록 일반노동계층보다 신중간계층(OR=1.14)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불안정노동계층(OR=0.96)일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적 요인들도 계층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고용주였을 경우 본인 역시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될 확률(OR=2.07, 1.52)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가 비정규직이나 무직이었을 경우 본인도 불안정노동계층이 될 확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본인 외에 다른 가구들의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정계층이나 구중간계층, 신중간계층이 될 확률은 낮추는 대신, 고용주가 될 확률(2.07배)은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산이 많으면 불안정노동계층이 될 확률은 낮추면서 고용주계층과 구중간계층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별로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경제위기 국면의 1998~2002년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노동계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47) 패널 데이터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패널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할 경우 우도함수의 수렴 실패와 계산 복잡성 증가로 인해 실제 적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는 일반 다항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하되 개인 식별자 단위에서 군집화된 강건오차(vce, clustered by pid)를 적용하는 방법이 표준적인 실증분석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Wooldridge, 2010; Greene, 2012).

&lt;표 3-26&gt; 5계층 결정요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odds ratio)

	(1) 고용주	(2) 구중간계층	(3) 신중간계층	(4) 일반노동계층	(5) 불안정노동계층
성별(ref.=남성)_					
- 여성	0.393*** (0.066)	1.109 (0.074)	2.087*** (0.196)		1.233*** (0.072)
연령(ref.=30~44세)					
- 15~29세	0.172*** (0.047)	0.258*** (0.020)	1.402*** (0.120)		1.202*** (0.070)
- 45~59세	2.373*** (0.267)	1.812*** (0.117)	0.942 (0.082)		1.605*** (0.088)
- 60세이상	4.596*** (0.928)	4.559*** (0.499)	1.455*** (0.207)		3.495*** (0.374)
교육년수	0.980 (0.029)	0.904*** (0.012)	1.175*** (0.025)		0.898*** (0.012)
ISEI 지수	1.058*** (0.007)	1.003 (0.004)	1.143*** (0.005)		0.957*** (0.003)
14세부모직업(ref.=정규직)					
- 2.비정규직	0.991 (0.344)	0.734** (0.099)	1.136 (0.188)		1.109 (0.120)
- 3.고용주	2.069*** (0.446)	1.523*** (0.182)	0.975 (0.124)		1.062 (0.107)
- 4.자영업자	1.416** (0.243)	1.165* (0.097)	1.019 (0.103)		1.010 (0.073)
- 5.무직	2.598 (2.433)	1.378 (0.494)	1.689 (0.752)		1.258 (0.438)
본인의가구소득(log)	2.068*** (0.197)	0.791*** (0.029)	0.883** (0.043)		0.709*** (0.023)
총자산(log)	1.590*** (0.101)	1.209*** (0.026)	0.991 (0.032)		0.901*** (0.017)
시기(ref.=1998~2002)					
- 2003~2007	0.580*** (0.051)	0.988 (0.032)	1.017 (0.048)		1.590*** (0.060)
- 2008~2012	0.349*** (0.039)	0.794*** (0.039)	0.908 (0.062)		1.790*** (0.093)
- 2013~2016	0.219*** (0.028)	0.686*** (0.044)	0.948 (0.089)		2.130*** (0.142)
- 2017~2023	0.121*** (0.019)	0.572*** (0.054)	1.079 (0.116)		2.371*** (0.178)
상수	0.000*** (0.000)	2.292*** (0.733)	0.000*** (0.000)		119.948*** (33.015)
표본수	155,031	155,031	155,031	155,031	155,031

Robust standard error in parentheses

\*\*\* p&lt;0.01, \*\* p&lt;0.05, \* p&lt;0.1

## 2) 불안정노동계층이 될 확률

다음으로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불안정계층에 해당하면 1, 그 외 계층이면 0을 부여하는 이항변수(unstable)를 생성해서 이를 종속변수

로 하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에 대해 선형회귀모형(OLS)과 고정효과모형(FE), 임의효과모형(RE)을 각각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표준오차는 개인 군집단위 강건오차(vce)를 적용하였다.

여성인 경우 불안정노동에 속할 확률이 OLS에서 2.0%p, RE 모형에서 3.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이상)이 핵심연령대(30~44세)에 비해 불안정노동에 속할 확률이 각각 2~4%p, 6~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5~59세의 경우 OLS에서는 불안정노동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FE, RE 모형에서는 음(-)의 영향이 있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 요인 가운데 교육년수는 세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음(-)의 방향(OLS: -0.9%p, FE: -2.6%p, RE: -1.0%p,  $p < 0.001$ )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인적자본 효과를 확인시켜 준다. 특히 고정효과(FE) 모형에서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이 생애 동안 교육을 추가적으로 획득한 경우 불안정노동계층에서 벗어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지위(ISEI 점수) 또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OLS: -0.5%p, FE -0.7%p, RE -0.7%p,  $p < 0.001$ )이 확인되었다.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지위가 하향되거나 불안정한 지위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적 요인으로서는 부모가 14세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경우, 본인이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이 OLS에서는 +2.5%p ( $p < 0.10$ ), RE모형에서는 +6.2%p ( $p < 0.001$ )로 개인속성 불변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FE 모형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등 별도의 변수를 추가하여 부모의 직업특성이 누락된 경제적 변수를 대리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유의한 영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는 가정 배경에서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성인기의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세대 간 이전효과(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abor precarity)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반면 부모가 자영업자·고용주였던 경우의 효과는 대부분 비유의하거나 소폭의 음(-)의 값으로 나타나, 불안정노동계층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영업·사업주 지

위가 미치는 영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 중 가구소득과 자산을 보면, 소득은 세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음(-)의 방향으로 불안정노동계층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LS: -3.0%p, FE: -2.2%p, RE: -2.5%p). 자산의 효과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불안정노동에 빠질 확률을 크게 낮추는 영향이 있다(OLS: -2.8%p, FE: -0.8%p, RE: -1.2%p). 이것은 배우자나 부모와 자녀 등 다른 가구원들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비록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 일시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급하게 불안정한 직업지위를 선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경로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자산효과는 FE모형에서 크기가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자산이 시간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개인내 변화(within)에서 설명력이 일부 제거되기 때문이다.

시간의 변화와 경기순환의 영향,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시기별 변화 등을 통제하기 위한 시기 변수의 영향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2년을 기준 시점으로 했을 때 모든 모형에서 시기효과가 강하고 일관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정효과 모형에서 불안정노동 확률의 증가폭이 2003~2007 기간이 +5%p, 2008~2012 기간이 +7%p, 2013~2016 기간이 +9%p, 2017~2023 기간이 +11%p로 계속 상승한 것은 2000년대 이후 불안정노동화의 흐름이 강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은 성별, 연령을 통제한 경우에도 교육 및 직업지위 등 개인적 속성과 노력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부모 노동시장 지위와 가구 차원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 등 개인적·가구적·세대간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강한 시기효과는 불안정노동이 단기간의 경기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말해준다.

&lt;표 3-27&gt; 불안정노동이 될 확률에 대한 3가지 선형회귀 모델 추정

	(1) 일반선형(OLS)	(2) 고정효과(FE)	(3) 임의효과(RE)
성별(ref.=남성)_			
- 여성	0.020*** (0.007)		0.035*** (0.004)
연령(ref.=30~44세)_			
- 15~29세	0.027*** (0.006)	0.041*** (0.005)	0.043*** (0.004)
- 45~59세	0.034*** (0.006)	-0.010** (0.004)	-0.002 (0.003)
- 60세이상	0.084*** (0.014)	0.058*** (0.007)	0.063*** (0.006)
교육년수	-0.009*** (0.002)	-0.026*** (0.003)	-0.010*** (0.001)
ISEI_지수	-0.005*** (0.000)	-0.007*** (0.000)	-0.007*** (0.000)
14세부모직업(ref.=정규직)_			
- 2.비정규직	0.025* (0.014)		0.062*** (0.008)
- 3.고용주	-0.011 (0.010)		0.004 (0.007)
- 4.자영업자	-0.007 (0.008)		-0.011** (0.005)
- 5.무직	-0.007 (0.048)		0.078*** (0.022)
본인외가구소득(log)	-0.028*** (0.003)	-0.008*** (0.001)	-0.012*** (0.001)
총자산(log)	-0.030*** (0.005)	-0.022*** (0.002)	-0.025*** (0.002)
시기(ref.=1998~2002)			
- 2003~2007	-0.028*** (0.003)	-0.008*** (0.001)	-0.012*** (0.001)
- 2008~2012	0.086*** (0.006)	0.073*** (0.005)	0.074*** (0.004)
- 2013~2016	0.116*** (0.008)	0.094*** (0.006)	0.096*** (0.005)
- 2017~2023	0.138*** (0.009)	0.105*** (0.007)	0.110*** (0.005)
상수	0.891*** (0.036)	0.928*** (0.042)	0.810*** (0.018)
표본수	155,031	202,234	202,234
R-squared	0.130	0.045	
개인고유 표본수		24,067	24,067

Robust standard error in parentheses

\*\*\* p&lt;0.01, \*\* p&lt;0.05, \* p&lt;0.1



### 3) 종합적인 평균 한계효과

끝으로 불안정노동계층 여부를 구분한 이항 종속변수에 대한 각 요인들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로짓(logit) 모형을 추정하고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를 산출하였다.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의 분포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설명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앞서의 다항로지스틱모형과 달리 특정 계층유형에 대비한 일대일 비교가 아니라 통제변수와 다른 설명변수들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전제할 때, 독립변수가 최하위계층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28>을 보면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AME)가 정리되어 있다. 첫째, 여성일 경우 평균적으로 불안정노동에 처할 확률이 약 1.0%포인트 증가하는 방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변수는 앞서 일반 다항로지스틱 분석과 선형확률모형(OLS, RE)에서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평균 한계효과(AME)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의 로그오즈 변화는 유의미하지만, 불안정계층에 속할 확률 수준에서의 변화는 약 1%포인트 정도로 크지 않아, 표준오차(0.007)를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할 확률도 높지만 신중간계층에 속할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상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여성 고령자의 불안정계층 확률과 여성 청년층의 신중간계층 확률이 상쇄되는 효과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령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 기준범주(30~44세)에 비해 15~29세, 45~59세, 60세 이상 모든 연령집단에서 불안정계층에 속할 확률이 각각 2.9~4.4%포인트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교육년수와 직업지위(ISEI)는 모두 음의 방향이며 강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교육 1년 증가 시 불안정계층 확률은 약 0.6%p 감소하고, 직업지위 점수(ISEI) 1점 증가 시 0.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이 불안정노동 진입 위험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적 요인으로 14세 당시 부모가 비정규직이었던 경우 자녀가 불안정계층에 속할 확률은 2.9%포인트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실시한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 상대적인 승산비를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부모의 직업 영향이 평균 한계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고용주·자영업자·무직이었던 경우에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자녀의 성인기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3-28> 불안정노동계층이 될 확률의 평균 한계효과(종합)

독립변수	불안정노동(unstable)	
	한계효과	표준오차
성별(ref. 남성)		
- 여성	0.010	(0.007)
연령(ref. 30~44세)	0.044***	(0.007)
- 15~29세	0.044***	(0.007)
- 45~59세	0.029***	(0.006)
- 60세이상	0.043***	(0.013)
교육년수	-0.006***	(0.002)
ISEI 지수	-0.008***	(0.000)
청소년기부모(ref. 정규직)		
- 2.비정규직	0.029**	(0.013)
- 3.고용주	-0.012	(0.012)
- 4.자영업자	-0.003	(0.009)
- 5.무직	0.003	(0.040)
본인외가구소득(log)	-0.025***	(0.004)
총자산(log)	-0.026***	(0.002)
시기(ref. 1998~2002)		
- 2003~2007	0.045***	(0.003)
- 2008~2012	0.070***	(0.005)
- 2013~2016	0.102***	(0.007)
- 2017~2023	0.128***	(0.009)
표본수	155,031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영향도 종합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

다. 다른 가구원들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불안정계층 확률이 2.5%포인트 감소하며, 총자산이 1% 증가할 때 역시 2.6% 불안정계층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고용 조건과 장기 자산 수준이 계층 귀속에 지속적으로 연동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구단위의 소득과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가구원의 계층 지위가 유지되고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가구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계효과에서도 시기별로 추가적인 불안정계층 확률의 증가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1998~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이후 모든 시점에서 불안정계층 확률이 지속적·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기간별 순수 증가효과는 2003~2007년 시기가 4.5%p, 2008~2012년 기간이 2.5%p, 2012~2017년 기간이 3.2%p, 그리고 2017~2023년 시기가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불안정·비정규 고용의 구조적 확대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결과이다.

## 5. 사회계층간 이동성에 대한 전이행렬 분석 결과

이제는 사회계층의 ‘계층이동’의 실제와 변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 분석을 통해 5년 단위의 기간별로 연평균 계층 이동성 추이를 분석한다.

전이행렬에서의 분석의 초점은 사회계층 전반의 이동성 수준 변화와 함께, ‘불안정노동계층’으로 진입한 개인들이 ‘일반노동계층’이나 ‘신중간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social mobility)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1) 분석 방법

사회계층 변수(kclass3)의 7개 계층, 즉 자본가-고용주, 구중간계층, 신중간계층,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모두를 활용하였으며, 1998~2023년 기간의 시기를 5개(1998-2003, 2003-2008, 2008-2013, 2013-2017, 2017-2023)로 구분하여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을 도출하여, 해당 기간별로 특정 시점(t)에 본인이 속했던 계층이 다음 년도(t+1)에 어떤 계층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전이행렬의 대각선 값(계층유지율)과, 특히 하층에서 일반노동계층 및 신중간계층으로의 이동비율(이동률)의 변화였다.

### 2) 계층 이동성 추이의 주요 특징

전이행렬 분석 결과, 한국 사회계층 이동성의 전체적인 특징과 추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든 기간에 걸쳐 모든 계층에서 대각선 값(자기 계층 유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계층이동보다는 계층유지가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구중간계층(87~90%), 신중간계층(86~90%), 일반노동계층(83~87%)의 유지율은 매우 높아서, 이들 계층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시

켜 준다.

반면, 불안정노동계층의 유지율은 69~73% 사이로, 다른 노동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안정적 상향이동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실업이나 비경활 인구로 하향이동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다. 하위층의 상향이동성 추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3-29> 불안정노동계층의 연평균 이동률

<불안정노동계층 → 일반노동계층>	<불안정노동계층 → 신중간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2003: 12.07%</li> <li>▪ 2003-2008: 11.66%</li> <li>▪ 2008-2013: 10.02%</li> <li>▪ 2013-2017: 9.66%</li> <li>▪ 2017-2023: 9.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2003: 0.99%</li> <li>▪ 2003-2008: 1.07%</li> <li>▪ 2008-2013: 1.03%</li> <li>▪ 2013-2017: 0.94%</li> <li>▪ 2017-2023: 0.91%</li> </ul>

<표 3-32>의 상향이동 확률의 기간별 분포를 보면, 불안정노동계층이 정규직 일반노동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1998-2003년 12.07%에서 2017-2023년 9.75%로 약 2.3%p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신중간계급으로의 상향이동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불안정노동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머무르거나 실업자(약 2% 내외)나 비경활 인구(약 13% 내외)로 하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즉, 불안정노동계층의 상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층이동성을 제약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t;표 3-30&gt; 전기간 전이행렬(1998~2023)

	고용주	구중간	신중간	일반노동	불안정노동	실업자	비경활	전체
고용주	64.19	28.13	1.74	0.99	0.75	0.69	3.49	100
구중간	1.93	87.52	0.77	1.87	1.72	0.56	5.63	100
신중간	0.25	1.75	86.67	2.67	0.7	1.38	6.58	100
일반노동	0.13	1.81	1.33	83.37	5.31	1.71	6.35	100
불안정노동	0.07	2.63	0.99	12.07	69.06	2.01	13.17	100
실업자	0.23	4.75	9.84	19.29	14.96	13.51	37.41	100
비경활	0.05	1.65	2.8	3.52	3.65	1.82	86.52	100
전 체	0.98	14.26	10.82	19.24	9.81	1.8	43.08	100

&lt;표 3-31&gt; 지위유지

	고용주	구중간	신중간	일반노동	불안정노동	실업자	비경활	전체
1998-2003	64.2	87.5	86.7	83.4	69.1	13.5	87.4	100.0
2003-2008	65.0	88.4	87.3	84.7	70.5	13.9	87.1	100.0
2008-2013	64.9	89.1	87.9	86.3	73.2	12.5	87.4	100.0
2013-2017	69.5	89.8	89.3	86.8	73.9	12.2	87.6	100.0
2017-2023	67.0	90.2	90.5	87.4	73.0	12.6	87.2	100.0

&lt;표 3-32&gt; 상향이동

	고용주	구중간	신중간	일반노동	불안정노동	실업자	비경활	전체
1998-2003	0.0	1.9	2.0	3.3	15.8	49.1	13.5	100.0
2003-2008	0.0	1.9	1.8	2.9	15.1	49.3	12.9	100.0
2008-2013	0.0	1.8	1.6	2.6	13.0	50.4	12.6	100.0
2013-2017	0.0	1.5	1.2	2.5	12.4	49.4	12.4	100.0
2017-2023	0.0	1.5	1.1	2.3	12.3	49.6	12.8	100.0

&lt;표 3-33&gt; 하향이동

	고용주	구중간	신중간	일반노동	불안정노동	실업자	비경활	전체
1998-2003	38.8	11.0	17.5	11.1	19.4	37.4	0.0	100.0
2003-2008	38.6	10.1	14.4	10.1	18.5	36.8	0.0	100.0
2008-2013	39.0	9.5	13.5	9.3	17.4	37.2	0.0	100.0
2013-2017	34.3	9.1	12.1	9.1	17.0	38.4	0.0	100.0
2017-2023	35.5	9.0	11.4	9.2	17.0	37.8	0.0	100.0

자본가/고용주 계층은 65% 전후의 매우 높은 유지율을 보이며, 그 다음 비중으로 큰 이동 방향은 구중간계층(약 25~28%)이다. 실업자의 경우 약 13%는 다음 해에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을 보이고 비경활 인구로 이동한 비율도 36~38%에 이른다. 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2017년 이전에는 일반노동계층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불안정노동계층에 비해 더 높았으나, 2017년 이후에는 불안정노동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19.6%)이 일반노동계층으로의 이동 비율(18.2%)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상향 이동이나 하향 이동 가능성 모두 줄어들면서 현재의 계층을 유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KLIPS 1998-2023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한국의 계층 이동성은, 특히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그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계층 구조가 경직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 6. 불안정노동계층의 현실 : 생존 위기와 재생산 위기

앞에서 계층간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불안정노동계층과 최하위계층이 일반노동계층과의 이질성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계층의 결정 요인으로 본인 자신의 교육과 직업 등과 함께 부모의 직업과 자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로 사회계층의 이동성이 최근 들어 점점 약화되고 계층 내부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결혼과 가족이나 출산 등의 이슈는 사회계층이 처한 상태와 미래의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매우 밀접한 주제가 된다. 사회계층의 분류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고용상 지위와 직업, 소득과 자산 등은 결혼 선택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확대 문제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가 노인빈곤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현상을 진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세대와 젠더, 수도권과 지역 등의 기준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영역의 문제들을 다룰 때 사회계층이라는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준과 대상을 놓고 현상과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계층 접근법의 필요성과 의의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영국 런던경제대학(LSE)의 마이크 새비지(Mike Savage) 교수 연구팀은 2011년 영국 BBC와 함께 16만명의 이상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국사회계층조사(GBCS)’를 실시한 뒤, 영국 사회가 7개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달리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와세다대학의 하시모토 교수는 올해 6월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한 **《새로운 계급사회》**에서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 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격차사회’ 현상 그 자체를 넘어 기존의 노동자계급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가 ‘언더클래스(アンダクラス)’라는 최하층



의 새로운 제5계급으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이 구조가 고착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언더클래스는 원래부터 하층을 벗어나기도 힘들지만, 극단적인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한 상태에서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계급 재생산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남성의 생애미혼율<sup>48)</sup> - 5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 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언더클래스가 일본의 생애미혼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시모토는 “언더클래스가 일본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계급이지만, 스스로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계급의 공백을 다른 계급에서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메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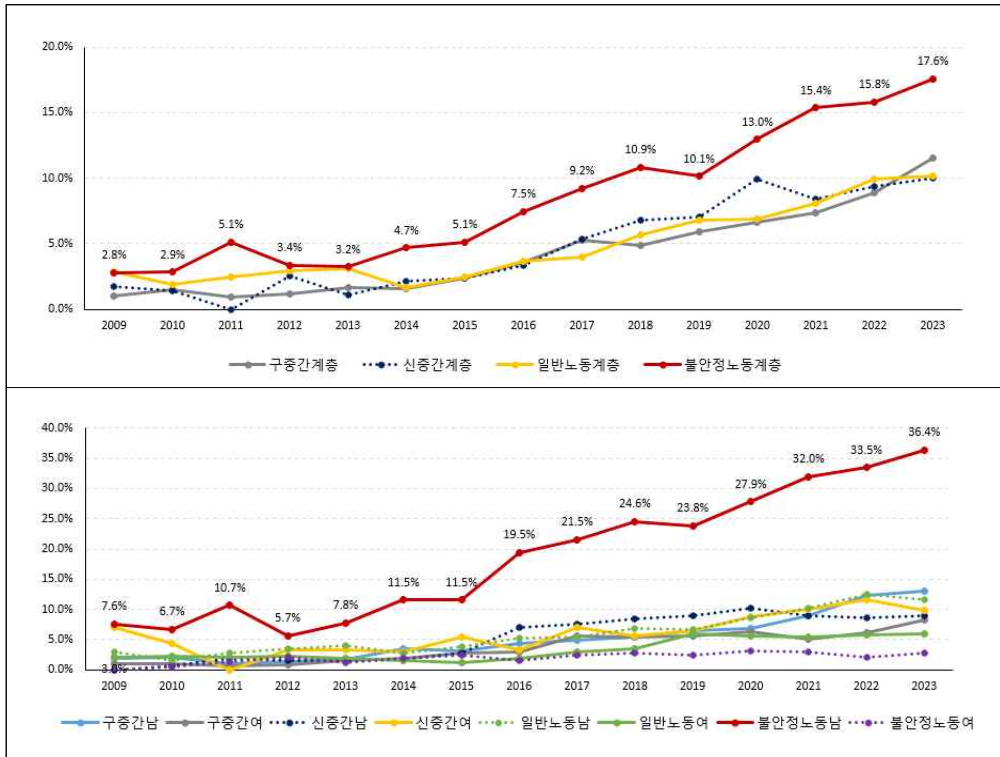
사회계층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애미혼율을 집계하면, 불안정노동계층의 미혼율이 매우 뚜렷하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들의 미혼율은 2009년 2~3% 수준이었는데,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해 2023년 현재는 17.6%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남녀를 각각 구분해서 보면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한 남성의 미혼율 상승이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안정노동계층의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 추이를 비교하면 여성의 미혼율은 2%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남성의 생애미혼율만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정노동계층의 남성 미혼율은 2014년 이전에는 한 자리수에 그쳤으나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2019년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해서 2023년 현재 36.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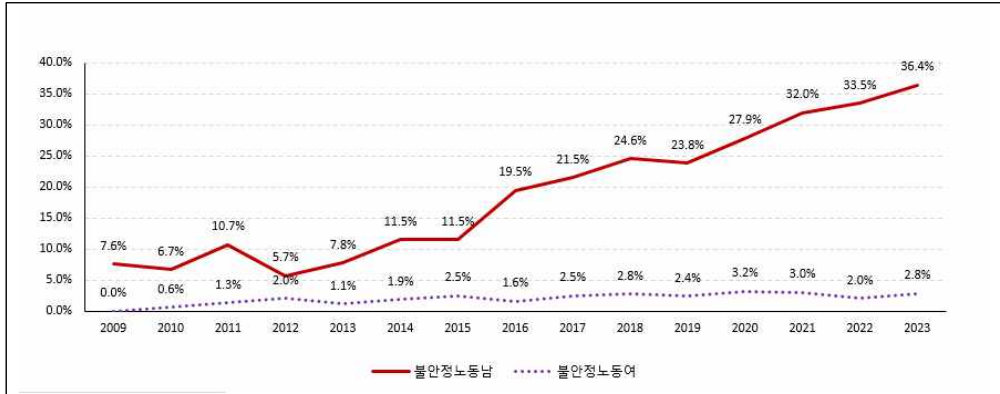
48) 실제 통계는 50세 연령만아 아니라 45~54세 연령구간의 미혼율로 집계한다.

<그림 3-35> 생애미혼율(45~54세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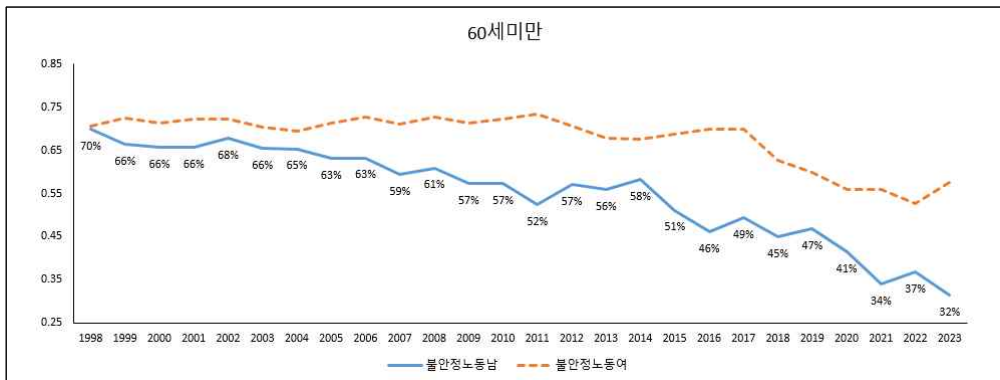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은 유배우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모든 연령층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불안정노동계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60세 이하로 국한해서 남녀를 구분하면 불안정노동계층 남성의 유배우비율이 뚜렷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에는 불안정노동계층에 속하는 경우라도 유배우비율이 70%에 달했고 남녀간 차이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해서 4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21년 이후 30% 수준으로 다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lt;그림 3-36&gt; 불안정노동계층 생애미혼율(45~54세)



&lt;그림 3-37&gt; 불안정노동계층 유배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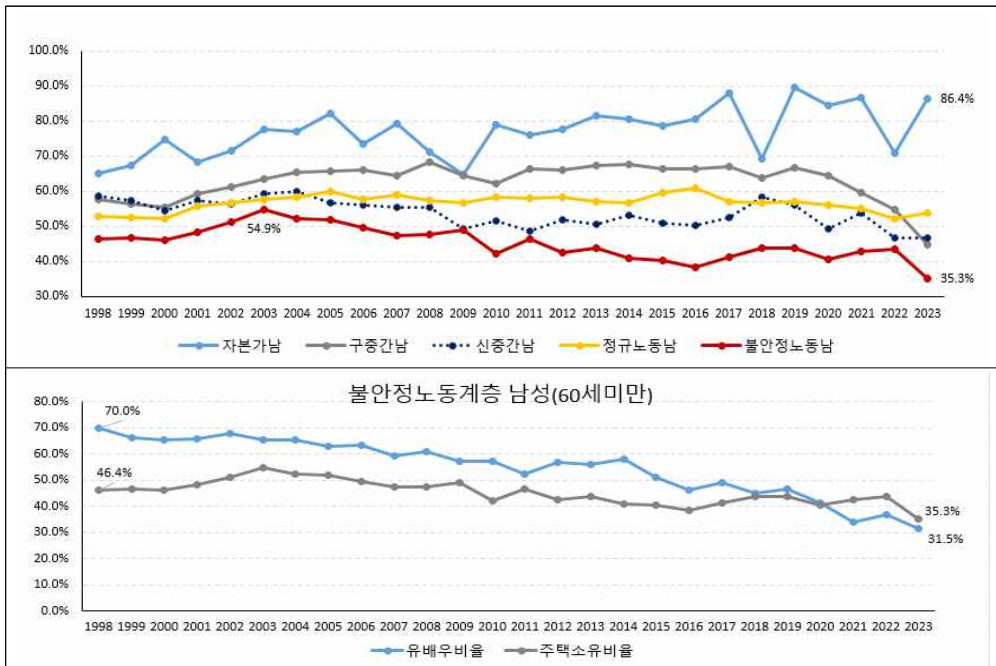
이 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로는 주택소유 비율이 있다. 결혼과 주택 수요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고 한국 사회에서 내집마련이 어느 정도는 남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60세미만 남자로 국한했을 때 사회계층별로 주택소유 비율의 수준과 추이를 보면 계층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된다. 고용주와 일반노동(정규직) 남성의 경우에는 주택소유 비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불안정노동계층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마라 주택소유 비율 하락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8>을 보면 2020년 이후 불안정노동계층과 구중간계층 남성의 주택소유

비율 하락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두 그룹의 유배우비율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루칼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로 구성되는 두 계층의 경제적 조건 악화와 부집값 상승이 맞물린 시기에 미혼율 증가, 유배우 비율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8> 주택소유비율과 유배우비율(60세미만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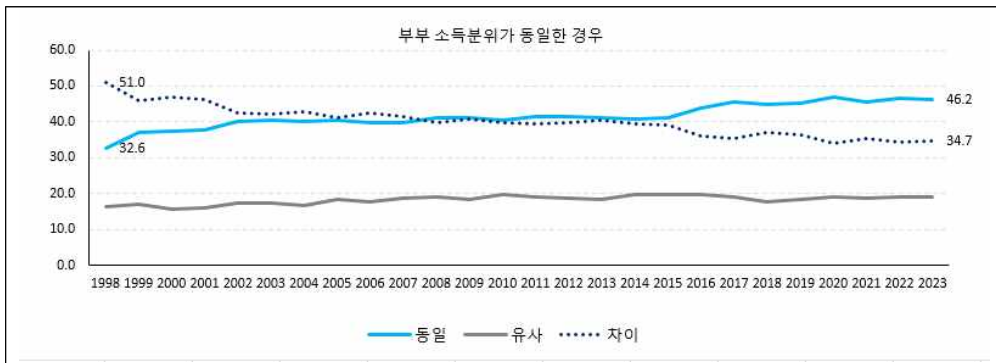


신광영(2013)은 동질혼이 불평등 현상의 하나로 보고 부부간 동질혼 경향이 강해지면 개인간 소득불평등이 가구간 소득불평등으로 확대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박용민(2023)의 분석에서는, 부부의 소득분위 관계가 체계적인 상관관계 없이 무작위가 가까운 상태를 1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지수는 1.09로 OECD 국가 가운데 동질한 경향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패널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 추세적으로 동질혼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부부가 소득분위가 동일한 가구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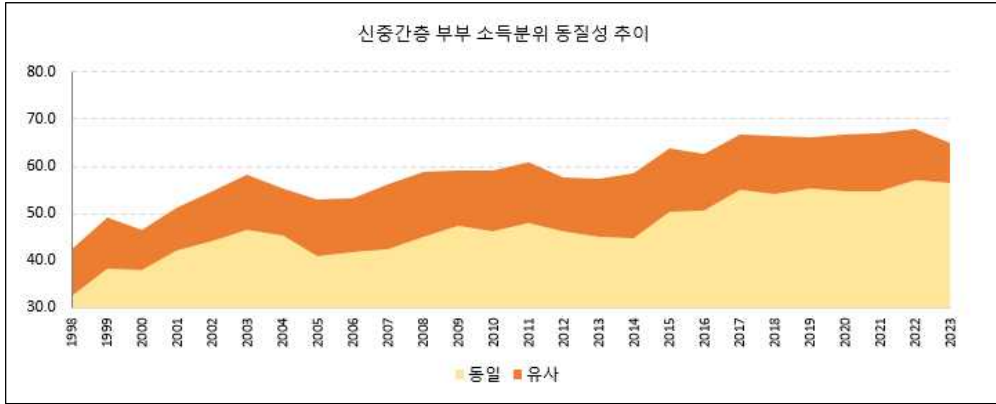
41.2%로 3분위 이상 차이가 있는 가구 비율(39.7%)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소득분위가 동일한 가구가 46.2%이고 3분위 이상 차이가 있는 비율은 34.7%로 떨어진 상태이다.

<그림 3-39>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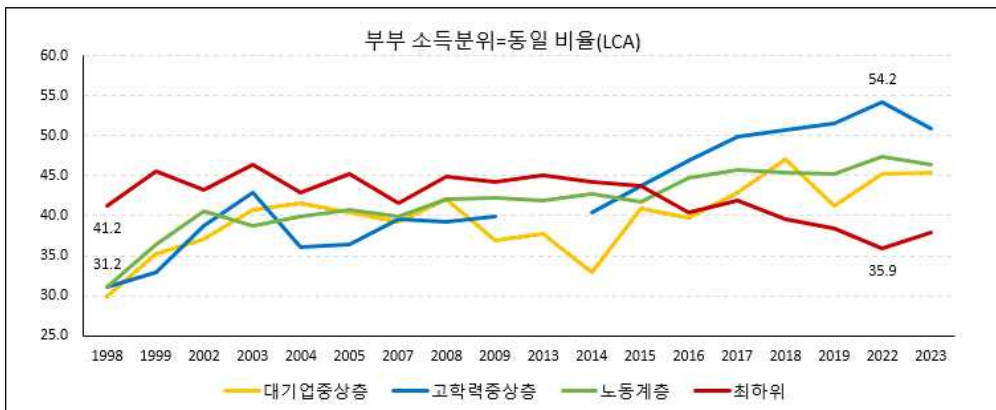


사회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동질혼 경향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3-42>의 좌측 그래프에서 보면 고용주의 동질혼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신중단계층의 동일비율이 2015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이 중심이 되는 일반노동계층에서도 2015년 이후 동질혼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정노동계층과 구중단계층은 추세적으로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중단계층은 1998년에도 부부동일 비율이 30% 초반이었으며 현재도 비슷한 수준이며, 불안정노동계층은 부부동일 비율이 40% 중반 수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0> 신중간계층의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



<그림 3-41>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L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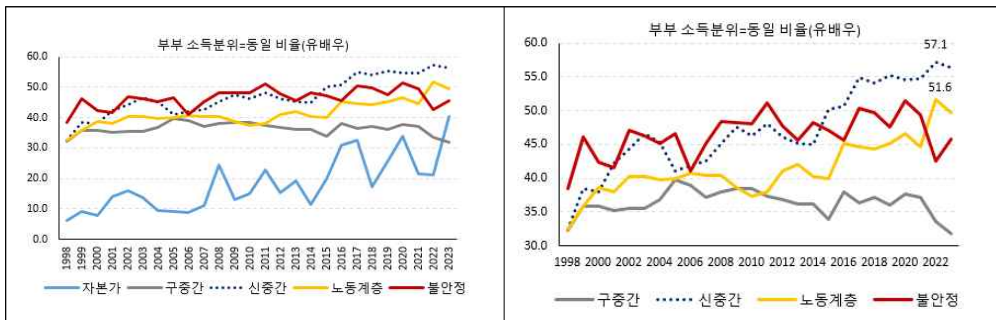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들에서 동질혼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비율 자체의 변화는 없으나 미혼율이 높아지고 유배우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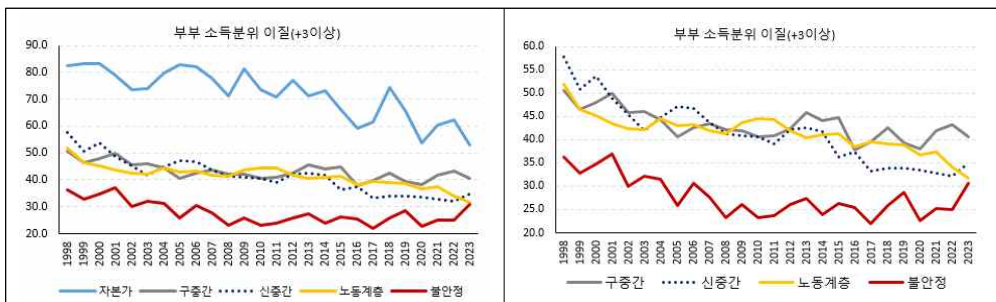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대 청년 인구에서 남녀 성비가 남성이 20만명 정도 더 많은 남성 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상위층에서 동질혼이 강화되는 현상과 중간소득층인 구중간계층이 동질혼 경향이 약한 상태에서 불안정노동계층 남성의 결혼 가능성이 가장 낮아지고 있다. 불안정노동계층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어렵고,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소득과 자산을 모으기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모든 계층 가운데 주택소유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인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게 되고 결혼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림 3-42> 부부간 소득동질성 추이



<그림 3-43> 부부간 소득이질성 추이



## 7. 계층별 생활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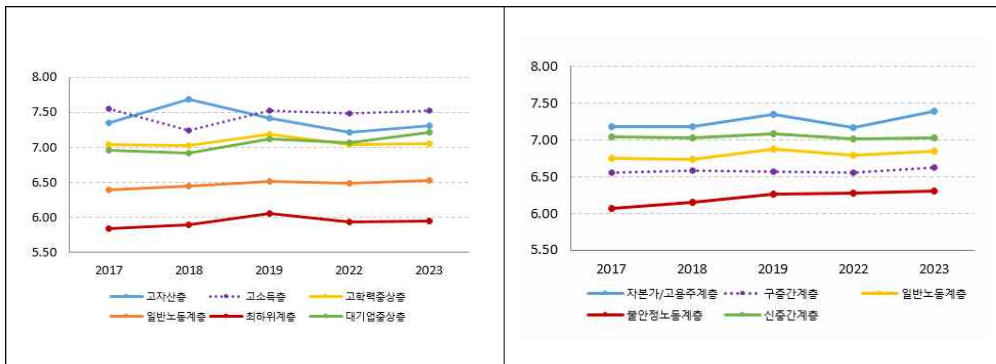
### 1)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

불안정노동계층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행복감도 가장 낮은 상태에 있으며, 이 영역에서도 일반노동계층과의 만족도와 행복감 차이가 큰 편이다.

일반노동자가 신중관계층에 더 가깝고 구중관계층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불안정노동계층은 구중관계층보다도 훨씬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LCA 분류계층의 만족도와 비교해보면 일반노동계층과 최하위층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비슷한 응답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이 높은 계층은 자본가·고용주계층이며 고소득층의 긍정 인식이 가장 높은 편이다. 대기업중상층의 만족도는 고학력중상층보다 약간 높아져서 위치가 달라진 상태이다.

<그림 3-44> 삶에 대한 만족도(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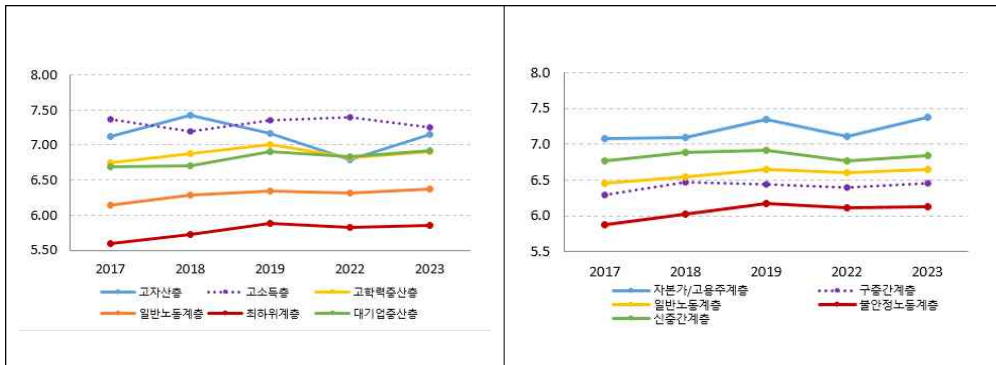


현재의 행복도에 있어서 불안정노동계층은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이고 바로 위의 구중관계층과도 거리차가 있는 편이다. 일반노동계층은 행복도에서도 신중관계층과 함께 고용주 바로 아래에 있는 위치이다. LCA 방식 계층분류에서는 고소득층의 행복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고자산계층과 대기업중상층, 고학력중상층이 거의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행복감은 일반노동계층이나 최하위층과는 큰 차이가 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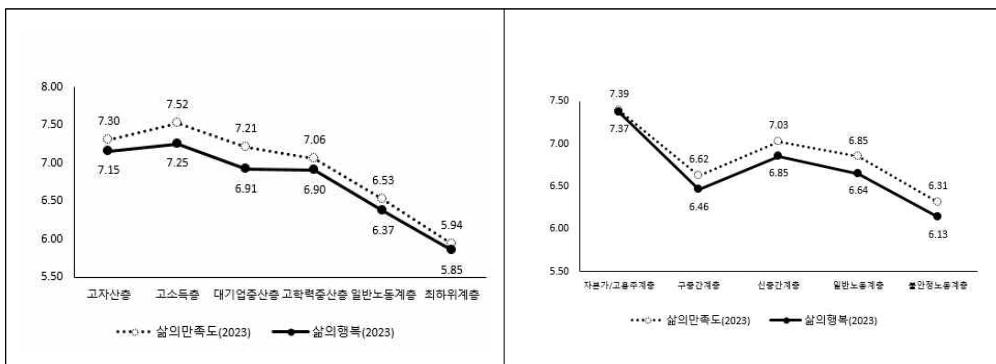
<그림 3-45> 현재 행복도(0~10점)



2023년 현재 시점에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반노동계층과 구중산층이 비슷한 수준이고 만족도는 신중산층과 구중산층 사이에 있다. 이에 비해 불안정노동계층의 행복도는 구중간계층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LCA 계층의 경우 고소득층이 고자산층보다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은 편이며 대기업중상층과 고학력중상층이 비슷한 수준다. 일반노동계층은 최하위층과는 차이가 있지만 사전분류 방식 노동계층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행복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46>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2023년)



## 2) 계층이동 가능성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사회계층별 인식이나 행위는 고용상의 지위와 직업을 중심으로 집단적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와 행동에 나서게 되기도 한다.

현재 각 계층의 사회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는 노동패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조사와 노동조합 가입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조사하고 있는 항목으로 “귀하는 우리 사회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 매우 긍정이면 1번이 되고, 강한 부정이면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계층의 이동이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긍정적인 사고나 기대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성에 개인들의 평가의 의미도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질문은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느냐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노동조합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노조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각각 묻고 있다.

노조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노동조합의 약자보호나 정의실현 능력에 공감하고 인정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노조와 함께 문제해결할 생각이 있는 태도가 있는지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의식의 이념이나 사회의식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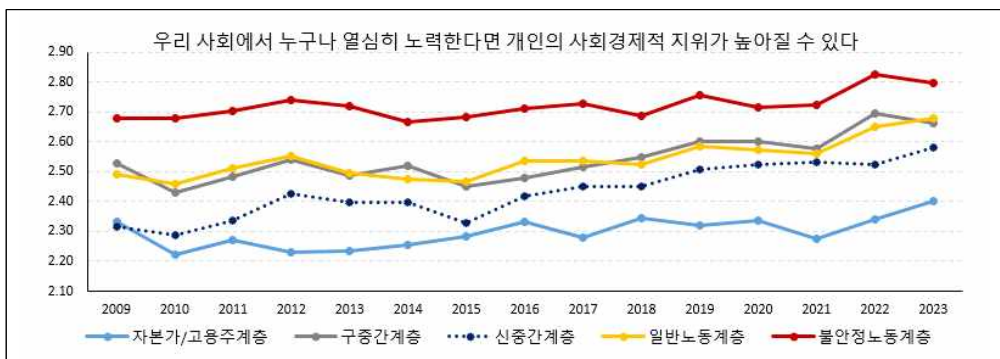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노조의 실용성내지 도구성을 인정하는지와 실제 자신 주변의 노동조합이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노조의 기능에 대한 긍정평가 여부를 묻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계층상의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 적극 긍정하는 상황이 실제로 그러한 사회인지에 대

한 평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답은 불안정노동계층의 응답이 평균적으로 가장 비관적이고 가장 지위가 높은 고용주계층의 평균 점수가 제일 긍정적이다. 고용주 다음으로는 신중관계층이 호의적으로 답하고 있고 구중관계층과 일반노동계층의 응답이 비슷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고 불안정노동계층은 그렇지 않다는 쪽에 더 가깝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를 가질만한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이후의 평가가 더욱 부정적 평가가 강화되었는데, 이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 등으로 인한 불만과 박탈감이 이같은 부정평가가 강화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47> 사회이동성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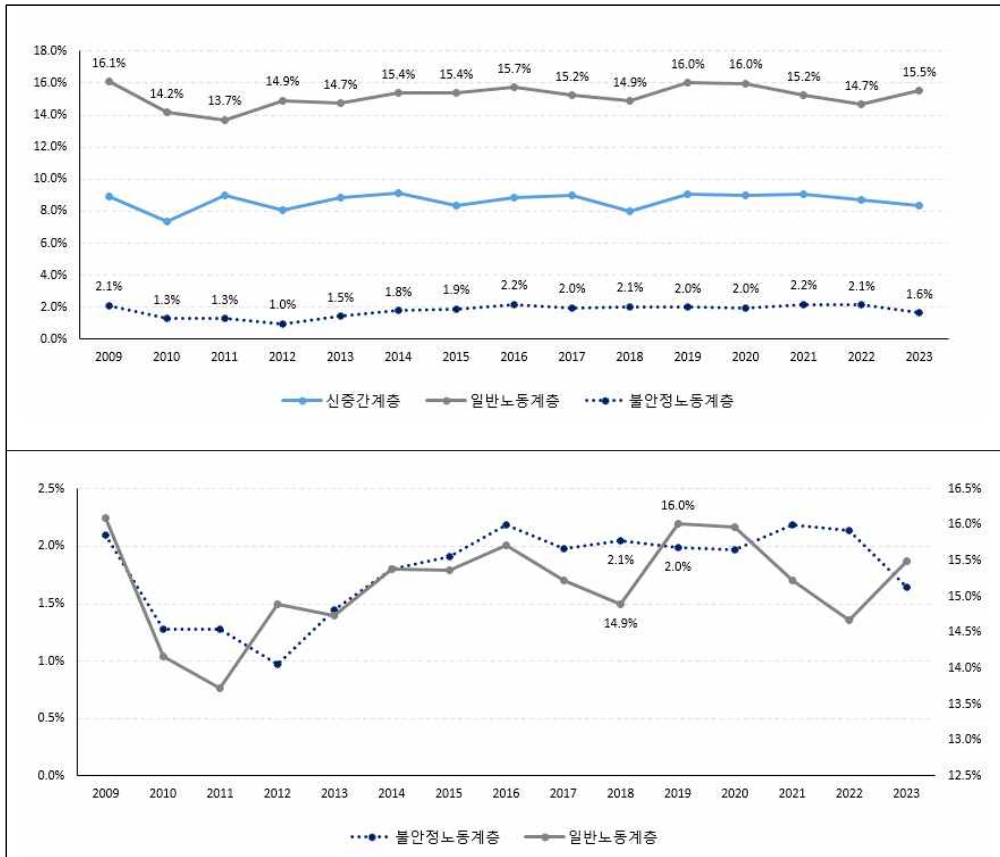


다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차례인데, 그보다 먼저 누가 어느 정도로 노조에 가입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층별 노조가입 상황을 집계해 보면 일반노동계층이 15.5%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신중관계층은 8% 정도가 가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불안정노동계층은 가입률이 1.6%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조직이나 기구로 인식하기가 힘든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의 조직이나 외부 기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리감이 노조에 관한 응답에 깔려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세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자세히 그려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나마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이 증가한 영향이 약간 나타나는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사회계층 분류기준상 불안정노동계층에서 일반노동계층으로 귀속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등의 과정에서 불안정노동계층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되면 불안정노동계층 노조가입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노동계층의 노조가입률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48> 노동조합 가입률(5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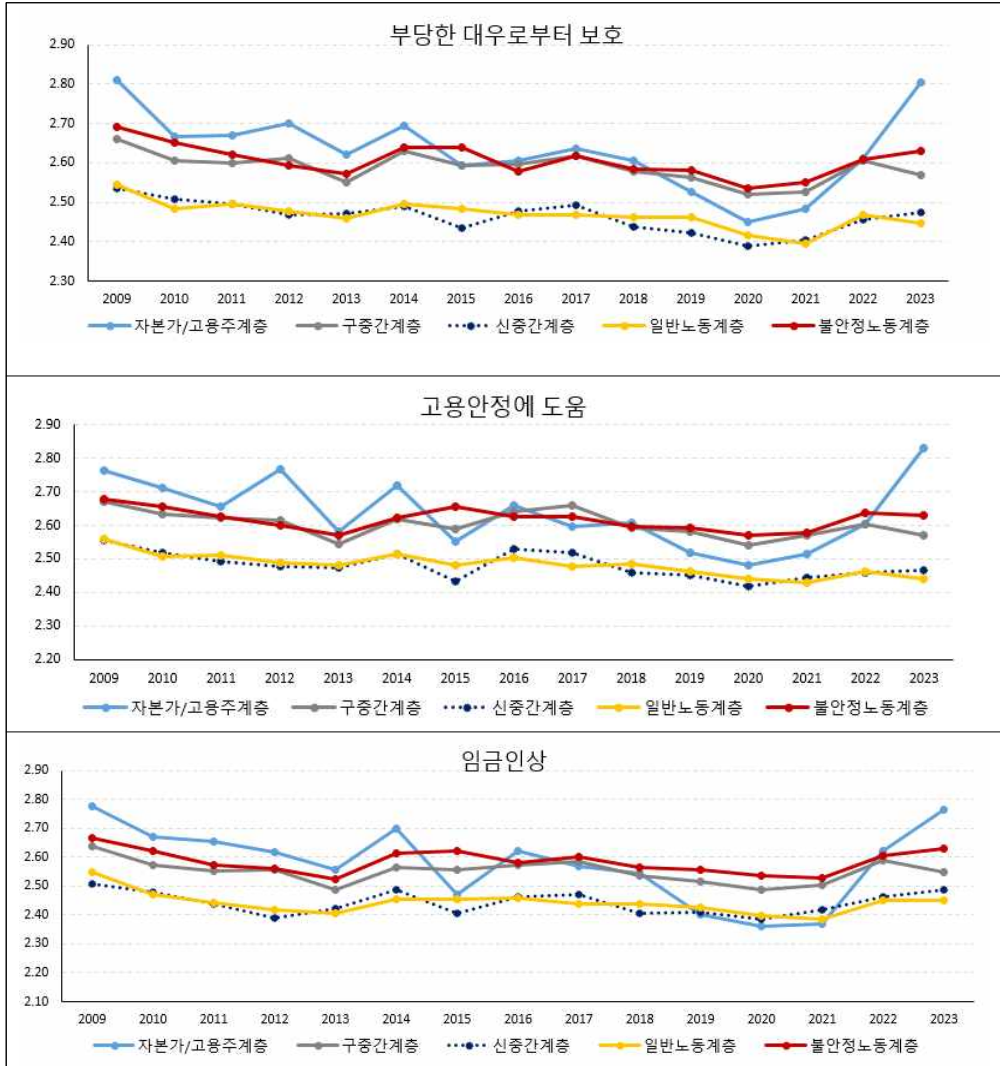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질문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유형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노동계층과 신중간계층의 응답이 그래도 가장 긍정적이고 구중간층과 불안정노동 계층의 인식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그래프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 노조에 관한 응답에서는 불안정노동 자영업자들과 유사한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고용주자본가 계층의 인식 추이가 일반적인 고용주들과도 사뭇 다른 추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2015년 이전에는 고용주계층이 노조에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것이 2018년 이후 시기에는 정규직 노동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2021년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권이 교체되는 흐름을 따라 노조에 대한 인식도 긍부정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평가한다면 각 계층의 노조에 대한 인식은 노조에 실제로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정규직과 화이트칼라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고용주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불안정노동계층에서는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간으로 보면 2017~2020년 기간이 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여론이 있었던 시기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약간 다시 노동조합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안정노동계층은 누구보다도 노동조합이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lt;그림 3-49&gt;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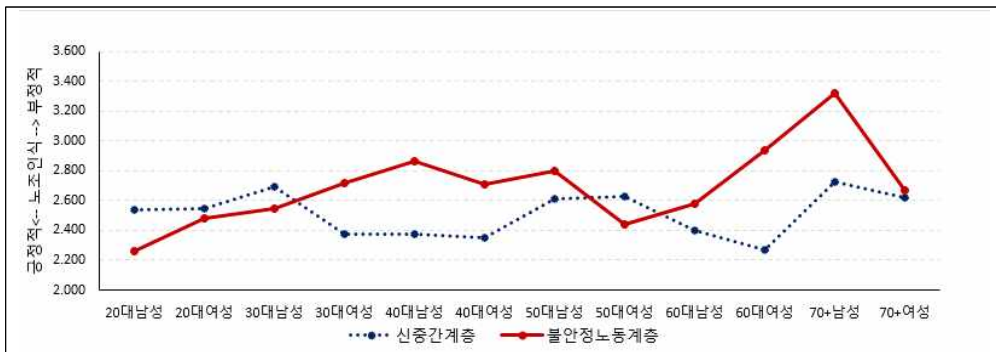


그런데 평균적으로 불안정노동계층이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대별로 구분해서 보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동일집단 내에서 세대간 차이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불안정노동 계층은 기본적으로 노조에 비판적이지만, 20~3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중간층이나 노동계층보다 더 노조의 긍정적 기능을 긍정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40~50대

에 가서는 같은 연령대에 비해 보수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른바 ‘이대남’ 현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처럼 지방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기성 질서에 반기를 들고 나오는 주축세력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와 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가운데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흐름은 저소득의 불안정 취업계층에서 생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을 누리는 중상층 이상의 계층에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발견과 확인이 가능한 것이, 사회계층을 모든 취업자들에 게 할당하고 분류한 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계층별 입장과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이야말로 사회계층 접근법의 진정한 의미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0> 노동조합에 대한 성-연령별 인식 차이



## 제4절 유럽사회경제 분류(ESeC)를 이용한 한국의 계층 분석

## 1. 개요

이 장에서는 한국의 사회경제 계층을 분류하고 계층의 분포와 구성,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범주형 계급 체계 가운데 유럽사회경제 분류(European Socio-economic Classification, ESeC)를 이용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와 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SeC는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경제적 지위 분류 체계로, 특히 직업 기반 계층 분석을 위해 설계된 도구이다. 이 체계는 Erikson-Goldthorpe-Portocarero (EGP)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며, 직업(occupation), 고용형태(employment status), 감독권 여부(supervisory statu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층을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직업 분류에 고용형태(정규/비정규)·종사상지위(임금/고용주/자영자·노무종사자), 사업체 규모를 추가로 적용하는 시도를 한다. 직업 분류는 국제직업분류에 ESeC코드화한 작업을 국제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연계한 결과에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 소분류 직업분류와 국제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한 계층 코드를 연계할 수 있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사용이 가능한 시계열(2009~2023년)을 분석대상으로 계층의 분포와 특성 변화를 추적한다.

사회경제 계층은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하는 기저(fundamental)이기 때문에 사회의 불평등의 단면과 그 변화를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계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계층 분류에 따라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어떻게 분포하고, 다차원적인 불평등 가운데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개입해야 하는 불평등의 차원은 무엇인지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계층에 따른 특성(소득, 자산 등)과 그 변화를 추적하여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드러낸다.

다만 ESeC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 유럽과 한국의 차이를 분석 방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직업은 임금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직업은 뚜렷한 위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계층 구분에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급이 발달되어 있고 법과 단체협약을 토대로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에 대한 보편성이 높은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임금과 사회보장권 등에서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정규직)이 핵심적인 차이를 만든다. 유럽의 계층 분류에서 사업체 규모를 사용하는 것은 고용주의 계층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지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미니잡과 같이 한계직 일자리를 제외하고 노동권 보장에 있어 고용안정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한국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 차이가 직업의 특성과 밀접할 경우 따로 분류에 활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각 변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한 후 계층 분류에 활용하고자 한다.

## 2. 유럽사회경제 계층 분류(ESeC) 방법

European Socio-economic Classification(ESeC)<sup>49)</sup>은 유럽 국가 간 비교연구와 각국의 사회 구조 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위 분류 체계를 제공한다. ESeC는 EGP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계급 분석의 표준 도구로 ESeC는 이론적으로는 Erikson-Goldthorpe-Portocarero(EGP)<sup>50)</sup> 계급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EGP 이론의 핵심 개념인 고용관계의 성격에 따라 직업을 구분한다. 즉, 자율성, 감독권, 계약 형태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계급', '노동자 계급', '자영업자' 등으로 계층화한다. 실무적으로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의 직업코드(3자리), 직업 지위 정보, 고용 형태 등을 결합하여 계급을 할당한다.

유럽 사회경제 계층 분류(ESeC)는 직업 기반 계층 분류로, 소분류(3-digit groups) 단위 직업 코드, 고용상태(고용주, 자영자, 피고용인); 작업장 규모(number of

49) Harrison, E., & Rose, D. (2006). The European Socio-economic Classification (ESeC) and the ISCO-88 codes: An evaluation. In: Final report to Eurostat.

50) Erikson, R., &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employees at the workplace); 감독자 여부(whether a worker is a supervisor)<sup>51)</sup> 정보가 필요하다. 감독자는 관리자나 전문직이 아니지만 주된 업무가 다른 근로자의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임금근로자다. 이 분류는 ‘고용 관계’로 노동시장과 생산 단위에서 지위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고용주, 자영자, 피고용인,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제외된 자로 구분한다.

고용관계 접근에서 기본적인 분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employers)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사고 그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위와 통제를 가진다; 자영자(self-employed or ‘own account’) 노동을 사지도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않는다; 피고용인(employees)은 그들의 노동을 고용주에게 판매한다. 피고용인은 직업의 고용관계에 따라 추가 분류되고 고용주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자영자는 직업에 따라 분류된다.

피고용인 중에는 다양한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이 있다. 노동 지위는 작업 현장에서의 권위와 통제와 관련된 위치이며, 자율성 정도는 두 번째 측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분류는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관계-피용인은 고용계약을 통해 고용주에 어떻게 규제되는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1) ‘서비스 관계’에서 피용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 ‘보상’으로 즉각적인 보상(임금)과 장기적 급여 전망(연공급, 안정성과 경력 기회의 보장) 제공한다. 계층 1과 계층 2가 해당한다. 2) ‘근로 계약’에 따라 노동량과 일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댓가로 일정한 노동량을 제공한다. 고용계약이 쉽게 종료되고 전망 요소는 없다. 계층 9와 약한 형태로 계층 7~8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3) 중간 또는 ‘혼합’ 형태, 계층 3~6에 해당한다. 피고용인의 계약은 (1) 그들의 업무가 얼마나 쉽게 감시되고 통제되어 지는가, (2) ‘자산 특수성’ 즉, 그들의 기술과 조직적 지식이 얼마나 고유하고 중요한가에 따른다. 감시가 어렵고 자산 고유성 높으면 서비스 관계가 일반적이고 대체가 쉬울수록 노동계약이 적용된다.

---

51)

&lt;표 3-34&gt; 유럽 사회경제계층 분류

	ESeC	공통 용어	고용관계
1	대 고용주, 높은 등급 전문직, 행정관리직 (Large employers, higher grade professional,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occupations)	높은 (higher salariat)	서비스 관계 (Service Relationship)
2	낮은 등급 전문직, 행정관리직 (Lower grade professional,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occupations), 높은 등급 기술직, 감독직(higher grade technician and supervisory occupations)	낮은 (Lower salariat)	수정 서비스 관계 (Service Relationship, modified)
3	중간직 (Intermediate occupations)	높은 등급 화이트칼라 노동자 (higher grade white collar workers)	혼합
4	소 고용주, 자영업자 (농업 제외) (Small employers, self-employed occupations)	쁘띠부루주아 또는 독립계약자 (Petit bourgeoisie or independents)	
5	자영업자 (농업 포함) (self-employed occupations)	쁘띠부루주아 또는 독립계약자 (Petit bourgeoisie or independents)	
6	낮은 감독직, 낮은 기술직 (Lower supervisory and lower technician occupations)	높은 등급 블루칼라 노동자 (Higher grade blue collar workers)	혼합
7	낮은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 (Lower service, sales and clerical occupations)	낮은 등급 화이트칼라 노동자 (Lower grade white collar workers)	수정 고용계약 (Labour Contract, modified)
8	낮은 기능직 (Lower technical occupations)	숙련 노동자(Skilled workers)	수정 고용계약 (Labour Contract, modified)
9	단순반복직 (Routine occupations)	준 또는 비숙련 노동자(Semi- and non-skilled workers)	고용계약 (Labour Contract)
10	일한 적 없음, 장기 실업자 (Never worked and long-term unemployed)	실업자(Unemployed)	

가구 단위 ESeC는 참조가 되는 한 가구원(a reference person, household reference person (HRP))을 골라서 그 사람의 지위로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지 소유, 임대 등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 공동 소유인 경우, 더 높은 소득자로 선정하고, 소득 같으면 연장자로 선정한다. 여기서는 주거지 소유, 임

대 등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에서 취업소득이 가장 큰 자로 선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고용 영역 정보를 이용해 다음의 경제적 자원의 변화를 분석한다.

<표 3-35> KLIPS 필요 변수 및 차수

구분				포함 차수
고용			직업(5~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전 차수
			사업체(작업장) 규모	전 차수
			종사상지위	전 차수
소득	개인		월소득, 연 취업소득	전 차수
	가구		시장, 경상, 가처분 등	전 차수
자산	실물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시가	전 차수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6차부터
		기타 실물자산	자동차	10차부터
	금융자산	저축액	자동차 외 기타 실물자산	11차부터
			은행예금	2차부터
			주식, 채권, 신탁	2차부터
			저축성 보험	2차부터
			아직 타지 않은 계	2차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2차부터
			기타 금융자산	2차부터
		전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전월세보증금	전 차수
			거주 외 입차부동산 보증금	6차부터

### 3. 분석 결과

#### 1) 유럽사회경제계층(ESeC) 분석 결과

계층 1, 4의 고용주는 10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 규모가 큰 유럽에서는 25인을 기준으로 삼지만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한국에서는 고용주 지원에 관한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10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개인 직업, 종사상지위, 고용주의 사업체 규모로 결정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계층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교육 및 기술과 지식의 특수성이 높은 계층 1~3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반면 일부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 비율 및 비취업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IT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증가하는 반면, 전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36> 개인 ESeC 분포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총합
2009	6.4	4.6	7.3	3.1	8.9	0.6	8.7	5.7	9.1	45.7	100.0
2010	6.5	5.1	7.1	2.9	9.1	0.6	9.2	6.1	9.3	44.2	100.0
2011	6.7	5.2	7.6	2.9	8.8	0.7	9.6	6.2	9.4	43.0	100.0
2012	6.6	5.5	7.6	2.5	9.1	0.5	10.1	6.0	9.2	43.0	100.0
2013	6.4	5.6	8.2	2.6	9.0	0.7	9.6	6.0	9.2	42.8	100.0
2014	6.6	6.1	8.5	2.5	8.8	0.7	9.7	5.7	9.2	42.1	100.0
2015	6.2	6.6	8.1	2.7	8.5	0.6	10.0	5.9	8.7	42.7	100.0
2016	6.5	6.5	8.2	2.6	8.4	0.6	10.0	5.8	8.9	42.4	100.0
2017	6.3	6.9	8.3	2.7	8.2	0.6	10.3	5.9	9.2	41.7	100.0
2018	6.2	7.2	8.6	2.7	8.2	0.6	10.0	5.8	9.3	41.5	100.0
2019	6.2	7.1	8.8	2.5	8.0	0.6	10.0	5.5	9.2	42.0	100.0
2020	6.1	7.1	8.7	2.4	8.1	0.6	9.8	5.7	8.9	42.6	100.0
2021	6.3	7.2	9.0	2.2	8.5	0.6	9.8	5.9	9.0	41.5	100.0
2022	6.7	7.5	9.2	2.1	8.6	0.6	10.1	5.6	8.7	40.9	100.0
2023	7.0	7.5	9.6	2.4	8.3	0.5	10.1	5.4	8.7	40.5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10인 이상 고용주와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 및 1인 자영자, 10인 이하 사업체여도 피고용인이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인 고용주, 계층 2와 3은 임금근로자 중에 전문직과 사무직(국제표준분류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일부)의 기술과 지식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 계층 4는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주(계층 1로 포함되는 전문관리직 고용주 제외),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일부 기능직을 포함하지만 거의 없음, 계층 7은 주로 서비스·판매직 임금노동자, 계층 8은 주로 기능직 및 조립직

임금노동자, 계층 9는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계층 10은 비취업자임.

가구원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구계층 분포는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 내에서 취업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원을 가구의 대표자로 선정하고 가구의 계층은 대표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계층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취업소득이 높은 계층 1~3의 비중 증가와 더불어 가구 계층 분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 1~3의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지위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가구원 수가 많은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계층 4(10인 미만 고용주)와 계층 5(1인 자영자) 비율은 감소했다. 비취업자 개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비취업자를 가구 내 대표자로 하는 비취업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2010년대 후반부터 증가했는데, 노령화로 비취업자만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 비율이 증가한 까닭으로 추측된다.

<표 3-37> 가구 ESeC 분포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총합
2009	10.8	6.5	11.1	7.6	16.7	1.1	10.2	8.6	14.1	13.3	100.0
2010	11.0	7.1	11.0	7.1	16.4	1.0	10.7	8.8	14.2	12.6	100.0
2011	11.1	7.3	11.5	6.8	16.0	1.2	10.4	9.2	14.0	12.4	100.0
2012	11.2	7.6	11.3	5.9	16.9	1.0	10.7	9.1	14.1	12.1	100.0
2013	10.6	7.8	12.1	6.3	16.3	1.2	10.8	9.1	13.5	12.3	100.0
2014	10.3	8.3	12.2	5.9	15.5	1.2	10.4	8.9	13.6	13.5	100.0
2015	9.9	8.8	12.1	6.4	15.4	1.1	10.3	9.5	13.4	13.3	100.0
2016	11.2	9.1	11.3	5.7	15.1	1.2	10.8	9.7	13.0	12.8	100.0
2017	10.9	9.2	11.7	6.3	14.9	1.0	9.9	9.6	13.8	12.8	100.0
2018	10.2	10.0	12.1	6.0	14.7	1.0	9.3	9.2	13.5	14.0	100.0
2019	10.2	10.3	12.4	5.3	14.1	1.1	9.8	8.9	13.6	14.2	100.0
2020	10.4	10.0	12.1	5.2	13.9	1.1	10.2	9.2	12.9	15.0	100.0
2021	10.5	10.5	12.9	4.2	14.3	1.0	9.9	9.2	12.8	14.6	100.0
2022	10.5	10.8	13.0	4.1	14.1	1.1	10.4	8.7	12.5	14.9	100.0
2023	11.5	10.7	13.2	4.8	13.5	0.9	9.9	8.6	12.1	14.7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10인 이상 고용주와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 및 1인 자영자, 10인 이하 사업체에도 피고용인이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인 고용주, 계층 2와 3은 임금근로자 중에 전문직과 사무직(국제표준분류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일부)의 기술과 지식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 계층 4는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주(계층 1로 포함되는 전문관리직 고용주 제외),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일부 기능직을 포함하지만 거의 없음, 계층 7은 주로 서비스·판매직 임금노동자, 계층 8은 주로 기능직 및 조립직 임금노동자, 계층 9는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계층 10은 비취업자임.

개인의 사회경제계층별 월 취업소득과 그 변화를 보면, 계층 1과 계층 4의 취업 소득이 다른 계층과 큰 격차를 보이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및 기술의 전문성·특수성이 높은 전문관리직 임금노동자인 계층 2와 3의 평균 소득은 1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주(계층 4)의 평균 소득보다 큰 폭 낮고, 2023년에는 그 차이가 181~189만 원에 이르렀다. 더욱이 사업체규모가 10인 이상인 고용주나 지식기술 수준이 높은 전문관리직 임금노동자, 이들의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로 구성된 계층 1의 소득이 1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주(계층 4)의 소득보다 일관되게 낮으며, 그 차이도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2023년 90만 원). 즉, 전문관리직 임금노동자의 소득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고용주 소득에는 이르지 못한다. 낮은 계층에서 계층의 순서와 취업소득 위계가 다른 하나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유사했으나 1인 자영자(계층 5)의 상대소득이 점점 낮아져 기능직 임금노동자(계층 8)와 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영세한 1인 자영자 비율이 높고 위장 자영자와 같은 회색지대 불안정 노동자 규모가 커지면서 1인 자영자의 열악한 지위가 두드러지며, 점차 심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기능직(계층 8)과 단순노무직(계층 9)보다 서비스·판매직(계층 7)의 월 취업소득이 낮고, 상대소득도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서비스·판매직에서 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서비스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은 매우 보편적이지만, 유럽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성을 띠는 반면,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초단시간의 비정규직, 한계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취약성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 취업소득이 전문관리직의 소득보다 큰 폭, 일관되게 높다는 점, 1인 자영자의 낮은 지위, 서비스·판매직 임금 노동자의 낮은 소득에는 한국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유성을 반영한 계층 분류 체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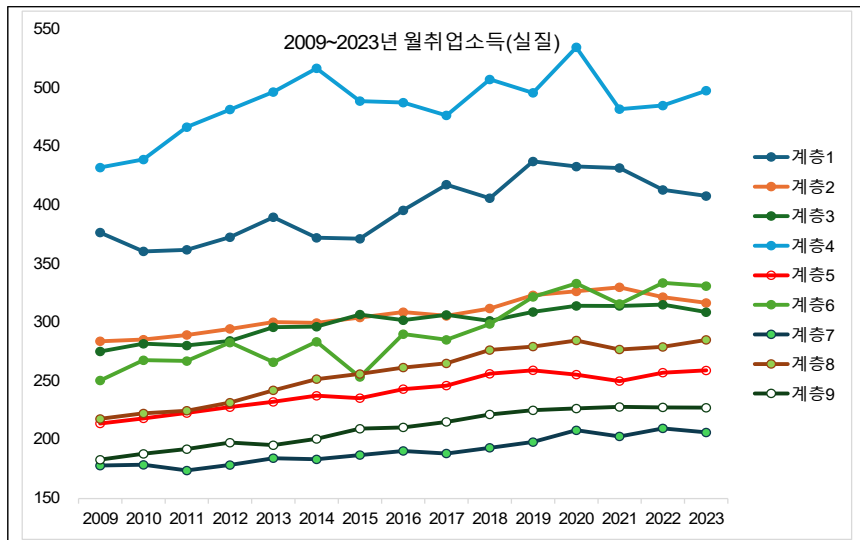
&lt;표 3-38&gt; ESeC 개인 평균 월 취업소득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8	9	10	총합
2009	377	284	275	432	214	251	182	218	207	.	251
2010	361	286	282	439	218	268	184	223	214	.	252
2011	362	289	280	467	223	267	179	225	219	.	254
2012	373	295	284	482	228	283	183	232	224	.	259
2013	390	300	296	497	232	266	189	242	224	.	267
2014	372	300	297	517	238	284	189	252	230	.	269
2015	372	304	307	489	236	254	192	256	241	.	271
2016	396	309	302	488	243	290	195	262	241	.	277
2017	418	306	307	477	246	285	192	265	250	.	280
2018	406	312	302	507	256	299	198	277	256	.	285
2019	437	323	309	496	259	322	206	280	258	.	292
2020	433	327	314	535	256	333	218	285	261	.	296
2021	432	330	314	482	250	316	215	277	260	.	291
2022	413	322	315	485	257	334	222	279	261	.	292
2023	408	317	309	498	259	331	220	285	262	.	29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lt;그림 3-51&gt; ESeC 개인 평균 월 취업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10인 이상 고용주와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 및 1인 자영자, 10인 이하 사업체여도 피고용인이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인 고용주, 계층 2와 3은 임금근로자 중에 전문직과 사무직(국제표준분류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일부)의 기술과 지식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 계층 4는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주(계층 1로 포함되는 전문관리직 고용주 제외),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일부 기능직을 포함하지만 거의 없음, 계층 7은 주로 서비스·판매직 임금노동자, 계층 8은 주로 기능직 및 조립직 임금노동자, 계층 9는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계층 10은 비취업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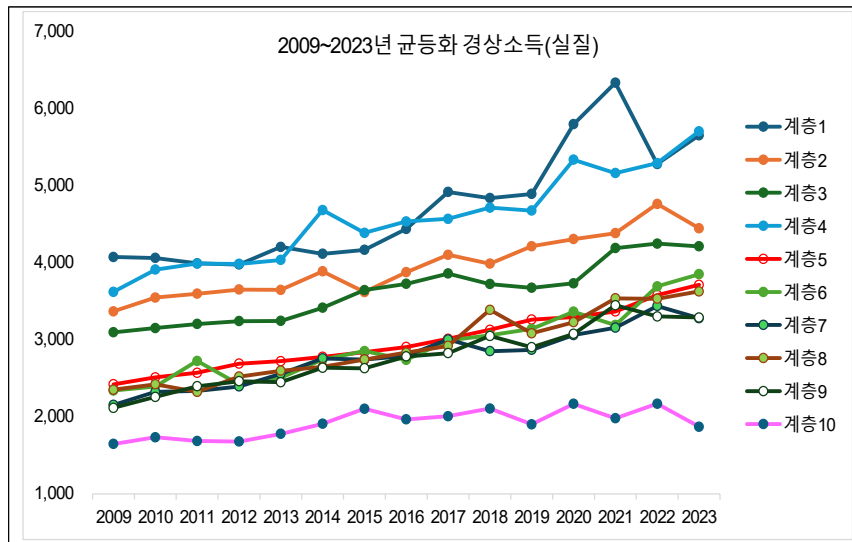
&lt;표 3-39&gt; ESeC 가구 평균 균등화 총소득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8	9	10	총합
2009	4075	3368	3097	3621	2422	2341	2154	2352	2116	1647	2648
2010	4062	3548	3153	3911	2511	2391	2324	2421	2258	1735	2762
2011	3992	3598	3205	3989	2571	2725	2335	2324	2397	1687	2793
2012	3977	3652	3242	3984	2689	2422	2394	2521	2462	1679	2841
2013	4206	3648	3245	4036	2722	2507	2559	2598	2448	1778	2914
2014	4116	3888	3416	4684	2779	2742	2758	2648	2637	1910	3048
2015	4167	3620	3645	4387	2839	2854	2742	2744	2630	2105	3091
2016	4439	3877	3726	4536	2906	2740	2791	2833	2783	1967	3195
2017	4919	4103	3860	4569	3013	2990	3004	2920	2827	2008	3354
2018	4839	3988	3723	4715	3130	3059	2851	3389	3050	2107	3400
2019	4893	4214	3675	4677	3262	3140	2869	3084	2903	1902	3355
2020	5798	4437	3733	5337	3294	3365	3061	3228	3076	2168	3589
2021	6337	4384	4190	5163	3367	3190	3157	3538	3448	1980	3771
2022	5281	4763	4249	5293	3581	3693	3438	3532	3303	2170	3782
2023	5654	4447	4213	5706	3713	3852	3281	3628	3288	1871	380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lt;그림 3-52&gt; ESeC 가구 균등화 총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10인 이상 고용주와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 및 1인 자영자, 10인 이하 사업체에도 피고용인이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인 고용주, 계층 2와 3은 임금근로자 중에 전문직과 사무직(국제표준분류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일부)의 기술과 지식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 계층 4는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주(계층 1로 포함되는 전문관리직 고용주 제외),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일부 기능직을 포함하지만 거의 없음, 계층 7은 주로 서비스·판매직 임금노동자, 계층 8은 주로 기능직 및 조립직 임금노동자, 계층 9는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계층 10은 비취업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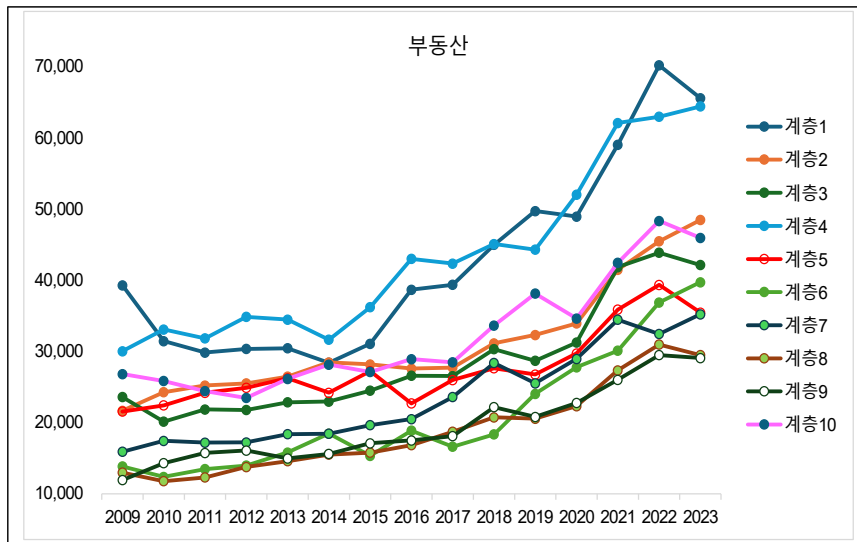
&lt;표 3-40&gt; ESeC 가구 부동산 자산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8	9	10	총합
2009	39348	21706	23627	30081	21600	13876	15939	13004	11955	26863	22565
2010	31491	24314	20178	33127	22459	12402	17474	11800	14333	25884	22041
2011	29888	25255	21883	31888	24237	13494	17222	12325	15770	24472	22273
2012	30401	25550	21817	34912	24931	13995	17248	13787	16103	23504	22793
2013	30497	26500	22885	34531	26273	15829	18418	14604	14994	26187	23540
2014	28447	28507	23003	31692	24230	18486	18468	15540	15635	28192	23324
2015	31122	28215	24535	36263	27258	15360	19674	15822	17136	27153	24810
2016	38722	27628	26624	43073	22732	18902	20525	16872	17537	28966	26090
2017	39421	27774	26579	42406	26026	16657	23637	18749	18130	28509	27181
2018	45053	31196	30368	45151	27680	18377	28416	20781	22204	33685	30796
2019	49791	32355	28737	44364	26805	24082	25572	20597	20829	38191	31029
2020	49011	33991	31291	52088	29760	27824	28994	22345	22792	34684	32793
2021	59123	41536	41912	62179	35933	30149	34507	27394	26060	42520	39786
2022	70295	45541	43937	63063	39411	36938	32494	31022	29538	48392	43670
2023	65676	48544	42206	64513	35510	39777	35261	29540	29120	46021	4302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lt;그림 3-53&gt; ESeC 가구 부동산 자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10인 이상 고용주와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 및 1인 자영자, 10인 이하 사업체에도 피고용인이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인 고용주, 계층 2와 3은 임금근로자 중에 전문직과 사무직(국제표준분류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일부)의 기술과 지식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 계층 4는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주(계층 1로 포함되는 전문관리직 고용주 제외),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일부 기능직을 포함하지만 거의 없음, 계층 7은 주로 서비스·판매직 임금노동자, 계층 8은 주로 기능직 및 조립직 임금노동자, 계층 9는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계층 10은 비취업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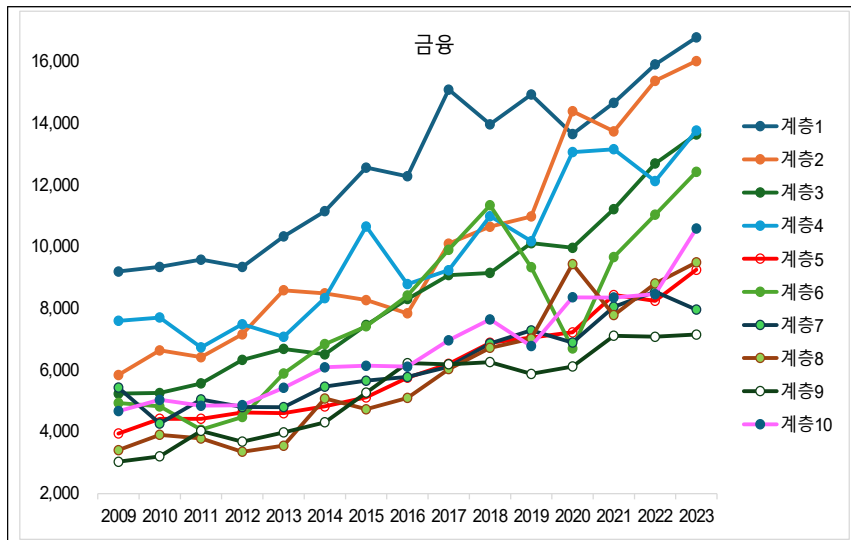
&lt;표 3-41&gt; ESeC 가구 금융 자산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8	9	10	총합
2009	9213	5853	5246	7612	3954	4943	5444	3413	3035	4680	5252
2010	9360	6651	5270	7717	4432	4834	4277	3911	3210	5047	5374
2011	9597	6429	5577	6748	4432	4076	5058	3791	4039	4854	5536
2012	9358	7174	6343	7501	4639	4488	4813	3360	3688	4871	5597
2013	10351	8601	6698	7091	4614	5899	4807	3556	3987	5435	5973
2014	11170	8504	6523	8349	4835	6855	5476	5092	4317	6101	6469
2015	12583	8285	7474	10675	5126	7432	5668	4741	5280	6151	7059
2016	12302	7854	8316	8802	5764	8432	5788	5108	6238	6124	7276
2017	15116	10119	9093	9253	6215	9919	6118	6042	6199	6981	8230
2018	13989	10666	9165	11007	6897	11360	6875	6733	6270	7658	8621
2019	14956	10998	10132	10194	7064	9351	7301	7035	5890	6792	8722
2020	13674	14414	9981	13087	7238	6715	6904	9454	6126	8375	9472
2021	14689	13760	11238	13181	8448	9683	8068	7795	7126	8366	9994
2022	15932	15400	12717	12145	8261	11056	8558	8825	7095	8476	10627
2023	16810	16042	13660	13785	9268	12444	7974	9509	7166	10606	1152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lt;그림 3-54&gt; ESeC 가구 금융 자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10인 이상 고용주와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 및 1인 자영자, 10인 이하 사업체여도 피고용인이 관리직, 전문직 임금노동자인 고용주, 계층 2와 3은 임금근로자 중에 전문직과 사무직(국제표준분류의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일부)의 기술과 지식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 계층 4는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주(계층 1로 포함되는 전문관리직 고용주 제외),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일부 기능직을 포함하지만 거의 없음, 계층 7은 주로 서비스·판매직 임금노동자, 계층 8은 주로 기능직 및 조립직 임금노동자, 계층 9는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계층 10은 비취업자임.

가구 대표자 지위를 따르는 가구의 계층별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을 비교해 보면, 개인 취업소득은 계층 4가 계층 1보다 크게 높은 반면, 가구소득과 부동산소득은 매우 유사하며 다른 계층보다 훨씬 큰 값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의 경우 두 번째 높은 집단군이 계층 2와 계층 3, 직업 위계가 높은 임금노동자 가구이다. 그 외에 1인 자영자 가구,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임금노동자 가구의 가구소득은 세 번째 집단으로 매우 큰 유사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비취업자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계층 1과 계층 4의 평균 부동산 자산액이 일관되게 가장 높은데, 201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던 또는 감소하던 격차가 2010년 중반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다른 계층의 경우 2010년대 완만하게 증가하다 2020년부터 급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용인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와 관리직과 전문직 임금근로자가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을 가장 크게 늘린 계층이라고 판단된다. 부동산 규모에서도 계층 2와 3이 2번째 집단을 구성하지만, 가구소득과 달리 다른 계층과의 차이가 크지 않고, 비취업자만으로 구성된 계층 10의 부동산 자산규모가 계층 2와 유사하다. 소득과 달리 노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계층 5~9는 평균 부동산 자산액이 계층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하지만 1인 자영자가 대표하는 계층 5에서 2015년부터의 부동산 자산의 평균값이 크게 하락한 데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자산 분배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금융 자산은 계층 5~10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하단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 상단의 모습은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과 다른데, 전문관리직 임금노동자 비중이 큰 계층 1의 금융자산 규모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계층 2의 임금노동자인데 201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금융자산 평균이 계층 1의 그것만큼 증가하여, 소득이 높은 전문관리직 임금노동자(계층 1~2)의 금융자산 투자가 급증하였음을 말해준다. 10인 미만 고용주(계층 4)는 취업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매우 높은 데 비해 금융자산은 별로 높지 않고 계층 3의 임금노동자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고용주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취업소득이 안정적이 높고 안정적인 전문관리직, 사무직, 지식·기술 특수성 높은 임금노

동자는 금융 자산으로 자산액을 증식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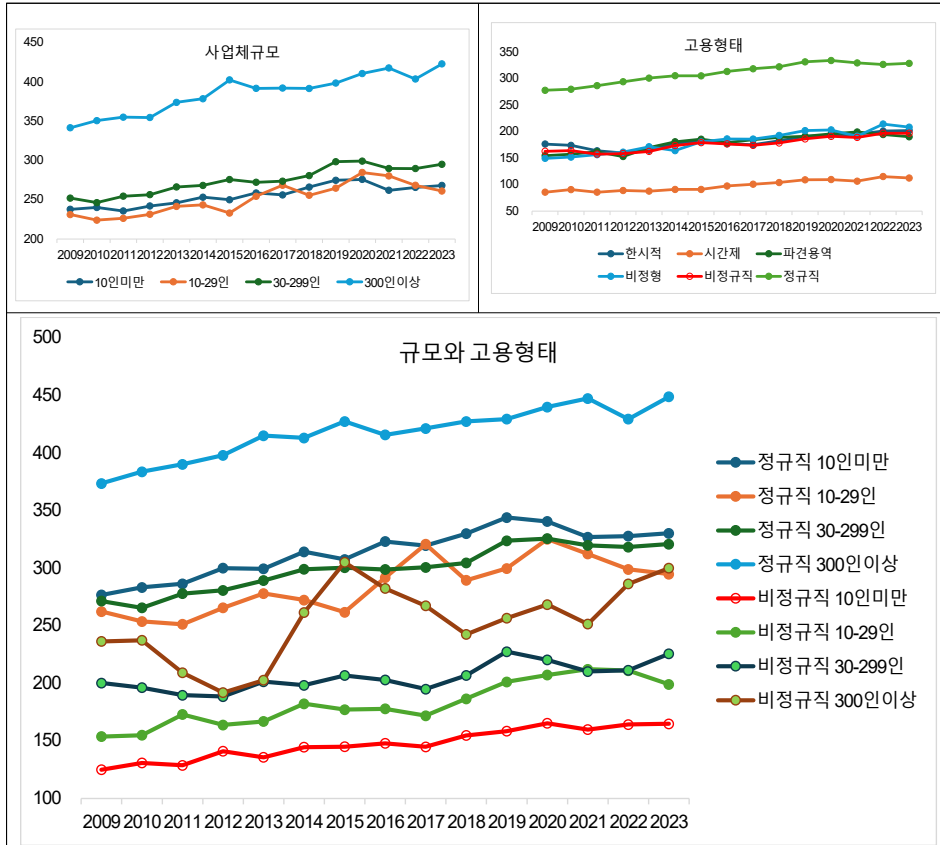
## 2) 한국 사회경제계층(KSeC) 분류

직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는 유럽사회경제계층 분류를 활용하되 한국의 고유성을 반영한 분류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임금 노동시장에서 임금, 업무자율성, 노동권, 사회보장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과 사업체 규모이다. 유럽 계급분류에서 고용주와 자영자, 임금노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생산자본 소유 여부에 따른 것인데 임금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 사용자의 감독과 지시를 따르지만 고용주와 자영자는 자신의 노동에 자율성이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임금노동자도 관리감독 노동 여부와 지식과 기술의 특수성에 따라 업무의 자율성이 결정된다. 여기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일자리 안정성 차이로 인해 협상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구분할 만하다. 유럽의 분류에서는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만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데, 기업별 노조가 주된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자의 사업체 규모가 일자리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도 고려할 만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다양한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취업소득 수준은 다음과 같다. 300인 이상 기업과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소득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10인 미만과 10~29인은 임금이 가장 낮으며 평균이 거의 차이가 없고, 30~299인 사업체는 이들보다 약간 더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매우 큰 반면,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평균임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 두 변수를 교차하여 8개 집단의 평균 임금 변화를 보면, 상위 4개 집단이 정규직이고, 하위 4개의 집단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정규직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여부가 임금 프리미엄을 크게 하지만, 정규직 여부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지위에서 더욱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를 유럽사회경제계층 구분의 직업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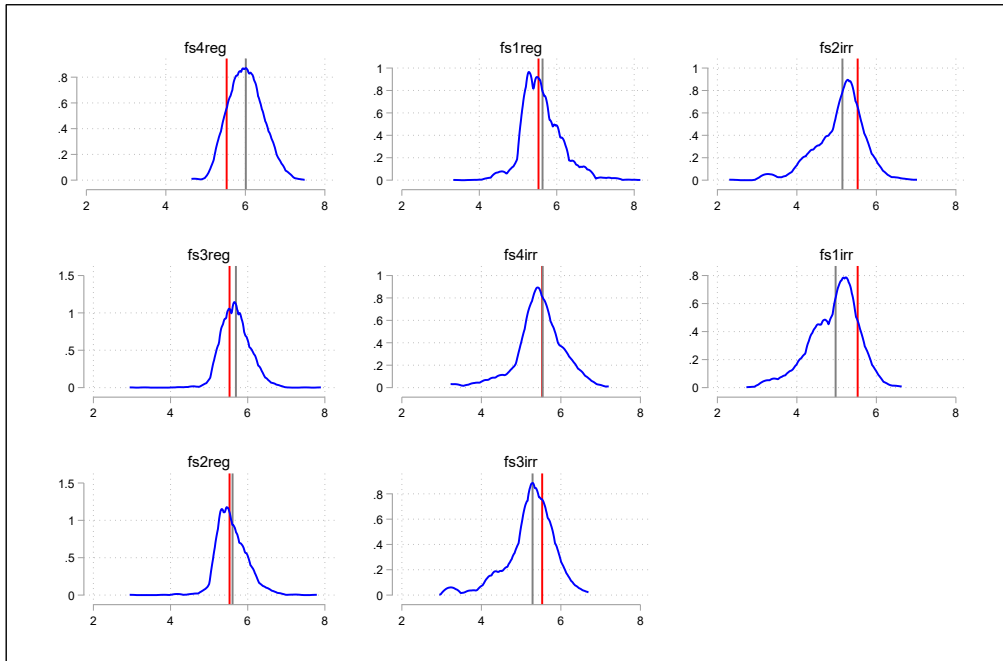
와 피고용인 여부와 연계하여 한국의 사회경제계층 구분을 시도해본다.

<그림 3-55> 임금노동자 월취업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lt;그림 3-56&gt; 2023년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월 취업소득 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빨간색 세로선은 2023년 로그 취업소득의 중위값, 회색 세로선은 각 집단 로그 취업소득의 평균값임.

한국의 사회경제계층은 직업과 종사상지위,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다. 계층 1은 1인 이상의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이며, 계층 2는 전문관리직과 대부분의 사무직 및 지식·기술의 특수성이 있는 기능직 직업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이다. 유럽 사회경제계층의 계층2와 3의 직업(소분류)이 여기에 해당한다. 계층 3은 계층 2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정규직 노동자이다. 계층 4는 계층 2의 직업군을 가진 비정규직으로,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낮은 협상력을 지니지만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계층 5는 1인 자영자로 정의상 근로시간과 가격에 있어서 타인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작업 시간과 가격이 결정되는 위장 자영자인 플랫폼 노동자, 클라우드 워커 상당수가 1인 자영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이 있다고 보여진다. 계층 6은 계층 3과 동일한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마지막 계층 7은 비취업자이다. 계층의 순서는 EGP의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출발한 유럽의 사회경제계층 분류를 차용했지만, 취업소득이라는 1차적인 경제적 수준에 따른 귀납적인 접근이다. 이는 한편으로 이론적 토대가 견고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ESeC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계층은 가구의 대표자, 즉 가구 내에서 취업소득이 가장 높은 개인의 계층 지위를 따른다. 이에 따른 개인 및 가구계층별 개인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개인과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계층 2와 계층 6의 직업 위계가 높은 정규직 취업자 비율과 직업 위계가 낮은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율은 증가했으며, 계층 3의 직업 위계 높은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전문관리직 및 지식 특수성이 높은 직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확률은 증가한 반면, 직업 위계 낮은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확률 또한 증가해 이중화가 심화되었다. 가구 계층 분포에서는 전문관리직 정규직 가구의 비율을 증가한 반면,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은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lt;표 3-42&gt; 개인 KSeC 분포

(단위: %)

	1	2	3	4	5	6	7	총합
2009	4.5	14.4	14.8	3.2	8.7	8.7	45.7	100.0
2010	4.4	14.8	15.0	3.2	8.9	9.6	44.2	100.0
2011	4.4	15.5	15.0	3.3	8.5	10.2	43.0	100.0
2012	3.9	15.6	14.4	3.3	8.9	10.8	43.0	100.0
2013	3.9	16.4	14.6	3.3	8.8	10.2	42.8	100.0
2014	3.7	16.7	13.5	4.1	8.7	11.1	42.1	100.0
2015	3.9	16.7	13.6	3.8	8.4	11.0	42.7	100.0
2016	4.0	17.1	13.4	3.5	8.3	11.3	42.4	100.0
2017	4.1	17.4	13.6	3.4	8.0	11.7	41.7	100.0
2018	3.9	17.7	14.0	3.7	8.1	11.1	41.5	100.0
2019	3.6	17.5	13.5	4.2	8.0	11.2	42.0	100.0
2020	3.4	17.8	13.3	3.8	8.1	11.0	42.6	100.0
2021	3.2	18.0	13.4	4.2	8.4	11.2	41.5	100.0
2022	2.9	18.9	13.2	4.3	8.5	11.2	40.9	100.0
2023	3.3	18.8	13.0	5.0	8.2	11.2	40.5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계층 2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3은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지식·기술 특수성 및 자율성 낮은 직업군의 정규직, 계층 4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계층 4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7은 비취업자임.



&lt;표 3-43&gt; 가구 KSeC 분포

(단위: %)

	1	2	3	4	5	6	7	총합
2009	10.9	22.6	21.4	4.1	15.8	11.9	13.3	100.0
2010	10.3	23.5	20.9	3.9	15.6	13.2	12.6	100.0
2011	10.2	24.6	20.8	3.6	15.1	13.3	12.4	100.0
2012	9.2	24.8	20.8	3.5	16.0	13.6	12.1	100.0
2013	9.1	25.8	21.1	3.5	15.6	12.6	12.3	100.0
2014	8.6	25.5	19.0	4.4	14.9	14.1	13.5	100.0
2015	8.9	25.5	19.8	4.1	15.0	13.5	13.3	100.0
2016	8.8	26.4	19.3	3.7	14.7	14.3	12.8	100.0
2017	9.3	26.5	19.9	3.6	14.3	13.6	12.8	100.0
2018	8.5	27.5	20.1	3.5	14.3	12.2	14.0	100.0
2019	7.6	27.5	19.7	4.3	13.7	12.9	14.2	100.0
2020	7.3	27.4	19.3	4.2	13.6	13.2	15.0	100.0
2021	6.4	28.4	18.9	4.6	13.9	13.2	14.6	100.0
2022	6.0	28.8	18.5	4.9	13.8	13.3	14.9	100.0
2023	6.8	28.8	18.6	5.6	13.2	12.3	14.7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계층 2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3은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지식·기술 특수성 및 자율성 낮은 직업군의 정규직, 계층 4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계층 4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7은 비취업자임.

한국의 사회경제계층별 월 취업소득과 그 변화를 보면, 계층 1 고용주의 취업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최상위 집단보다 평균 150~180만 원 높다. 2023년 각 계층의 소득 분포를 보면 계층 2는 분산이 작고 평균값(회색 세로선)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계층 1의 분산이 매우 크고 왼쪽 끝단의 비중이 계층 2보다 크지만 중위값(빨간 세로선) 왼쪽에 있는 비중이 계층 2보다 훨씬 작고 평균값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유럽 계층 분류에서와 같이 고용주의 사업체 규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질적이지만 계층 2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가구의 균등화 경상소득,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에서도 계층 1의 수준이 가장 높다. 특히 부동산 자산에서는 고용주 가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평균 자산 수준을 보이며 다른 모든 계층과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금융 자산에서는 전문관리 정규직보다 약간 낮으며 최근 2년에는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고용주가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높은 자산 증식을 보이는 한편 금융 자산 투자로 증가한 반면, 임금노동자는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취업소득은 계층 1과 2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계층 2와 다른 계층군(계층 3~5)의 격차도 크다. 비전문직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문관리기술직 비정규직과 1인 자영자는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며 상대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비전문직 비정규직의 임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최하단을 보이는데, 2023년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비스직 등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로 월 취업소득이 매우 낮은 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대부분 중위값 왼쪽에서 소득 지위의 열악함을 드러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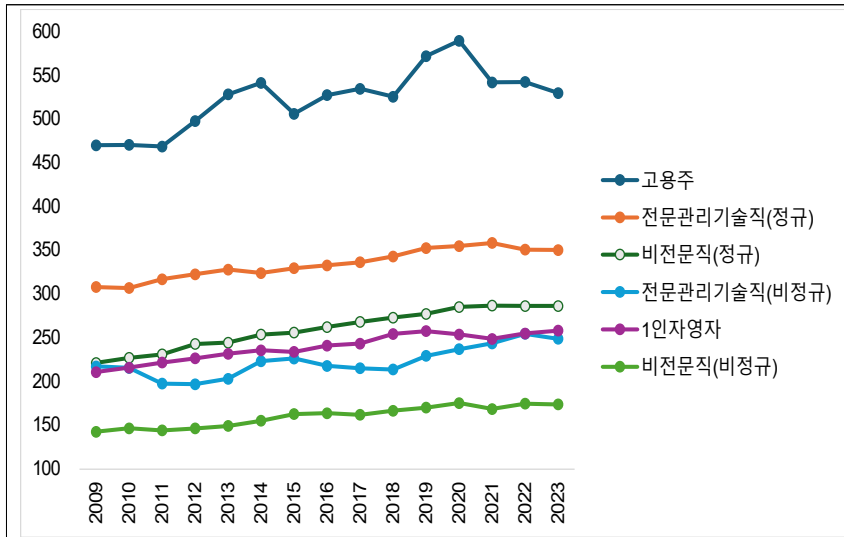
<표 3-44> KSeC 개인 평균 월 취업소득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총합
2009	471	308	222	218	211	143	.	251
2010	471	307	227	216	216	147	.	252
2011	469	317	232	198	222	144	.	254
2012	498	323	243	197	227	147	.	259
2013	529	329	245	204	232	150	.	267
2014	542	325	254	224	236	156	.	269
2015	507	330	256	227	234	163	.	271
2016	528	333	263	218	242	164	.	277
2017	535	337	269	216	244	162	.	280
2018	526	344	273	214	255	167	.	285
2019	573	353	278	230	258	171	.	292
2020	590	355	286	237	254	176	.	296
2021	543	359	287	244	249	169	.	291
2022	543	351	287	255	255	175	.	292
2023	531	351	287	249	259	174	.	29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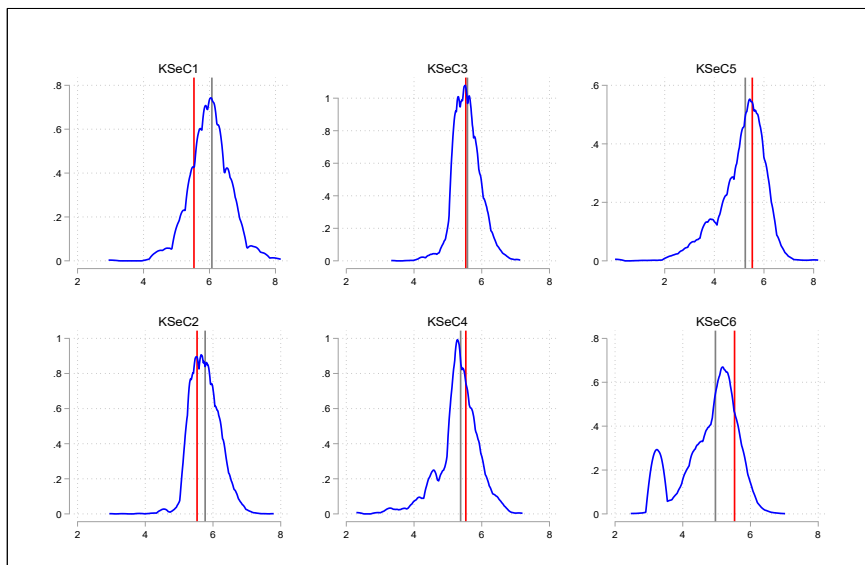
&lt;그림 3-57&gt; KSeC 개인 월 취업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계층 2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3은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지식·기술 특수성 및 자율성 낮은 직업군의 정규직, 계층 4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계층 4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7은 비취업자임.

&lt;그림 3-58&gt; 2023년 KSeC 개인 월 취업소득 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가구 계층별 가구 소득은 고용주(계층 1)과 전문관리직 정규직(계층 2)이 순서대로 다른 계층보다 훨씬 크다. 그 다음은 전문관리기술직 비정규 노동자, 비전문직 정규직 노동자, 1인 자영자가 큰 차이 없이 등락을 보였다. 그 다음은 가구의 대표자가 비전문직 비정규직 노동자, 비취업자 순이다.

부동산 자산에서는 노인 비율이 높은 비취업자 가구가 소득과 달리 전문관리기술직 정규직(계층 2)과 비정규직(계층 4)만큼의 높은 순위를 보이며, 2등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하단에서는 1인 자영자(계층 5)와 비전문직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층 3과 계층 6)이 순서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비전문직의 부동산 자산 수준이 낮은 것은 현재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와 더불어 부모 세대의 낮은 이전 효과 영향일 수 있어 추가적인 분석을 요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 격차는 점차 커졌으며 2020년 이후 이 격차는 더욱 커졌음은 유럽 계층 분석에서 확인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 자산은 계층 1과 2, 그 외의 집단으로 양분되었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관리기술직 비정규직의 금융자산 규모가 불안정하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교육수준에 따른 투자 행위가 분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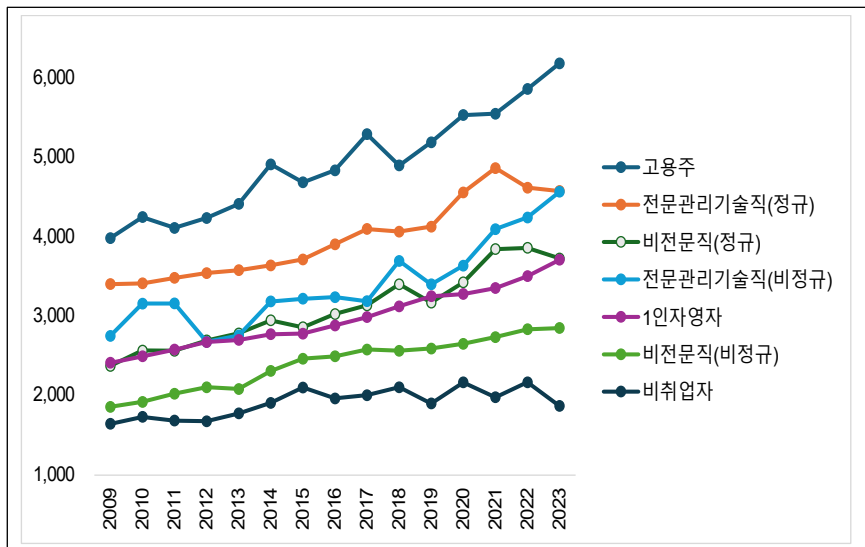
&lt;표 3-45&gt; KSeC 가구 평균 균등화 총소득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총합
2009	3986	3406	2376	2755	2416	1860	1647	2648
2010	4250	3415	2570	3161	2497	1922	1735	2762
2011	4115	3485	2566	3163	2581	2026	1687	2793
2012	4239	3545	2697	2680	2676	2107	1679	2841
2013	4416	3581	2786	2760	2704	2085	1778	2914
2014	4915	3643	2950	3188	2775	2312	1910	3048
2015	4688	3717	2862	3222	2782	2467	2105	3091
2016	4840	3908	3029	3242	2885	2497	1967	3195
2017	5294	4100	3139	3190	2990	2582	2008	3354
2018	4900	4067	3405	3699	3127	2566	2107	3400
2019	5193	4130	3173	3404	3253	2595	1902	3355
2020	5534	4561	3428	3640	3282	2654	2168	3589
2021	5552	4867	3848	4099	3356	2739	1980	3771
2022	5863	4621	3863	4245	3506	2837	2170	3782
2023	6186	4579	3730	4569	3713	2852	1871	380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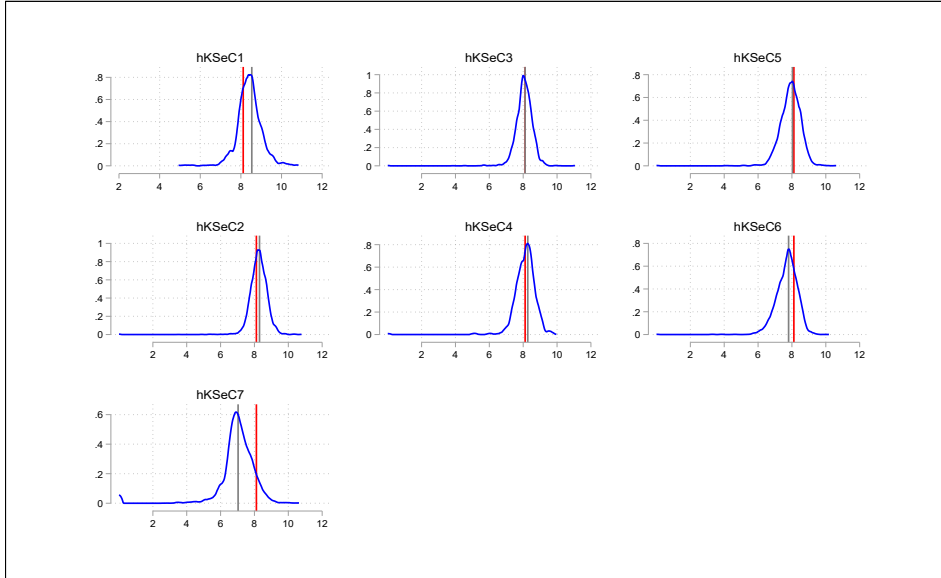
&lt;그림 3-59&gt; KSeC 가구 균등화 경상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계층 2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3은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지식·기술 특수성 및 자율성 낮은 직업군의 정규직, 계층 4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계층 4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7은 비취업자임.

&lt;그림 3-60&gt; 2023년 KSeC 가구 계층별 균등화 가구소득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lt;표 3-46&gt; KSeC 가구 부동산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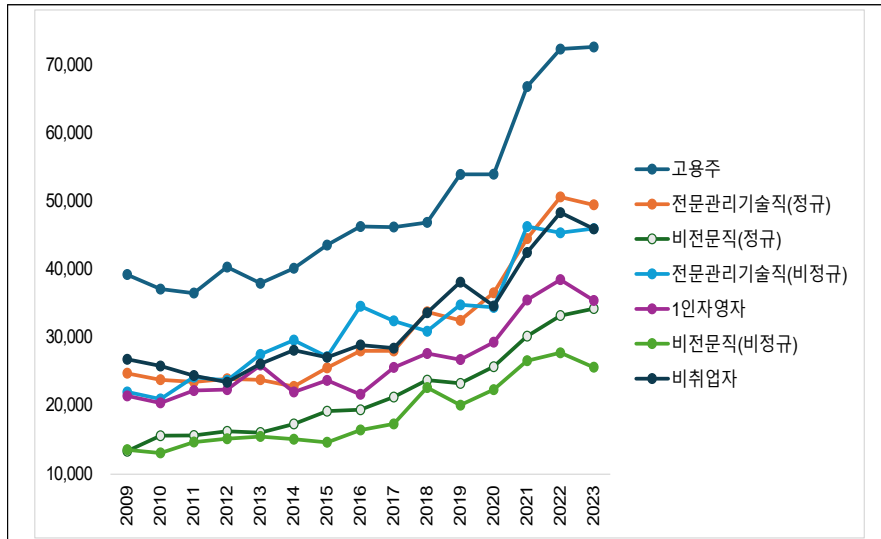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총합
2009	39302	24819	13364	22072	21499	13599	26863	22565
2010	37179	23854	15645	21036	20468	13117	25884	22041
2011	36584	23541	15686	24243	22273	14719	24472	22273
2012	40400	23997	16287	23758	22411	15207	23504	22793
2013	38017	23856	16102	27586	26009	15533	26187	23540
2014	40222	22876	17363	29673	22061	15137	28192	23324
2015	43634	25611	19260	27237	23775	14672	27153	24810
2016	46361	28087	19461	34657	21714	16482	28966	26090
2017	46277	28093	21333	32493	25660	17379	28509	27181
2018	46943	33823	23804	30990	27724	22723	33685	30796
2019	54002	32574	23336	34866	26825	20134	38191	31029
2020	54029	36633	25776	34483	29373	22412	34684	32793
2021	66874	44573	30260	46354	35568	26650	42520	39786
2022	72394	50687	33287	45438	38542	27823	48392	43670
2023	72703	49540	34296	46046	35502	25704	46021	4302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 개인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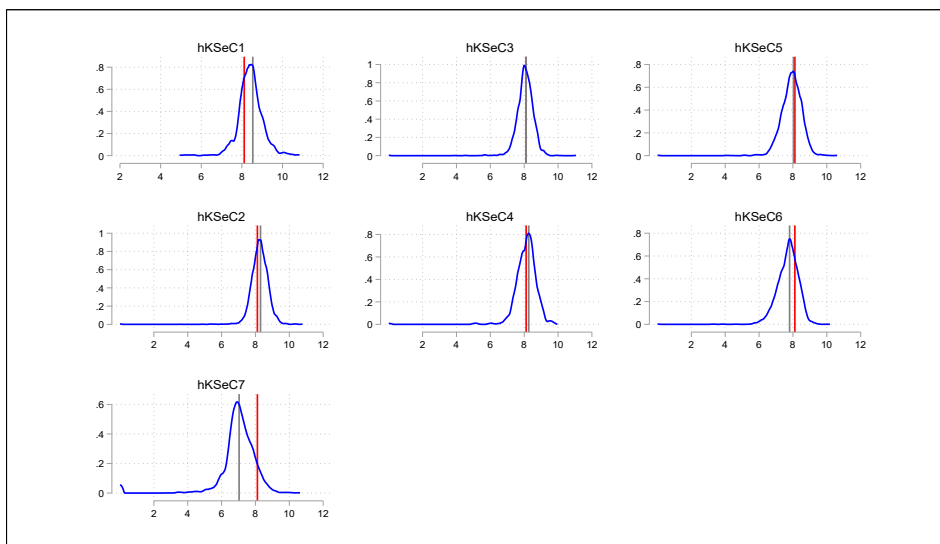
&lt;그림 3-61&gt; KSeC 가구 부동산 자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계층 2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3은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지식·기술 특수성 및 자율성 낮은 직업군의 정규직, 계층 4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계층 4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7은 비취업자임.

&lt;그림 3-62&gt; 2023년 KSeC 가구 부동산 자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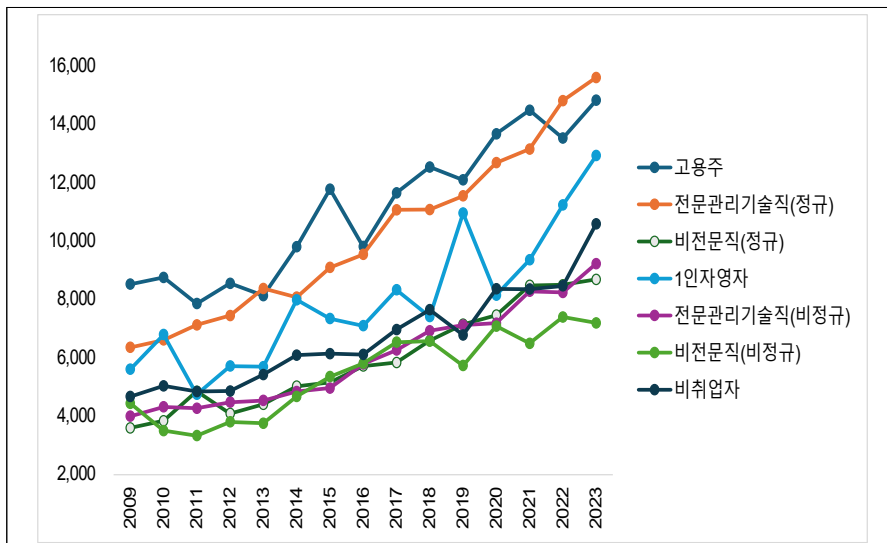
&lt;표 3-47&gt; KSeC 가구 금융 자산

(단위: 만 원)

	1	2	3	4	5	6	7	총합
2009	8534	6370	3608	5616	4008	4451	4680	5252
2010	8768	6621	3853	6805	4328	3515	5047	5374
2011	7868	7139	4862	4757	4280	3343	4854	5536
2012	8566	7458	4098	5728	4487	3812	4871	5597
2013	8144	8387	4418	5704	4548	3766	5435	5973
2014	9817	8088	5038	7999	4853	4686	6101	6469
2015	11793	9106	5172	7352	4973	5366	6151	7059
2016	9823	9553	5729	7108	5799	5818	6124	7276
2017	11665	11085	5848	8339	6275	6546	6981	8230
2018	12551	11094	6599	7421	6938	6583	7658	8621
2019	12107	11560	7160	10970	7129	5742	6792	8722
2020	13691	12697	7474	8160	7199	7098	8375	9472
2021	14501	13167	8494	9368	8289	6507	8366	9994
2022	13544	14829	8512	11248	8251	7411	8476	10627
2023	14841	15621	8698	12945	9238	7205	10606	1152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lt;그림 3-63&gt; KSeC 가구 금융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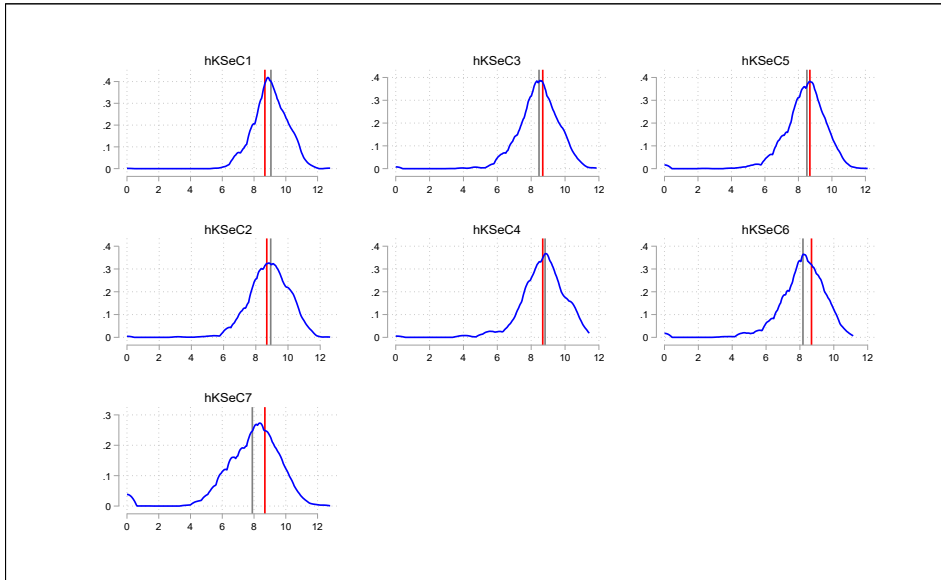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주 1 : 개인가중치 적용, 2 : 계층 1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 계층 2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3은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지식·기술 특수성 및 자율성 낮은 직업군의 정규직, 계층 4는 전문관리직 및 기술 특수성이 있는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5는 1인 자영자, 계층 6은 계층 4 직업군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계층 7은 비취업자임.



&lt;그림 3-64&gt; 2023년 KSeC 가구 금융자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KLIPS)

## 제5절 소결 및 함의

사회계층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단순한 격차의 확대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계층화로 위계화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계층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개인과 가구 수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사회계층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의 안정성, 소득의 획득과 자산 축적 능력의 질적인 차이를 낳고 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서 자본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이고 누적적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

둘째, 고용의 질이 소득 및 계층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이 재확인되었다.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비교할 때보다, 비정규직의 직업지위를 추가로 고려하여 계층을 분류해서 비교한 결과 계층간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계층' 간 차이로 고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계층간의 결혼과 출산, 자산의 형성 등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고용과 소득, 자산의 격차가 결혼에 미치는 비례적인 영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생애미혼율의 급증과 빈곤 1인가구의 증가에서 이들이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네째, 한국의 사회계층 구조는 전통적인 직업 분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닌다. 고용형태간 차별이 추가되고 기업규모에 따른 영향과 가족구성원의 영향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유럽사회경제분류

(ESeC)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한국의 계층 구조는 고용 관계의 불안정성과 계층 간 이동성의 경직성이 두드러지는 독자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맥락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이 아닌 '고용-소득-자산'이라는 연쇄 고리와 이를 재생산하는 '사회계층' 구조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데이터에서 이같은 필요성을 확인하고 노동패널 데이터에 대한 사회계층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심층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제4장

# 결론

제1절 한국의 불평등 현단계

제2절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사실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후속 과제



## 제4장 ■ 결론

### 제1절 한국의 불평등 현단계

지금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승인용 RAS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배 실태를 확인하고,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계층의 분포와 변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가금복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는 2010년대 이후 개인 취업소득과 가구 처분가능소득에서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최상위층의 금융자산 소득 증가 등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포와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면서, 개인과 가구의 소득분위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있고, 부부간의 소득분위 동질성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개인간 불평등보다 가구간 불평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취업형태와 가구원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N잡러 증가로 인해 가구소득의 혼합유형이 증가하는 것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구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가구소득의 최상위층과 하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상위 소득과 자산을 가진

계층은 고용주와 전문직을 중심으로 임금노동자의 상위 일부가 포함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의 하위층에는 고령자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과 임금노동자의 상위계층에 여성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핵심 노동계층이었던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고령자 가운데 비취업자들이 고소득 고자산층에 속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계층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단순한 격차 수준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으로 위계화된 계층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의 안정성, 자산 형성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이고 누적적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간 격차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비정규직의 직업지위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비전문직 비정규직의 열악한 지위가 보다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계층’간 차이로 고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1인가구의 증가와 비혼 및 비출산 현상의 확대가 저소득계층과 전문직 중간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고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저소득 남성의 비혼율과 생애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의해서 보아야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결혼과 가족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최하위에 있는 불안정노동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배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제2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이 아닌 '고용-소득-자산'이라는 연쇄 고리와 이를 재생산하는 '사회계층' 구조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아직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 RAS 데이터와 노동패널 데이터에 대한 사회계층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분석이 이러한 분석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과 가구, 고용과 소득 및 자산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로서의 장점은 있었지만, 가계와 기업 또는 노동과 자본 등 거시적 국민경제 수준에서 소득과 자산의 분배와 축적이 이루어지는 차원의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최근 기업의 유보이익이 가계로 분배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국민경제수준의 가계분배계정의 총량과 거의 일치하는 자료 대표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과 분석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계층 분류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론과 분석방법을 모두 적용하였지만,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계층분류와 사전적 정의에 의한 계층분류를 교차 검증하고 추가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용과 직업을 중심으로 분류한 사회계층을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분류한 계층분류와 교차할 경우 사회계층 내부의 양적, 질적인 차이가 발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증과 비교분석을 계층 내부의 이질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계층분류의 결과에 대한 분석 외에 일부 인과추론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도출된 계층분류의 기초결과를 활용한 다양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특정 코호트 집단의 생애궤적을 사회계층의 변화와 이동성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과 직업별로 계층 이동성의 차이와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번 연구의 후속 연구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후속 과제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다소 활발하지 않았던 사회계층 분석 방법론의 유효성과 의의를 다시 환기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데이터의 인프라 구축과 공개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자의 고용과 소득, 자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제한적으로 가구원 자료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산업과 직업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의 소득표본 자료는 전체 소득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근로소득과 일부 종합소득신고자 표본을 따로따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취업자의 고용상 지위와 직업, 산업,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자산에 관한 충실한 표본자료를 구축하고 정책과 학술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공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사회계층 분석을 비롯한 불평등 연구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실태 진단과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신욱, 강두용, 홍민기, & 정현상. (20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원택, 구인회, 권현지, 김용창, & 주병기. (2018).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푸른길.
- 공제욱. (1989). 1950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경제와사회, 3, 227-263.
- 구해근. (2007).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계급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 경제와사회, 255-289.
- 권현지, 김영미, & 권혜원. (2015). 저임금 서비스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경제와사회, 107, 44-78.
- 권현지. [네이버 열린연단]. (2023). 기술발전과 직업·계층 구조의 변화. YouTube. [https://youtu.be/Nm\\_19JEXUIk?si=UAM2PeiARjr-tXWQ](https://youtu.be/Nm_19JEXUIk?si=UAM2PeiARjr-tXWQ)
- 김낙년 & 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 김낙년. (2012).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125-158.
- 김낙년. (2012).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125-158.
- 김낙년. (2016).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석, 22(3), 147-208.
- 김낙년. (2016).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석, 22(3), 147-208.
- 김낙년. (2018a).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사회과학연구, 25(2), 175-196.
- 김낙년. (2018b).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 한국경제포럼, 11(1), 1-32.

- 김낙년. (2023).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한국경제포럼, 16(2).
- 김민정.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 및 자산 결합분포 특성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4), 225-248.
- 김상욱, 송유진, 신동준, 신승배, 엄석진, & 윤영근. (2012).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통계와 사례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공정성. 한국경제신문.
- 김상조. (2014).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모집단 기준 전환 100분위 자료를 기초로. 경제개혁리포트, 1-35.
- 김수한. (2012). 기업조직의 변화와 여성의 관리직 진출. 한국사회, 13(2), 113-138.
- 김원섭, & 김수한. (2013). 한국의 국가공공성 형성과 구조: 발전국가의 복지제도 발전을 중심으로:발전국가의 복지제도 발전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6(2), 42-74.
- 김현경. (2024). 2004~2019년 한국 임금불평등 추이와 변화의 원인. 사회경제평론, 37(2), 1-43.
- 남형우, & 김수한. (2024). 거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집단의 차등적 효과에 관해서. 사회과학연구, 37(1), 1-43.
- 박강우 & 서영선. (2018). 기능적 소득분배와 장기 경제성장. 경제발전연구, 24(1), 33-67.
- 박명호. (2025).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재정정책논집, 27(1), 31-59.
- 박보람. (2024).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23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고용이슈, 6-19.
- 박영삼. (2024).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용혜인·이용우·신장식·한창민 의원실.
- 박진. (2025). 국민계정상 가계분배계정 작성 결과. National Accounts Review.
- 박해경, 한승균, & 김상일. (2023). 가계금융복지데이터를 이용한 세대 간 순자산 격차 분석 2012~2021: 수도권 · 비수도권 중심으로 APC분석을 이용하여.

- 국토계획, 58(3), 167-179.
- 박현준, & 정인관. (2021). 20년간의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30~49세 두 남성 코호트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55(3), 159-191.
- 서관모. (1990). [특집: 현단계 사회과학논쟁의 쟁점] 신중간계층층과 계급분석. 경제와사회, 4, 40-63.
- 서재원, & 진장익. (2021). 주택가격의 불평등은 계층이동 가능성의 기대감을 낮추는가? 국토계획, 56(7), 141-156.
- 서형수의원실. (2018). 계층별 소득분포와 실효세율 추이—2018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8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자료집).
- 성수빈. (2019). 아버지의 실직이 자녀의 첫 번째 직업의 위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20(2), 37-62.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22).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본 개인소득 분배 상황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2. 3. 14.).
- 신광영. (2008). 세계화 시대 계급론과 계급 분석. 경제와사회, 238-255.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35-60.
- 신행철 외. (2000).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아르케.
- 신행철, 양춘, 정대연, & 김석준. (1991).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의식: 국제적 비교를 위한 조사 연구. 아세아연구, 34(2), 1-44.
- 신행철. (1997). 사회계급의 개념과 관점. 사회발전연구, 제13집.
- 안정화. (2024). 노동조합은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궤적과 함의 (2003-2022). 산업노동연구, 30(2), 5-39.
- 윤정향. (2005).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원인과 배제기제(exclusion mechanism)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희숙. (2016).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KDI FOCUS, 이진민. (2023). 우리나라 순수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포 추정, 2008~2021년. 사회경제평론, 1-26.
- 이문호. (2020).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 ‘노동사회학적 관점’에서 -. 노동

- 연구, 40, 47-86.
- 이병훈, & 신재열. (2009).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76, 205-232.
- 이병훈, & 신재열. (2011). 자영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247-274.
- 이병훈, & 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111-140.
-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2), 29-59.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성재민, 하은솔, & 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이윤석, & 신인철. (2015). 골드소프 계급 도식의 타당성 검토: 잠재적 계급 분석 (Latent Class Modeling)을 중심으로.
- 이장원, 김유선, 오학수, & 정동관. (2013). 임금체계 관련 국내외 제도와 근로자 의식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우, & 황성현. (1998).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0(2),
- 이제민. (2023). 자본이득을 감안한 자본소득분배율의 장기 추이. 경제발전연구, 29(4), 57-86.
- 이종권, 권치홍, & 이경애. (2020). 저성장시대 부동산 자산격차 추이와 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이종선, 박성국, 박영삼, & 안종기. (202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 및 정책대안: — 서울시 노원구 사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 이지은. (202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KLI 패넬브리프 23호).
- 이진순. (2014).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재정학연구, 7(4), 183-217.
- 이현재. (2019a).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역연구, 15(2), 347-368.
- 이현재. (2019b). 한국의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적분 추정에 의한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387-401.

- 장귀연. (2013).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계급구조.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12-40.
- 정성진 & 정구현. (2022a).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계급적 분석. 경제와사회, 100-141. DBPIA.
- 정인관. (2022). 일본의 세대 간 절대적 사회이동에 대한 연구—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2009년과 2019년 비교 -. 사회이론,
- 정종우, 이동원, & 김혜진. (2024).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BOK 이슈노트, 2024(26).
- 조돈문, 신광영, & 조은. (1994). [쟁점토론] 계급론적 이해의 반론. 경제와사회, 24, 271-295.
- 조돈문. (1994).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1960-1990: 계급구조의 양극화의 고찰 :계급구조의 양극화의 고찰. 한국사회학, 28(SPR), 17-46.
- 조돈문. (2024). 불평등 이데올로기: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한겨레엔.
- 조은, 강정구, & 신광영. (1992).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사회학, 25(WIN), 27-51.
- 주상영, & 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31-65.
- 주상영. (2015). 피케티 이론으로 본 한국의 분배 문제. 경제발전연구, 21(1), 21-76.
- 표학길. (2015).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케티가설의 검증. The Korean Economic Forum, Vol. 8(No. 1).
- 하시모토 겐지. (2022). 언더클래스의 출현과 새로운 계급사회. 일본비평(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6.
- 한국은행. (202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
- 한국은행. (일자 없음). 한국의 국민대차대조표 해설(2020).
- 함선유. (2023). 청년의 계층적 가족형성과 소득불평등 연구 (Nos. 2023-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9-87.
  - 홍민기. (2016). 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홍장표. (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발전연구*, 20(2), 67-97.
  - 황선웅. (2022). 인구집단별 비정규직 비중과 코로나19 위기의 영향. *노동리뷰*, 20-31.
- 
- Acemoglu, D. (2024). *Clarifying America's Great Inequality Debate*. Project Syndicate.
  - Altonji, J. G., Hynsjö, D. M., & Vidangos, I. (2023). Individual earnings and family income: Dynamics and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Dynamics*, 49, 225-250.
  - Arrow, K. J., & Intriligator, M. D. (2000). Introduction to the series.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 v). Elsevier.
  - Atkinson, A. B. (1996). The distribution of income: Evidence, theories and policy. *De Economist*, 144(1), 1-21.
  - Atkinson, A. B. (1997). Bringing Income Distribution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Journal*, 107(441), 297-321.
  - Atkinson, A. B., & Bourguignon, F. (2000). Introduction: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s.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1-58). Elsevier.
  - Atkinson, A. B., & Bourguignon, F. (2014).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Elsevier.
  - Atkinson, A. B., & Piketty, T. (2007). *Top Incomes Over the Twentieth*



- Century: A Contrast Between Continental European and English-Speak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 Auten, G., & Splinter, D. (2024).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Using Tax Data to Measure Long-Term Tren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2(7), 2179–2227.
- Author index. (2000).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 I-1-I-18). Elsevier.
- Autor, D. H. (2014). Skills, education, and the rise of earnings inequality among the “other 99 percent”. *Science*, 344(6186), 843–851.
- Autor, D. H., Katz, L. F., & Kearney, M. S. (2008). Trends in U.S. Wage Inequality: Revising the Revisionis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2), 300–323. <https://doi.org/10.1162/rest.90.2.300>
- Autor, D., Dube, A., & McGrew, A. (2023). *The Unexpected Compression: Competition at Work in the Low Wage Labor Market* (Working Paper No. 3101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doi.org/10.3386/w31010>
- Barata, R. B., Ribeiro, M. C. S. de A., Silva, Z. P. da, & Antunes, J. L. F. (2013). Social class: Concepts and operationalization models in health research. *Revista de Saúde Pública*, 47, 647–655. <https://doi.org/10.1590/S0034-8910.2013047004396>
- Bardhan, P., Bowles, S., & Gintis, H. (2000). Chapter 10 Wealth inequality, wealth constraint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541–603).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3-5](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3-5)
- Berman, Y., & Klor, E. F. (2024). *Capital Taxation, Retained Earnings and*

- Inequality: Evidence from Dividend Tax Reforms*. IZA.
- Bertola, G. (2000). Chapter 9 Macroeconomics of distribution and growth.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477–540).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2-3](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2-3)
- Blanchet, T., Fournier, J., & Piketty, T. (2022). Generalized Pareto Curves: Theory and Applica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8(1), 263–288.  
<https://doi.org/10.1111/roiw.12510>
- Boadway, R., & Keen, M. (2000). Chapter 12 Redistribution.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677–789).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5-9](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5-9)
- Bourdieu, P. (1987). What Makes a Social Clas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xistence Of Groups.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32, 1–17.
- Bourquin, P., Brewer, M., & Wernham, T. (2024). Trends in income and wealth inequalities. *Oxford Open Economics*, 3(Supplement\_1), i103–i146.
- Bradley, H. (2014). Class Descriptors or Class Relations? Thoughts Towards a Critique of Savage et al. *Sociology*, 48(3), 429–436.
- Brinton, M. C. (2005).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review).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31(1), Article 1.
- Burgess, S., & Proper, C. (1998). *An Economic Model of Household Income Dynamics, with an Application to Poverty Dynamics among American Women* (No. CASE 009).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SE.
- Carnes, N., & Lupu, N. (2024). Are There Social Class Gaps in Nascent Political Ambition? Survey Evidence from the Americas. *The Journal of Politics*, 000–000. <https://doi.org/10.1086/734284>
- Carriero, R. (2024). Should we care about pay ratios? Dealing with ISSP

- questions on actual and ideal wag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0(0), 1–9.
- Chernozhukov, V., Fernández-Val, I., & Melly, B. (2013). Inference on Counterfactual Distributions. *Econometrica*, 81(6), 2205–2268. <https://doi.org/10.3982/ECTA10582>
- Cho, T. H., & Schreyer, P. (2017). *Has the Labour Share Declined? It depends*. (SSRN Scholarly Paper No. 4676869).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https://papers.ssrn.com/abstract=4676869>
- Connelly, R., Gayle, V., & Playford, C. (2021). Social class inequalities in educational attainment: Measuring social class using capitals, assets and resources.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6(3), 280–293.
- Cowell, F. A. (2000). Chapter 2 Measurement of inequality.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87–166).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05-6](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05-6)
- Crompton, R. (1996). The Fragmentation of Class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1), 56–67.
- Crompton, R. (2015). *Class and Stratification*. John Wiley & Sons.
- Davies, J. B., & Shorrocks, A. F. (2000). Chapter 11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605–675).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4-7](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4-7)
- Davis, J. M. V., & Mazumder, B. (2024). The Decline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after 1980.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47. [https://doi.org/10.1162/rest\\_a\\_01413](https://doi.org/10.1162/rest_a_01413)
- Desmond, M. (2024). *Poverty, by America*. <https://www.penguin.co.uk/books/444975/poverty-by-america-by-desmond-ma>

tthew/9780141998794

- Desmond, M., & Wilmers, N. (2019). Do the Poor Pay More for Housing? Exploitation, Profit, and Risk in Rental Marke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4(4), 1090–1124. <https://doi.org/10.1086/701697>
- Firpo, S. P., Fortin, N. M., & Lemieux, T. (2018). Decomposing Wage Distributions Using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egressions. *Econometrics*, 6(2), Article 2. <https://doi.org/10.3390/econometrics6020028>
- Flemming, J. S., & Micklewright, J. (2000). Chapter 14 Income distribution, economic systems and transition.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843–918). Elsevier.
- Fortin, N., Lemieux, T., & Firpo, S. (2011). Chapter 1—Decomposition Methods in Economics. In O. Ashenfelter & D. Card,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4, pp 1–102). Elsevier.
- Ganzeboom, H. B. G., De Graaf, P. M., & Treiman, D. J. (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1), 1–56.
- Goldthorpe, J. H. (2002). Globalisation and Social Class. *West European Politics*, 25(3), 1–28.
- Goldthorpe, J. H. (2016). Social class mobility in modern Britain: Changing structure, constant process. *Journal of the British Academy*, 4(89–111).
- Gottschalk, P., & Smeeding, T. M. (2000). Chapter 5 Empirical evidence on income inequa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261–307). Elsevier.
- Grossbard, S. (2015). Household Economics. In J. D. Wrigh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Second Edition)* (pp

- 224–227). Elsevier.
- Håkon Leiulfstrud. (2005). *Computing Social Class Indices*. NTNU Social Research Ltd.
- Harry B.G. Ganzeboom. (2010).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With ISEI-08 scores*.
- Hashimoto, K. (2003).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Trans Pacific.
- Hashimoto, K. (2021). Time Difference Gentrification as a Bloodless Revolution: Class Structure and Spatial Polarization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after the 1980s.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30(1), 23–63.
- Hashimoto, K. (2021). Time Difference Gentrification as a Bloodless Revolution: Class Structure and Spatial Polarization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after the 1980s.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30(1), 23–63. <https://doi.org/10.1111/ijjs.12122>
- Hashimoto, K. (2022). Transformation of the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In *International Income Inequality*. Routledge.
- Hashimoto, K., & Miyasaka, J. (2000).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30(1), Article 1.
- Heckley, G., Gerdtham, U.-G., & Kjellsson, G. (2016). A general method for decomposing the causes of socioeconomic inequality in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48, 89–106. <https://doi.org/10.1016/j.jhealeco.2016.03.006>
- Hong, J. (2014).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Demand Regime and Productivity Regime -.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20(2), 67–97.
- Hoynes, H., Schanzenbach, D. W., & Almond, D. (2016). Long-Run Impacts of

- Childhood Access to the Safety Ne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4), 903-934.
- Jäntti, M., & Danziger, S. (2000). Chapter 6 Income poverty in advanced countries.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309-378).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09-3](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09-3)
- Jarman, J., Lambert, P., & Penn, R. (2021). Social stratifi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6(3), 271-279.
- Kanbur, R. (2000). Chapter 13 Income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791-841).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6-0](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16-0)
- Karabarbounis, L., & Neiman, B. (2014a). *Capital Depreciation and Labor Shares Around the World: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Working Paper No. 2060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s://doi.org/10.3386/w20606>
- Kelley, J., & Evans, M. D. R. (1993). The Legitimation of Inequality: Occupational Earnings in Nine N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1), 75-125.
- Kenji, H. (2022a). Emerging Underclass and the New Class Society in Contemporary Japan.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6, 158-197. <https://doi.org/10.29154/ILBI.2022.26.158>
- Kim, H.-K. (2024). Changes and Causes of Wage Inequality in South Korea during 2004-2019.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37(2), 1-43. <https://doi.org/10.17964/rses.2024.37.2.1>
- Kim, M.-J. (2016). Characteristics Analysis on the Joint Distribution of Baby boomer Household Income and Wealth.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 Review*, 12(4), 225–248. <https://doi.org/10.15790/cope.2016.12.4.225>
- Kim, N. N. (2023).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Labor Productivity, Wages, and Labor Income Share. *The Korean Economic Forum*, 16(2), 1–36.
- Kim, S. (2013). Surviving Hard Times: The Impacts of Corporate Bankruptcy on Workplac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Impacts of Corporate Bankruptcy on Workplac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한국사회학*, 47(3), 25–50.
- Kristal, T. (2013). The Capitalist Machine: Computerization, Workers’ Power, and the Decline in Labor’s Share within U.S. Indus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3), 361–389.
- Kröger, H., & Hartmann, J. (2021). Extending the Kitagawa–Oaxaca–Blinder decomposition approach to panel data. *The Stata Journal*, 21(2), 360–410.
- Lee, S. S., & Baek, S. (n.d.). Beyond the precariat: Trajectories of precarious work and its determina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n/a(n/a).
- Lee, S., & Lee, W. (2017). 샤프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23(1), 57–109.
- Lee, W. (2018).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n South Korea.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 24(2), 29–59.
- Lindert, P. H. (2000). Chapter 3 Three centuries of inequality in Britain and America.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167–216). Elsevier. [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06-8](https://doi.org/10.1016/S1574-0056(00)80006-8)

- Liu, X. (2020). Class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in transitional China. *The Journal of Chinese Sociology*, 7(1), 4.
- Mattila-Wiro, P. (1999). *Economics Theories of the Household: A Critical Review*. UNU-WIDER. <https://collections.unu.edu/view/UNU:5163>
- Milanovic, B. (2016).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anovic, B. (2023). *Visions of Inequality*. <https://www.hup.harvard.edu/books/9780674264144>
- Morgan, S. (2017). *A Coding of Social Class for the General Social Survey (GSS Methodological Report No. 125)*.
- Morgan, S. L., Grusky, D. B., & Fields, G. S. (2006). *Mobility and Inequality: Frontiers of Research in Sociology and Econom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rrisson, C. (2000). Chapter 4 Historical perspectives on income distribution: The case of Europe.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217–260). Elsevier.
-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Inequality. (2015).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 pp 141–216). Elsevier.
- Nayebi, H., & Abdollahyan, H. (2006). Social Stratification and its Indices: A Critique. *Critique: Critical Middle Eastern Studies*, 15(3), 249–263.
- Neal, D., & Rosen, S. (2000). Chapter 7 Theories of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379–427). Elsevier.
- OECD. (2025). *To Have and Have Not – How to Bridge the Gap in Opportunities*. OECD; OECD Publishing.



- Oesch, D. (2021). *Contemporary Class Analysis*. JRC Publications Repository.  
<https://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handle/JRC126506>
- Parolin, Z., & Filauro, S. (2023). The United States' Record-Low Child Poverty Rate in Internat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A Research Note. *Demography*, 60(6), 1665–1673.
- Parolin, Z., Lehner, L., & Wilmers, N. (2025). Declining earnings inequality, rising income inequality: What explains discordant inequal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44, 105337.
- Penn, R. (1981). The Nuffield Class Categorization. *Sociology*, 15(2),
- Penn, R. (2016). Rethinking class analysis: Some reflections on current issues and possible new forms of empirical research.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1(2–3), 113–124.
- Penn, R. (2016). Rethinking class analysis: Some reflections on current issues and possible new forms of empirical research. *Contemporary Social Science*, 11(2–3), 113–124. <https://doi.org/10.1080/21582041.2016.1254946>
- Piketty, T. (2000). Chapter 8 Theories of persistent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429–476). Elsevier.
- Piketty, T., & Goldhammer, A.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Piketty, T., & Goldhammer, A.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Piketty, T., Saez, E., & Zucman, G. (2018). 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 Methods and Estimates for the United St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3(2), 553–609.

- Polarization. (2015).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 pp 301–358). Elsevier.
- Ranaldi, M. (2025). Global Distributions of Capital and Labor Incomes: Capitalization of the Global Middle Class. *World Development*, 188,
- Rhee, H.-J. (2019).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Evaluated by Capital and Earned Incomes: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5(2), 347–368.
- Rios-Avila, F. (2020).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s (RIFs) in Stata: RIF regression and RIF decomposition—Fernando Rios-Avila, 2020. *The Stata Journal*.
- Rose, D., & Pevalin, D. J. (2001). *The National Statistics Socio-economic Classification: Unifying offici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to the conceptualis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class* (Working Paper Nos. 2001–04). ISER Working Paper Series.
- Rose, D., Pevalin, D. J., & O'Reilly, K. (2005). *The National Statistics Socio-economic Classification: Origins, development and use*. Palgrave Macmillan.
- Salverda, W. (2015). *Individual earnings and household incomes: Mutually reinforcing inequalities?* <https://doi.org/10.4337/ejeep.2015.02.05>
- Salverda, W., & Checchi, D. (2014). Labour-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persion of Wage Earnings. *IZA Discussion Papers*, Article 8220. <https://ideas.repec.org/p/iza/izadps/dp8220.html>
- Savage, M. (2016). End class wars. *Nature*, 537(7621), 475–479. <https://doi.org/10.1038/537475a>
- Savage, M., Devine, F., Cunningham, N., Taylor, M., Li, Y., Hjellbrekke, J., Le

- Roux, B., Friedman, S., & Miles, A. (2013). A New Model of Social Class? Findings from the BBC's Great British Class Survey Experiment. *Sociology*, 47(2), 219–250.
- SEHYUN HONG, NAK NYEON KIM, ZHEXUN MO, & LI YANG. (2024).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1933-2022*.
- Sen, A. (2000). Chapter 1 Social 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1, pp 59–85). Elsevier.
- Shin, K.-Y., & Kong, J. (2014). Why Does Inequality in South Korea Continue to Ris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6), 31–48.
- Sinha, P., Calfee, C. S., & Delucchi, K. L. (2021). Practitioner's Guide to Latent Class Analysis: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Common Pitfalls. *Critical Care Medicine*, 49(1), e63–e79.
- Song, J., Price, D. J., Guvenen, F., Bloom, N., & von Wachter, T. (2019). Firming Up Inequ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1), 1–50.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 Statistical Methods for Distributional Analysis. (2015). In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 pp 359–465). Elsevier.
- Stiglitz, J. E. (2013).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 W. Norton & Company.
- Taylor, S. D. (1999). *Sociology: Issues and Debates*. Macmillan.
- Tinbergen, J. (1975). *Income Distribution: Analysis and Policies*.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Toshchenko, Z. (2018). A New Social Class: From Proletariat to Precariat.

- Przegląd Narodowościowy – Review of Nationalities*, 8, 39–51.
- Vrooman, J. C., Boelhouwer, J., & Gijsberts, M. (2024). A contemporary class structure: Capital disparities in The Netherlands. *PLOS ONE*, 19(1), e0296443.
- Waitkus, N., Savage, M., & Toft, M. (2025). Wealth and Class Analysis: Exploitation, Closure and Exclusion. *Sociology*, 59(1), 126–143.
- Widmer, E. D., & Ritschard, G. (2009). The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Are men and women equal?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4(1), 28–39.
- Wilmers, N. (2018). Wage Stagnation and Buyer Power: How Buyer-Supplier Relations Affect U.S. Workers' Wages, 1978 to 201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Wright, E. O. (2003). Social class.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2, 717–724.
- Wright, E. O. (2009). *Understanding Class. Towards an Integrated Analytical Approach*. New Left Review.
- Yoon, I.-S. (1995). CLASS, GENDER AND HOUSING IN KOREA. *Journal of Asian Sociology*, 24(1), 1–25.
- Yoshihara, N. (2021). On the labor theory of value as the basis for the analysis of economic inequality in the capitalist economy.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47(2–3), 190–212.
- 超・階級社会”の闇を暴く「4.4万人最新データ」初公開！全8階級で年収激減の衝撃。  
(2023, January 19).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 「格差拡大」により日本に出現した「新しい下層階級」…現代日本の「階級社会」のし  
くみ. (2025, 6월 16). 現代新書 | 講談社.

<https://gendai.media/articles/-/153224>

- 橋本健二. (1997). ジェンダーと階層構造. 教育社会学研究, 61, 55-76.
- 橋本健二. (1999). 戦後日本の階級構造. 社会学評論, 50(2), 164-180.
- 橋本健二. (2007). 「格差社会」における階級・階層研究と地域社会研究 - 「土地の社会移動研究」の提案. 地域社会学会年報, 19, 12-30.
- 橋本健二. (2008). 階級間格差の拡大と階級所属の固定化: 「格差社会」の計量分析 (〈特集〉〈格差社会〉化とオールタナティヴ). 季刊経済理論, 44(4), 29-40.
- 橋本健二. (2018). 現代日本の階級構造と階級間移動. 2015年社会階層と社会移動調査研究会.
- 橋本健二. (2019). 現代日本における階級構造の変容. 季刊経済理論, 56(1), 15.
- 橋本健二. (2025). 新しい階級社会 最新データが明かす〈格差拡大の果て〉. 講談社.
- 大橋隆憲. (1964). 現代日本の階級構成-その統計による研究のために. 経済論叢, 93(3), 155-172.
- 大橋隆憲. (1964). 現代日本の階級構成-その統計による研究のために. 経済論叢, 93(3), 155-172.
- 鹿又伸夫 & 渡辺秀樹. (1999). 特集〈階級・階層の現代像〉に寄せて. 社会学評論, 50(2), Article 2.
- 佐藤嘉倫. (2009). 現代日本の階層構造の流動性と格差. 社会学評論, 59(4), 632-647.
- 竹内洋. (1995). 日本のメリトクラシー: 構造と心性.
- 川合隆男. (1973). 現代日本の階級構造の変化とホワイト・カラー層. 法學研究.
- 脇田彩. (2013). 現代日本女性にとっての階層再生産 2 つの側面による測定の可能性. 社会学評論, 63(4), 585-601.

